

# 통일과 평화

16집 3호  
2024

## 특 집

### 핵무장과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

- 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 정성철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 이경석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 정구연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 홍예림 · 조동준

## 일반논문

-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 박성열 · 정원희  
: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연구 | 안중숙  
: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평화적 의의 | 이정선  
: 1964년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늦봄 문익환의 통일문학과 통일운동 소고(小考) | 조성면

## 현장보고

- 2024 파리올림픽 남북스포츠 교류...정치 과잉과 스포츠 정치화 | 김창금



**통일과 평화** 16집 3호 2024년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b>편집위원장</b>	김병로(서울대)
<b>부편집위원장</b>	한모니까(서울대)
<b>편집위원</b>	강구섭(전남대) 김귀옥(한성대) 김다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지훈(부산대) 김진환(국립통일교육원) 박태균(서울대) 배개화(단국대) 전재성(서울대) 한준성(강릉원주대)
<b>해외 편집위원</b>	김동진(Trinity College Dublin) 김연호(George Washington Univ.)
<b>편집간사</b>	조현주(서울대)
<b>발행인</b>	김범수(서울대)
<b>발행일</b>	2024년 12월 3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 (031) 5176-2332 Fax | (031) 624-4751  
E-mail: tongil-journal@snu.ac.kr

**인쇄 도서출판 선인**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8길 1(신월동 163-1) 1층  
전화 02-718-6257  
팩스 02-718-6253  
이메일 suninbook@naver.com

ISSN 2092-500X

값 10,000원

#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6, No.3 2024

16집 3호 · 202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차례

### 특집 : 핵무장과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

- 정성철 | 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 7
- 이경석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 35
- 정구연 |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 97
- 홍예림 · 조동준 |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 133

### 일반논문

- 박성열 · 정원희 |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 173
- 안종숙 |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연구  
: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 225
- 이정선 |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평화적 의의  
: 1964년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 269
- 조성면 | 늦봄 문익환의 통일문학과 통일운동 소고(小考) ..... 307

**현장 보고**

김창금 | 2024 파리올림픽 남북스포츠 교류…  
정치 과잉과 스포츠 정치화 ..... 339

## 핵무장과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인의 마음

북한발 핵위협, 미국의 관여 축소 움직임, 다자협력의 약화 등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에서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무산된 이래 수면 아래 있던 자체 핵무장론이 일부 비전통 매체에서 언급되다가 이제는 정치권과 전통 매체로 확장되었다. 국제질서의 약화와 한반도 안보환경은 한국의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번 호 『통일과 평화』는 한국 핵무장론의 원인과 강도, 미국의 확장억제와 대한 기제에 관련된 한국인의 마음을 분석하는 논문 4편을 게재한다. 한국 핵무장론이 안보불안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고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회 세력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국민 다수는 핵무장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으로 주저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국인의 마음에서 병립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말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중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과 같이 실질적 조치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인다. 핵무장론이 한국인의 위상 갈망과 연결되며, 핵무장과 첨단무기를 통한 대응이 병립적으로 경쟁하는 현상을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특집

## 왜 한국인은 핵무장을 원하는가?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

정성철 (명지대학교)

### 국문요약

한국인은 왜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가? 기존의 핵개발 연구에 기초하여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위협, 미국불신, 민족주의는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주요 원인이다. 북한 관련 지식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 북한위협과 미국불신의 영향은 더욱 커지지만 민족주의에 따른 핵무장 선호는 찾기 어렵다. 한편,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하는 중도 성향의 한국 대중은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였다. 보수 성향의 대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재재와 군사력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독자 핵무장을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선포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 대중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심화된 안보불안을 직시하고 강대국 동맹국의 방기를 우려한 합리적 반응인 셈이다. 향후 미중 강대국 경쟁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퇴조로 상징되는 탈단극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국제 질서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주제어: 핵무장, 북핵, 한미동맹, 미중 경쟁, 민족주의, 지식수준, 정치이념, 비핵화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7>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또한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1047469).

## I. 들어가는 글

누가 핵무장을 원하는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핵무장과 미국 트럼프즘의 영향으로 쉽사리 설명할 수 있는가? 핵 비확산 체제가 자리 잡은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제의 모범생인 한국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2010년대 이후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은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동시에 이러한 핵무장 여론의 “중층성,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해 “선부터 해석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한다.<sup>2)</sup>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할수록 핵무장에 긍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sup>3)</sup> 정치 양극화는 핵무장 여론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sup>4)</sup>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공약에 믿음을 가질수록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결과나 나타나는지와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대중이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 
- 1) 정상미,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IFANS 2023-44 (2024), 4쪽.
  - 2) 박주화,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4 (2023), 7-8쪽.
  - 3) Dalton, Toby and Karl Friedhoff, eds., “Thinking Nuclear: South Korean Attitudes on Nuclear Weapons,”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22), <<https://globalaffairs.org/sites/default/files/2022-02/Korea%20Nuclear%20Report%20PDF.pdf>>, pp. 7-8.
  - 4) 박현주, 「손열 EAI 원장, “정치적 분열, 외교에도 부담...상대국 악용 우려」 『중앙일보』 10월 4일 (20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052>>; 김지현, 「한국 핵무장 67% 찬성, “미(美) 이익 따져 한반도 개입” 54%」 『한국일보』 1월 2일 (20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2712090002350?did=NA>>.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론적 논의와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 다수의 핵무장 여론 보도와 논의는 특정 변수와 핵무장 지지의 상관성에 집중한다. 만약 특정 성향을 지닌 집단(X)이 자체 핵무장(N)을 선호한다고 밝혀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X와 N의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X집단의 다수가 공유하는 특징으로 핵무장을 선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다수의 이유로 한국인이 핵무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다수의 변수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일회귀변수에 준하는 추측과 분석에 머물면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의 종합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대중의 핵무장 선호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은 핵무장 여론을 합리성과 편향성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동안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연구는 국가의 합리성 혹은 지도자의 편향성을 전제하고 왜 그리고 언제 국가가 핵개발을 시도하는지를 설명하였다.<sup>5)</sup> 이러한 기존 성과를 활용하여 한국 대중이 핵무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할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선호를 설명하는 체계적으로 검증된 이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가 수준의 핵확산 연구 성과에 기대어 개인 수준의 핵무기 선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추구한다. 핵무기 개발을 설명하는 이론

---

5) 국가가 ‘왜’ 그리고 ‘언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핵확산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두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 27.1 (2011), 47~81쪽; Scott D Sagan, “The Cause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4 (2011), pp. 225~244. 한편, 국가가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하는지를 다룬 대표적 핵무장 연구는 다음과 같다. Vipin Narang,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을 활용해 핵무장 여론을 설명하는 시도인 셈이다. 이러한 작업은 2010년대 이후 다수 한국인이 왜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민주 국가에서 일반 대중이 언제 핵무장을 선호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국가의 핵무장을 국가와 사회, 지도자와 대중이라는 다양한 분석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핵 위협과 미국 불신이 핵무장 선호를 낳은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배타적 민족주의가 독자 핵무장을 선호하는 요인임을 지적한다. 북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에 대한 핵무장 선호 현상은 강화되었지만 배타적 민족주의에 따른 핵무장 찬성 경향은 약화되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지식대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와 무력 강화 정책을 신뢰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은 북핵 위협 증가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의 민족주의 성향과 기존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분적으로 핵무장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대외전략의 변화에 따라 한국 내 핵무장 여론도 변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전문가와 미디어가 대외환경을 어떠한 프레임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핵무장 선호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脫)단국시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해안과 관점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 II. 이론과 가설

### 1. 합리적 대중

왜 핵무장을 원하는가? 흔히 핵무장은 외부위협에 대한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으로 평가받았다.<sup>6)</sup> 이러한 관점에서 핵무장을 시도하는 국가는 외부위협에 직면했다고 인식되었다. 만약 외부위협에 대응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면 핵개발은 미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게 핵개발은 매우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치열한 안보 경쟁을 펼친 주요 국가들이 핵개발에 나선 사례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특히 숙적 관계에 놓인 국가가 핵개발에 성공하였을 때 국가의 핵개발 의지는 단숨에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핵무기 독점은 소련의 핵무장으로 종식되었고, 미소 핵경쟁은 이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인도와 파키스탄 안보 경쟁은 핵무장으로 격화되면서 수평적 핵확산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안보불안이 항상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안보불안이 핵개발의 의지를 강화하지만 핵개발의 역량을 증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핵확산을 가로막고자 핵개발 기술과 자원 통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동맹과 우방에 대한 안보 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핵 역량을 제공하지 않지만 대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전략이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통해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국제 규범을 확산시키면서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결과

---

<sup>6)</sup> Scott D Sagan, "Why Do State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1996-1997), pp. 57-63.

를 도출시켰다. 비록 핵개발을 선호하는 안보환경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지만 강대국은 동맹체제를 통해 안보불안을 약화시키면서 핵무장을 포기하게끔 유인하는 대외전략을 그동안 추진한 것이다.

종합하면 안보불안과 동맹불신은 핵개발의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다. 안보불안이 심하고 믿을만한 동맹이 부재한다면 국가는 핵개발의 길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sup>7)</sup> 이러한 논의를 개인 수준에 적용해본다면, 외부위협을 우려하는 대중일수록 자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북한은 2017년 제6차 핵실험을 마친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여 자국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 바로 핵무기라는 한국인의 인식이 바로 핵무장 여론을 주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 북핵 위기를 경험했던 한국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핵무장을 현실적 대안으로 본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대중의 경우 북한 도발 관련 뉴스를 통해 북한 위협을 인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도발의 빈도와 핵무장 여론의 상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CSIS의 북한도발 데이터베이스(North Korean Provocations)에 따르면,<sup>8)</sup> 총도발 회수는 김일성 시대(1958~1994년)는 111회, 김정일 시대(1995~2011년)는 76회, 김정은 시대(2012~2024년)는 263회로 집계된다. 산술적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은 시대는 각각 매년 3회와 매년 4.47회의 도발이 감행되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은 매년 20.23회의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도발의 강도와 유형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

<sup>7)</sup> Alexandre Debs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sup>8)</sup>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atabase: North Korean Procoation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database-north-korean-provocations/>>.

겠지만, 핵과 미사일 기술이 향상된 최근의 북한을 생각할 때 한국 대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활용한 도발 뉴스를 그 어느 때보다 반복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면 대중은 독자적 핵무장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1월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등장하였기에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인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애초부터 높지 않았다면 2010년대 이후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을 설명할 수 없지만, 1970년대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폐기되고 1990년대 초반 한반도 내 미국 전술핵은 사라졌지만 미국의 공식적인 안보공약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트럼프즘의 부상이 몰고 온 영향의 하나로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가 한국 핵무장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미 동맹은 주요한 변수로 작동한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창설을 밝혔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결속이 강화되고 대북억제를 위한 실효적 노력이 강화될수록 한국 대중은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덜 느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떠한 한미 협력이 이러한 대중의 반응을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외교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의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9)</sup>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를 높일 수 있

9) 김양규, 「2024 한국인의 핵무장지지 분석: 워싱턴 선언의 안심 효과 사라졌나?」

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상황에 따른 한국 대중의 핵무장 선호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들을 수립할 수 있다. 북한 핵위협을 우려할수록, 그리고 미국 확장억지를 불신할수록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가설1, 가설2). 이는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의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핵무장을 지지하기에 합리적 선호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북핵 위협과 미국 신뢰라는 두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핵무장 여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우려가 적어도 미국 불신이 크다면 핵무장을 지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하더라도 북핵을 두려워하기에 핵무장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대중이 시기별로 북핵 위협과 미국 불신이 다른 수준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고려한다면, 두 변수가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는지 확인할 필요가 크다.

가설1: 북한 핵위협을 우려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가설2: 미국 핵우산을 불신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더불어 북한위협과 미국불신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 역시 생각할 수 있다(가설3). 즉 북한위협이 높을 뿐 아니라 미국불신이 높은 대중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지가 믿음만하기에 높은 비용을 들여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불신이 크더라도 북핵이 우려되지 않는다면 핵무기 개발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북핵위협과 미국불신이 결합된 경우

---

EAI 이슈브리핑 2024-10-22 (2024),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78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2784&board=kor_issuebriefing%27,%27kor_workingpaper%27,%27kor_special%27,%27kor_multimedia)>.



에만 핵무장 여론이 높다는 또 다른 가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북핵위협×미국불신→핵무장). 이러한 가설이 경험적 지지를 확보하다면, 1990년대 제1차 북핵위기가 발발한 이후 2010년대까지 핵무장 여론이 부상하지 않았던 이유를 미국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한미동맹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더라도 북핵위협 인식이 낮아진다면 핵무장 여론이 수그러들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가설3: 북한 핵위협을 우려하고 미국 핵우산을 불신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 2. 편향과 규범

1990년대 이후 상당수의 정치심리학 연구자는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주장하고 나섰다.<sup>10)</sup> 개인의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인지 편향(cognitive bias)의 존재와 영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더불어 지도자의 신념과 성향이 정책선호뿐 아니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전망이론을 활용한 주요국의 대외행태에 대한 사례연구와 이론작업을 들 수 있다.<sup>11)</sup> 국가의 핵무장 관련해서는 배타적

<sup>10)</sup> 정치현상과 의사결정 연구에 있어서 합리성 가정에 대한 비판과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James G. March, *A Primer on Decision Making: How Decisions Happ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Donald P. Green and Ian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A Critique of App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sup>11)</sup> Rose McDermott,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6권 1호 (2006), 79~101쪽.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지도자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는 대표적 연구가 존재한다.<sup>12)</sup> 외부위협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지도자가 핵무장을 통해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역사적 사례들은 개인의 성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유형의 개인은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하더라도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한 방어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자신과 관련해서 외부에 원인을 돌리는 근본적 귀인편향(fundamental attribution bias)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 가운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체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결과 위협적 역량을 갖춘 상황을 고려할 때, 민족주의 성향은 핵무장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 바라보는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가설4)

가설4: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개인의 성향은 항상 핵무장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중이 수용하고 내재한 규범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타부(nuclear taboo) 국제규범의 확산과 영향에 대한 연구를 감안할 때,<sup>13)</sup> 한국 사회의 이러한 규범 수용이 핵무장 선호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 핵무기의 사용 뿐 아니라 제조와 보유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 확산되었

<sup>12)</sup>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up>13)</sup> Scott D Sagan, "Why Do State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pp. 73-85; Nina Tannenwald,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1999).

다. 1970년대부터 핵비확산 체제가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이러한 국제규범의 영향을 상당하였다.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핵무기의 윤리성에 대한 관심은 각국의 핵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서서히 부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규범을 받아들인 한국의 대중이 독자 핵무장에 반대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가설5). 199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을 규범위반으로 비판했던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핵개발을 상황변화에 따라 지지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리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대중의 경우 오랫동안 국제규범에 대해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논의에 친숙한 이들에게 이러한 규범적 영향을 더욱 받고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가설5: 자유주의 국제규범을 수용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반대한다.

### 3. 정보와 이념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지식대중’(informed public)은 앞서 언급한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에 기초하여 자체 핵무장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지식이 높은 개인은 기존 지식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다양한 정보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며 새롭게 평가를 진행하는 경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sup>14)</sup> 북한의 핵무력 완성과 김정은 시대의 무력도발 증가는 지식대중의 경각심을 한층 높였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영향은 한국의 지식대중에게 자국우선주의 미국에 대한 우려를 뚜렷하게 심겨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의 변화 관련 정보에 민감하지 않은 대중이라면 기존 지식과 믿음에

14) 류재성,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1권 2호 (2012), 61~64쪽.

기초하여 정책선호를 유지했으리라 예상된다. 개인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고려할 때 지식의 투입이 제한적일 경우 개인은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새로운 정보 투입으로 인지부조화를 겪는 개인은 정책변경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지식 수준이 높을 수록 북한위협과 한미동맹에 대한 최근의 평가를 바탕으로 핵무장 지지한다고 예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가설6, 가설7).

가설6: 지식대중은 북한 핵위협을 우려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가설7: 지식대중은 미국 핵우산을 불신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정치이념은 정책선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 보수와 진보는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입장차를 명확히 한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분석과 제안은 상이하다. 보수가 압박을 통해 북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진보는 관여를 선호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자연스럽게 진보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보수 정부는 경제 제재와 군비 확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대중일 수록 마지막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가설8). 더불어 보수 대중과 진보 대중은 각각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가설9, 가설10). 이념성향에 따라 상이한 인과경로를 거쳐 핵무장을 지지(equifinality)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대중은 진보 정책을 비판하며 핵무장을 지지하고, 진보 대중은 보수 정책을 타하면서 핵개발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요구된다.

가설8: 한국 비핵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가설9: 보수 성향의 대중은 진보 비핵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가설10: 진보 성향의 대중은 보수 비핵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

#### 4. 종합

이 연구는 한국 대중의 합리성과 편향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을 분석한다. 대외환경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선택으로 핵무장의 필요를 지지하지만, 개인의 지식·이념·성향이 정책선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성향은 북한과 미국 문제를 두고 대립하며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렇듯 합리와 편향에 기초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독자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기에, 이미 공개된 여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비록 주요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타당성(validity)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나, 연구자의 편향이 데이터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는 이점도 존재한다.

### Ⅲ. 분석과 검증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년 통일의식조사 Raw Data」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여 앞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sup>15)</sup>

---

15)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년 통일의식조사 Raw Data」 2024년 1월 9일,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2023년 통일의식조사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핵무장’(중속변수)와 ‘북한 위협’, ‘미국 신뢰’, ‘민족주의’, ‘국제규범’(이상 독립변수)을 측정하였다.<sup>16)</sup> ‘민족주의’의 경우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을 통해 측정하였고, ‘국제규범’ 측정은 다문화 관련 인식을 묻는 항목들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측정은 기존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국제규범’ 변수의 경우 다문화와 포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타당성을 보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핵무장’, ‘북한 위협’, ‘미국 신뢰’ 변수는 이에 대한 직접적 응답을 재코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의 ‘비핵화 실패’, ‘보수 비핵화 실패’, ‘진보 비핵화 실패’ 측정은 “인도적 대북 지원”,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얼마나 비핵화 진전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비핵화 정책의 실패 여부가 아니라 상이한 진영이 지지하는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 것이다. 단일 정부에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정책을 혼용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이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개인 이념과 정책 선호 간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개인의 이념성향은 응답자의 자기 평가(진보, 중보, 보수)에 따랐다. ‘북한 지식’ 측정 역시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 악단”에 대한 지식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 값을 합산하여 이루어

<<https://ipus.snu.ac.kr/data-archive>>.

16)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23년부터 통일의식조사에서 “한국 핵무장 관련 가장 적절한 방식”(문32)을 포함시켰다(<표1> 참조). 따라서 2022년과 이전 통일 의식조사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2024년과 이후 통일 의식조사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시계열 분석을 통한 유의미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졌다. 기존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했기에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지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의 환경과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핵무장 선호 수준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기술통계 및 측정방법

변수명	N	평균	중간값	최소	최대	표준편차	측정
핵무장	1200	0.49	0	0	1	0.50	한국 핵무장 관련 가장 적절한 방식(nkp18)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은 1, 나머지(“미국 전술핵 배치”, “핵무기 보유 반대”, “잘 모름”)는 0
북한 위협	1200	3.12	3	1	4	0.73	북한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nk10)에서 “매우 위협을 느낀다” 4,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2,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1
미국 신뢰	1200	0.71	1	0	1	0.45	한반도 전쟁시 주변 4국의 태도-미국(fp05_01)에서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1, 나머지(“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는 0
민족주의	1200	0.19	0	0	1	0.39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uni12_b)에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하고 북한과 주변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중 일국 이상을 “적대 대상”으로 응답하면 1(nk01, fp04_01, fp04_02, fp04_03, fp04_04), 나머지는 0
국제규범	1200	0.02	0	0	1	0.15	다문화 관련 인식 네 항목(포용성, 수용성, 생활습관 변화, 동등한 대우) 모두에서 “매우 찬성” 혹은 “다소 찬성”을 선택하고 “대제 이상”의 교육수준이면 1(sk22_01, sk22_02, sk22_03, sk22_04, TD3), 나머지는 0
비핵화 실패	1200	10.26	10	4	16	2.27	대북 정책 도움 정도(북한의 비핵화)의 네 항목(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경제협력,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력 강화)에 대한 평가(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수의 합(nkp15_1, nkp15_2, nkp15_3, nkp15_4)

보수 비핵화 실패	1200	5.15	5	2	8	1.38	대북 정책 도움 정도(북한의 비핵화)의 두 항목(대북 제재, 군사적 역지력 강화)에 대한 평가(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수의 합(nkp15_3, nkp15_4)
진보 비핵화 실패	1200	5.11	5	2	8	1.38	대북 정책 도움 정도(북한의 비핵화)의 두 항목(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평가(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수의 합(nkp15_1, nkp15_2)
북한 지식	1200	2.12	2	0	6	2.09	북한 사회 인지도 관련 여섯 항목(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 악단)에서 각각 “매우 잘 안다” 혹은 “조금 안다”는 1점, “들어본 적 있다” 혹은 “전혀 모른다”는 0점을 부여한 후 합한 (nk07_01, nk07_02, nk07_03, nk07_04, nk07_06, nk07_08)
이념성향	1200	1.99	2	1	3	0.69	1 진보적, 2 중도, 3 보수적(TQ54)
보수-중도	1200	0.76	1	0	1	0.43	“이념성향”에서 보수 혹은 중도는 1, 나머지는 0
진보-중도	1200	0.76	1	0	1	0.43	“이념성향”에서 진보 혹은 중도는 1, 나머지는 0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로짓 분석은 전반적으로 ‘북한위협’, ‘미국신뢰’, ‘민족주의’ 가설(가설1, 가설2, 가설4)을 지지한다. <표 2>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북한위협, 미국신뢰, 민족주의는 단일 변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모델1, 모델2, 모델3), 다변량 모델에서도 그 유의미성을 유지한다(모델5). 하지만 국제구범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가설5, 모델4와 모델5). 한편,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가설3, 모델6).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북한위협×미국신뢰)을 포함시켰을 경우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의 개별 변수(북



한위협, 미국신뢰)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한국 대중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경험적 근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다.

〈표 2〉 로짓분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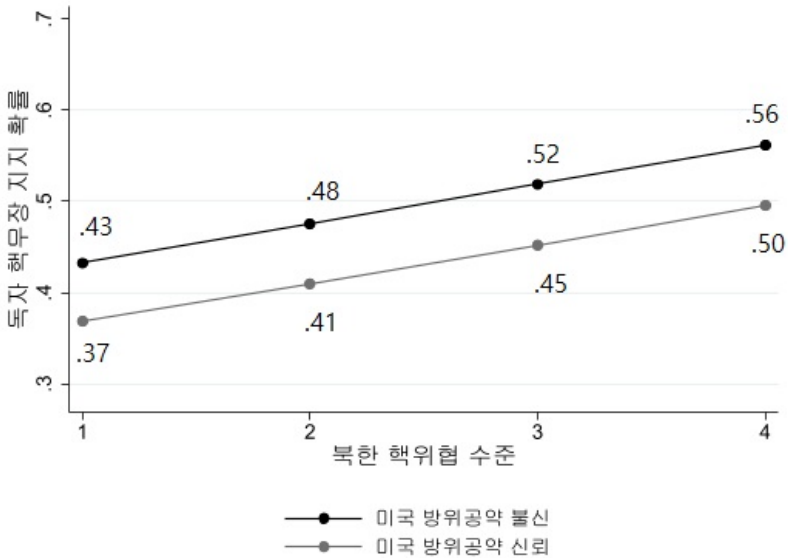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북한위협	0.182 ** 0.080				0.174 ** 0.081	0.055 0.146
미국신뢰		-0.254 ** 0.128			-0.266 ** 0.129	-0.793 0.558
북한위협× 미국신뢰						0.171 0.176
민족주의			0.325 ** 0.150		0.279 * 0.151	0.277 * 0.151
국제규범				0.535 0.387	0.493 0.389	0.461 0.390
상수	-0.600 ** 0.257	0.151 0.108	-0.090 0.064	-0.043 0.058	-0.446 * 0.269	-0.083 0.460
N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ll	-829.037	-829.662	-829.260	-830.657	-824.173	-823.701
aic	1662.074	1663.324	1662.521	1665.313	1658.346	1659.402
bic	1672.254	1673.504	1672.701	1675.493	1683.797	1689.943

앞서 제시한 모델5에 기초하여 <그림 1>은 한국 대중의 핵무장 지지 확률을 산출한 값을 시각화하였다.<sup>17)</sup> 핵무장 지지 확률은 북한 핵위협

17) ‘민족주의’와 ‘국제규범’ 변수는 모두 0에 고정하였다. Stata/SE 16.1 프로그램에서 logit 분석 후 margins와 marginsplot 명령어를 사용함.

인식에 따라 0.43에서 0.56(미국 불신의 경우), 0.36에서 0.50(미국 신뢰의 경우)의 변화를 보인다. 북한 위협 인식에 따라 자체 핵무장 지지 확률이 14%까지 차이가 난다. 반면에,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고 믿을 경우 자체 핵무장 지지 확률이 6~7% 포인트 하락한다. 미국 방위공약을 불신하는 대중에 한하여 핵무장 지지 가능성이 5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배타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대중이라면 핵무장지지 가능성은 더욱 상승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한국체제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핵무기 개발을 지지할 가능성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자체 핵무장 지지 가능성



다음으로, 지식수준과 정치성향이 핵무장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지식을 갖춘 지식대중에 한정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이 핵무장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가하였다(모델7과 모델5 비교). 또한 동일한 변수를 활용했지만 모델7이 모델5보다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ll, AIC, BIC 점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대중이 북핵위협과 미국 불신

<표 3> 로짓분석 II

	모델7	모델8	모델9	모델10	모델11	모델12
	북한지식 >=4	북한지식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북한위협	0.329 ** 0.156	0.173 0.324	0.176 ** 0.081	0.059 0.147	0.177 ** 0.082	0.06 0.147
미국신뢰	-0.505 * 0.268	-1.121 1.158	-0.301 ** 0.13	-0.823 0.559	-0.3 ** 0.13	-0.821 0.559
북한위협* 미국신뢰		0.203 0.37		0.169 0.176		0.169 0.176
민족주의	0.402 0.286	0.42 0.288	0.273 * 0.152	0.271 * 0.152	0.274 * 0.152	0.272 * 0.152
국제규범	0.896 0.682	0.854 0.686	0.454 0.39	0.423 0.392	0.454 0.39	0.423 0.392
북한지식			0.06 ** 0.028	0.06 ** 0.028	0.06 ** 0.028	0.06 ** 0.028
보수성향					-0.013 0.084	-0.012 0.084
상수	-0.599 0.521	-0.134 0.997	-0.555 ** 0.274	-0.196 0.464	-0.533 * 0.31	-0.176 0.484
N	334	334	1200	1200	1200	1200
ll	-224.031	-223.881	-821.892	-821.432	-821.88	-821.422
aic	458.062	459.763	1655.784	1656.863	1657.76	1658.843
bic	477.118	482.629	1686.324	1692.494	1693.39	1699.564

에 따라 핵무장을 선호한다는 가설(가설6과 가설7)을 지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지식대중에게 있어서 민족주의가 핵무장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사라졌다. 이는 지식수준에 따라 심리적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의 상호작용항(북한위협×미국신뢰)과 국제규범(국제규범)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지식대중에게 있어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모델8과 모델7). 북한 지식수준(지식수준)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포함시킬 경우(모델9), 지식수준은 핵무장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의 유의미한 영향력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러한 지식수준의 영향력은 북한위협과 미국신뢰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상황에도 유지되었다(모델10).

한편, 정치성향(보수성향)은 핵무장 선호에 독립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모델11과 모델12). 이는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서 자체 핵무장 이슈가 전반적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정치성향에 따라 일정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다른 주요한 독립변수를 함께 고려한 다변량 분석에서 보수 성향이 핵무장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국내정치의 변화와 상관없이 핵무장 여론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앞서 논의한 북한과 미국이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그에 대한 인식이 핵무장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과 정책실패와 관련된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앞서 논의한 것처럼 정치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정치성향에 따라 기존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핵무장을 다른 이유로 지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 남북 경험, 경제 제재, 군사력 강화

관련 부정 평가를 합산한 ‘비핵화 실패’ 변수는 독자 핵무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가설8, 모델13). 다만, 중도 성향의 대중은 비핵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할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모델13). 다음으로, ‘비핵화 실패’ 대신 ‘보수 비핵화 실패’와 ‘진보 비핵화 실패’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상대 진영의 정책 실패에 따른 핵무장 지지에 대한 가설(가설9와 가설10)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도 성향의 대중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험

〈표 4〉 로짓분석 III

	모델13	모델14	모델15	모델16	모델17	모델18	모델19
	전체	진보	중도	보수	진보	중도	보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북한위협	0.171 ** 0.081	0.126 0.166	0.228 ** 0.113	0.069 0.173	0.126 0.167	0.226 ** 0.114	0.093 0.176
미국신뢰	-0.256 ** 0.129	-0.261 0.262	-0.169 0.176	-0.484 0.296	-0.261 0.263	-0.213 0.177	-0.594 ** 0.302
민족주의	0.251 0.153	0.456 0.341	0.275 0.210	0.019 0.308	0.456 0.341	0.214 0.213	-0.080 0.316
국제규범	0.518 0.390	0.978 0.855	0.065 0.529	1.812 1.111	0.978 0.855	0.068 0.532	1.463 1.128
비핵화 실패	0.031 0.026	0.065 0.055	0.064 * 0.036	-0.084 0.057			
진보 비핵화 실패					0.065 0.093	0.200 *** 0.066	0.129 0.099
보수 비핵화 실패					0.066 0.096	-0.074 0.067	-0.272 *** 0.091
상수	-0.757 ** 0.377	-0.908 0.724	-1.407 *** 0.541	1.055 0.829	-0.909 0.725	-1.352 ** 0.543	0.909 0.838
N	1200	293	622	285	293	622	285
ll	-823.479	-199.436	-424.389	-193.119	-199.436	-421.362	-189.420
aic	1658.957	410.872	860.778	398.238	412.872	856.725	392.839
bic	1689.498	432.953	887.375	420.153	438.634	887.756	418.406

에 대하여 부정적일수록 핵무장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보수 성향의 대중은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에 호의적일수록 핵무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이 핵무장 선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비핵화 정책에 대한 상이한 판단과 그에 따른 핵무장 선호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보수와 중도 성향의 대중이 경제 제재와 군사력 강화의 연장선에서 독자 핵무장 정책을 선호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중도층(51.83%)이 진보층(24.42%)과 보수층(23.75%)의 합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도 대중의 북한의 위협, 한미 동맹, 한국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핵무장 여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분석에서는 유화적 비핵화 정책에 대한 중도 대중의 불신이 자체 핵무장 여론의 주요한 동력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V. 논의와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은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북한 위협과 미국 불신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려준다. 2010년대 북한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수십 기의 핵무기를 갖추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 다수의 한국인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약화되며 트럼프즘이 득세하자 미국의 한국 방위를 우려하는 대중은 독자적 방어 능력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변수는 상호작용 속에서 핵무장 여론을 이끌고 있지는 않다. 즉,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더라도 북

핵 위협이 유지된다면 핵무장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핵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방위공약이 의심을 산다면 지금은 핵무장 선호는 유지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핵무장 여론의 특징은 스스로 북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대중에게서 한층 뚜렷하다. 북한 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을수록 자체 핵무장을 선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위협과 미국 변화에 대한 정보에 더 많은 대중이 노출될수록 한국 스스로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가는 독자 핵무장이 가져올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하며 대안 모색을 지지하고 있지만, 관심 대중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 대중이 핵무장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일부 지식인과 결합하여 핵무장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정치적 중도층이 북한에 대한 지원과 남북 경협이 실패했다고 평가할수록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도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탈냉전기 한국의 소위 햇볕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 사이의 인과적 경로를 정치 성향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층의 경우 경제 제재와 군사 억지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클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였다. 정치 성향에 따라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가에 따른 대안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핵무장 여론의 부상은 북한발 안보불안을 직시하고 강대국 동맹국의 방기를 우려한 대중의 합리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대중의 북한과 미국, 나아가 국제정세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맞물려 2010년

대부터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이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냉전 논의와 사고가 자기충족적 예언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18)</sup>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신냉전 프레임에 대해 우리 모두 숙고할 필요가 있다. 자칫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 신냉전을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의 공세가 강화되고 미국의 트럼프즘이 드세질 경우 동아시아 권력정치는 한층 노골화되면서 핵무장 여론은 강화될 것이다. 반대로, 다양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국제질서가 창출된다면 핵무장 여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낙관적 미래를 예상하는 대중이 정부로 하여금 소중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할 것을 요구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은 북한 위협과 미국 쇠락이라는 프레임으로 국제현실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불안을 보여주는 거울인 셈이다. 우리의 현실 혹은 상상한 프레임의 변화가 없다면 대중의 불안은 끊임없이 ‘절대무기’를 향한 요구로 분출될 것이다.

■ 접수: 2024년 11월 20일 / 심사: 2024년 12월 9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sup>18)</sup> 백준기,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분석과 대안』 제7권 3호 (2023), 53-54쪽.



## 【참고문헌】

- Debs, Alexandre and Nuno P Monteiro, *Nuclear Politics: The Strategic Causes of Prolifer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Green, Donald P and Ian Shapiro, *Pathologies of Rational Choice Theory: A Critique of Applications in Political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 Hymans, Jacques E. C.,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March, James G., *A Primer on Decision Making: How Decisions Happ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 McDermott, Rose, *Risk-Taking in International Politics: Prospect The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8.
- Narang, Vipin,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 김양규, 「2024 한국인의 핵무장지지 분석: 워싱턴 선언의 안심 효과 사라졌나?」 EAI 이슈브리핑, 2024-10-22, 2024.
- 류재성, 「정치이념의 정책선호 결정에 있어 정치지식의 역할」 『한국정치연구』 제21권 2호, 2012, 53~86쪽.
- 박주화,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3-04, 2023.
- 백준기,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에 관한 비판적 소론: ‘차가운 평화’(cold peace)의 정치적 결과」 『분석과 대안』 제7권 3호, 2023, 27~59쪽.
- 정상미, 「한국민의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IFANS 2023-44, 2024.
- 조동준,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1호, 2011, 47~81쪽.
- 황지환, 「전망이론을 통해 본 북한의 핵 정책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6권 1호, 2006, 79~101쪽.
- Dalton, Toby, Karl Friedhoff and Lami Kim, “Thinking Nuclear: South Korean Attitudes

on Nuclear Weapons,”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https://globalaffairs.org/sites/default/files/2022-02/Korea%20Nuclear%20Report%20PDF.pdf>>, 2022.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pp.54-86.

Sagan, Scott D. “The Cause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4 (2011), pp.225-244.

Tannenwald, Nina, “The Nuclear Taboo: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mative Basis of Nuclear Non-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1999), pp. 433-468.

## Why Do South Koreans Want Nuclear Armament? North Korea's Threat and the ROK-US Alliance

Jung, Sung Chul (Myongji University)

### Abstract

Why does the South Korean public want nuclear armament? By conducting a statistical analysis of South Korea's public survey data, this study argues that North Korea's threat, distrust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belligerent nationalism play major roles in South Koreans' support for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mong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well-informed about North Korea, the perceived threat from North Korea and distrust in the US have a stronger influence, while the role of nationalism is less pronounced.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as politically independent tend to prefer nuclear armament when they see that South Korea's policie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have failed. Those who self-identify as politically conservative tend to give more support for nuclear development when they are more positive about economic sanctions and military armament against North Korea's threats. In an era of a post-unipolar system often characterized by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end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outh Koreans may continue to favor nuclear armament if they perceive the lack of a stable and resilient international system supported by robust bilateral,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across military, economic, technological, and diplomatic sectors.

Keyword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ROK-US alliance, US-China competition nationalism, informed public, political ideology, denuclearization

**정성철 (Jung, Sung Chul)**

---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럿거스 대학(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New Brunswick)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논문상(2017년)을 수상했으며, 『한국정치학회보』, *Armed Forces & Socie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Journal of Peace Research* 등의 학술지에 연구업적을 게재하였다.

특집

## 컨조인트 실험을 통해 본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비용 민감성\*

이경석 (인천대학교)

### 국문요약

북·러 군사밀월로 인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변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진행될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이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다음 네 가지 비용 요인에 맞추어졌다: (1)경제제재로 인한 경제타격, (2)한미동맹 변화와 주한미군 축소, (3)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 축소, (4)한국의 원자력 생태계 파괴. 기존 연구들이 개별 요인의 단편적 영향만을 분석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다양한 비용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제재의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동반될 경우 핵무장 찬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미 간 경제안보·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축소와 원자력 생태계 변화는 핵무장 찬성도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핵무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핵개발, 대중여론, 컨조인트 실험, 경제제재 기간,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한미 포괄적 협력, 민간 원자력 생태계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35>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I. 서론

2024년 6월 19일 새벽 2시 45분, 북한 김정은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였다. 현대판 러시아 차르로 불리는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북한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푸틴의 방북 일정은 하루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국가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전기를 맞이하였다. 두 국가는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3항과 제4항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만나서 상황을 논의하기로 하였고(제3항), 군사적 및 기타 원조의 모든 수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제4항). 이는 1996년 소련의 붕괴로 폐기된 조소 동맹조약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의 군사적 밀착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지면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핵무장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 논의는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속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그 시작점은 정몽준 전 국회의원의 2013년 4월 미국 카네기 국제핵정책회의(Carnegie International Nuclear Policy Conference) 기조연설이다. 북한의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몽준 전 의원은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sup>1)</sup> 자체 핵 개발에 대한 대중 여론 분석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차대한 안보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정치 엘리트들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적 견해를 반영할 정치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대중들의 투표행태에 국내정치 이슈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sup>2)</sup> 특히 핵무장과 같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안보정책들에 대해 대중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중여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대중들의 높은 정책 지지도가 정치 엘리트들의 정책 설계 및 입안에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sup>3)</sup> 대중의 높은 정책 지지도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은 더욱 자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입법부와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더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여론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2017년 말경까지 총 19개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국 대중의 59%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 
- 1) Kyung Suk Lee, "Who follows Whom?: Non-elected Elite Responsiveness to Publ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Working paper (2025).
  - 2) John Aldrich et al., "Foreign Policy and the Electoral Connec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1 (2006), pp. 477~502.
  - 3) Thomas Knecht and M. Stephen Weatherford,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The Stages of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3 (2006), pp. 705~727.
  - 4) Michael Tomz and Jessica L. P. Weeks, "Public Opinion and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7, no. 4 (2013), pp. 849~865.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6개의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61%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찬성하였다.<sup>5)</sup>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는 한국 국민의 핵무장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지만,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여론조사기관들이 단선적이고 직관적으로만 대중들의 핵무기 개발 찬성 여부를 묻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종현 학술원이 실시한 2023년 여론조사의 경우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문항을 사용하여 대중들의 핵무기 개발 견해를 측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대중들이 왜 핵무장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대중들의 핵무장 견해를 선불리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학자들은 양적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국민의 핵무장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분석 연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실험연구(survey experiment)를 바탕으로 한 연구물도 계속 출판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비핵화 회담 실패가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중들의 북한 위협인지도, 남북한 핵 불균형 인식도, 보수적 정치 성향이 높은 자체 핵무장 찬성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 핵 보호국의 확장 억제 정책 공표, 전술핵무기 배치 등은 핵무장 찬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핵무장에 따른 경제피해, NPT 위반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

---

<sup>5)</sup> Victor Cha,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9, 2024), <<https://www.csis.org/analysis/breaking-bad-south-koreas-nuclear-option>>.



택, 북한의 선제타격에 따른 인명피해 가능성 등은 한국 국민의 핵무기 개발 반대 여론을 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기존의 핵무장 여론 연구들은 몇 가지 주요한 한계점을 보인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한계는 경제제재의 시간적 차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시적 경제제재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했으나, 실제 경제제재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피해가 누적된다. 이러한 누적 효과가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변화에 대한 분석도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존 연구들은 한미동맹 파기가 핵무장 여론을 감소시킨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만을 제시할 뿐, 주한미군의 부분 또는 완전 철수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sup>7)</sup>

6) Kyung Suk Lee, "South Korean Cost Sensitivity and Support for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50, no. 3 (2024), pp. 506-536; Jiyoung Ko, "Alliance and Public Preference for Nuclear Forbear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5, no. 4 (2019), pp. 509-529; Lauren Sukin,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6 (2020), pp. 1011-1042; Kyung Suk Lee, "The Microfoundations of Nuclear Prolife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35, no. 4 (2023), pp. 1-12; Sangyong Son and Man-Sung Yim, "Correlates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uclear Proliferation" *Asian Survey*, vol. 61, no. 6 (2021), pp. 1028-1057; Sangyong Son and Jong Hee Park, "Nonproliferation In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Issue 6 (2023), pp. 1095-1127.

7) 핵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로는 자체 핵무장에 따른 국가적 위상, 안보 환경, 환경·생태계, 개발 소요시간 등이 있다. 우선 긍정적 요인들로는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세계 핵클럽 가입으로 인한 국가 위상 제고와 외교안보 자율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또한 독자적 핵억지력 확보, 재래식 군비 감축 가능성,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수단 확보 등의 안보적 이점도 기대할

또한 한미 포괄적 협력관계에 대한 고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안보, 첨단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핵무장이 이러한 포괄적 협력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이것이 핵무장 찬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민간 원자력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핵무장은 상업용 원전 수출, 원자력 원료 공급, 국제 원자력 협력 등 민간 원자력 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핵무장 찬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핵무장 관련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한계를 보인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실험 연구를 통해 자체 핵무장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 중 특정 몇몇 독립변수들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conjoint experiment)을 활용하여 한국 대중들의 자체 핵무장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부정적 요인들도 존재한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책임한 국가라는 낙인이 우려되며, 안보 측면에서도 남북한 저장도 국지도 발 증가,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가능성, 한중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의 위험이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 기간 동안의 안보 취약성과 핵실험에 따른 인체 피폭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적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본 논문은 네 가지 핵심 비용 요인에 주목하였다: (1)경제 타격, (2)한미동맹 파기 혹은 주한미군 축소, (3)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과학기술 협력 축소, (4)원자력 생태계 파괴. 이들 요인에 초점을 맞춘 것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승인할 경우 최소화될 수 있는 핵무장 비용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컨조인트 실험은 다수의 가설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어 전통적인 설문 실험(survey experiment)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은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sup>8)</sup>

컨조인트 실험 분석 결과, 경제제재의 지속기간과 한미동맹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제재가 6개월로 한정될 경우 핵무장 찬성률이 57.8%로 가장 높았으나, 제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영구적일 경우 37%까지 하락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 철수가 없을 경우 찬성률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부분 철수의 경우에도 평균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했으나, 동맹 파기와 완전 철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38.2%까지 하락했다. 반면,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분야의 한미협력 중단은 핵무장 지지도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협력이 유지될 경우 54.1%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두 분야 모두 중단되더라도 기준점 대비 5.9%p 하락하는데 그쳤다. 또한 원전수출 중단(49.2%), 저농축 우라늄 수입중단(50.6%), 국제 핵에너지 협력 중단(50.1%) 등 원자력 생태계 변화는 한국인의 핵무장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미국의 동의 없는 한국의 핵무장 시 감당해야 할 4가지 비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분석하고, 본 논문의 컨조인트 실험에 대한 설명과 실증적 결과를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 대해 본 논문이 지닌 함의를 제시하며

8) Jens Hainmueller et al., "Causal Inference in Conjoint Analysis: Understanding Multidimensional Choices Via Stated Preference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vol. 22, no. 1 (2014), pp. 1~30; Thomas Leeper et al., "Measuring Subgroup Preferences in Conjoint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vol. 28, no. 2 (2020), pp. 207~221.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미국의 동의 없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따른 비용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야기할 수 있는 네 가지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난관이고, 둘째는 한미동맹 변화와 주한미군 축소이며, 셋째는 한미 간 포괄적 협력 축소, 마지막으로 한국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 축소이다. 이러한 비용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과거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완강한 반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핵 비확산이라는 강력한 기조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서 이들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강력하게 억제해 왔다. 이는 냉전 시대 서독을 비롯한 여러 나토 동맹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려 했음에도 여전히 비핵무장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도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미국이 5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다른 동맹국들의 핵 개발 도미노로 이어져 미국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1. 핵무장 비용 1: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 타격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따른 첫 번째 비용은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다.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제재는 크게 국제사회를 통한 다자적 차원의 제재와 주요 무역국들의 양자적 차원의 제재로 구분된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하면서 세 가지 주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첫째, 어떤 경로로도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양도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핵무기를 자체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금지되며, 셋째, 평화적 핵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물질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NPT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메커니즘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조약은 위반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주체나 권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sup>9)</sup> 실제 경제제재는 주로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탈퇴하고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7장 41조에 근거하여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제재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할 경우, NPT 조약 제10조 1항에 근거하여 먼저 NPT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NPT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최고 이익(supreme interests)'이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탈퇴가 승인되면 IAEA의 핵 관련

<sup>9)</sup> 박민 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1호 (2021), 71~95쪽.

감시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한국의 NPT 탈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북한의 불법적 핵 능력 고도화가 한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비상사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한국의 NPT 탈퇴는 법리적,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문제는 NPT 탈퇴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 차원의 경제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찬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없이 추진되는 독자적 핵무장은 결국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sup>10)</sup>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는 다자적 차원뿐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46), 무기통제 및 군축법(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ct of 1961), 시밍턴 개정안(Symington Amendment), 글렌 개정안(Glenn Amendment), 핵확산 금지법(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 등 다양한 제재법을 보유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법들을 근거로 미국은 핵무기 확

10)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아인혼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엔 제재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다자적 차원의 경제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조은정, 「특별 대담 “한국 NPT 탈퇴 후 핵무장 정당”vs“흑독한 대가 치를 것”」 『미국의 소리(VOA)』, 2022년 12월 23일, <<https://www.voakorea.com/a/6888092.html>>.

11)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7 (2019); Newell Highsmith, “Would the U.S. Sanction Allies Seeking the Bomb?”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20, 2023),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3/04/would-the-us-sanction-allies-seeking-the-bomb?lang=en>>.

산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경제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암묵적 동의 없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국가는 중국이다. 과거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경제제재로 대응했던 것처럼,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중국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경제안보 지수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제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 품목이 한국의 20배에 달하며, 이러한 비대칭적 무역의존도를 활용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sup>12)</sup>

핵 개발에 따른 경제제재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 강화로 제조업 생산율이 12.9% 감소하고 실질 소득률이 15.3% 하락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예상될 때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IMF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면 핵무장 찬성도가 25%p 하락하며,<sup>13)</sup> 심각한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찬성률이 36.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14)</sup>

12) 김병연, 「한국 핵무장론의 현실성 검토」 『중앙일보』 2024년 7월 1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014#home>>.

13) Kyung Suk Lee, "South Korean Cost Sensitivity and Publ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Sangyong Son and Jong Hee Park, "Nonproliferation In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Evidence from South Korea"

14)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정보를 응답자들이 받지 않았을 때 63.2%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였다":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 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24년 2월 8일),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경제제재의 지속 기간에 따른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 변화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핵확산 관련 경제제재가 평균 7.5년간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15)</sup> 장기적인 경제 타격이 핵무장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a: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1b: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지속될수록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는 더 감소할 것이다.

## 2. 핵무장 비용 2: 한미동맹 변화와 주한미군 축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따른 주요 비용 중 하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체제의 변화다. 한국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핵무장을 하더라도 현재의 한미동맹과 2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유지되는 것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미국과의 양자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미국의 조약 동맹국 중 핵무장으로 나아간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다자동맹기구인 NATO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고, 핵비확산 규범(NPT) 수립 이전에 이미 핵개발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사례는 한미 양자 동맹관계를 예측하는 데 완벽한 비교사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두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한국의 핵무장이 동맹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

mai1674786536&category=51&idx=114284>.

15) 박재석·황태희,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4호 (2018), 103-130쪽.



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먼저 분석해보면, 1954년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에서의 미국의 프랑스 방기와 1956년 수에즈 위기(Suez Crisis)에서 보여진 미국의 태도로 인해 프랑스는 미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고, 이는 독자적 핵무장으로 이어졌다. 이후 프랑스는 1966년 나토의 군사지휘구조에서 탈퇴하였는데, 이는 드골 대통령이 독립적인 국방정책 추구, 프랑스군 통제권 유지, 그리고 자국 핵 억지력의 독자성 확보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드골은 미국 주도의 NATO 체제보다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인들의 유럽’을 지향했다.

안보-자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핵피후견인(nuclear protege)의 핵개발은 핵후견인(nuclear patron)과의 동맹관계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이론은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감소할수록 동맹 파기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핵피후견인은 외교·안보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핵후견인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며, 핵후견인은 핵피후견인에 대한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프랑스의 사례는 핵개발을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 외교·안보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NATO 군사지휘구조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경우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는 프랑스의 사례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동맹 파기는 미국 측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연루의 위험이 큰 확장억제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한미동맹이 조약동맹이라는 특성상,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에 따른 군사적 위협부담을 회피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기존 외교·안보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관계 유지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핵무장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미영 핵 협력 관계의 발전 과정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나, 전후 맥마혼 법(1946) 제정으로 핵 협력이 제한되는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1954년 원자력법 개정과 1958년 미영 상호방위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냉전 시기 소련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영국의 가치, 영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성공(1952년), 그리고 수에즈 위기(1956)를 통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이후 양국은 핵운반체계 제공, 핵실험 시설 공유, 데이터 교환, 핵탄두 설계 기술 협력, NATO를 통한 공동 표적 설정 등을 통해 ‘특별 핵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영국의 핵억지력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영 간의 특수한 핵 협력 관계는 핵무장 이후에도 동맹 관계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미국과 특별한 핵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 미영 핵협력이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했던 것처럼,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핵무장한 한국과 특별한 핵동맹 관계를 유지할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핵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며, 이는 미국의 효율적인 핵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70년 이상의 동맹 역사를 통해 구축된 제도적 성숙도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미영 핵협력의 사례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핵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지지도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핵무장 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대중들의 지지도는 매우 높을 것이나, 동맹 파기로 이어질 경우 지지도는 크게 감소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핵 개발이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응답자들의 핵무장 찬성도는 25%p 가까이 감소했다.<sup>16)</sup> 이는 한국 대중들이 한미동맹을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91.6%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sup>17)</sup> 과반수가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지지했고,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국방·안보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다. 21세기 초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7~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 군사력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sup>18)</sup> 미국 내 양당이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9.11 테러 이후 본격화되었으며,<sup>19)</sup> 한국 정부는 안보 공백을 우려해 이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16) 이상신 외, 『KINU 통일외식 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17)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25일, <<https://www2.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666>>.

18) Seong Hyeon Choi and Hayley Wong, "US military still has an edge, but China is catching up with hi-tech weapons"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16, 2024,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266740/us-military-still-has-edge-china-catching-hi-tech-weapons>>.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지 못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주된 위협이 아닌 북한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붙잡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북핵 위협 대응은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 억제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은 계속 주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한국의 지리적 이점 때문인데, 특히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 이를 ‘중국의 턱을 겨냥한 비수’라고 표현할 정도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을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 대중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는 90%의 응답자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핵무장을 주한미군의 안보 대체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2024년 4월 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찬성이 40.1%인 반면, 핵무장 찬성은 44.6%로 나타났다. 2021년과 2023년 조사를 비교해보면, 주한미군 주둔 선호도는 49.5% 수준에서 10%p 가까이 하락한 반면, 핵무장 선호도는 33.8%에서 10%p 상승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9) 이상현,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 (2006), 155~178쪽.

가설 2a: 핵무장에 따른 한미동맹 파기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2b: 핵무장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3. 핵무장 비용 3: 경제 안보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 한미협력 축소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근간이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은 2009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2022년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다. 2022년 한미정상은 기존의 군사·안보 영역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최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 경제·기술 안보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sup>20)</sup> 이러한 동맹 확대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관련이 깊다. 21세기 초 미국이 상대적 쇠퇴기를 겪는 동안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을 급격히 확장했다.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전략과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경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제약 원료, 스마트폰, 희토류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의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리튬 배터리 공급망의 76%, 희토류 금속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보건용품 등 필수품 공급에서도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21)</sup>

중국이 국제 공급망에서의 우위를 자국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무기화(weaponization)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이에 맞서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면서 동맹국들과의 앨라이쇼어링(ally-shoring)에

<sup>20)</sup> 강구상 외,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10 (2022년 5월 30일).

<sup>21)</sup> Ash Jain and Matthew Kroenig, “Ally Shoring: A New Tool of Economic Statecraft” *Orbis*, vol. 67, Issue 1 (2023), pp. 21~26.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2)</sup> 2022년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과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얼라이쇼어링 핵심 국가로 자리잡았다. 한미 경제안보대화과 한·미·일 삼국 경제안보대화 신설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4차산업 육성을 국가성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로봇,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 핵심 첨단산업을 선정했다.<sup>23)</sup> 중국은 2025년 이후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국제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2035년 이후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여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24)</sup>

미국은 중국의 첨단과학기술 굴기에 맞서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하고 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통제목록(CCL)을 통해 3,100여 개 품목의 해외 수출을 통제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며, 중국 첨단산업 관련 투자도 제한하고 있다.<sup>25)</sup> 또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2023년 12월 한미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

22) 이승주,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2024년 세계 경제 질서 전망: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재세계화」 동아시아 연구원, 2024년 1월 4일, <[https://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22320&board=kor\\_englishletter&keyword\\_option=&keyword=&menu=news](https://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22320&board=kor_englishletter&keyword_option=&keyword=&menu=news)>.

23) 윤혜령,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 5G 기술과 플랫폼을 둘러싼 네트워크 전쟁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33집 (2021), 133~161쪽.

24) *Ibid.*

25) 정혜영 외,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전략 강화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3 (2024),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_53](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_53)>.

화에서는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AI·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sup>26)</sup>

이러한 경제안보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한미 협력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동맹국으로 인식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와 미국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미국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으로 인식하게 되면, 경제안보·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 경제안보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상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과의 첨단과학 기술 협력은 국가 경쟁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 대중들도 이러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경제성장 도움”(44.2%)과 “과학기술 협력·인적 교류 필요”(10.5%)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sup>27)</sup> 따라서 자체 핵무장으로 인해 경제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포괄적 협력이 저해될 경우,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두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3a: 핵무장에 따른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축소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가설 3b: 핵무장에 따른 한미 간 첨단과학 기술 협력 축소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26) 이승주,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1호 (2022), 227~256쪽.

27) 「국민 53.7% 한미동맹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연합뉴스』, 2023년 9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039500005>>.

#### 4. 핵무장 비용 4: 한국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축소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와 환경문제로 크게 위축되어왔다.<sup>28)</sup> 전 세계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이 1996년 17.5%에서 2021년 9.8%로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력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근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15년 만에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코 원전 수주 배경에는 한국의 여러 강점이 작용했다.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으로 한정되는데, 한국은 다수의 원전 건설 경험과 신형 경수로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원전 건설비용은 프랑스와 미국의 절반 수준이며, 중국보다도 14% 저렴하다. 현 정부가 원전 수출 10기를 국정과제로 삼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펼치는 것도 강점이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가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사회 영향력은 원전 수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원전수출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수출은 평화적 사용으로만 제한되는데, 한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타국가 원전 수출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경우, 핵무장은 국제적 평판과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현재 세계 원전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

<sup>28)</sup> 김수진,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년 3월 20일, <[https://www.wfri.re.kr/ko/web/research\\_report/research\\_report.php?id=1103&page\\_type=view&mode=view](https://www.wfri.re.kr/ko/web/research_report/research_report.php?id=1103&page_type=view&mode=view)>.



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수출 원전 건설 34기 중 러시아가 23기(68%), 중국이 4기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기업들을 중심으로 원전 기술 자립화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보유한 원전설계 시공능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원전 수주에는 외교·안보적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교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게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이 공들이고 있는 사우디 원전 수출 사업(2030년까지 12조 원 규모의 1400MW급 원전 2기)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사우디 간의 우라늄 농축 협상 결과가 한국의 수주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한미 원자력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기술공동개발, 원자력 공급망 확보, 첨단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협력에 합의했음에도, 한국이 미국의 핵심 이익인 비핵확산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협력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던 원전 발전 비중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2022년 29.6%, 2023년에는 30%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2030년까지 32.4%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에 필수적인 저농축우라늄 수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축우라늄은 천연 우라늄의 U-235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인 원자력 발전연료로, 한국의 주요 원전 형태인 경수로

29) 「리·중이 79% 장악한 원전수출시장 ... 한미 원전동맹으로 돌파해야」 한국경제 인협회 보도자료·발표문, 2023년 5월 3일,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76&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76&category=ST)>.

3~5%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세계 우라늄 농축 시장은 소수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다.<sup>30)</sup> 러시아(40%), 영국·독일·네덜란드 합작회사 Urenco (27%), 프랑스(14%), 중국(12%) 등이 주요 공급자이며,<sup>31)</sup> 한국은 이 중 러시아로부터 33%를 수입하고 있다.<sup>32)</sup> 이들 공급국은 모두 NPT 체제의 공식 핵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을 중시하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농축 우라늄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핵에너지 협력도 저해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비용과 안정성이 뛰어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i-SMR 개발을 통해 원전시장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최근 아시아 소형모듈원전 협력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이러한 국제협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핵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핵무장은 국제사회와 주요 원전 공급국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 
- 30) 천연우라늄은 전 세계 50여 국에 풍부하게 매장되었으며, 우라늄 광석을 수출하는 나라는 20여 개국에 이른다.
- 31) 이유호, 「경제안보시대의 새로운 뇌관 ‘우라늄 농축’ 시장에서 무슨일 벌어지나」 지구와 에너지, 2022년 7월 3일, <<https://www.earth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
- 32) 「원자력 발전 필수 원료인데...“언제 끊길지 몰라” 中도 사할 [원자재 이슈탐구] 『한국경제』, 2024년 3월 25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52751i>>.

- 가설 4a: 핵무장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수출 감소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4b: 핵무장에 따른 민간 원자력 에너지 생산 차질은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가설 4c: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핵에너지 협력 저하는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 III.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민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전국 대표성을 가진 한국인 표본 (N=1,785)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된 컨조인트 실험을 실시하였다. 컨조인트 실험은 응답자들이 제안 내의 다양한 속성들을 어떻게 우선순위화하는지와 그들의 의사결정 선호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응답자들이 여러 정보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면적인 선호도를 조사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으며,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측면에 집중하면서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본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sup>33)</sup>

〈표 1〉 컨조인트 실험의 속성(Attribute) 및 값(Value)

속성(Attribute)	속성값(Value)
(핵무장에 따른) 경제 타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의 소득 25% 하락, 6개월 후 원상회복</li> <li>• 귀하의 소득 25% 하락, 2년 후 원상회복</li> <li>• 귀하의 소득 25% 하락, 4년 후 원상회복</li> <li>• 귀하의 소득 25% 하락, 6년 후 원상회복</li> </ul>

<sup>33)</sup> Jens Hainmueller et al., “Causal Inference in Conjoint Analysis: Understanding Multidimensional Choices Via Stated Preference Experi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 불가</li> </ul>
(핵무장에 따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 유지</li> <li>• 한미동맹 유지 및 비전투병 부분 철수</li> <li>• 한미동맹 유지 및 전투병 부분 철수</li> <li>• 한미동맹 유지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li> <li>•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li> </ul>
(핵무장에 따른) 한미협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유지</li> <li>• 과학기술 협력 부분 중단</li> <li>• 과학기술 협력 완전 중단</li> <li>• 경제안보 협력 부분 중단</li> <li>• 경제안보 협력 완전 중단</li> <li>•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 모두 완전 중단</li> </ul>
(핵무장에 따른) 핵에너지 협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원전 해외 수출 중단</li> <li>•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 수출 중단</li> <li>• 국제사회와 전반적 핵에너지 협력 중단</li> </ul>

컨조인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응답자들에게 인구통계학적 질문과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국민들의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sup>34)</sup>을 제시한 후,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모든 응답자는 공통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짧은 설명글(vignette)을 읽었다.<sup>35)</sup> 설명글은 증대되는 북핵위협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현재 어떠한 안보 위협에 처해있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배경설명을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sup>36)</sup> 설명글을 읽은 후 응답자들은 컨조인트 실험에 대한 일반적인

34) 제시된 개념은 “미국의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이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 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35) 세부내용은 부록 참고.

지침을 제공하였다.<sup>37)</sup> 이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상이한 컨조인트 실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장시 발생 가능한 4가지 속성들의 세부내용을 응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제시된 4가지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 제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 포괄적 협력, 민간 핵에너지 협력이다.

〈표 2〉: 실제 응답자가 본 컨조인트 실험 표 예시

선생님은 두 가지 결과 중 어떤 결과상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

사안	결과 1	결과 2
경제타격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6년 소요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4년 소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비전투 병력 철수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완전 철수
한·미 협력	한미 경제안보협력 전면중단 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한미 과학기술협력 부분 중단 예: AI,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핵에너지 협력	국제사회와 산업·연구·군사분야 핵 협력 전면중단	산업용 원전수출중단으로 연 3조 5천억 원 손실
선택	○	○

〈표 1〉은 4개의 속성 및 각 속성들의 세부값들을 정리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결과를 각 속성별로 나열한 두 개의 프로파일 쌍이 제시되었다(〈표 2〉 제시). 각 프로파일은 4개의 속성들 중에 각각의 속성값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구성된 조합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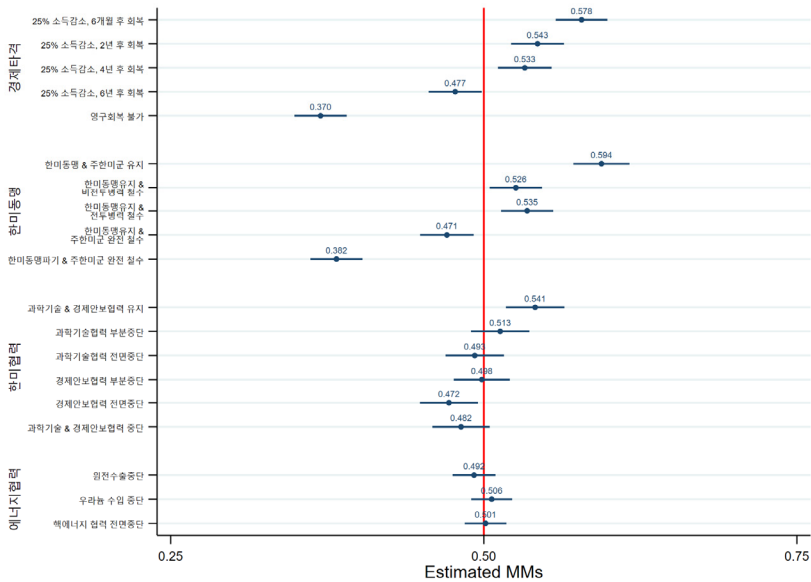
36) 세부내용은 부록 참고.

37) 세부내용은 부록 참고.

전체적인 표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총 세 쌍의 결과 세트(총 6개의 결과 세트를) 응답자들에게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1,785명의 응답자가 3회에 걸쳐 평가한 10,710개의 프로필(3,570쌍)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세트를 읽고 응답자들은 “제시된 두 가지 결과 중 어떤 결과상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결과 1 또는 결과 2 중 하나로 답하였다.

### IV. 결과분석

〈그림 1〉 한계평균 (Marginal M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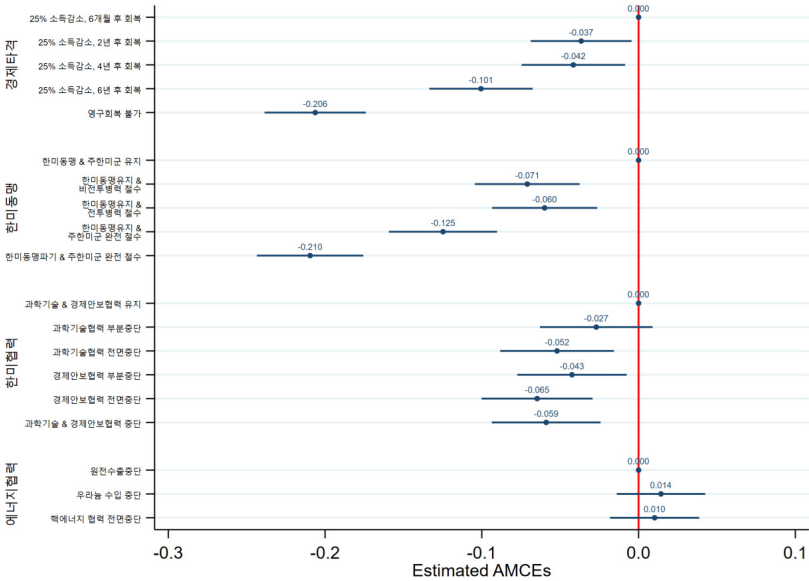


<그림 1>은 다른 속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개별 속성의 세부 속성 값들의 한계평균(marginal means)과 95% 신뢰구간을 표시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핵무장에 관한 두 개의 결과 중에서 하나의 결과를 강제로 선택해야 했기에(forced choice) 하나의 결과를 선택할 확률은 점선으로 표시된 0.5(50%)이다.

먼저 경제제재의 경제타격과 관련하여, 자체 핵무장이 6개월 이내의 25% 개별 소득감소로 한정되었을 때 응답자들이 핵무장을 찬성할 확률은 57.8%, 2년 이내로 한정되었을 때 54.3%, 4년 이내로 한정되었을 때 53.3%, 6년 이내로 한정되었을 때 47.7%, 영구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핵무장을 찬성할 확률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무장에 따른 개개인의 경제타격이 지속될수록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들이다.

경제적 타격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었을 경우, 전체 평균(50%)보다 약 8%p 찬성도가 증가한 반면,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타격이 핵무기 개발 착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핵무장 찬성도가 전체 평균보다 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경제제재에 대한 경제타격이 4년 이내로 한정될 경우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가 50%를 상회한다는 점이다. 경제타격이 2년 이내로 한정되었을 경우 전체 평균보다 약 4%p 증가하였고, 4년 이내로 제한되었을 경우 3%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한 개인소득 감소가 6년 정도 지속되면 한국 대중들의 핵무장 지지도는 전체 평균보다 약 2.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평균한계구성효과 (Average Marginal Component Effects)



〈그림 2〉는 평균한계구성효과(Average Marginal Component Effects, AMCEs)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 속성값을 기준으로 다른 속성값들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경제제재에 대한 경제타격이 6개월 내로 한정된다는 속성값을 기준점으로 볼 때, 경제제재가 2년 이내로 지속되면 핵무장 찬성도는 3.7%p 감소하고, 4년 이내로 지속될 경우 핵무장 찬성도는 4.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각 속성값의 한계 평균값 차이만큼 찬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6년 지속되면 6개월로 한정되었을 경우보다 10.1%p 핵무장 찬성도가 감소하고, 경제제재에 대한 개인소득 감소가 회복 불가능할 경우 무려 20.1%p 자체 핵무장 찬성도가 하락하였다. 본 분석결과는 가설 1a와 1b를 지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들이 핵무장을 찬성할 확률은 59.4%이다. 한미동맹이 유지되면서 주한미군의 비전투병력이 부분 철수할 경우 핵무장 찬성확률은 52.6%, 전투병력이 부분 철수할 경우 53.5%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전체 평균(50%)을 각각 2.6%p, 3.5%p 상회하는 수치이다. 반면 한미동맹이 유지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핵무장 찬성확률은 47.1%이고,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자체 핵무장 찬성비율은 38.2%로 나타났다. 자체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핵무장 찬성도는 전체 평균(50%) 아래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함께 일어날 경우 찬성도가 전체 평균보다 약 12%p 낮아졌다.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들이다.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선에서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가 일어나더라도 한국 대중들의 자체 핵무장 찬성도가 전체 평균인 50%보다 높다는 것이다. 자체 핵무장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로 이어지지 않는 한 북핵위협 대응을 위해 자체 핵무장이 주한미군의 안보대체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국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이 한국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이상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을 경우 주한미군의 비전투병 또는 전투병 부분 철수는 7.1%p, 6.0%p 핵무장 찬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하지만 한미동맹이 유지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찬성도는 12.5%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일어나면 기준점에 비해 무려 21%p 정도로 자체 핵무장 찬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분석결과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축소는 한국 국민들의 핵무장 찬

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가설 2a와 2b를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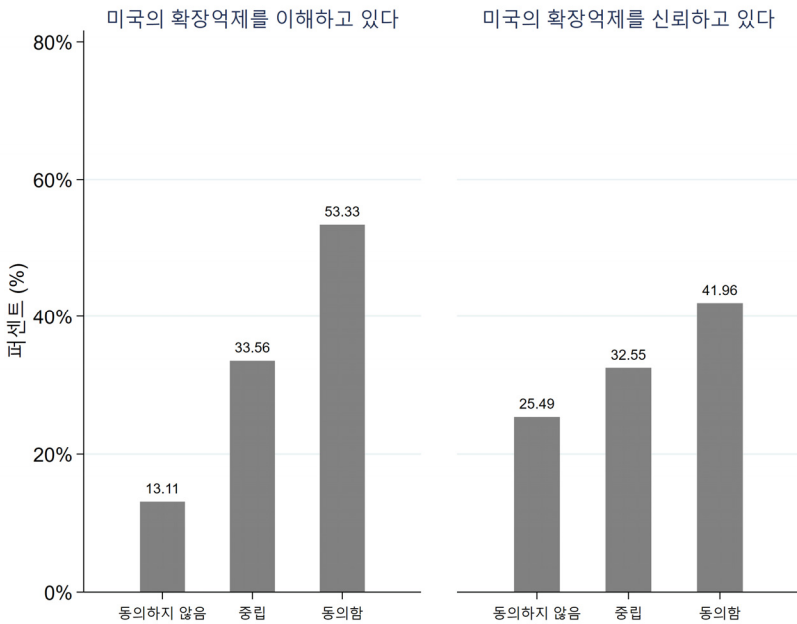
다음으로 경제안보 및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한미협력을 살펴보겠다. 먼저 <그림 1>에서 나타났듯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 간 경제안보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이 유지될 경우 핵무장 찬성도는 54.1%이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4.1%p 상회하는 수치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경제안보협력의 전면 중단을 제외하고 다른 속성값들의 한계 평균은 95% 신뢰수준에서 전체 평균인 50%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한계구성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미 간 경제안보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유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에 따르면 기준점에 비해 과학기술 협력 부분 또는 전면 중단은 각각 2.7%p, 5.2%p의 핵무장 찬성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안보 분야 협력 부분 또는 전면 중단은 4.3%p, 6.5%p 찬성도 감소로 귀결되었다. 과학기술 및 경제안보 두 분야의 한미협력 전면 중단은 5.9%p 자체 핵무장 찬성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값들은 95% 신뢰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다. 따라서 본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설 3a와 3b를 모두 지지한다. 앞서 설명한 경제적 타격과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에 비해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한미 간 협력 축소 비용은 한국 대중들의 자체 핵무장 찬성 견해를 크게 하락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원자력 생태계 변화에 관한 분석이다. <그림 1>에 따르면 원전수출 중단, 저농축 우라늄 수입중단에 따른 전력 차질, 국제사회와의 핵에너지 협력 전면 중단될 경우 응답자들의 자체 핵무장 찬성도는 49.2%, 50.6%, 50.1%이다. 각각의 속성값들의 한계 평균은 95% 신뢰수준에서 전체 평균인 50%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2>에 따르면 원전수출 중단에 따른 경제피해를 기준

점으로 설정하여 속성값들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핵무장에 따른 한국 원전 생태계 변화 비용은 대중들이 자신들의 자체 핵무장 견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전체 응답자들의 미국 확장억제 이해도 및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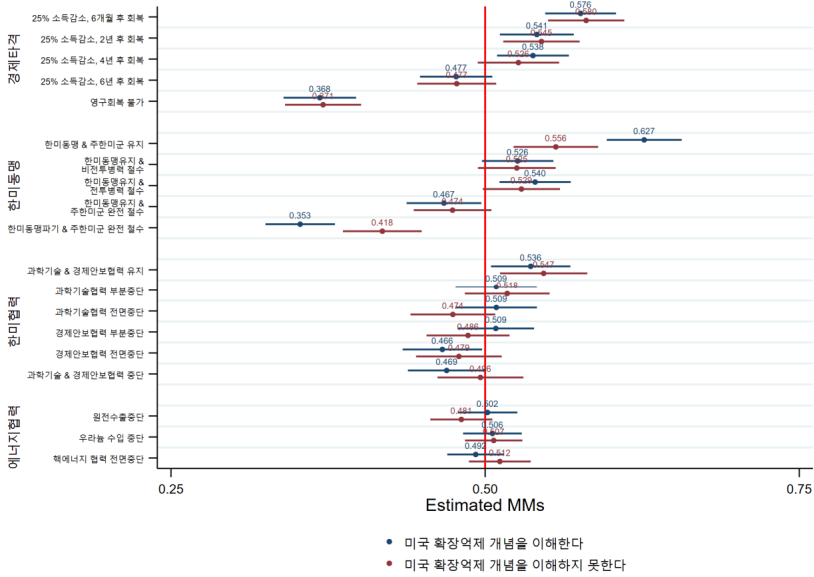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문제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급속도로 고도화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영토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한국을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자체 핵무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설문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 또는 핵우산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한 얼마나 신뢰하는지 측정하였다. <그림 3>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33%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이해한다고 답변하였다. 한국 대중의 과반 이상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이해한다고 답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응답자 중 13.11%는 미국의 확장억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3.56%는 확장억제를 이해한다는 물음에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과반 이상의 대중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이해함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는 41.96%에 머물렀다. 25%의 응답자들은 미국의 안보보장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32.55%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응답자들의 미국 확장억제 이해도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위에서 분석한 핵무장 비용이 자체 핵무장 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의 확장억제 이해도와 신뢰도를 이진법으로 다시 측정하였다.<sup>38)</sup>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응답자들의 미국 확장억제 이해도와 신뢰도에 따라 핵무장 비용이 대중들의 핵무기 찬반 견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변화에 관해서 응답자별 확장억제 이해도 및 신뢰도의 유무가 핵무장 찬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응답자들은(62.7%) 이해도가 없는 응답자들(55.6%)보다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 핵무장 찬성도가 약 7.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참고).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응답자들은(61.8%) 신뢰도가 부재한 응답자들(57.6%)보다 약 4.2%p 높은 자체 핵무장 찬성도를 보였다(<그림 5> 참고).

<sup>38)</sup> 1 = 이해 또는 신뢰함, 0 =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음.

〈그림 4〉 응답자별 한미확장억제 이해도: 한계평균 (Marginal M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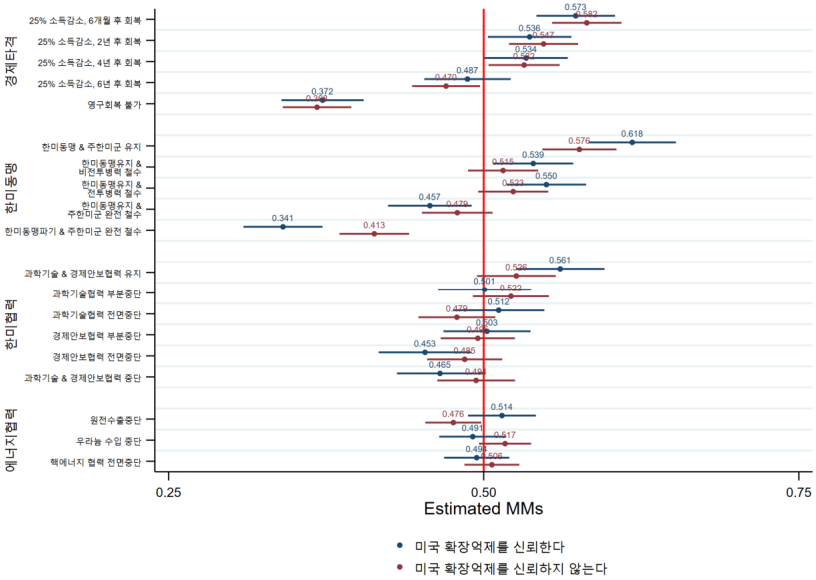


또한 미국 확장억제 이해도와 신뢰도가 있는 응답자들의 핵무장 찬성도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더욱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확장억제 이해도가 없는 응답자들의 자체 핵무장 찬성도는 41.8%이고, 이해도가 있는 응답자들의 핵무장 찬성 비율은 35.3%이다. 두 응답자 집단의 핵무장 찬성도 차이는 약 6.5%p이다(〈그림 4〉 참고).

이와 유사하게 확장억제 신뢰도가 없는 응답자들은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할 경우 자체 핵무장 찬성도는 41.3%이며, 신뢰도가 있는 응답자들의 찬성도는 34.1%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핵무장 찬성도 차이는 약 7.2%p이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값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제외한 다른 속성값(경제 제재, 한미 포괄적 협력, 원자력 에너지 협력)들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이해도 및 신뢰도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상이한 결과값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5〉 응답자별 한미확장억제 신뢰도: 한계평균 (Marginal Mean)



## V. 결론 및 함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북러의 군사적 밀착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는 형국이다. 2023년 4월 한

미 간 워싱턴 선언(Washington Agreement) 이후 잠잠했던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미국 조야를 상당히 긴장시켰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미국이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글로벌 핵 비확산체제의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였다. 핵심 내용은 한국이 국제 비확산체제를 준수하는 대신 한미 양자간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핵전략 기획과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양자 채널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핵전략을 한반도에 투사함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 의사결정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된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동맹은 핵동맹으로 발전하였고, 올해 말까지 4번의 핵협의그룹 회의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긴밀히 통합해 나가기로 하였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핵협의그룹을 통해 긴밀히 상호 소통함에도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 논쟁이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여전히 미국만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핵능력 사용권을 한국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는 한미 확장억제가 한국 대중들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 요인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주는 심리적 효과보다 낮기 때문이다. 억제의 측면에서 볼 때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면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다. 미국과 북한의 핵능력(nuclear capability)을 단순히 비교하면, 북한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한국의 대

중들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세부 내용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그 군사적 합의 역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워싱턴 선언의 결과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대중들은 미국 핵잠수함의 입항이 뜻하는 군사적 합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매우 직관적이며 강력하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 여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자체 핵무장의 실현 가능성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국과의 합의이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동의할 경우 핵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먼저 경제제재에 따른 경제타격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경제제재가 채택될 확률이 낮아진다. 나아가 미국과 같은 외교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EU 국가들의 양자 차원의 경제제재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중국의 경제제재는 예외이다. 또한 자체 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도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경제안보와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한미 간 포괄적 협력에 관련된 타격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한국의 민간 원자력 분야 생태계 피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인가? 1970년부터 미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50여 년 동안 공들여 유지해 왔다. 한국의 핵무장 용인이 핵 잠재력을 가진 동맹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핵 비확산 체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를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추측과 기대는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이 구축해 온 핵 비확산 체제를 스스로 붕괴시킨다면, 한국은 지체 없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전반적 외교·안보 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에서 다시 발견되는 고립주의 정책노선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공화당 지지자 및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 반대하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일시적인 여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노선이다. 고립주의 노선은 트럼프 1기 정부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발현되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자 시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 노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도 주지해야 한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이 비슷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 원칙과 고립주의 노선은 향후 공화당의 주류 외교정책 노선으로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sup>39)</sup>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간접적으로 정책화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핵무장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핵무장이 필요한가?, 핵무장은 실현 가능한가? 이

<sup>39)</sup> Kyung Suk Lee and Kirby Goidel, "U.S. Public Support for the U.S.-NATO Al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 34, Issue 2 (2022), pp. 1~10.

두 질문에만 머물지 말고 핵무장한 한국의 핵독트린 및 핵태세에 학술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접수: 2024년 11월 20일 / 심사: 2024년 12월 9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강구상 외,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10, 2022년 5월 30일.
- 김보미, 「2차 핵시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7, 2019.
- 김수진,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 보고서 2023년 3월 20일, <[https://www.wfri.re.kr/ko/web/research\\_report/research\\_report.php?idx=1103&page\\_type=view&mode=view](https://www.wfri.re.kr/ko/web/research_report/research_report.php?idx=1103&page_type=view&mode=view)>.
- 박민 외, 「핵확산금지조약(NPT)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NPT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6권 1호, 2021, 71~95쪽.
- 박원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 통합억제와 전 세계 대비태세」 『한국국가전략』 제7권 2호, 2022, 29~58쪽.
- 박재석·황태희,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4호, 2018, 103~130쪽.
- 윤혜령, 「4차 산업혁명시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 5G 기술과 플랫폼을 둘러싼 네트워크 전쟁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33집, 2021, 133~161쪽.
- 이상신 외, 「KINU 통일외식 조사 2023: 한국의 자체적 핵보유 가능성과 여론」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24년 2월 8일,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14284](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14284)>.
- 이상신 외, 「KINU 통일외식조사 2024: 요약보고서」 통일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25387](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nav_code=mai1674786536&category=51&idx=125387)>.
- 이상현, 「한미동맹과 전략적 유연성」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 2006, 155~178쪽.
- 이승주,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② 2024년 세계 경제 질서 전망: 미중 전략 경쟁, 공급망 재편, 그리고 재세계화」 동아시아 연구원 2024년 1월 4일, <[https://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22320&board=kor\\_eneNewsletter&keyword\\_option=&keyword=&menu=news](https://www.eai.or.kr/m/publication_01_view.asp?intSeq=22320&board=kor_eneNewsletter&keyword_option=&keyword=&menu=news)>.
- 이승주, 「기술과 국제정치: 기술 패권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8권 1호, 2022, 227~256쪽.

이유호, 「경제안보시대의 새로운 뇌관‘우리농 농축’시장에서 무슨일 벌어지나」 지구와 에너지 2022년 7월 3일, <<https://www.earth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2>>.

정혜영 외, 「미국의 경제안보·핵심기술 통제전략 강화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vol. 3, 2024,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53>>.

Aldrich, John et al., “Foreign Policy and the Electoral Connec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 1 (2006), pp. 477-502.

Brewer, Eric, “Mind the Gaps: Reading South Korea’s Emergent Proliferation Strategy”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6, Issue 2 (2023), pp. 141-160.

Cha, Victor,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Center for Strategic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9, 2024, <<https://www.csis.org/analysis/breaking-bad-south-koreas-nuclear-option>>.

Hainmueller, Jens et al., “Causal Inference in Conjoint Analysis: Understanding Multidimensional Choices via Stated Preference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vol. 22, no. 1 (2014), pp. 1-30.

Highsmith, Newell, “Would the U.S. Sanction Allies Seeking the Bomb?”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20, 2023,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3/04/would-the-us-sanction-allies-seeking-the-bomb?lang=en>>.

Jain, Ash and Kroenig, Matthew, “Ally Shoring: A New Tool of Economic Statecraft” *Orbis*, vol. 67, Issue 1 (2023), pp. 21-26.

Kim, Jihee et al.,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45 (November 2023), 103813.

Knecht, Thomas and Weatherford, M. Stephen,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The Stages of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no. 3 (2006), pp. 705-727.

Ko, Jiyoung, “Alliance and Public Preference for Nuclear Forbear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Foreign Policy Analysis*, vol. 15, Issue 4 (2019), pp. 509-529.

Lee, Kyung Suk, “South Korean Cost Sensitivity and Support for Nuclear Weapon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50, Issue 3 (2024), pp. 506-536.

- Lee, Kyung Suk, "The Microfoundations of Nuclear Prolife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35, Issue 4 (2023), pp. 1-12.
- Lee, Kyung Suk, "Who follows Whom?: Non-elected Elite Responsiveness to Publ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Working paper (2025).
- Lee, Kyung Suk and Kirby Goidel, "U.S. Public Support for the U.S.-NATO Al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34, Issue 2 (2022), pp. 1-10.
- Leeper, Thomas et al., "Measuring Subgroup Preferences in Conjoint Experiments" *Political Analysis*, vol. 28, no. 2 (2020), pp. 207-221.
- Morrow,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04-933.
- Son, Sangyong and Park, Jong Hee, "Nonproliferation In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Issue 6 (2023), pp. 1095-1127.
- Son, Sangyong and Yim, Man-Sung, "Correlates of South Korean Public Opinion on Nuclear Proliferation" *Asian Survey*, vol. 61, no. 6 (2021), pp. 1028-1057.
- Sukin, Lauren, "Credible Nuclear Security Commitments can Backfire: Explaining Domestic Support for Nuclear Weapons Acquisi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4, no. 6 (2020), pp. 1011-1042.
- Tomz, Michael and Weeks, Jessica L. P., "Public Opinion and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7, no. 4 (2013), pp. 849-865.
- 김병연, 「한국 핵무장론의 현실성 검토」 『중앙일보』 2024년 7월 1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014#home>>.
- 조은정, 「특별 대담」 "한국 NPT 탈퇴 후 핵무장 정당" vs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미국의 소리(VOA) 2022년 12월 23일, <<https://www.voakorea.com/a/6888092.html>>.
-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9월 25일, <<http://www2.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40666>>.
- "국민 3/4, 핵추진 잠수함 보유 찬성...주한미군 지지율 90%," 『뉴시스』, 2021년 12월

29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229\\_0001705\\_591](https://www.newsis.com/view/NISX20211229_0001705_591)>.

“국민 53.7% 한미동맹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연합뉴스』, 2023년 9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5039500005>>.

“러·중이 79% 장악한 원전 수출 시장 ... 한미 원전동맹으로 돌파해야,” 한국경제 인협회 보도자료·발표문. 2023년 5월 3일,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76&category=ST](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4976&category=ST)>.

“北 비핵화 목표 비현실적...美, 北ICBM 사거리제한에 집중해야,” 『연합뉴스』, 2024년 5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7088200071>>.

“원자력 발전 필수 원료인데...“언제 끊길지 몰라” 中도 사활 [원자재 이슈탐구],” 『한국경제』, 2024년 3월 25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52751i>>.

Choi, Seong Hyeon and Wong, Hayley, “US military still has an edge, but China is catching up with hi-tech weapons,” South China Morning Post, June 16, 2024,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266740/us-military-still-has-edge-china-catching-hi-tech-weapons>>.

Roy, Danny, “Elbridge Colby Is Wrong on the U.S.-ROK Alliance,” The National Interest, May 23, 2024,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elbridge-colby-wrong-us-rok-alliance-211153>>.

“Highlights From Our Interview With Donald Trump on Foreign Policy.” The New York Times, March 26, 2016, <<https://www.nytimes.com/2016/03/27/us/politics/donald-trump-interview-highlights.html>>.

## Cost Sensitivity of Korean Public towards Nuclear Armament : Evidence from a Conjoint Experiment

Lee, Kyung Su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debate over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has reemerged amid rapidly changing security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driven by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is study analyzes how potential costs associated with Sou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ithout implicit U.S. consent affect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The analysis focuses on four cost factors: (1) economic impact from sanctions, (2)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and U.S. Forces Korea (USFK) presence, (3) reduced ROK-U.S.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nd (4) disruption of South Korea's nuclear energy ecosystem. By administering a novel conjoint experi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decreases significantly with prolonged economic sanctions, especially when coupl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complete withdrawal of USFK. However, the reduction in ROK-U.S. cooperation in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sectors, as well as changes in the civilian nuclear energy ecosystem, showed only limited impact on public support for nuclear armament.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novel factors influencing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Key words: Nuclear Development, Public Opinion, Conjoint Experiment, Duration of Economic Sanctions, ROK-U.S. Alliance and USFK, Comprehensive ROK-U.S. Cooperation, Civilian Nuclear Energy Ecosystem

이경석 (Lee, Kyung Suk) 

---

현재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텍사스 A&M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연구분야는 국제안보, 핵·동맹 정치, 강대국정치, 엘리트-대중의 정치역학을 포괄하고 있다. 그의 연구물들은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및 *Social Science Quarterly* 등에 출판되었다. 이경석 교수는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이며 한국정치학회 통일안보연구분과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정책연구분과위원회 위원 및 총무간사를 역임하였다.



## 【부록】

### A. 컨조인트 실험 개요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 조사 업체인 엠브레인(<https://embrain.com/kor/>)에 의뢰하여 한국 유권자 1,785명을 대상으로 실험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우선,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적 관심도와 관련 지식수준, 그리고 미국 확장억제·핵우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를 파악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2024년 6월 시점 한국 안보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비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될 경우 연구의 외적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 실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두개의 가상결과 프로필이 제시된 컨조인트 표를 본 후, (1) 둘 중 어떤 가상결과 프로필이 주어졌을 때 한국의 핵무장을 더욱 지지하는지 그리고 (2) 각각의 가상결과 프로필 하에서 어느 정도로 핵무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답변한다. 이 과정을 세 번 반복하여 응답자들은 총 6개의 가상결과 프로필을 보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총 10,710개의 관측수를 확보하였다.

### B. 컨조인트 실험: 설명글

북핵 위협에 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응답자들이 아래의 설명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60초 이내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중요 내용들은 강조 처리하였다.

**증대되는 북핵위협**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법령화 명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음. 2022년 9월, 북한은 비핵 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2023년 10월,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함.
- 북한은 전술핵 핵탄두 화산31형의 개발을 마쳤으며 2023년 3월 이를 실전배치 함.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최악의 경우에는 남한의 군사대응에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 미국은 자국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겠다는 '확장억제'를 약속해 왔음. 2023년 4월, 한·미 양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함. 그 핵심 내용은 양국 간 핵협의그룹 (NCG)를 창설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핵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여겠다는 것임.
- 2023년 12월,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 2024년 1월, 김정은은 한국을 "제 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 명시하며, 전쟁 발생 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 이처럼 북핵 위협이 고도화 되고 북한이 대남 강경정책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60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C. 컨조인트 실험: 지침**

**핵무장 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가상결과 세트**

- 앞으로 보게 될 표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상결과 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가상결과 세트는 다음의 8가지 사안에 대한 예상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위상, 군사·안보, 경제 타격,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협력,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핵무장 완성시간, 핵 에너지 협력.
-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가상결과 세트 1이 실현될 수도 있고, 가상결과 세트 2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한 세트가 실현되면, 이에 속한 8가지 결과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 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총 세 쌍의 결과 세트(총 6개의 결과 세트)를 보시게 됩니다.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1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D. 컨조인트 실험: 8가지 속성에 대한 설명

### 핵무장 시 발생 가능한 8가지 사안들 세부 설명

- 국가위상  
- 자체 핵무장은 한국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군사·안보  
-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 타격  
-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북한과 이란도 핵개발 여파로 경제 타격을 입음. 자체 핵무장 추진 시, 한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회복소요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미국은 핵무기의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이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한·미협력  
- 미국은 핵무기의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이것이 한미 간 과학기술협력 및 경제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 핵개발 시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피폭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핵무장 완성 시간  
- 한국의 현재 기술력을 기준으로 핵무장 완성까지 필요한 소요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핵에너지 협력  
- 한국은 우라늄을 수입해 원자력 발전으로 국내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또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 학계, 산업계, 관련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핵에너지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4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D. 컨조인트 실험: 응답자들 실제 응답 화면

Q13. 선생님은 두 가지 중 어떤 결과 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

1개 선택

사안	결과 1	결과 2
국가위상	군사주권·외교 자주성 확대	국제 규범 미준수 불량국가로 낙인에·북한, 이란
군사·안보	재래식 군비부담 감소 핵무기로 재래식 군사력 일부 대체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 대비
경제 타격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6년 소요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4년 소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비전투병력 철수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완전 철수
한·미협력	한미 경제안보협력 전면 중단 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한미 과학기술협력 부분 중단 예: AI,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양·토양오염 및 인체피폭 발생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인체피폭 발생
핵무장 완성 시간	4년 이내	2년 이내
핵에너지 협력	국제사회와 산업·연구·군사분야 협력력 전면중단	산업용 원전수출 중단으로 연 3조 5천억원 손실
선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E. 컨조인트 실험: 8가지 속성 및 세부 속성값

본 연구는 이 중 경제타격,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협력, 핵에너지 협력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나머지 네 개 속성에 대한 분석은 동 연구팀 정상미 교수의 논문을 참고할 것.

속성(Attribute)	속성수준(Values)
국가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규범 미준수 불량국가로 국가 위상 하락</li> <li>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으로 국가 위상 하락</li> <li>세계 “핵클럽 가입” 군사 강국으로서 국가 위상 상승</li> <li>군사주권 및 외교영역 자주성 확대로 국가 위상 상승</li> </ul>
군사·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 핵억지력 확보 (전면전)</li> <li>중국으로부터의 증대되는 군사 안보 위협 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력 완성 후 재래식 군비부담 감소</li> <li>· 북한과의 핵군비 경쟁에 따른 국지 도발 위협 증가 (국지도발)</li> <li>·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li> <li>· 핵무장 완성 전 군사적 긴장 고조</li> <li>· 일본 핵무장 가능성 증가</li> </ul>
경제 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개인소득의 25% 하락</li> <li>· 연 개인소득의 25% 하락, 2년 후 점진적 개인소득 회복</li> <li>· 연 개인소득의 25% 하락, 4년 후 점진적 개인소득 회복</li> <li>· 연 개인소득의 25% 하락, 6년 후 점진적 개인소득 회복</li> <li>· 핵개발 이전 수준의 연 개인소득회복 불가능</li> </ul>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미동맹 현 상태로 유지</li> <li>·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비전투병력 부분 철수</li> <li>·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전투병력 철수</li> <li>·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완전 철수</li> <li>·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완전 철수</li> </ul>
한·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과학기술·경제안보 분야 한미협력 유지</li> <li>·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AI,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개발 협력 부분 중단</li> <li>·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AI,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개발 협력 완전 중단</li> <li>·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 부분 중단</li> <li>·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미 협력 완전 중단</li> </ul>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토양 오염·인체 피폭 위험 없음</li> <li>·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로 해양·토양 오염</li> <li>·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로 인체 피폭 위험</li> <li>·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로 해양·토양 오염과 인체 피폭 발생</li> </ul>
핵개발 소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무장 1년 이내</li> <li>· 핵무장 2년 이내</li> <li>· 핵무장 3년 이내</li> <li>· 핵무장 4년 이내</li> </ul>
핵에너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전 수출 중단으로 연 3조 5천억원 손실</li> <li>·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수입중단으로 전력수급차질</li> <li>· 국제사회와 산업·연구·군사분야 핵협력 전면 중단</li> </ul>

## F. 설문지 및 전체적인 컨조인트 실험 흐름

설문 시작 전 아래 문구 삽입  
“선생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통계학적 문항들
------------

###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남자
- 여자

### [나이]

선생님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예시, 1986년)

### [거주지]

선생님의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세종포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참여동의]**

귀하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력]**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 재학/대학 졸업
- 대학원 재학 이상

**[정치성향]**

선생님의 정치적 성향은 어떠하십니까?

- 매우 보수적
- 상당히 보수적
- 약간 보수적
- 보수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음

- 약간 진보적
- 상당히 진보적
- 매우 진보적

### [지지정당]

선생님은 다음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22대 국회 의석수 순 제시)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기타정당
- 지지하는 정당 없음

### [임금]

선생님의 한달 가계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 월 200만원 미만
- 월 200만원 이상 ~ 월 300만원 미만
- 월 300만원 이상 ~ 월 400만원 미만
- 월 400만원 이상 ~ 월 500만원 미만
- 월 500만원 이상 ~ 월 600만원 미만
- 월 600만원 이상 ~ 월 700만원 미만
- 월 700만원 이상 ~ 월 800만원 미만
- 월 800만원 이상 ~ 월 900만원 미만
- 월 900만원 이상 ~ 월 1000만원 미만
- 월 1000만원 이상



**[정치관심도]**

국내·외 정치사안들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항상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치 영역 전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거의 관심 없다
- 아주 간혹 관심 있다
- 관심이 없지도 있지도 않다
- 가끔 관심 있다.
- 거의 항상 관심 있다

**[정치전문성]**

선생님은 국내·외 정치사안들에 대한 스스로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다
- 낮은 편이다
- 낮지도 높지도 않다
- 높은 편이다
- 매우 높다

**[군복무]**

선생님은 군복무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 (육해공군)
- 대체 복무 경험이 있다
- 공익 근무 경험이 있다
- 없다

**외교·안보 문항들**

**[New Page]: 미국 확장억제**

미국의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이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신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아래의 주장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

나는 제시된 미국의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미국 확장억제 신뢰도 1]**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 미국의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New Page]**

**[Attention Check 1]**

선생님의 답변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좌우합니다. 이후에 제시될 정보를 꼼꼼하게 읽으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증대되는 북핵위협**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핵무기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음. 2022년 9월, 북한은 비핵 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정당화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2023년 10월,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함.
- 북한은 전술핵 핵탄두 화산31형의 개발을 마쳤으며 2023년 3월 이를 실전배치 함.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최악의 경우에는 남한의 군사대응에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 미국은 자국 핵무기와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겠다는 '확장억제'를 약속해 왔음. 2023년 4월, 한·미 양국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함. 그 핵심 내용은 양국 간 핵협의그룹(NGG)를 창설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핵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일겠다는 것임.
- 2023년 12월,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 2024년 1월, 김정은은 한국을 "제 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 명시하며, 전쟁 발생 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 이처럼 북핵 위협이 고도화 되고 북한이 대남 강경정책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60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핵무장 시 발생 가능한 두 개의 가상결과 세트**

- 앞으로 보게 될 표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두 개의 가상결과 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가상결과 세트는 다음의 8가지 사안에 대한 예상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위상, 군사·안보, 경제 타격,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협력,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핵무장 완성시간, 핵 에너지 협력.
-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가상결과 세트 1이 실현될 수도 있고, 가상결과 세트 2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한 세트가 실현되면, 이에 속한 8가지 결과가 모두 발생할 것으로 가정합니다.
- 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는 총 세 쌍의 결과 세트(총 6개의 결과 세트)를 보시게 됩니다.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15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핵무장 시 발생 가능한 8가지 사안들 세부 설명**

- 국가위상  
- 자체 핵무장은 한국 국가 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군사·안보  
-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 타격  
- 자체 핵무장은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북한과 이란도 핵개발 여파로 경제 타격을 입음. 자체 핵무장 추진 시, 한국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회복소요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미국은 핵무기의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이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한·미협력  
- 미국은 핵무기의 확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바,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이것이 한미 간 과학기술협력 및 경제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 핵개발 시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피폭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핵무장 완성 시간  
- 한국의 현재 기술력을 기준으로 핵무장 완성까지 필요한 소요 시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 핵에너지 협력  
- 한국은 우라늄을 수입해 원자력 발전으로 국내 에너지를 공급하고, 해외에 원전을 수출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또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해외 학계, 산업계, 관련기관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음. 한국이 핵무장을 강행할 경우, 핵에너지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칸샘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45초 후 [다음]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컨조인트 결과 테이블 1 (예시)

사안	결과 1	결과 2
국가위상	군사주권·외교 자주성 확대	국제 규범 미준수 불랑국가로 낙인 예: 북한, 이란
군사·안보	재래식 군비부담 감소 핵무기로 재래식 군사력 일부 대체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 대비
경제 타격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6년 소요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4년 소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비전투병력 철수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완전 철수
한·미협력	한미 경제안보협력 전면 중단 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한미 과학기술협력 부분 중단 예: AI,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양·토양오염 및 인체피폭 발생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인체피폭 발생
핵무장 완성 시간	4년 이내	2년 이내
핵에너지 협력	국제사회와 산업·연구·군사분야 협력력 전면중단	산업을 원전수출 중단으로 연 3조 5천억원 손실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10초 후 [다음]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설문관련 문의

선생님은 두 가지 중 어떤 결과 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

- 1) 결과 1
- 2) 결과 2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1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2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New Page]

[Attention Check 2]

선생님께서 본 설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상기 표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 국가위상
- 경제타격
- 출산율
- 한미협력
- 핵무장 완성 시간

컨조인트 결과 테이블 2 (예시)

사안	결과 1	결과 2
국가위상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 예: 북한	군사주권·외교 자주성 확대
군사·안보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 대비	일본 핵무장 가능성 증가
경제 타격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4년 소요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2년 소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완전 철수	한미동맹·주한미군 유지
한·미협력	한미 경제안보협력 부분 중단 예: 반도체, 배터리, 핵심영역	한미 과학기술협력 전면 중단 예: 시,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팅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양·토양오염 발생	해양·토양오염 및 인체피폭 없음
핵무장 완성 시간	1년 이내	3년 이내
핵에너지 협력	원자력 발전을 유라늄 수입종단으로 전력수급에 자립	산업용 원전수출 중단으로 연 3조 5천억원 손실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10초 후 [다음]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설문관련 문의

[New Page]

선생님은 두 가지 중 어떤 결과 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

- 1) 결과 1
- 2) 결과 2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1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2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New Page]

[Attention Check 3]

선생님께서 본 설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중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상기 표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무엇입니까?

- 군사·안보
-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 환경오염 및 인체피폭
- 핵에너지 협력
- 대학교 순위



컨조인트 결과 테이블 3 (예시)

사안	결과 1	결과 2
국가위상	국제 규범 미준수 불황국가로 낙인 예: 북한, 이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 예: 북한
군사·안보	중국과 군사적 긴장 고조 예: 중국 함정 한국해군 관할 해역 진입	일본 핵무장 가능성 증가
경제 타격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6년 소요	귀하의 소득 25% 하락, 원상회복에 2년 소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완전 철수	한미동맹 유지, 주한 미군 비전투병력 철수
한·미협력	한미 경제안보협력 부분 중단 예: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한미 과학기술·경제안보협력 전면중단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방사능 유출로 인한 해양·토양오염 및 인체피폭 발생	해양·토양오염 및 인체피폭 없음
핵무장 완성 시간	3년 이내	2년 이내
핵에너지 협력	원자력 발전을 우라늄 수입중단으로 전력수급에 차질	산업용 원전수출 중단으로 연 3조 5천억원 손실

= 컨셉 또는 이미지를 충분히 봐 주십시오 =  
10조 후 [ 다음 ]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⑦ 설문관련 문의

[New Page]

선생님은 두 가지 중 어떤 결과 상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상대적으로 더 지지하십니까?

- 1) 결과 1
- 2) 결과 2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1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선생님은 한국 핵무장 시 결과 2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매우 반대					중립					매우 찬성

다음의 8가지 사안들 중, 선생님의 ‘독자 핵무장 찬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안부터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사안까지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위상
- 군사안보
- 경제타격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한미협력
- 핵개발 시 환경오염·인체피폭
- 핵무장 완성시간
- 핵에너지 협력

특집

##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대북 억제 수단 선호도\*

정구연 (강원대학교)

### 국문요약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 보장 차원에서 비핵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이 제공받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위협의 양상, 동맹 형태와 제도화의 수준,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도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핵다극체제의 도래와 강대국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확산은 비핵 동맹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가 진행한 설문 실험에 따르면, 대북 위협인식이 높은 한국 대중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북 억제 정책 수단을 선호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 선호 여론과 조응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최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도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나 전략자산 전개는 낮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2023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치된 핵협의그룹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방향을 보여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확장억제, 미국, 핵무장, 한국, 핵협의그룹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97>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임.

## I. 서론

본 연구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살펴보고, 대북 억제 수단에 대한 한국 대중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 및 비핵 억제력 제공을 통해 잠재적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여 동맹국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이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sup>1)</sup> 2006년 10월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공동성명(Joint Communiqué)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명문화했는데, 이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감행한 제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로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됐고,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국방·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에 합의했다.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정보 공유, 핵작전 공동 기획 및 실행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및 핵전력 탑재 전폭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에도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가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핵협의그룹 창설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 내 현저해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sup>2)</sup>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선호하는 논의들은 북한의 위협

1) 이상규, 「확장억제와 동맹보장의 구분 및 강화 방향」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23년 2월 10일).

2) Karl Friedhoff, “Longitudinal Attitudes in South Korea on Nuclear Proliferation” Korea Economic Institute (2023); Seong-Chang Cheong, “The Case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 The Diplomat (2022); Robert Kelly, “A Nuclear South Korea? Why It Might Be the Best Option” RealClear Defense (2022).

양상을 강조하며 한반도 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공세적인 핵정책도 천명했다.<sup>4)</sup> 과거 북한의 핵교리가 억제에 방점을 둔 확증 보복 (assured retaliation)에 있었다면, 이제는 비대칭 확산(asymmetric escalation)에 가까워졌다고 분석되고 있다.<sup>5)</sup> 2022년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입법화하며 핵무기 사용조건을 명시했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선제적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sup>6)</sup> 더욱이 북한은 2023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을 총 25차례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긴장 수위를 높였으며, 향후 2030년까지 2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했다.<sup>7)</sup>

이러한 위협기반 핵무장 논의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 국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예컨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적용됐고, 지역별 지정학적 이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변용되었다는 것이다.<sup>8)</sup> 또한 미국의 비확산

- 
- 3) 전성훈, 「바이든 행정부의 NPR: 분석과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37~74쪽.
- 4) 황지환,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한국과 국제정치』 제 40권 1호(2023), 77~110쪽.
- 5)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14기 7차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 7) Bruce Bennet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and Research Report (December 2023).
- 8)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 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제62권 1호 (2019), 63~98쪽; Doug Bandow, "Give South Korea Nuclear Weapon" Cato Institute (2022); Thomas P. Cavanaugh, "Geopolitics over Proliferation: The Origin of US Grand Strategy & Their

체제가 약화된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sup>9)</sup>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자체 핵무장 선호 여론은 낮아진다는 실험연구 결과도 존재한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상정함으로써 논란을 과열시키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단기간 내에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핵무장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제사회가 부과할 제재를 한국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체 핵무장으로 인해 한국이 한반도 주변 핵보유국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의 핵보유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자<sup>11)</sup>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되는 듯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택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기대를 걸고 한국의 안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

Implication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 in South A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1, no. 4 (2018), pp. 1~28.

- 9) Jennifer, Lind and Daryl G. Press.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Washington Post* (October 7, 2011); Andrew O’Neill, “Nuclear Weapon and Non-proliferation: Is Restraint Sustainable?” *Security Challenges*, vol. 5, no, 4 (2009), pp. 39-57.
- 10) Lauren Sukin, “How Bad Would a Nuclear-Armed South Korea Be? Let Us Count the Way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October 21, 2021); Sangyong Son and Jong Hee Park, “Non-proliferation In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no. 6 (2023), pp. 1095-1127.
- 11) 임세흠, 「빅터차, “트럼프, 한국 핵무장 신경 안쓸 것...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KBS 뉴스* (2024. 3. 19.)

한국 대중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의 여러 비핵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sup>12)</sup> 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비핵 동맹국의 신뢰도는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비핵 동맹국의 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억제 조치,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 동맹 보장(assurance) 수준 간의 인식 격차를 지적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이에 대한 한국의 위협인식에 비해 핵협의그룹에서 논의되는 확장억제 조치는 충분한 동맹 보장을 담보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이 비핵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 정책과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준을 논의한다. 이후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실험을 통해 측정된 한국 대중의 확장억제 신뢰도와 이해도를 살펴보고, 현재의 확장억제 조치 이외 대북 억제 수단에 대한 한국 대중의 선호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자체 핵무장과 확장억제 사이의 이분법적 국내 담론을 좀 더 다양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대북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다.

## II.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한반도로의 적용

### 1.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 지역별 변용

핵보유국의 비핵 동맹국(*protégé*)에 대한 안보 공약인 확장억제의 효

12) 피터리·강충구,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아산 이슈브리프 (2024).

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 연구는 핵보유국의 안보 공약만으로도 적대국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비핵 동맹국 영토에 군이 핵무기를 배치하는 매물비용을 치루지 않더라도, 동맹관계와 핵보유국의 안보공약만으로도 적대국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sup>13)</sup> 그러한 안보 공약을 가시화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은 <표 1>과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표 1> 확장억제 목적과 수단

유형	목적	수단
정치적 의지	외교 및 정책 수립	· 공약 및 리더십 외교 · 군사조약 및 안전보장 협정 · 주요 안보전략 문서 공개 및 적대국 메시지 전달
정치·군사적 지원	협력적 합의 (협력체계, 공동 연습, 공동 실행, 도상훈련(TTX))	· 가시적 관여 (연합훈련, 협의체, 연합 계획) · 지속적 주둔
군사적 역량 강화	군사전략 및 기획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전략자산 전개 확대)	· 재래식 전력, 핵전력, 미사일 방어 · 우주력 조력, 사이버 조력 · 정보·감시·정찰, 지휘통제

\* 출처: 이상규. 「확장억제와 동맹보장의 구분 및 강화 방향」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23년 2월 10일).

이에 따라 미국이 비핵 동맹국들에게 실제 제공하는 주요 확장억제 수단은 상이하다. <표 2>는 이러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sup>13)</sup>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2014), pp. 919-935;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1997), pp. 236-269.



〈표 2〉 동맹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주요 수단의 유형과 수위

동맹국	핵능력·확장억제 정책 수위
영국, 프랑스	독자 핵능력 보유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핵공유체제(미국 전술핵 배치), 핵기획그룹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이중용도 항공기(Dual-Capable Aircraft, DCA) 운용/ 스노캣(Support to Nuclear Operation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 SNOWCAT) 실시 <sup>14)</sup>
한국	핵협의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일본	확장억제대화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호주	전략 자산 전개 AUKUS

〈표 2〉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 정책의 수위와 유형은 다양하다. 〈표 2〉에 열거된 비핵 동맹국들의 현황과 이들이 마주한 적대국의 위협 양상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적대국에 대한 억제 차원에서만 결정되는 것도, 비핵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 제고 차원에서만도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제와 동맹 보장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당 비핵 동맹국과의 비대칭적 동맹관계 유지, 비핵 동맹국이 위치한 지역 내 세력균형 및 비

<sup>14)</sup> DCA, 즉 이중 용도 항공기란,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의 공군 주요 기종을 재래식 공격과 핵공격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이중 용도로 개조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사시 미국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발진 및 투발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SNOWCAT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연례 핵연습인 'SteadFast Noon'의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비핵 동맹국들이 핵투발 폭격기 엄호, 정찰, 재급유 등 공중 지원과 수색, 구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훈련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핵 사용과 관련된 소유권과 결정권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동맹국은 수단만 제공할 뿐이다. 구분윤·마윌, 「워싱턴 선언과 나토 핵공유 체제의 비교: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2권 4호 (2023), 173~205쪽.

확산 체제 유지, 그리고 미국 주도 글로벌 동맹체제의 유지 등의 전략적 목표도 고려하여 구체적인 확장억제 정책과 수단이 채택될 수 있다.<sup>15)</sup>

실제로 인태 지역 내 비핵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수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비핵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수준은 상이하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접근법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와 2022년 나토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전략개념 (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핵태세 보고서>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인도-태평양(Indo-Pacific)과 유럽-대서양(Euro-Atlantic)을 나누었고, 지역별로 상이한 확장억제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sup>16)</sup>

우선 미국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핵동맹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냉전기 유럽 대륙에서 유지되었던 미소 간 긴장과 그에 대한 위협인식을 기반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핵동맹으로 재편되었고, 이것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의 핵전략개념은 대량보복과 유연반응, 전략적 안정과 경쟁 등으로 진화해 왔고 이에 따라 확장억제의 목표도 핵억제, 핵-재래식 균형, 위기관리, 전술핵 현대화 등으로 연동되어 변화해 왔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핵동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는 러시아가 여전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비핵 동맹국들에게 실존적 위협이며, 핵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력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복합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유럽 동맹국 영토 내 중단거리 핵미사일 배치, 그 이후 핵탄두 및 운반수단 분업체계에 기반한 핵공유

15) 손한별, 「핵확장억제의 역사와 쟁점: 미국의 對유럽 확장억제 사례와 함의」 『한국군사』 제15호 (2024), 29-63쪽.

16)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October 27, 2022).

체제 등을 수립해 왔다. 핵무기 배치라는 초기적 핵공유모델이 오히려 소련의 도발을 유발하거나 역내 군비경쟁, 그에 따른 안보딜레마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지금의 분업 기반 핵공유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sup>17)</sup> 또한 이는 구소련의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전략이 대량보복에서 유연 반응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8)</sup> 미국은 핵공유체제를 통해 비핵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는 비핵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의 수위는 조절되었다. 예컨대 미국은 전술핵을 유럽 비핵 동맹국의 영토에 배치하였음에도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핵운용과 핵사용의 최종 결정권을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sup>19)</sup>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핵공유가 이뤄진 이후 해당 지역 내 비핵 보유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요컨대 유럽-대서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러시아 등 핵보유국에 대한 억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 그리고 미국의 전략개념을 고려하여 절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자동맹이자 집단방위체제라는 제도적 특징, 그리고 자동개입 조항이 나토 헌장 5조에 명문화되어있다는 점, 회원국 간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위기 발생시 지역적 확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유럽-대서양 지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다.<sup>20)</sup> 핵기획 및 핵공유체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폴란

17) 이런 측면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는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허용하지 않기도 했다.

18) 이수형,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재」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101~122쪽.

19) Marc Trachtenberg, *A Constructed Peace: The Making of the European Settlement 1945-1963*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20) 손한별, 「핵확장억제의 역사와 쟁점: 미국의 對유럽 확장억제 사례와 함의」, 43쪽.

드,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 역시 유사시 자동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영국, 프랑스는 핵보유국으로서 직접 대리 핵억제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비핵 동맹국들의 동맹 보장 인식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해 모두가 같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회원국 각각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확장억제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 동맹 보장에 대한 만족도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비핵 동맹국 폴란드의 경우 54.1%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공유 그룹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 내 주둔 미군 규모(NATO 군 포함)를 11,600명 규모로 확대하고 동부유럽 우방국 최초로 제5군 사령부 건설을 약속했음에도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지 않은 스페인의 확장억제 신뢰도 31%에 불과하다.<sup>21)</sup>

〈표 3〉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 모델 비교

	북대서양조약기구	동아시아 비핵동맹국
위협	· 러시아, 이란	· 북한, 중국
공약	· 다자동맹·집단방위기구 · 북대서양조약기구 헌장 5조 · 핵공유 · 역사적 경험 공유	· 양자 동맹 기반 (한미동맹, 미일 동맹, ANZUS)
배치 체계 유형	· 전술핵 유럽 대륙 내 배치 · 이종용도 항공기 운용 (B61 탑재) · 대규모 재래식 병력, 미사일 방어체계	· 재래식 전력 · 동맹국 영토 내 핵무기 배치 전무 · 부분적 미사일 방어 체계

21) 피터리·강충구,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4쪽.

협약의 기제	· 공식화된 협약기제 (핵기획그룹, 나토 정상회의 등)	· 양자 협약 기제
핵무기 배치 위치	· 유럽 전역 및 역외	· 수중 핵억제('On the horizon')
지역별 고려 변수	·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지리적으로 인접; 대부분 유럽 연합 회원국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특징 보유.	· 동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다양성, 역사적 경험 공유 전무, 다양한 위협.

\* 출처: Larsen, Jeffrey A. "US Extended Deterrence and Europe," in Stéfanie Von Hlatky, Andreas Wenger, eds.,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NATO and Beyon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5).

한편 인도태평양 역내 확장억제의 수준은 협약체 구성과 전략적 메시지 발신,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최근에서야 수립된 핵협의그룹 등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표 3>은 이러한 현황을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인도태평양 역내 비핵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도 제공되는 확장억제 수단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의 경우 1960년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형태의 핵공유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자국내 전술핵 배치 거부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과 같은 확장억제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고, 한국의 경우 과거 자체 핵무기 개발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핵무장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과 달리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선호 여론도 냉전기부터 높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sup>22)</sup>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달리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는 양자동맹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위기 발생 시 삼각 탈동조화(triangular

<sup>22)</sup> Michito Tsuruoka, "The NATO vs. East Asian Models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Seeking a Synergy beyond Dichotomy" *The Asan Forum* (June 30, 2016).

decoupling)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일본과 한국을 모두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일본과 한국 중 어떤 동맹국을 먼저 방어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어, 한미일 삼각협력의 내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3)</sup> 또한 유럽 전구와는 달리 해양 중심의 동아시아 전략환경은 비핵 동맹국 영토 내 전술핵 배치보다 핵잠수함 운용을 통한 억제력 투사가 효과적이다. 또한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의 적대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포함된다는 점에 있어 미국이 유럽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확장억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한다.

요컨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지역별 차이는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와 같이 비핵 동맹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앞서 언급했듯 확장억제란 적대국에 대한 억제뿐만 아니라 비핵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이 모두 고려되어야만 그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 둘은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은 같을 수 있기에, 비핵 동맹국은 확장억제의 동맹 보장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실행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 정책결정가들은 이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핵 동맹국에 대한 동맹 보장 효과와 그에 기반한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는 전략자산 전개 및 동맹국 간 협력 등의 가시성

23)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국제관계연구』 제25권 2호 (2020), 33~59쪽.

24) Ivo H. Daalder, Chuck Hagel, Malcolm Rifkind, and Kevin Rudd,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ebruary 10, 2021).

25) Justin V. Anderson and Jeffrey A. Larsen, Polly, "Extended Deterrence and Allied Assurance: Key Concepts and Current Challenges for U.S. Policy" INSS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과 핵공유 수준에 따라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 북한의 핵능력 및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현황

앞서 언급했듯, 냉전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동아시아 역내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sup>26)</sup> 박정희 정부는 1970년 미국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및 20,000여 명 철수로 인해 핵개발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결심은 당시 핵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수립과 함께 국제 비확산 체제를 형성해가던 미국에게 있어서 도전요인이 되었을 것이다.<sup>27)</sup>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반핵 여론이 높았으나,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통해 유사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완공을 앞두며 핵비확산조약 가입을 하려던 시점이었다. 만약 한국이 당시에 핵개발을 추진했다면, 일본 역시 핵비확산 조약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동북아시아 지역 봉쇄의 전방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이 핵무장을 완성한다면, 일본의 자주성이 확대되며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약화될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했다.<sup>28)</sup>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것은 동아시아 봉쇄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제공하게 된 확장억제는 한국의 동맹이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며,

<sup>26)</sup> Richard Phillip Lawless, *Hunting Nukes: A Fifty-Year Pursuit of Atomic Bomb Builders and Mischief Makers* (New York: Mountain Lake Press, 2023).

<sup>27)</sup> Se Young Jang,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4 (2016), pp. 502~520.

<sup>28)</sup> Benjamin A. Engel, "American Responses to Possible Sou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n and Now"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3, no. 2 (2023), pp. 53~78.

만약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핵능력을 완성하기 전까지 북한의 예방 공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사 한국이 핵능력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의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하겠지만, 북한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핵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요컨대 한국의 핵무장은 냉전기 봉쇄 구조 유지 차원에서나, 또한 한반도 주변 불안정성 고조 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1970년대 미국이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한다면 그 책임이 미국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었다. 요컨대 냉전기 미국은 동아시아 공산 세력 봉쇄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상변경적 행위도 봉쇄하기 위한 ‘이중봉쇄’ 차원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29)</sup>

한편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고, 2022년을 기점으로 경량화·다종화된 전술핵무기에 대한 실제 운용 능력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아직 북한의 이차공격 능력을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2030년까지 2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최소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 전략, 즉 충분한 핵탄두 보유를 기반으로 이차공격 능력의 생존성을 확보한 이후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공세적 전략으로의 전환을 예측하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거부억제 능력을 충분히 보유

<sup>29)</sup> 유사하게도, 구 서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 서독은 미국 린든 존슨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해 왔는데, 구 서독 역시 유럽 대륙 내 봉쇄정책의 전방 국가라는 점에 있어 미국은 주둔 미군 철수와 동맹 파기라는 위협을 통해 구 서독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켰다 Benjamin A. Engel, “American Responses to Possible Sou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n and Now”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3. no. 2 (2023), pp. 53~78; Gene Gerzhoy, “Alliance Coercion and Nuclear Restraint: how the United States Thwarted West Germany’s nuclear Ambi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pp. 91~129.



하고 있기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만으로는 대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없다.<sup>30)</sup> 이에 따라 북한은 실제 사용 가능한 전술핵 및 미사일 방어 회피 기술, 동시 발사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 제고 추이를 고려해볼 때 한국의 핵무장 혹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가시적 확장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냉전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의 핵확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본으로의 핵확산뿐만 아니라 핵보유로 인한 대미 안보 의존도 약화, 그에 따른 한미 안보협력의 내구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구성된 핵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과 같은 중소핵보유국이 등장함에 따라 전략적 안정성 유지뿐만 아니라 비확산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sup>31)</sup>

이에 따라 미국은 비핵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핵·비핵무기 등을 동원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밝혀왔다. 2023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 창설이야말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억제 공약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핵 및 전략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한미 양자간 협의체로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받고 있다.<sup>32)</sup> 2023년 12월 2차 핵협의 그룹 회의 결과 양국은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구

30) 설인효·손한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핵 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2호 (2023), 1~36쪽.

31) Robert Litwak, *Tripolar Instability: Nuclear Competition Amo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Washington D.C.: Wilson Center, 2023).

32) 로버트 아인혼, 「“독자 핵무장” 한국 여론은 잠재웠지만 거세지는 北도발 위협...韓美 ‘워싱턴선언’ 빛보려면」 『매일경제』 (2023.12.13).

축을 시사했고, 이를 통해 지침, 보안 및 정보 공유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등의 영역에 대한 업무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6월 제 3차 핵협의그룹회의 이후 양국에 의해 채택된 공동지침에는 핵-재래식 통합 역시 표기됨으로써 더욱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협의그룹이 창설되기 전까지 한미 간 확장억제 정책의 형태는 다양한 전략보고서 및 지침을 통한 확장억제의 공약 공개, 각종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협의체 마련, 주요 고위급 인사의 대북 확장억제 메시지 전달,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및 연합군사훈련 등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의 3축 체계, 즉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은 미국의 확장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대북억제의 공백을 채웠다. 2023년 핵협의그룹 창설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수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며, 2024년 10월 창설되는 한국군의 전략사령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연합방위체계 확대에도 기여, 확장억제 실행의 제도적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억제 수단으로서의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등 다양한 대안도 향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경험적 분석

#### 1. 연구 설계

앞서 논의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를 측정한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비핵 동맹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다. 미국은 핵 현대화를 추구하는 중국·러시아뿐만 아니라 핵약소국인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억제력 강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도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다극체제의 등장과 핵보유국 간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미국 동맹국 내부의 국내 정치적 양극화는 향후 동맹체제의 약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기고조 통제 및 억제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sup>33)</sup>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앞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핵억제 수단들 가운데 어떠한 수단을 선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문실험과 일반여론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엠브레인에 의해 2024년 5월 진행되었으며, 총 1,884개의 응답을 포함한다. 우선,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설문실험을 진행하기 이전에 성별, 나이, 거주지, 학력, 정치적 성향과 소득 수준, 정치적 관심도 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와 북핵에 관한 위협인식을 측정하였다. 셋째, 설문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현황과 핵교리의 공개 상황,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핵협의그룹 창설 현황과 한국 내 높아가는 자체핵무장 여론에 대한 포괄적인 배경 설명을 다음 [표 4]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4〉 배경 설명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고도화시키고 있음. 2022년 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까지 정당화하는 핵무력 정책법령을 채택하고, 2023년 '핵보유국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함.'

<sup>33)</sup> Heather Williams, Kelsey Hartigan, Joseph Rodgers, Reja Younis, *Alternative Nuclear Futures: Capability and Credibility Challenges for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3).

- 북한은 2023년 전술핵 핵탄두 화산 31형의 개발을 마쳤으며 실전배치함.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남북한 재래식 교전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남한의 재래식 군사대응에 북한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 증대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에 이름.
-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를 창설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핵 및 전략기획을 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함.
-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한국을 북한의 “제 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2024년 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을 통해 물리적 충돌 발생시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함.

이후 응답자들은 다섯 개의 처치 집단(treatment group)에 무작위 배치되었다. 이때의 다섯 개 실험집단은 각각 (1) 한국의 자체 핵무장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3)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 (4)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 및 강화 (5) 한국의 최첨단 비핵무기 개발로 구성되어있다. 각 처치 집단을 구성하는 응답자에게 보여준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표 5>와 같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처치집단에 보여주는 이유는, 일반 대중이 자체 핵무장 이외의 대북 억제 수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양한 억제수단이 존재할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이라는 억제 수단을 택할 것인지 설문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표 5〉 처치 집단별 제공 시나리오

<p><b>○ 집단 1: 한국의 자체 핵무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결정함.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추출 기술과 농축 기술, 핵개발을 위한 기폭·유도장치 기술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핵재처리 시설 등 다양한 저장시설도 구축하기 시작함.</li> <li>- 핵무기 제조를 위한 역량 및 제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핵교리와 핵태세를 포함한 핵전략 구상에 돌입함. 합참과 국방부는 이를 담당하기 위한 군 편제 수정에 돌입함.</li> <li>- 독자 핵무장 결정으로 한국은 한반도 내의 핵균형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선제 핵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로 함.</li> </ul>
<p><b>○ 집단 2: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1991년 철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기로 함. 이를 위해 먼저 한국 내 미 전술핵 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거나 새로 짓기로 합의함.</li> <li>- 또한, 한국은 미국의 노후화된 B61 전술핵무기 100기를 정밀폭격이 가능한 개량형 B61-12로 현대화 및 추가 생산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추가로 생산된 미국의 개량 전술핵무기는 한국에 도입하기로 함.</li> <li>- 북한의 핵 도발 시, 미국은 한국을 대신하여 주한미군 또는 주일미군의 자국 전투기에 탑재된 전술핵무기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로 함.</li> </ul>
<p><b>○ 집단 3: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자산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한반도 수역에 상시 배치하기로 함. 현재까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항공모함)은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된 바 있으나, 상시적으로 머물지는 않았음.</li> <li>- 미국의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20기(미사일 1기당 약 4발의 탄두 탑재 가능)를 무장할 수 있으며, 상시 배치된 핵잠수함은 북한의 주요 군사 및 지휘 시설들을 고정 표적으로 삼을 것임.</li> </ul>

○ **집단 4: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 및 강화**

-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립을 선언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전력(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CNI) 구축을 추진함. 이로써 핵탄두와 비핵탄두 모두 장착 가능한 이중용도(dual use) 투발수단을 내세워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려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로 함.
- NCG의 출범으로 기존 재래식 전력의 통합운용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연합군의 군대비 태세가 핵 및 전략기획, 정보공유, 핵·재래식 전력 통합, 연습 및 훈련까지 포괄하게 됨.
- 이로써 북한이 한미연합군 지휘통제소를 포함하여 연합전력의 작전운용 능력을 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으로 파괴하여 전장에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이를 억제(deter) 및 거부(deny)하기로 함.

○ **집단 5: 한국의 최첨단 비핵무기 개발**

- 합성 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 탑재한 인공위성과 다양한 고도에서 운용되는 드론의 종합적 장거리 정찰로 인해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탐지가 24시간 날씨와 상관없이 가능해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 군 수뇌부의 위치 또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
- 장거리 타격 능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수 미터 이내로 줄어든 오차범위 내 타격에 따라 거의 100퍼센트에 육박하는 명중률을 보이게 됨. 외과수술공격처럼 정확한 타격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핵전력만으로도 원하는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군사적 표적을 격멸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력의 통합을 매우 빠르게 산출할 수 있게 됨.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의 감지, 표적식별, 및 선제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혁명적으로 줄임으로써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 핵무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deny)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함.

이후 응답자들은 각각의 대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답하였다. 동

의 여부는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4) 어느 쪽도 아니다 - (5) 동의하는 편이다 - (6) 대체로 동의한다 - (7) 전적으로 동의한다 (8) 모르겠다의 응답 가운데 선택하게 했다.

## 2. 분석 결과

우선 설문실험 전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6>에서 알 수 있듯 한국 국민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의 비율을 합하면 응답자의 65.86%가 미국이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가 79.83%와는 대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6>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

[질문] 선생님은 다음의 주장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sup>34)</sup>

- (1)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 “나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
- (2)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북한 핵·미사일 대응함에 있어 미국의 핵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으로 충분하다.”

<sup>34)</sup> 응답자는 본 설문 문항에 대답하기 이전 미국의 핵확장억제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읽도록 하였다.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핵 확장억제, 혹은 핵우산 정책이란, 한국이나 일본처럼 핵무기가 없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대신하여 핵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왔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해도	45 (2.99%)	49 (3.25%)	210 (13.93%)	<b>690</b> <b>(45.79%)</b>	<b>375</b> <b>(24.88%)</b>	<b>138</b> <b>(9.16%)</b>
신뢰도	<b>126</b> <b>(8.44%)</b>	<b>182</b> <b>(12.76%)</b>	<b>640</b> <b>(44.66%)</b>	362 (25.39%)	83 (5.82%)	33 (2.31%)

<표 7>의 경우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의 수위를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위협인식은 76.16%의 응답자가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이 51.54%의 응답자는 북한의 대남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앞서 설명한 대북 위협인식과 북한의 공세적인 핵교리의 등장, 이차공격능력 확보를 통한 제한억제 전략의 사용가능성, 즉 북한의 대담한 핵전략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협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표 8>과 같은 선호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 7> 북한의 핵무기 및 선제공격 관련 위협인식

<p>[질문] 선생님은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p> <p>(1) 북핵 위협인식: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p> <p>(2) 북한의 전술핵사용 가능성: “2023년 북한은 전술핵탄두 화산 31형을 개발하였다. 북한은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남한을 향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p>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대체로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핵 위협인식	28 (1.49%)	54 (2.87%)	131 (6.95%)	<b>803 (42.62%)</b>	<b>297 (15.76%)</b>	<b>335 (17.78%)</b>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55 (2.92%)	141 (7.48%)	295 (15.56%)	<b>640 (33.97%)</b>	<b>181 (9.61%)</b>	<b>150 (7.96%)</b>

<표 8>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수준의 확장억제 이외 다섯 개의 선택지를 응답자에게 보여준 후 가장 선호하는 선택지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이때의 다섯 개 선택지는 <표 5>에서 설명했듯 설문실험 처치집단에 제공된 시나리오로 활용되었다. <표 8>에 따르면 미국이 제공하는 전술핵 배치나 전략무기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 정책에 대해 한국 대중의 선호도는 높지 않다.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억제 정책에서도 나타났듯 가시적인 핵억제 능력을 공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비핵 동맹국이 이러한 전술핵이나 전략무기의 사용에 관해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핵협의그룹 3차 회의에서 합의된 한미간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는, 한국이 기여하고 실제 억제력 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독자핵무장 및 최첨단 비핵무기 개발의 선택지도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대중은 미국이 치러야 할 매물 비용이 높은 선택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자율성이 높은 선택지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북한 핵 대응을 위한 선택지별 1순위 선호도 (단위: 명, %)

선택지	1순위 선택 빈도	1순위 선택 비율(%)
한국의 독자 핵무장	744	39.49%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144	7.64%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	182	9.66%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 및 강화	213	11.31%
한국의 최첨단 비핵무기 개발	601	31.90%
총계	1,884	100%

〈표 9〉는 〈표 5〉의 처치 집단에 각각 포함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각 응답자가 처한 시나리오에 대해 동의하는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짓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로짓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 처치집단에 대한 더미변수를 설정하였고, 〈표 9〉에서는 5개 처치집단 중 처치집단 3번, 즉 전략무기 상시배치의 시나리오를 들려준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치집단 3번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한 이유는, 〈표 8〉에서 보여지듯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동의 여부는: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4) 어느 쪽도 아니다 - (5) 동의하는 편이다 - (6) 대체로 동의한다 - (7) 전적으로 동의한다 (8) 모르겠다 - 의 여덟 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로짓 회귀분석을 위해 (1)-(3)과 (5)-(7)의 카테고리를 합치고, (4)와 (8)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표 9〉에서 알 수 있듯 Model 1의 경우 처치집단의 선호도 변수만 포함하였고, Model 2의 경우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제변수를 다수 포함하였다.

〈표 9〉 시나리오 등의 여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변수	Model 1 (계수)	Model 2 (계수)
한국 자체 핵무장	0.2419 (0.1504)	0.2201 (0.1521)
미국 전술핵 재배치	-0.2212 (0.1476)	-0.2131 (0.1515)
한미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 및 강화	0.0916 (0.1495)	0.0471 (0.1512)
한국의 최첨단 비핵무기개발	0.4634** (0.1531)	0.4955** (0.1565)
성별		-0.1903 (0.1047)
연도		-0.0564 (0.0372)
학력		-0.0687 (0.0914)
이념		-0.1567*** (0.0465)
소득		0.0002 (0.0367)
정치관심도		0.1211* (0.0576)
북핵위협인식		0.2279*** (0.0391)
확장억제 이해도		0.1450*** (0.0424)
확장억제 신뢰도		0.1164** (0.0389)
상수	-0.3540*** (0.1054)	-0.8755 (0.5784)
N	1,884	1,884
Log likelihood	-1224.6879	-1186.6826

\* 참고: 기준집단: 처치집단 3(전략무기 상시배치); \*p<0.05, \*\*p<0.01, \*\*\*p<0.001

〈표 9〉에서 알 수 있듯, 최첨단 비핵무기 개발 시나리오에 대한 동의 수준은 Model 1과 Model 2 모두에 있어 나머지 시나리오에 비해 높을 뿐

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 $p < 0.01$ ). 앞서 논의되었듯 한국의 자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서의 자체 핵무장과 핵-재래식 통합 능력 배치도 긍정적인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선호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자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국 대중은 선호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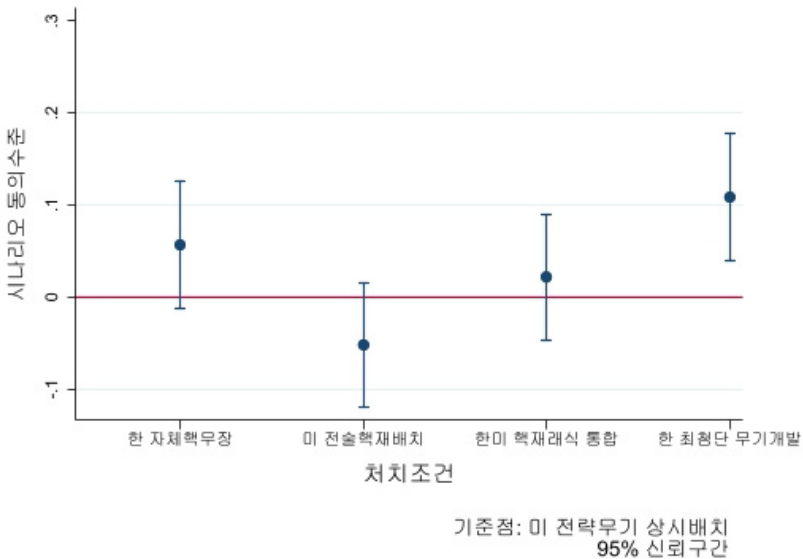
〈표 10〉 한계효과 분석

변수	Model 1 (한계효과)	Model 2 (한계효과)
한국 자체 핵무장	0.0566 (0.0351)	0.0484 (0.0333)
미국 전술핵 재배치	-0.0517 (0.0344)	-0.0468 (0.0333)
한미 핵-재래식 통합능력 배치 및 강화	0.0214 (0.3499)	0.0103 (0.0332)
한국의 최첨단 비핵무기개발	0.1084** (0.0355)	0.1090** (0.0340)
성별		-0.0418 (0.0230)
연도		-0.0124 (0.0081)
학력		-0.0151 (0.0201)
이념		-0.0344*** (0.00101)
소득		0.0006 (0.0080)
정치관심도		0.0266* (0.0126)
북핵위협인식		0.0501*** (0.0082)
확장억제 이해도		0.3191*** (0.0091)

확장억제 신뢰도		0.0256** (0.0084)
N	1,884	1,884

\* 참고: 기준집단: 처치집단 3(전략무기 상시배치);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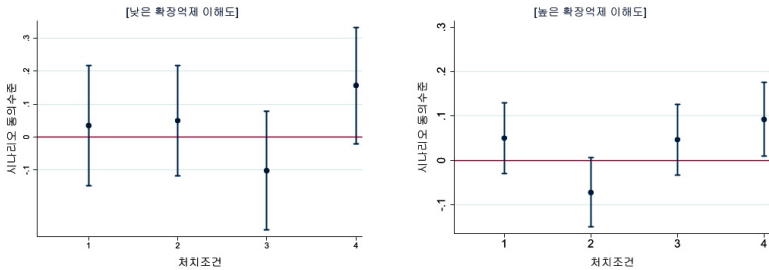
<그림 1> 동의 여부에 대한 한계효과 그래프: Model 2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각 처치그룹 시나리오의 동의여부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비교에 있어서도, 처치집단 3의 미국 전략자산 상시 배치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전술핵 배치의 경우 4.6% 지지도가 줄어드는 한편,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거나 한미 재래식 통합, 최첨단 비핵 무기 개발의 경우 각각 4.8%, 1.03%, 10.90% 만큼 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체 핵무장의 경우보다 한국의 첨단 비핵무기개발에 대해 높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은 향후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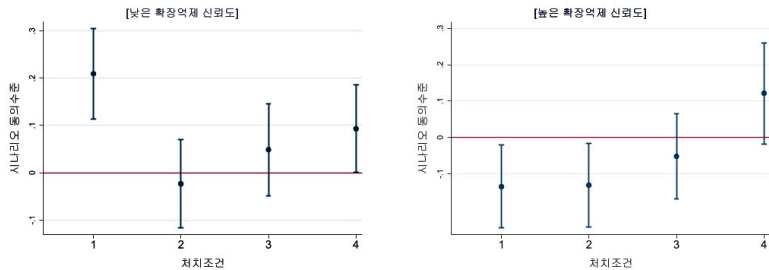
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대북억제 수단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 확장억제 이해도와 동의 여부에 대한 한계효과 그래프: Model 2



\* 참고: 처치조건 1: 한국 자체핵무장; 2: 미국 전술핵배치, 3: 한미 핵재래식 통합; 4: 한국 최첨단 무기개발; 기준점: 미국 전략무기 상시배치, 95% 신뢰구간

<그림 3> 확장억제 신뢰도와 동의 여부에 대한 한계효과 그래프: Model 2



\* 참고: 처치조건 1: 한국 자체핵무장; 2: 미국 전술핵배치, 3: 한미 핵재래식 통합; 4: 한국 최첨단 무기개발; 기준점: 미국 전략무기 상시배치, 95% 신뢰구간

<그림 2>와 <그림 3>의 경우, 앞서 Model 2의 한계효과를 각각 확장억제 이해도와 신뢰도의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우선 <그림 2>는,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자체 핵무장과 최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3>의 경우, 확장억제의 신뢰도 수준에 따라 시나리오 등의 수준을 보여준 그래프이다.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자체 핵무장에 대한 선호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자체핵무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뢰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최첨단 무기개발에 대한 선호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낮을수록 자체핵무장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이해도와는 다른 맥락의 문제로서, 확장억제의 작동방식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 의해 시행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의 최첨단 무기개발이라는 선택지는 한국의 자체 대북억제 역량강화, 그리고 대미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적인 수준의 실험연구였으나 본 연구는 대북 억제의 다양한 수단들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선호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응답자들은 현재의 확장억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이는 자체 핵무장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대북 억제 수단을 개발하고 또한 한미동맹 차원의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면 지금의 핵협의그룹은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설문실험과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대중의 신뢰도와 이해도를 측정하고, 대북 억제를 위해 선호하는 수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자체 핵무장의 여론이 높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에 따라 국내 자체 핵무장 여론은 더욱 현저해졌다. 이는 결국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가 낮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만의 사례는 아니며, 미국의 비핵 동맹국들 사이에도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핵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로부터 인식하는 동맹 보장의 수준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비핵 동맹국들이 마주한 적대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미국의 억제 전략 및 해당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 등이 조합되어 확장억제의 구체적 형태가 제시되기에, 비핵 동맹국들과 미국과의 인식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설문 조사 결과 북핵 위협 인식은 높고 확장억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도 높다고 나타났다. 현재의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핵-재래식 통합 능력 배치, 최첨단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억제 정책들을 제시했을 때, 한국 대중은 대미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 대북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 즉 자체 핵무장과 최첨단 기술개발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였다. 특히 최첨단 기술개발에 대한 선호도는 기존 대북 억제 논의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던 것으로서, 자체핵무장과 확장억제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에 대해 다른 선택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러한 선호는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한미 동맹이 위기 발생 시 탈동조화될 가능성, 혹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탈동조화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 비확산 규범에 기반하여 2023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핵협의그룹 창설에 합의하였고, 더 높은 가시성과 공유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확장억제 체제 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보다 지속가능한 협의그룹 운영을 위해 한국 대중의 위와 같은 선호와 그에 따른 전략적 소통은 대북 억제뿐만 아니라 동맹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4년 11월 20일 / 심사: 2024년 12월 9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Lawless, Richard Phillip. *Hunting Nukes: A Fifty-Year Pursuit of Atomic Bomb Builders and Mischief Makers*. New York: Mountain Lake Press, 2023.
- Litwak, Robert. *Tripolar Instability: Nuclear Competition Among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 Washington D.C.: Wilson Center, 2023.
- Larsen, Jeffrey A. "US Extended Deterrence and Europe," in Stéfanie Von Hlatky, Andreas Wenger, eds.,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NATO and Beyon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5.
- Narang, Vipin.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Trachtenberg, Marc. *A Constructed Peace: The Making of the European Settlement 1945-1963*.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
- Williams, Heather, Kelsey Hartigan, Joseph Rodgers, Reja Younis, *Alternative Nuclear Futures: Capability and Credibility Challenges for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23.
- 구본윤·마윌, 「워싱턴 선언과 나토 핵공유 체제의 비교: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 연구』 제32권 4호, 2023, 173~205쪽.
- 김성한,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국제관계연구』 제25권 2호, 2020, 33~59쪽.
- 설인효·손한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핵억제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3권 2호, 2023, 1~36쪽.
- 손한별,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과 선택적 비확산 정책: 전략적 균형을 위한 수평적 핵확산」 『국방연구』 제62권 1호, 2019, 63~98쪽.
- 손한별, 「핵확장억제의 역사와 쟁점: 미국의 對유럽 확장억제 사례와 함의」 『한국군사』 제15호, 2024, 29~63쪽.
- 이상규, 「확장억제와 동맹보장의 구분 및 강화 방향」 동북아안보정세 분석 (2023년 2월 10일).
- 이수형, 「한국형 핵공유체제 구축 모색: 이론과 실제」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101~122쪽.

전성훈, 「바이든 행정부의 NPR: 분석과 정책적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32권 1호, 2023, 37~74쪽.

피터리, 강충구, 「미국 동맹국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비교」 아산 이슈브리프 (2024-1).

황지환, 「전망이론과 김정은 시기 북미관계: 2012-2023」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1호, 2023, 77~110쪽.

Anderson, Justin V. and Jeffrey A. Larsen, Polly, “Extended Deterrence and Allied Assurance: Key Concepts and Current Challenges for U.S. Policy” INSS Occasional paper (September 2013).

Bandow, Doug. “Give South Korea Nuclear Weapon” Cato Institute (2022),  
<<https://www.cato.org/commentary/give-south-korea-nuclear-weapons>>.

Bennet, Bruce,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and Research Report (December 2023).

Cavanna, Thomas P. “Geopolitics over Proliferation: The Origin of US Grand Strategy & Their Implication fo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 in South A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1, no. 4, (2018), pp. 1-28.

Cheong, Seong-Chang. “The Case for South Korea to Go Nuclear” *The Diplomat* (October 22, 2022).

Daalder, Ivo H., Chuck Hagel, Malcolm Rifkind, and Kevin Rudd, “Preventing Nuclear Proliferation and Reassuring America’s Allies”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February 10, 2021).

Engel, Benjamin A. “American Responses to Possible Sou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Then and Now”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3, no. 2 (2023), pp. 53-78.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2 (1997), pp. 236-69.

Friedhoff, Karl. “Longitudinal Attitudes in South Korea on Nuclear Proliferation” *Korea Economic Institute* (2023).

Fuhrmann, Matthew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4 (2014), pp. 919-935.

Gerzhoy, Gene, "Alliance Coercion and Nuclear Restraint: how the United States Thwarted West Germany's nuclear Ambi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9, no. 4 (2015), pp. 91-129.

Jang, Se Young, "The Evolution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South Korea's Nuclear Ambition,"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9, no. 4 (2016), pp. 502-520.

Kelly, Robert, "A Nuclear South Korea? Why It Might Be the Best Option" *RealClear Defense* (May 3, 2022).

Lind, Jennifer and Daryl G. Press. "Should South Korea Build Its Own Nuclear Bomb?" *Washington Post* (October 7, 2021).

O'Neill, Andrew. "Nuclear Weapon and Non-proliferation: Is Restraint Sustainable?" *Security Challenges*, vol.5, no.4 (2009), pp. 39-57.

Son, Sangyong and Jong Hee Park. "Non-proliferation Information and Attitude Change: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7, no. 6 (2023), pp. 1095-1127.

Sukin, Lauren. "How Bad Would a Nuclear-Armred South Korea Be? Let Us Count the Way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October 21, 2021).

Tsuruoka, Michito. "The NATO vs. East Asian Models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Seeking a Synergy beyond Dichotomy" *The Asan Forum* (June 30, 2016).

## South Korean Public's Confidence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nd Preference for Deterrenc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Chung, Kuyo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instruments of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to its non-nuclear allies and demonstrates that these instruments have been established in a compromise manner to not only deter adversaries but also to reassure allies and align with U.S. strategic interests. Specifically, extended deterrence for NATO allies and Indo-Pacific regional allies has evolved distinctly, reflecting differences in regional alliance structures,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geostrategic characteristics. However, the advent of a nuclear multipolarity and the spread of geopolitical crises due to great power competition have widened the gap in threat perceptions and confidence in the extended deterrence between non-nuclear allies and the United State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preferences for indigenous nuclear armament, as see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survey experiment conducted in this study, the South Korean public prefers forms of extended deterrence that enhance autonomy in South Korea-the U.S. relationship, which helps explain the preference for indigenous nuclear armament. In this context, while there is a high p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cutting-edge technology, there is a lower preference for the 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r strategic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lications for guiding the cooperative direc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established under the 2023 Washington Declaration.

Keywords: Extended Deterrence, US, Nuclear Armament, South Korea, Nuclear Consultative Group

**정구연 (Chung, Kuyoun)**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미국 외교안보정책, 동맹정치와 해양안보, 인공지능 등이다.

특집

## 신호전달수단으로 미국의 대북억제(對北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

홍예림 (버지니아대학교)\*\*

조동준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이 글은 설문실험을 통해 (1) 한국인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를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지 않으며, (2) 미래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수단보다는 현재 매몰비용을 치르는 수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을 보인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미국이 연루위험을 피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일반적 예상과 다르게, 한국인은 북한발 위협의 정도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평가한다. 둘째, 연합군사훈련 또는 주한미군주둔과 같이 사전 대응조치가 위기 발생 후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는 언술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믿는다.

주제어: 억제, 보장, 확장억제, 남북관계, 신호이론, 실험연구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133>

\* 이 논문은 2024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논문을 발전시키고 수정하는데 유익한 조언을 주신 고려대학교 고지영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제1저자(honglucy85@gmail.com)

\*\*\* 교신저자(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센터장, dxj124@snu.ac.kr)

## I. 들어가며

한미 양국의 공식적 언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믿음직하다. “철통같다,” “굳건하다,” “강력하다,” “어느 때보다 좋다,” “핵심축이다” 등 수많은 표현이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대북억제조치에 신뢰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과 핵잠수함 기항 등을 통하여 대북억제조치가 유사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 이와 같은 수사와 실질적 조치의 효과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나타난다. 대부분 한국인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대북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필요하다고 인식한다.<sup>1)</sup> 한미동맹을 둘러싼 수사, 실질적 조치, 여론조사는 모두 미국의 대북억제/보장의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용하는 대북억제조치/대한보장조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시점이나 혹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을 때 국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미동맹 위기와 연관시키고 미국 대북억제조치

---

1)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정책연구원(2022년 5월), 24-26쪽.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 여론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세대나 이념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나이나 정치이념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간 상관관계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어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우정엽·이성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3호 (2015), 45쪽).



의 효과성에 의구심을 보였다.<sup>2)</sup> 특히,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맞물려, 안보 관련 전문가 집단에서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을 의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 표현이지만, “미국이 서울과 도교를 지켜주기 위하여 LA와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와 같은 질문이 공개적 자리에서 언급된다.<sup>3)</sup>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는 두 흐름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기존 동맹 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동맹의 현황이 분석된다. 동맹 이론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방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 모델을 한미동맹에 적용하여 현안을 분석하거나 혹은 동맹의 지속 및 쇠퇴 요인에 대한 기존 문헌의 기준을 한미동맹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sup>4)</sup> 둘째, 한미동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여론조사가 지속되어 왔다. 그간 누적된 여론조사 데이터는 한미동맹 혹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한미동맹/한미협력에 기반한 대북억제 및 대한보장 관련 기존 여론조사는 크게 세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신뢰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위협 강도의 변화가 동맹이 작동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론적 이해가

2) 조영빈,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다」 『한국일보』 2021년 8월 19일.

3) 황대진·양승식, 「美,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다」 『한국일보』 2017년 8월 1일.

4) 나승하,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2015), 161~180쪽; 조윤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1호 (2004), 275~293쪽.

상식으로 공유되지만, 구체적으로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의 신뢰성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 이루어지 않았다. 둘째, 한미동맹/한미협력에 기반한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대북억제조치와 대한보장조치가 여러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유형별 한국인의 신뢰를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수동적인 혹은 반응적이라고 간주되었다. 한국인의 인식이 한미동맹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탐색되지 않았다.

이 글은 2022년 4월에 수집한 설문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1) 북한발 위협의 변화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북한발 안보위협이 미국의 연루 위협을 높여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가 떨어지는 인과사슬을 한국인이 인식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2)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유형별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신호이론에 따라 미국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을 유형화하고 대북억제/대한보장과 관련된 정책 수단이 각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확인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후견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를 신호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후견국은 잠재적 적대국을 향하여 유사시 보복으로 큰 대가를 치르거나 도발이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피후견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는데, 이는 후견국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이 글이 설정한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성한 설문실험(survey experiment)의 구성 과정 및 변수를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위협의 강도 변화가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의 신

뢰성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신호이론에 따라 유형화된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소개한다. 셋째, 설문실험을 통하여 드러난 미국의 대북억제/대한보장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을 정리한다. 또한, 대북억제/대한보장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한다.

## II. 기존 연구 검토

확장억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논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안보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가 확장억제에 기여하는지 여부이다. 이 연구의 흐름은 신호이론(signaling theory)과 결합되어 후견국, 피후견국, 적대국 간 관계에서 후견국의 조치를 피후견국 보호를 위한 결의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피후견국의 입장에서 후견국의 조치에 대한 신뢰를 탐색하는데, 국가 수준의 분석은 물론 시민의 마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반 시민이 외교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민주국가에서는 후견국의 조치에 대한 여론이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과 확장억제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진행된다. 이 절은 확장억제와 동맹국의 약속의 신뢰성에 관한 두 연구 흐름을 정리한다.

### 1. 신호이론과 확장억제

확장억제에 관련된 후견국, 피후견국, 그리고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는 동맹관계와 적수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잠재적 적대국과 후견국 간

적수관계에서는 잠재적 적대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며,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동맹관계에서는 후견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둘러싼 보장게임이 진행된다. 따라서 적대국 억제와 피후견국에 대한 보장이 모두 충족될 때, 확장억제가 온전히 작동된다. 반면 적대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피후견국의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피후견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적대국의 도발 위협성을 높인다면,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sup>5)</sup>

신호이론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행위자 간 신호전달의 신빙성이 신호 창출과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거짓 정보가 드러났을 때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확장억제를 둘러싼 후견국, 피후견국, 잠재적 적대국 간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신호이론은 억제를 위한 조치와 피후견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정보 또는 결의를 전달하는 신호로 해석한다. 즉, 억제조치와 보장조치를 취하는 후견국이 자국의 결의와 능력을 알지만 잠재적 적대국과 후견국이 이를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후견국은 자국 조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속 불이행 시 치러야 할 비용을 높이거나 위기 발생 전 연합훈련과 같이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신호의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 반면, 잠재적 적대국과 피후견국은 수신된 신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sup>6)</sup>

- 
- 5) James D. Fearon,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 38, no. 2 (June 1994), p. 245; Roseanne W. McManus and Keren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1, no. 4 (April 2017).
- 6) 조동준,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국가안보전략』 제3권 (2017), 276~279쪽; 조동준,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 127~129쪽; James D.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확장억제 게임에 신호이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는 두 측면에서 약점을 가진다. 첫째, 후견국의 신호가 적대국 억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지만, 후견국의 조치가 억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상충적 연구 결과가 병립한다. 예를 들어, 연합군사훈련이 적대국을 억제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잠재적 적대국의 반발로 피후견국의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sup>7)</sup> 해외 핵무기 배치와 핵보유국과의 동맹조약이 억제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았다.<sup>8)</sup>

둘째, 억제와 보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않았다. 기존 안보 연구들의 관심 주제와 대상은 잠재적 적대국의 도발 억제에

---

*Conflict Resolution*, vol. 41, no. 1 (February 1997), p. 70; Matthew Fuhrmann and Todd S.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April 2014), pp. 921~924.

7) Jordan Bernhardt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5, no. 5 (May 2021); Raymond Kuo and Brian Dylan Blankenship, "Deterrence and Restraint: Do Joint Military Exercises Escal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6, no. 1 (January 2022). 전자는 북한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발적인 수사와 행동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했으며, 반면 후자는 군사훈련이 확전의 개연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주장하였다.

8) Fuhrmann and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pp. 919~935; Paul C. Avey, "The Historical Rarity of Foreign-Deployed Nuclear Weapon Crises" *Security Studies*, vol. 27, no. 1 (January-March 2018), pp. 89~119; Brett Ashley Leeds,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3 (July 2003), pp. 427~439; Jesse C. Johnson and Brett Ash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7, no. 1 (January 2011); Thorin M. Wright and Toby J. Rider, "Disputed Territory, Defensive Alliances and Conflict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1, no. 2 (April 2014).

초점을 맞춘다. 반면, 후견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게임에 관해서 원론적 해법과 정책 제안이 제시된다.<sup>9)</sup> 후견국의 관점에서는 억제게임이 보장으로 일방향으로 이어지지만, 피후견국의 관점에서는 억제게임과 보장게임은 쌍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존 연구가 후견국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어, 억제게임과 보장게임 간 연결이 탐색되지 않았다.

## 2. 미국의 대한보장에 관한 한국의 신뢰

동맹을 맺은 국가는 상대국에게 제공하는 안보공약의 크기와 수단을 계산하는 동시에 상대국으로 받는 안보공약의 크기와 수단을 계산하면서, 동맹관계를 운영한다. 즉, 안보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최초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도 동맹국 사이에는 안보공약의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상호작용이 계속 진행된다. 동맹이 유지되는 동안 동맹국 간 안보의 수요와 공급이 외형적으로 고정된 듯 보이지만, 실상 동맹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성을 가진다. 기존 연구에서는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국력 차가 존재하는 비대칭 동맹에서 피후견국을 안보 수혜자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지만,<sup>10)</sup> 피후견국도 특정 영역에서 후견국으로 안보 혜택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영역에서는 후견국에게 안보 혜택을

9) 미국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의 신뢰 변화를 살펴본 문헌들은 동맹 이론에 기반한 현상 분석이나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기존 이론들의 가정과 전제 조건을 살피고 이를 한국의 맥락에 맞추어 시의적절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요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즉, 이론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드물었고, 정책 분석 중심의 연구들은 미국의 일부 정책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도를 살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맹 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의 신뢰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웠다.

10) McManus and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p. 705.

제공하면서 동맹을 관리한다.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보장에 관한 한국인의 신뢰를 탐색하는 기존 연구는 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인다. 첫째, 기존 연구는 피후견국 한국의 속성이 고정되어 있고 한국이 한미동맹의 피동적 수혜자로 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조치와 보장조치가 선행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탐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안보와 관련된 한국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 내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외교정책도 여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맹관리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이 동맹관리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한미 간 동맹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연구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조치와 보장조치 중 일부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헌은 주한미군의 주둔 혹은 연합군사훈련과 같이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정책이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가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특정 수단의 효과에 집중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공약의 효과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원론적으로 동맹이 가져오는 안보효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동맹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sup>11)</sup>

셋째, 북한발 위협이 한미 간 동맹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지 못했다. 위협(threat)은 안보 영역, 특히 동맹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며, 이에 따라 많은 동맹 연구자들이 위협을 동맹 형성 및 종결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였다.<sup>12)</sup> 이 논리를 확대하면, 동맹이 유지

<sup>11)</sup> Ibid., p. 704.

되는 상황에서 적대국발 위협 수준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동맹의 결속력이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동맹 아래서도 위협 수준의 변화가 동맹 관리 혹은 동맹 내 협상 (intra-alliance bargaining)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Ⅲ. 연구설계

이 부분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북한발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소개한다. 가설의 도출과정, 주요변수, 실험설문의 구상, 실험설문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정리한다.

#### 1. 가설

이 연구는 후견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보장에 대한 피후견국 시민의 인식 변화가 후견국의 약속에 대한 일방향적 반응이 아니라 후견국이 사용하는 수단과 적대국의 위협 강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전제 아래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북한의 위협 강도와 수단에 따라 변화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인식이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

<sup>12)</sup>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March 1997); Jesse C. Johnson,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61, no. 3 (May 2017).



로 한미관계에 투영되는 긴 인과사슬 중 초반 인과사슬에만 집중한다.

이 연구는 두 가설을 검증한다. 첫째, ‘신호 유형 가설’은 대북확장억제(對北擴張抑制)와 대한보장(對韓保障)의 수단이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유형별로 다르다고 예상한다. 대북확장억제의 효과에 대한 포괄적 인식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이 연구는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사용하는 수단이 달라짐에 따라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한국인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예상한다. 실제 미국이 사용하는 대북억제와 대남보장의 수단별 효과를 개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호이론에 기반하여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조치를 북한과 한국에 보내는 신호로 이해하고, 신호를 ‘매몰비용 신호’, ‘양자 청중비용 신호’, ‘다자 청중비용 신호’로 유형화한다. 이는 신뢰의 신뢰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후 발신자가 치러야 할 고통 또는 신호에 담긴 정보를 만들기 위하여 치러야 할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신호이론에 따른 유형화이다.<sup>13)</sup>

‘매몰비용 신호’는 잠재적 적대국의 실질적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비용을 발생시켜 동맹약속 이행의 결의를 보이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데, 주한미군 주둔이나 연합군사훈련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청중비용 신호’는 후견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치러야 할 국내외 평판 하락, 청중의 정치적 처벌 등과 관련된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데, 피후견국에 대한 후견국만의 약속과 관련될 경우 ‘양자 청중비용 신호’로, 후견국과 다른 여러 국가가 피후견국에 관여하는 약속과 관련될 경우 ‘다자

13) 본 논문에서 구분한 신호 유형은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이 제시했던 매몰비용(sunk cost)과 손뭉기 비용(tying-hands cost) 개념을 활용한 것이다.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국내학계에서 자주 활용되지 않지만, 공식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 (Fearon,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pp. 68-90).

청중비용 신호'로 분류한다.

'매몰비용 신호'는 피후견국과 잠재적 적대국 간 분쟁이 악화되기 이전에 적대국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정책들보다 더 분명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인은 세 유형 중 미국의 안보공약의 이행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매몰비용 신호'를 가장 높게 높은 신뢰를 보일 개연성이 있다. 그 다음으로 청중비용 정책 중에서는 미국이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동맹 약속 이행 의도를 전달하는 '양자 청중비용'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표현하는 '다자 청중비용'보다 한국인에게 더 높은 신뢰를 주리라고 추론한다. 이는 미국의 양자적 의사소통 방식이 다자적 방식보다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이라고 믿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상대국의 약속 이행을 감시 및 제재하는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다자정책이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sup>14)</sup>

가설 1-1('신호 유형 가설' 1): 한국인은 미국의 '매몰비용 신호'가 '청중비용 신호'보다 대북억제에 더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다.

가설 1-2('신호 유형가설' 2): 한국인은 미국의 '양자 청중비용 신호'가 '다자 청중비용 신호'보다 대북억제에 더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다.

둘째, '위협 가설'은 북한발 위협의 강도가 높을수록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낮아진다고 예상한다. 확

<sup>14)</sup> 이재준,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pp. 69~96.

장억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적성국의 위협 강도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하여 불명확하다. 피후견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 높을수록 적성국의 도발을 막기 위하여 후견국이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낸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있다.<sup>15)</sup> 반면, 적대국의 위협이 후견국에까지 미친다면, 후견국이 피후견국의 안보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끌려 들어갈 위협으로 인하여 피후견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sup>16)</sup> 기존 연구에서는 적성국발 위협이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충적이지만, 최근 북한발 위협강도의 증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

적대국의 위협 증가로 인하여 후견국의 억제와 보장조치에 대한 의문이 피후견국 시민의 인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적대국이 직접 후견국을 공격할 정도로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적대국과 피후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후견국이 적대국과 직접 교전하는 위협을 피할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후견국이 피후견국을 매개로 일어나는 연루의 위협을 피하려 한다면 피후견국은 방기의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는

15) Roseanne W. McManus and Mark David Nieman, "Identifying the Level of Major Power Support Signaled for Protégés: A Latent Measure Approa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6, no. 3 (May 2019), pp. 364~378). 반면, 후견국의 억제조치가 적성국을 자극할 위협이 있기 때문에 후견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피후견국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16) 예를 들어, 구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폭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프랑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을 모색하였다.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선제공격이 있다면, 미국이 공멸의 위협을 초래하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63년 1월 14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핵능력이 유럽과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일에 바로 필연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며 프랑스의 독자 노선을 옹호했다(Charles de Gaulle, "Conférence de presse du 14 janvier 1963 (sur l'entrée de la Grande-Bretagne dans la CEE)," Charles de Gaulle-paroles publiques <<https://fresques.ina.fr/de-gaulle/accueil>>).

데, 피후견국 시민의 마음에서도 동맹관리에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적대국의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후견국의 강력한 조치가 잠재적 적대국을 자극하여 위기 강도가 올라가고 피후견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안 다르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다른 것은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 전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는데,<sup>17)</sup> 이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억제조치로 인하여 한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으로 이끌려 들어갈 위험을 피하려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가설 2(‘위협 가설’):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국인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를 낮게 평가한다.

## 2. 분석단위와 자료

이 연구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을 통해 확보한 915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주간 설문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sup>18)</sup> 주요 연구 대상인 후견국은 미국, 피후견국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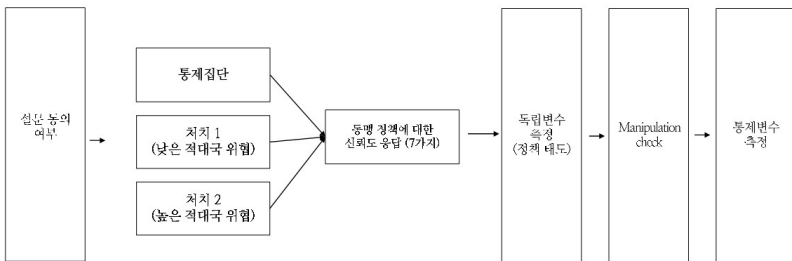
17) 소종섭,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 발언록」 『시사저널』 1829호 2003년 11월 2일.

18) 본 설문은의 처치효과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디자인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기 전 1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사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일럿 분석에서 수정된 버전의 설문지를 본 조사에서 활용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저자들이 직접 확보한 서울대학교 학부생 및 대한민국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총 1회의 사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보한 표본 100명을 대상으로 1회 사전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차례 사전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설문지와 실험 설계를 확정된 후 2022년 3월 22일

국, 잠재적 적대국은 북한으로 대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방법론은 실험 설계 중 집단 간 설계(between-subjects design)를 활용했다.<sup>19)</sup>

〈그림 1〉 실험 순서도

- (1) 설문 시작      (2) 집단 별 처치 (실험 2)      (3) 주요 종속변수      (4)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 3. 실험 처치: 상이한 북한발 위협 정보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언사를 기반으로 처치변수를 설정한다.<sup>20)</sup> 구체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지금까지 사용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본 연구에서 활용된 실험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본 실험은 2022년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총 5일 동안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를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 성인남녀 91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자료 수집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19) 집단 간 설계는 표본 내에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차이를 확인한다. 반면 집단 내 설계(within-group design)는 처치 제공 전과 후에 각각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을 설정하여 처치효과를 확인한다.

20) 한국인을 대상으로 안보에 대한 설문 실험을 진행했던 기존 연구들은 많은 경

했던 위협 수사를 활용하여 낮은 수준의 위협을 담은 정보와 높은 수준의 위협을 담은 정보를 처치변수로 설정했다. 북한발 위협 정보를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적절한 맥락(politically relevant context)을 포함하였다.<sup>21)</sup>

처치변수는 세 집단에게 다르게 적용되었다. 먼저 915명의 전체 응답자를 임의화(randomization) 과정을 통해 각 305명을 ‘통제집단, 처치집단 1, 처치집단2’로 분류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사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처치집단1’에는 북한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낮은 수준의 위협 정보를 제공했는데, 2022년 1월에 보도되었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수정한 문안을 사용했다.<sup>22)</sup> ‘처치집단 2’에게는 높은 북한발 위협 정보를 제공했는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발언과 함께 1차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 핵실험에 대한 자부심과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신년 공동사설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sup>23)</sup> 이처럼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

우 가설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를 활용하여 처치를 제공하였다. 가설적 시나리오란 현실에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만약 특정한 일이 발생한다면(what if)?’이라는 반사실적(counterfactual) 사고를 통해 구성한 가상의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설적 시나리오의 활용은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점은 높은 처치 효과를 얻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현실과 다소 거리감 있는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실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동시에 외적 타당성을 희생하게 된다. 즉, 실제 상황과 거리감 있는 가상의 정보를 통한 처치 효과는 현실에 대한 보편화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로 활용될 개연성이 낮아진다.

21) James N. Druckma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November 2006), p. 629.

22) 이제훈, 「북 “극초음속미사일 1000km 표적 명중”...김정은, 1년 10개월만에 참관」 『한겨레』 2022년 1월 12일.

23)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

제공하지 않고, ‘처치집단1’에게는 낮은 수준의 북한발 위협 정보, ‘처치 집단2’에게는 높은 수준의 북한발 위협 정보를 제공한 후,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표 1〉 실험 처치 정보

분류	텍스트	N
통제	없음	305
처치 1 (낮은 위협)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6일만인 11일 오후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김정은 위원장은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앞서 국방과학원 원장으로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듣고 “나라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군대의 현대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이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성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들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305
처치 2 (중간 위협)	북한은 지난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후 6일만인 11일 오후 들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미국이 대북독자 제재 및 안보리 차원의 제재 대상 추가 등 대응수위를 높이자, 북한 외무성은 “미제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원수들의 핵전쟁 위협과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조국을 끄떡없이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강한 민족적 자존심과 드센 배짱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비열한 제재, 봉쇄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고도의 혁명적 경각성과 격동상태를 견지하여 조국의 전초선을 철옹성같이 지키며 미제 침략자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무자비하게 격파 분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5

#### 4. 종속변수: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신뢰

종속변수는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위해 실제 사용하는 일곱

개 수단의 효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다. ‘매물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이 대북억제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 ‘양자 청중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가능성 시사’가 주는 대북억제 효과에 관한 신뢰값, ‘다자 청중비용 신호’에 대한 신뢰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추진,’ ‘6자회담 추진,’ ‘가치(인권, 민주주의) 중심 동맹 강화’가 주는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이다. 문안은 “북한의 (강도 높은) 위협과 도발 공격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미국의 특정 수단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며, 선택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5) 사이 총 5개로 구성된다.

## IV. 분석 결과

이 절은 실험설문 조사의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7개 대북억제 또는 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설문에 관한 응답을 정리한다. 이후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북한발 위협 수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 1. 매물비용 vs. 청중비용

<표 2>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7가지 수단의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를 보여준다.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7가지 조치가 대북억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하여 한국인은 대체



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준거집단의 통계치를 보면, 7개 항목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 또는 “도움이 된다”를 선택한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과 연합군사훈련의 대북억제에 대하여 한국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핵사용 시사와 강력한 대북선언이 대북억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대북억제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응답이 40% 이상 된다. 이 결과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의구심을 가진 한국 내 집단이 강력히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2〉 처치집단별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인식

처치 집단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응답자 비율 (%)		
				도움 안됨	효과 없음	도움됨
통제	강력한 대북선언	3.40	1.20	24.59	17.70	57.70
	핵 사용 시사	3.30	1.30	31.06	16.72	53.11
	유엔 안보리 결의안	3.40	1.16	23.93	21.31	54.75
	6자회담	3.48	1.10	18.69	21.97	59.34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38	1.10	24.11	25.57	52.46
	연합군사훈련	3.70	1.10	10.00	26.00	63.93
	주한미군 주둔	4.07	0.98	7.21	16.72	76.07
처치 1	강력한 대북선언	3.32	1.13	23.93	24.26	51.80
	핵 사용 시사	3.35	1.22	25.90	21.31	52.79
	유엔 안보리 결의안	3.32	1.09	21.97	25.90	52.13
	6자회담	3.36	1.07	21.31	26.23	52.46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37	1.11	22.30	25.90	51.80
	연합군사훈련	3.64	1.07	16.72	21.64	61.64
	주한미군 주둔	4.03	0.98	7.54	17.38	75.08
처치 2	강력한 대북선언	3.35	1.07	22.30	25.25	52.46
	핵 사용 시사	3.33	1.16	26.56	20.98	52.46

	유엔 안보리 결의안	3.50	1.05	19.34	21.31	59.34
	6자회담	3.53	0.99	18.03	19.82	62.30
	가치 기반 동맹 강화	3.54	1.08	18.03	24.92	57.05
	연합군사훈련	3.66	1.14	17.38	20.33	62.30
	주한미군 주둔	4.07	0.94	7.54	15.41	77.05

<표 3> 중 북한발 위협 강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표본에서 신호유형 별로 대북억제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이 두 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은 ‘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을 포함하는데,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시사’를 포함하는 양자 청중비용 수반 유형,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6자 회담 추진,’ 그리고 ‘가치 기반 동맹 강화’를 포함하는 다자 청중비용 수반 유형에 비하여 대북억제 효과가 높다.<sup>24)</sup> 특히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에 대하여 응답자 중 76%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둘째, 북한발 위협과 관련되어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는 준거집단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의 효과와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의 효과 간 차이가 없다. 개별 수단별로 보면,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5개 신호 중 6자회담 추진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이 가장 높고(3.479), 핵무기 사용 시사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3.300)이 가장 낮다.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속하는

<sup>24)</sup>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888,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421,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대북억제의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348이다.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간 평균 차이의 *t*-계수는 6.436(*p*-value = 0.000),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간 평균 차이의 *t*-계수는 6.151(*p*-value = 0.000)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추진,’ ‘6자 회담 추진,’ 그리고 ‘가치 기반 동맹 강화’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은 3.421,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속하는 ‘강력한 대북선언’과 ‘핵 사용 시사’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은 3.348으로, 두 신호유형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sup>25)</sup>

〈표 3〉 동맹 약속 이행 수단(신호유형)에 따른 한국인의 신뢰 (기술통계)

처치 집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통계 (N=305)	매물비용	3.88	0.92	1	5
	양자 청중비용	3.35	1.12		
	다자 청중비용	3.42	0.93		
처치 1 (N=305)	매물비용	3.84	0.93	1	5
	양자 청중비용	3.33	1.06		
	다자 청중비용	3.35	0.88		
처치 2 (N=305)	매물비용	3.86	0.95	1	5
	양자 청중비용	3.34	1.00		
	다자 청중비용	3.53	0.83		

매물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와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두 신호유형에 대한 신뢰 간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7가지 수단 간 상관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4〉를 보면, 신호유형 내 수단 간 연계성이 높다. 예를 들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강력한 대북 선언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핵무기 사용 시사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가 0.607이다. 매물비용을 수반하는 연합군사훈련의 효과에

25)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대한 신뢰값과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유형에 신뢰값 간 평균 차이의 *t*-계수는 0.879(*p*-value = 0.190)이다.

대한 신뢰값과 주한미군 주둔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603이다.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6자회담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UN 안보리 결의안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577이다. 반면, 동일한 신호유형에 속하는 않는 수단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핵사용 시사 발언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과 6자회담 추진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간 상관계수는 0.160에 불과하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은 신호유형 간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각 신호유형의 효과에 대하여 상이한 평가를 내린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 준거집단에서 대북억제/대한보장 수단간 연계성(Pearson 상관계수)

	핵사용 시사	UNSC 결의	6자회담	가치 동맹	군사훈련	미군주둔
대북선언	0.607	0.514	0.330	0.393	0.559	0.377
핵사용 시사		0.367	0.160	0.240	0.579	0.344
UNSC 결의			0.577	0.499	0.474	0.379
6자회담				0.528	0.318	0.360
가치동맹					0.473	0.363
군사훈련						0.603

## 2. 북한발 위협 강도와 무관한 인식

북한발 도발 강도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북한발 위협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은 준거집단, 낮은 위협을 담은 정보를 접한 처치집단1, 중간 정도의 위협을 담은 정보를 접한 처치집단2 사이 7가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 수단에 대한 신뢰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1〉과 〈표 2〉 참조).<sup>26)</sup> 〈표 5〉는 7가

지 수단의 대북억제 효과에 대한 신뢰값 평균 또한 북한발 위협 정보를 달리하는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발 위협 정보를 달리하는 세 개 집단 안에서 신호 유형별 대북억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은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인다. 첫째, 세 집단 안에서 ‘매물비용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은 ‘다자 청중비용 신호 유형’과 ‘양자 청중비용 신호 유형’에 비하여 일관되게 높다(〈표 2〉와 〈표 3〉 참조). 매물 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는 북한발 위협 강도와 무관하다고 해석된다. 둘째, 세 개 집단 안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이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보다 일관되게 높으며, 북한발 높은 위협 정도를 받은 집단 안에서는 양자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처치집단 2에서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527이고 양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신호 유형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은 3.339로, 양자 간 차이  $t$ -계수는 2.5216( $p$ -value=0.006)이다. 북한발 위협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북 보복조치가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예상으로 인하여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수단을 선호하게 된다고 추정된다. 즉, 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는 “말폭탄”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인의 인식 안에 있다는 의미다.<sup>27)</sup>

26) ‘강력한 대북선언’의 경우 세 집단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87 ( $p$ -value 0.420), ‘핵 사용 시사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3( $p$ -value 0.881),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07( $p$ -value 0.127), ‘6자 회담’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10( $p$ -value 0.124), ‘가치 기반 동맹 강화’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2.31( $p$ -value 0.010), ‘연합군사훈련’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9( $p$ -value 0.830), ‘주한미군 주둔’의 경우 세 집단 간 분산차이를 보여주는  $F$ -계수가 0.16( $p$ -value 0.856)이다.

27) 김윤형, 「하루새 말폭탄 주고받은 북·미…‘한반도 평화’ 재개 차질 우려」 『한겨레』 2021년 3월 18일; 김진욱, 「北 격해지는 말폭탄, 행동으로 옮길까... ‘적대

〈표 5〉 집단과 대북억제/대한보장의 효과에 대한 신뢰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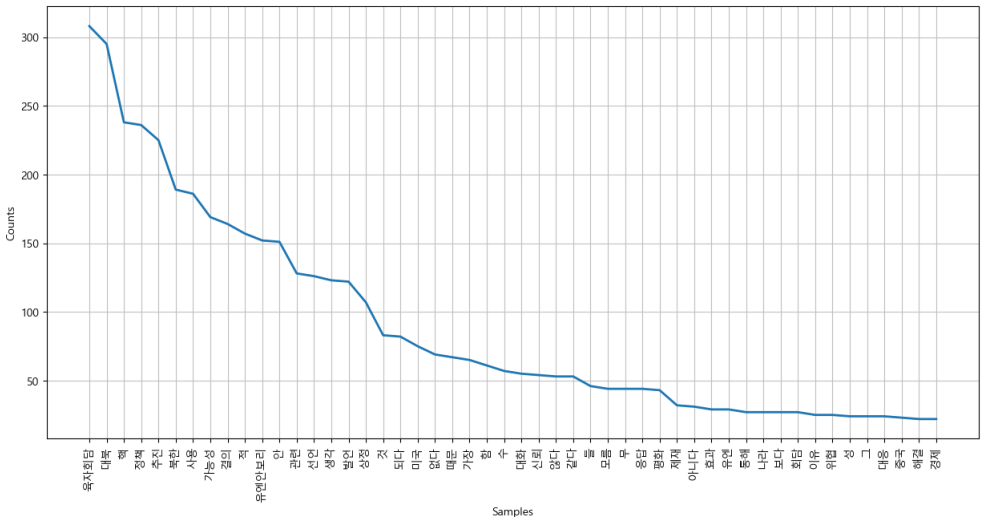
집단별 기술통계					
집단	평균	표준편차	관측수		
통제(북한발 위협 정보 없음)	3.532084	0.81073	305		
처치1(북한발 저강도 위협)	3.485714	0.78602	305		
처치2(북한발 중강도 위협)	3.569087	0.74910	305		
분산분석결과					
Source	SS	df	MS	F	Prob > F
Between groups	1.064481	2	0.53224	0.87	0.4195
Within groups	12530.1	912	0.61209		
Total	559.2886	914	0.61191		

북한발 위협 강도의 차이가 왜 미국 억제정책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이 추가질문에 대해 두 가지 잠정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북한발 위협 강도를 달리하는 처치가 북한발 위협에 관한 응답자의 평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북한발 위협에 대한 평가가 처치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가 처치와 무관하게 기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설문실험 조사가 기획의도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을 개연성을 암시한다. 둘째, 북한발 위협 강도의 증가가 초래하는 안보 효과를 일반 한국인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북한발 위협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인식지체 현상으로 인하여 북한발 위협 증가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3.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인과사슬

미국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을 위하여 활용하는 7가지 수단의 효과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형성하는 인과사슬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응답자에게 가장 선호하는 수단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기술하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행하는 네 수단(대북 6자회담 추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상정, 대북 선언 정책, 핵사용 시사)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세 수단(주한미군 주둔, 연합군사훈련, 방위동맹 조약, 민주주의나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다. 텍스트분석은 파이썬의 한국어 자연어 처리 및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텍스트분석의 방법론적 불완전성을 보완하고자 질적 코딩을 함께 실시하였으며, 질적 코딩은 개방형 응답 내 특정 수단에 대한 응답 빈도를 구분하고, 유사한 내용의 답변들끼리 묶어 유형화하였다.

〈그림 2〉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응답에 포함된 단어의 빈도



<그림 2>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행하는 네 가지 정책에 대한 개방형 응답문에서 등장한 단어의 빈도를 보여준다. 150회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 중 유의미한 의미가 담긴 단어는 ‘6자회담’, ‘대북’, ‘핵’, ‘정책’, ‘추진’, ‘북한’, ‘사용’, ‘가능성’, ‘결의’, ‘유엔 안보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 청중비용(6자회담 추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상정)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주된 선정 이유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신뢰’와 ‘제시된 다른 정책들은 북한의 태도가 오히려 강경해지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림 3>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행하는 세 가지 정책(주한미군 주둔, 연합군사훈련, 방위동맹 조약, 민주주의나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에 대한 단어 등장 빈도이다. 150회 이상 언급된 단어는 ‘동맹’, ‘미군’, ‘주둔’, ‘미국’, ‘방위’, ‘조약’, ‘강화’, ‘연합’, ‘군사훈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주한미군 주둔’, ‘방위조약’, ‘연합군사훈련’ 정책이 자주 언급되었으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신뢰 이유를 밝힌 응답자들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 ‘미군이 주둔한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 ‘주한미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보복을 고려할 수 있음’을 주로 언급했다. 한편 연합군사훈련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전쟁 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다른 정책에 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신뢰가 간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책을 신뢰하였다.

개방형 응답은 한국인의 인식구조 안에 상충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인과사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먼저 매몰비용을 수반하는 신호유형을 선호하는 인식은 억제의 논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매몰비용을 들여서까지 또는 자동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신호가 사전에 보냄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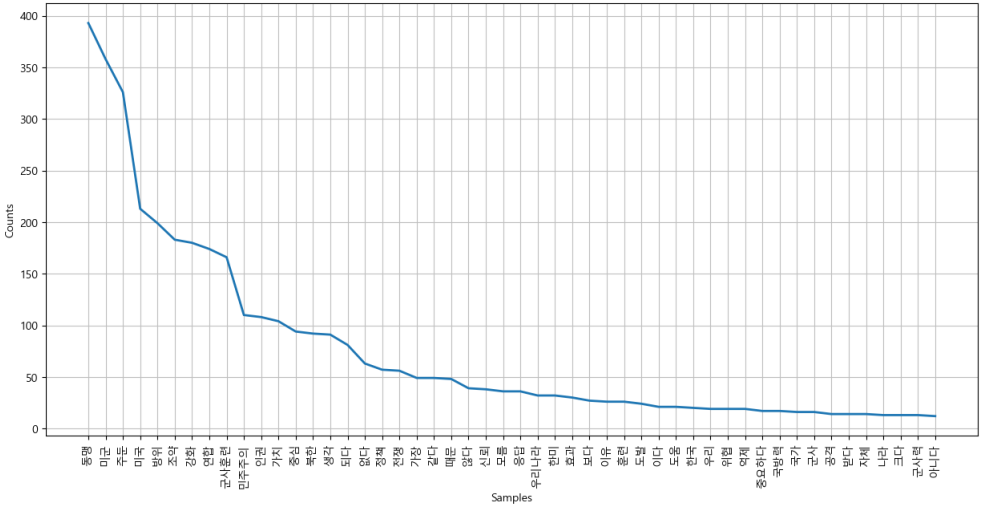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인과사슬이 다수 한국인의 인식구조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 인식구조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대북 보복의 인계철선이다. 즉, 유사시 주한미군의 피해가 발생하면 미국이 북한에게 보복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선호한다. 주한미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대북억제로 이어지기보다는 주한미군을 매개로 기대되는 미국의 대규모 개입이 대북억제 효과로 이어진다고 예상한다.

반면, 다자 청중비용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인식구조 안에 대북억제용 수사가 미국의 보복결의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위기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매물비용으로 북한에게 보복의지를 전달하는 선택이 북한을 오히려 자극한다는 걱정이 있다. 즉, ‘적대적 나선 모형’(hostile spiral thesis)<sup>28)</sup>이 존재한다. 합리성에 기반한 억제의 논리가 한미확장억제에 작동하기보다는 대북억제를 위한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오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인의 인식 구조에 상충하는 인과사슬이 존재한다는 점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과 관련된 정책 혼선을 설명한다. 국제정치학계 안에서 진행되는 억제론과 나선 모형 간 경쟁이 한국인 사이에서도 존재한다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과 관련하여 국민 다수를 모두 만족시키는 조치가 쉽게 만들질 수 없다고 예상하게 된다. 냉전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 논쟁과 정책 변화는 한국인의 인식구조로부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sup>28)</sup>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hap. 3; Charles L. Glaser, “Political Consequences of Military Strategy: Expanding and Refining the Spiral and Deterrence Models”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Andrew Kydd,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 *World Politics*, vol. 49, no. 3 (April 1997).

〈그림 3〉 단어 등장 빈도 그래프 (동맹정책 선호)



#### 4. 회귀분석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은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7개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대한 신뢰값의 평균을 종속변수로 삼고, 응답자의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상황, 정치적 성향을 독립변수로 삼는다. “인과 깔때기”(funnel of causality) 모형에 기반하여,<sup>29)</sup>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이르는 거리가 길다고 가정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이르는 거리가 짧다고 가정한다. 분석모형 1은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만 포함하고,

<sup>29)</sup> A. Campbell,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1960). p. 24.

분석모형 2는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한다.

회귀분석 결과를 담은 <표 6>은 몇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준다. 첫째, 앞서 기술했던 기술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처치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북한발 위협 강도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집단, 낮은 북한발 위협 정보를 받은 집단, 중간 정도의 북한발 위협 정보를 받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는 적대국의 위협이 동맹 결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던 기존 문헌의 흐름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북한발 위협 정도에 관한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응답자가 북한발 위협에 관한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했거나, 현실 세계에서 경험되었던 북한발 위협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둘째, 인구학적 변수를 검토하면, 60대 이상 응답자에 비하여 20~50대 응답자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억제와 대남억제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이 북한에 비하여 열세인 상태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던 냉전 초기 청소년기를 보낸 연령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미국의 안보공약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남북한 간 국력이 균형상태이거나 한국의 국력이 우세인 시기 청소년기를 보낸 중년층과 청년층은 미국의 안보공약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 각 연령층이 상이한 정치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체득한 인식이 미국의 안보공약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된다.<sup>30)</sup>

30) 성별이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반면, 정치인식 변수까지 포함된 분석모형 2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 현상은 성별이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대북강경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며(남성 평균=3.382, 여성평균=3.044, t-계수=4.337, p-value=0.000),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는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상

셋째, 사회경제학적 변수는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교육 수준,<sup>31)</sup> 소득 수준, 거주 지역, 종교 등이 모두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거주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여부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수도권과 강원도를 준거집단으로 삼고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대북강경책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북핵위험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방식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북한에 비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인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약한 피후견국을 포기한 반면, 강한 피후견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던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의 인식 체계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추정된다.

다섯째, 정치적 성향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sup>32)</sup> 이 결과는 정치적 성향이 대북인식에 세 경

---

관계수=0.4211, p-value=0.000). 분석모형 2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효과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로 인한 효과로 흡수되면서, 성별이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듯 나타난다.

31) 교육이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 1에서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근접하는 반면, 정치인식 변수까지 포함된 분석모형 2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이 현상은 교육 수준이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북강경책에 대한 선호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북핵 위협을 낮게 평가하고(상관계수=-0.042, p-value=0.203), 대북강경책을 선호하지 않고(상관계수=-0.048, p-value=0.148), 북핵위험 인식과 대북강경책 선호가 모두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인식과 정합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교육 효과가 두 경로로 분산되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게 된다.

32) 정치적 이념과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값은 약한 정합관계를 가진

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즉,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선호하고(상관계수=0.218,  $p$ -value=0.000), 북핵 위협을 높게 평가하며(상관계수=0.106,  $p$ -value=0.001), 군사력에서 대북 열세라고 평가한다(상관계수=-0.104,  $p$ -value=0.002). 이처럼 정치적 성향의 효과가 대북 인식과 관련된 세 변수의 효과로 분산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지 못한다.

〈표 6〉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계수	표준편차	$p$ -value	계수	표준편차	$p$ -value
낮은 위협 집단(처치1)	-0.0550	0.0622	0.423	-0.0641	0.0550	0.245
중간 위협 집단(처치2)	0.0320	0.0622	0.608	0.0144	0.0551	0.794
성별	-0.1146	0.0519	0.027	0.0279	0.0478	0.560
22-30대	-0.2438	0.0690	0.000	-0.1739	0.0625	0.005
40-50대	-0.3486	0.0635	0.000	-0.1960	0.0573	0.001
수입	-0.0003	0.0135	0.985	0.0006	0.0120	0.962
교육	-0.0445	0.0268	0.098	-0.0220	0.0237	0.354
층청	0.0945	0.0953	0.321	0.0467	0.0844	0.580
영호남+	-0.0139	0.0577	0.809	-0.0525	0.0511	0.305
개신교	0.0678	0.0700	0.331	-0.0371	0.0621	0.551
불교	0.1226	0.0726	0.092	0.0408	0.0646	0.528
카톨릭	0.0816	0.0860	0.343	-0.0031	0.0762	0.968
정치성향(진보-보수)				-0.0156	0.0264	0.555
대북강경책(반대-찬성)				0.2434	0.0204	0.000
남북한격차(약-강)				0.0968	0.0219	0.000
북핵위협(낮음-높음)				0.1741	0.0227	0.000
상수	4.0274	0.1512	0.000	2.0027	0.2127	0.000

다(상관계수=0.0844,  $p$ -value=0.011). 즉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미국의 동맹약속 이행을 신뢰하는 약한 경향이 있다.

관측수	관측수	915	관측수	915
	F(12, 902)	4.38	F(16, 898)	20.19
	Prob > F	0,000	Prob > F	0,000
	R-squared	0,0550	R-squared	0,2515

## V. 잠정적 결론

이 실험연구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을 포착했다. 첫째, 다수 한국인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 수단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믿는다. 7가지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 가운데 주한미군 유지,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현재 매물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을 약속 불이행 시 발생하는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보다 선호한다. 현재 매물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긴장 악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만, 다수 한국인은 매물비용을 수반하는 정책 수단을 더 선호한다. 즉, 말보다는 행동을 선호한다고 보여진다. 반면, 약 10-30% 한국인은 강력한 대북억제 신호가 북한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둘째,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한국인은 미국 내 청중비용보다는 다자 청중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수단을 더 선호한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약속을 불이행함으로써 입게 될 피해보다는 미국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게 될 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분석을 활용하여 인과 메커니즘을 일부 추정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응답자들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여러 국가행위자의 개입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북한발 위협의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안보전문가 사이에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장거리 공격능력의 강화로 인하여 미국이 자국의 피해를 회피하고자 대한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지만, 일반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본 실험연구에서는 북한발 위협 강도가 미국의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믿음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한국인이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원인을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이 채택하는 정책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군사격차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성향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군사격차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로 분산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된다. 즉, “인과 깔때기”의 초입에 인구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가 있고, 중간 부분에서 정치적 성향이 있고, 끝 부분에 대북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의 효과가 대북인식의 효과로 분산 흡수된다고 추정된다.

이 실험설문 연구는 동맹연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피후견국 내 개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보인다. 기존 연구는 후견국이 발송한 신호가 잠재적 적대국의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격이나 분쟁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거나 혹은 동맹에 대한 피후견국의 인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 연구는 후견국의 신호를 수용하는 주체가 국가라는 추상적 행위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억제 맥락 내에서 미국과 북한의 행동 변화에 따라 동맹약속 이행에 대한 한국 내 개인의 인식이 어떻

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적대국의 위협이 동맹 내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석수준 간 차이의 가능성을 포착했다. 기존 연구는 적대국 위협은 동맹 연구 내에서 동맹 형성이나 종결의 설명 요인으로서 주로 활용되어왔다. 반면, 이 연구는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가 미국 대북억제와 대한보장의 수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무관할 수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 현상은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된다고 추정된다. (1) 잠재적 적대국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확장억제를 둘러싼 후견국과 피후견국 간 관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의 마음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2) 실험설문연구에서 응답자가 제공된 북한발 위협 수준과 관련된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3) 현실 세계에서 경험된 북한발 위협 강도의 변화가 대남억제와 대남보장 수단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추후 연구 주제이다.

■ 접수: 2024년 11월 20일 / 심사: 2024년 12월 8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1960.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김 제임스·강충구·함건희,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2022.5.
- 나승학, 「탈냉전 이후 한미동맹의 쇠퇴요인에 관한 연구: Stephen M. Walt 동맹이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76호, 2015, 161~180쪽.
- 우정엽·이성원, 「한국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 변화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3호, 2015, 41~65쪽.
- 이재준,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30권 1호, 2021, 69~96쪽.
- 조동준, 「북한의 핵능력 증가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주는 함의와 대처방안」 『국가안보전략』 제2권 1호, 2017, 253~308쪽.
- 조동준,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평화학연구』 제19권 1호, 2018, 123~148쪽.
- 조윤영, 「미래의 한미동맹과 미국의 역할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1호, 2004, 275~293쪽.
- 통일연구원,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7-01, 2007.
- Avey, Paul C. "The Historical Rarity of Foreign-Deployed Nuclear Weapon Crises" *Security Studies*, vol. 27, no. 1 (January-March, 2018), pp. 371-400.
- Bernhardt, Jordan and Lauren Sukin,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Crisis Dynamics o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5, no. 5 (May, 2021), pp. 855-888.
- Druckman, James 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Experimental Research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0, no. 4 (November 2006), pp. 627-635.

- Fearon, James D. "Signaling versus the Balance of Power and Interests: An Empirical Test of a Crisis Bargaining Mod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8, no. 2 (June 1994), pp. 236-269.
- Fearon, James D. "Signaling Foreign Policy Interests: Tying Hands versus Sinking Cos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 no. 1 (February, 1997), pp. 68-90.
- Fuhrmann, Matthew and Todd Sechser, "Signaling Alliance Commitments: Hand-Tying and Sunk Costs in Extended Nuclear Deterre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4 (October 2014), pp. 919-935.
- Glaser, Charles L. "Political Consequences of Military Strategy: Expanding and Refining the Spiral and Deterrence Models" *World Politics*, vol. 44, no. 4 (July 1992), pp. 497-538.
- Johnson, Jesse C. and Brett Ashley Leeds, "Defense Pacts: A Prescription for Peace?" *Foreign Policy Analysis*, vol. 7, no. 1 (January 2011), pp. 45-65.
- Johnson, Jesse C. "External Threat and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1-3 (May, 2017), pp. 736-745.
- Kydd, Andrew, "Game Theory and the Spiral Model" *World Politics*, vol. 49, no. 3 (April 1997), pp. 371-400.
- Kuo, Raymond and Brian Dylan Blankenship, "Deterrence and Restraint: Do Joint Military Exercises Escalate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66, no. 1 (January 2022), pp. 3-31.
- Leeds, Brett Ashley, "Do Alliances Deter Aggression? The Influence of Military Alliances on the Initiation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3 (July 2003), pp. 427-439.
- McManus, Roseanne W. and Keren Yarhi-Milo, "The Logic of 'Offstage' Signaling: Domestic Politics, Regime Type, and Major Power-Protégé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71, no. 4 (April 2017), pp. 701-733.
- McManus, Roseanne W. and Mark David Nieman, "Identifying the Level of Major Power Support Signaled for Protégés: A Latent Measure Approa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6, no. 3 (May 2019), pp. 364-378.
- Wright Thorin M. and Toby J. Rider, "Disputed Territory, Defensive Alliances and Conflict Initi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vol. 31, no. 2

(April, 2014), pp. 119-144.

Walt, Stephen M,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March 1997), pp. 156-179.

소종섭, 「노무현 당선자의 대미 발언록」 『시사저널』 1829호 2003년 11월 2일.

이제훈, 「북 “극초음속미사일 1000km 표적 명중”…김정은, 1년10개월 만에 참관」 『한겨레』 2022년 1월 12일.

조영빈,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 한미동맹 회의론 근거 있다」 『한국일보』 2021년 8월 19일.

황대진·양승식, 「美, 북한의 ‘LA핵공격’ 감수하면서까지 서울 지키겠다」 『조선일보』 2017년 8월 1일.

de Gaulle, Charles, “Conférence de presse du 14 janvier 1963 (sur l’entrée de la Grande-Bretagne dans la CEE).” Charles de Gaulle-paroles publiques <<https://fresques.ina.fr/de-gaulle/accueil>>.

##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US Deterrence toward North Korea

Hong, Ye Rim (University of Virginia)

Jo, Dong-J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experiment to demonstrate that (1) South Koreans evaluate the credibility of U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assurance toward South Korea regardless of changes in North Korea's threat level, and (2) they perceive measures involving sunk costs as more effective than those involving audience costs in deterring North Korean aggression. These findings suggest two key implications: (1) Contrary to the common expectation that increasing North Korean threats would weaken the credibility of U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due to America's risk aversion, South Koreans' perception remains unaffected by the intensity of North Korea's threat. (2) South Koreans place greater trust in *ex ante* measures, such a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stationing of US forces in South Korea, over verbal commitments which bring *ex post* audience costs.

Keywords: deterrence, assurance, extended deterrence, inter-Korean relationship, signaling theory, survey experiment

**홍예림 (Hong, Ye Rim)** \_\_\_\_\_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동준 (Jo, Dong-Joon)** \_\_\_\_\_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제기구, 국제규범, 핵무기 확산 관련 현상을 연구하고 가르친다.



일반논문

##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평가

: 가용량(FAD)과 획득성(FED) 중심으로

박성열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 국문요약

김정은 정권은 만성적인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식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 식량정책의 목표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효과, 즉 의도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급 측면의 가용량과 분배 측면의 획득성이라는 두 관점을 활용하였다. 가용량은 생산량과 외부 도입으로 이루어지며 획득성은 국가의 공적배급체계와 시장을 통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 가용량은 국내 생산량이 연도별 진폭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준이며 외부 도입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 재개 등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득성은 일반주민 대상 배급이 줄고 국가의 양곡전매제 강화 등 유통 통제로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시장의 확충과 개인의 비공식 소득, 여유 자금 및 사적 재산 증가 등은 긍정 요인이다. 종합적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가용량의 일정 수준 유지, 시장을 통한 획득성 개선 등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량보장 및 체제 유지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사회통제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식량문제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173>

\* 제1저자(parkej@ssu.ac.kr)

\*\* 교신저자(whjung727@gmail.com)

가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정확한 실상 파악을 우선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실제 필요로 하는 농업개발협력 및 배급과 시장에서 소외된 취약층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식량 위기, 식량 정책, 가용량, 획득성, 공적분배체제, 시장, 사회통제

## I. 서론

북한 정권에 있어 식량은 인민들의 생존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이다.<sup>1)</sup> 역대 정권은 식량문제 해결을 꾸준히 공언해 왔으며, 김정은도 취임 직후부터 식량문제 대응을 국정的重要한 목표로 강조해 왔다.<sup>2)</sup>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식량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고 있고<sup>3)</sup> 국제기구와 국내외 언론도 북한의 식량 공급 부족과 주민들의 기근 가능성 및 영양 부족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1) 북한은 ‘의식주’란 표현을 ‘식의주’로 표현한다. 이는 김일성이 직접 먹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의식주라는 문화적 표현을 식의주로 바꾸도록 한 데서 유래한다. 김일성, 「공산주의적 시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3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07쪽.

2) 2012년 4월 김정은의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 강조했다. 『노동신문』 2012년 4월 16일.

3) 김정은은 “지난해의 태풍피해로 알곡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곯아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노동신문』 2021년 6월 16일; 『노동신문』 2022년 9월 9일.



탈북민 증인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에 관한 보고서 2022년」에서 북한주민 2,590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1,0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임을 공개하였고<sup>4)</sup> UNICEF는 2019년 기준 북한 여성 34%가 빈혈 증상을 보이며 2030년까지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였다.<sup>5)</sup>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식량정책은 ‘식량문제와 관련된 권위 있는 공공 기관이 결정한 행동 방침’을 의미하며, 식량정책의 목표는 표면적(1차적)으로는 인민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식량을 보장하는 것이며, 근본적(2차적)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사회 안정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제시된 주요 식량정책은 2012년 6.28 조치(포전담당제 시범 운영), 2014년 5.30 조치(농장 책임 운영제, 포전 담당제 확대 실시), 2016년 신년사(농촌 기계화 강조), 2021년 제8차 당대회(종자 혁명, 과학 농사, 새 땅찾기, 저 수확지 증산, 당적 지도의 강화 등), 2021년 12월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채택) 등이다. 이러한 식량정책을 뒷받침하고 추진력을 배가하기 위해 농장법 등 관계법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한편 당 농업부 복원, 내각에 부총리급 농업위원회 설치 등 식량정책 관리체계도 보강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보장은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생산과 외부 도입 등 가용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분배 측면에서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식량문

4)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epurpos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to make healthy diets more affordable* (2022).

5) “Undernourished and Overlooked: A Global Nutrition Crisis in Adolescent Girls and Women, Data Tables”, *UNICEF Child Nutrition Report Series, 2022* (New York, 2023), p. 13.

제와 기근(famine)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자를 식량의 가용량(Availability, FAD: Food Availability Decline, 식량 가용성 기근), 후자를 식량의 획득성(Entitlement, FED: Food Entitlement Decline, 식량 획득성 기근)으로 구분한다.<sup>6)</sup> FAD 관점은 전체 공급량(국내 생산+외부 도입+재고)을 중시하지만 FED 관점은 주민들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획득성, 즉 획득 권리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식량정책이 의도한대로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체제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는 것도 공급 측면의 가용량과 분배 측면의 획득성이라는 두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sup>7)</sup>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추진된 주요한 식량정책 효과를 식량의 가용량과 획득성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간 북한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북한 당국이 추진한 식량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식량보장과 체제 유지) 달성 여부를 가용량과 획득성 기준으로 평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토대와 논리적 모형을 갖추고 특정 사례를 전체로서 분석하는 사례 지향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sup>8)</sup> 국내외 및 북한의 1차

6) Amartya Sen이 제시한 'entitlement' 개념은 '한 사회의 법적 구조와 관련되어 개인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권한'을 의미한다. 이 글은 'entitlement'를 '획득성'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1), p. 45.

7) WFP, FAO 등 국제기구는 공급과 가용량 관점의 FAD를 활용하나, A. Sen 등 주요 학자들은 특정 지역 기근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량보다 주민들의 식량 획득 권리와 재산권 보유 여부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분배를 강조하는 FED를 중시한다.

8) 사례 지향적 연구는 변수 지향적 연구와 달리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특정 사례를 전체로서 분석함으로써 동태적인 역사적 과정과 다중 복합적 인과기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Ragin, Charles C., *Turning the Tables: How case-oriented*

자료를 포함한 문헌 연구와 함께 통일부와 대한변협의 탈북민 대상 면접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일부가 2024년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학계 전문가 참여하에 탈북자 6,351명 대상 심층 인터뷰이고,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단위로 일정한 문항과 형식으로 탈북민 인터뷰 조사를 신고 있어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연구의 순서는 2장에서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을 제시하고, 3장에서 김정은 시대 주요 식량정책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며, 4장에서 식량정책의 효과를 가용량과 획득성 관점에서 평가하며 5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식량의 개념은 북한의 농장법에서 제시한 곡물(쌀, 옥수수, 감자류, 보리 및 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며 조곡이 아닌 정곡을 기준으로 하였다.<sup>9)</sup>

##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 1. 식량 문제를 평가하는 두 접근: 가용량과 획득성

식량 기근 원인을 규명하는 두 가지 관점은 FAD(Food Availability Decline, 식량 가용량 감소) 측면의 가용량 접근(Availability Approach)과 FED(Food

---

*research challenges variable-oriented research*,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6, (1997), pp. 27~42.

<sup>9)</sup> 조곡과 정곡의 차이는 도정 여부이다. 북한은 2021년 7월 유엔에 제출한 SDG 이행 관련 VNR(Voluntary National Review)에 2020년 식량 생산 552만 톤을 밝혔으나 이는 조곡 기준이며, 한국 통계청은 2020년 북한 식량 생산량을 정곡 기준 약 440만 톤으로 추산하였다.

Entitlement Decline, 식량 가용량 감소) 측면의 획득성 접근(Entitlement Approach)이다. 가용량은 공급되는 식량의 총량을 의미하며 국내 생산, 수입, 외부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공급 부족으로 기아와 기근의 위험을 느끼는 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가용량 관점은 맬더스의 인구 규모 증가에 비해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전통적인 인구론 내용과도 부합된다.<sup>10)</sup> 그러나 공급 측면을 강조한 가용량 접근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은 데도 발생하는 한 국가의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서 발생한 기아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가용량 접근은 식량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해 식량 생산에 영향을 주는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식량의 도입을 제한하는 국제정치적 요인(전쟁, 제재 등) 등 통제가 어려운 자연과 외부의 구조적 요인들을 제시하는 경향이 높다.

가용량 접근은 북한의 식량 이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대량 확보 실패에 따른 가용량 감소가 문제라고 보고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을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가용량 접근은 식량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의 대응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와 규범적 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즉, 가용량 접근은 식량문제를 겪는 북한이 그 원인을 천재지변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식량 공급량의 감소 탓으로 돌림으로써 식량문제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획득성 접근(Entitlement Approach)은 기근(famine)의 특성에 대해 ‘어떤

<sup>10)</sup>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이래 식량 생산은 수백 배 늘었으나 이보다 더 증가한 인구수가 식량을 빨아들이며, 이럴 때 특정 지역에 대한 식량 공급의 급작 감소는 hunger와 famine(기근)을 초래한다. L. R. Brown and E. P. Eckholm, *By Bread Alone* (Oxford: Pergamon Press, 1975), p. 25.

사람들이 먹을 충분한 식량이 없다는 것(being not enough food to eat)'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갖지 못하는 것(not having enough food to eat)'이라고 정의한다.<sup>11)</sup> 이 짧은 문장이 가용량 접근과 획득성 접근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한다. 식량이 없다는 것은 식량 생산과 연관성이 크지만, 식량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한 사회의 식량 분배 구조와 연계되는 것이다. 가용량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만 획득성은 '특정 개인이 식량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개념에서 접근한다. 식량 획득성은 사회 구조에서 개인이 가진 역량과 권리에 의해 좌우되며 <표 1>에서 보듯 거래와 생산, 노동, 상속과 이전을 통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Sen(1981)은 식량을 교환할 수 있는 개인의 소유권 묶음을 교환 획득성 지도(exchange entitlement mapping)라고 지칭하며 굶주림의 직접적 원인을 식량의 교환 획득성 저하 때문으로 보았다. 또한 개인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역량은 그의 소유권과 그가 갖고 있는 교환 획득성 지도에 의존하며, 분배체계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과 노동권 등 보장 여부가 중요하다고 갈파하였다.

<표 1> 식량 교환 획득성(Food Exchange Entitlement) 유형

유형	내용
trade-based entitlement (거래 기반 획득성)	개인소유를 다른 사람 소유물과 거래를 통해 획득
production-based entitlement (생산 기반 획득성)	개인이 소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소유물을 이용해 생산함으로써 발생한 획득
own-labor entitlement (노동 획득성)	개인의 노동을 이용한 획득, 노동 고용 및 임금 실패에 반영

<sup>11)</sup> Amartya Sen,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81), p. 1.

inheritance and transfer entitlement (상속과 이전 획득성)	합법적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주는 획득
---	---------------------------

\* 출처: Sen(198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획득성 접근은 한 국가 또는 집단에서 식량이 전체적으로 남아돌아도 특정인들에게 기근은 있을 수 있고, 식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해도 식량을 마음껏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획득성 접근은 식량부족이 기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배급 시스템과 주민들이 시장 교환을 통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획득 권리 보장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본다. 획득성 접근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해서도 생산량 자체보다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제한하는 분배 체계와 주민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과 시장에서의 식량 교환 획득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중시하게 된다.

이 글은 북한의 식량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의 가용량과 분배 체계 측면을 강조하는 획득성의 두 가지 접근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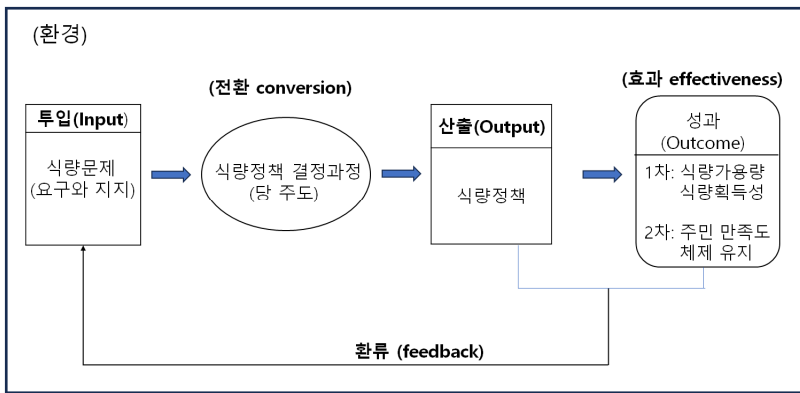
## 2. 북한의 식량정책 체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다.<sup>12)</sup> David Easton에 의하면 정책이란 정치 체계의 산물로 정치체제의 속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정치의 역할이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정책을 통해서 달성된다는

<sup>12)</sup>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23), 35쪽.

것이다.<sup>13)</sup> 모든 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이때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투입(input), 환경으로 내보내는 것을 산출(output)이라 부르고 산출에 대한 환경의 반응을 점검해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을 환류(feedback)라고 한다. 정치체제는 요구(demand)와 지지(support)라는 두 가지 종류의 투입을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인다.<sup>14)</sup> 정책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투입된 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의제 설정-정책분석-정책집행-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이는 환류를 거쳐 재투입되는 순환 과정을 이룬다.

〈그림 1〉 북한의 식량정책 체제 모형



\* 출처: 저자 작성

3권분립의 민주국가 정책 과정에서는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국회와 대통령 및 행정부 장관 등을 의미하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는 정

<sup>13)</sup> David Easton,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6). p. 189.

<sup>14)</sup>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23). 70~72쪽.

부의 강제에 의한 통제에 의지한다. 따라서 정책환경의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정책 결정의 권한이 국가 부문에 집중되며 강제적 수단으로 투입 과정을 통제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은 당·국가 체제 및 수령에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로서 당과 내각의 소수 엘리트만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폐쇄적 정책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sup>15)</sup> 식량정책의 투입 과정에서 식량부족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 이외 체제 유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 체계가 작동된다.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순응을 유도하는 식량 정치를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식량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sup>16)</sup>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농업부가 정책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내각 행정에 대한 통제권·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도 기능을 수행한다.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에서 중요 문제들을 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각의 경제관리보다는 당의 정치적 역할이 더 중요하며, ‘김정은 말씀’이나 ‘방침’이 당 서기실에서 내각 정치국을 통해 하달되기도 한다.<sup>17)</sup> 내각의 농업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에서 결정된 정책과 계획을 하위 집행단위(시, 도, 군)와 논의해 행정적으로 집행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출발점인 투입 부문에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가 반영되기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지침과 중앙당 등 권력 상층부의 주관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15) 김순양,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정책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04), 431~432쪽.

16)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0쪽.

17)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나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8), 82~83쪽, 112~113쪽 참고.



다음으로 식량문제를 인지한 당 농업부 주도하 내각 농업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정책 논의 및 목표 설정 → 식량정책 결정 → 지도·집행 단위 간의 상호 협의 및 집행의 순서로 진행된다.<sup>18)</sup> 정책집행의 효과는 목표달성도를 의미한다. 식량정책의 목표는 최고 지도자의 지침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인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식량정책의 1차적(표면적) 목표이고, 2차적(이면적) 목표는 식량문제 해소를 통해 정권과 체제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목표 달성 여부는 1차적으로 식량의 가용량과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2차적으로 식량정책 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 여부 등 반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정책 추진 결과는 권력 엘리트의 판단과 지침을 통해 환류 과정을 통해 다지 정책 투입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일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 3. 분석의 틀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주요 식량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식량정책 평가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2>).<sup>19)</sup> 이 평가 모형은 <그림 1>의 북한의 식량정책 체제 모형과 연계하여 고안하였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정책의 결정 및 실행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식량 가용량

18) 이지선 외, 「2023년 북한 식량안보 평가와 전망: 농업 거버넌스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No. 216 (2023), 3~4쪽.

19) 평가모형이란 평가대상 정책과 관련된 변수 간 관계를 아주 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구체화한 그림이다. 이윤식, 『정책평가론』 (서울: 대영문화사, 2024), 70~74쪽 참고.

과 식량 획득성 관점에서 평가 요소를 선정하고 이러한 평가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식량 가용량 접근은 국내 생산량과 외부 도입(수입+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국내 식량 생산량과 외부 도입량 추이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업 투입재(비료, 농기계, 전력 등)와 경지면적, 경제성장률(농림어업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외부 도입 영향 요인은 무역 추이와 보유 외화 수준, 대북 제재, 봉쇄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획득성 접근은 배급을 포함한 공적분배체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와 수매·분배에 작용하는 양정제도, 농장(협동, 국영)의 곡물 분배제도, 시장 거래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 보장 추이, 곡물을 포함한 시장물가, 1인당 GDP, 개인 재산, 임금 등 소득 추이가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요인은 각각 가용량과 획득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식량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2〉 북한의 식량정책 평가 모형



\* 출처: 저자 작성

### Ⅲ. 김정은 시대 주요 식량정책 추진 배경과 내용

2011년 12월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은 정권은 핵심적 국가목표를 안정적 권력 장악과 인민 지지 확보, 대외 국가 위상 확보에 두고 이러한 틀 속에서 식량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을 세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 1. 1기(2011.12~2015): 권력기반 강화 및 식량 증산정책 적극 추진

김정은 정권은 권력 승계 이후 신속한 권력구도 재편과 함께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였고, 2013년 2월부터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4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해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북한의 식량정책은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식량 증산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6월 김정은의 ‘우리 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6.28 방침)’ 노작 발표에 따라 시작된 농업개혁은 농장 운영의 분권화와 농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농업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012년부터 농지 규모 축소와 포전 담당책임제 실시, 농민 분배 문제 등 구체적 시범 조치들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종전 10~25명 단위의 분조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6명 단위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분조별 생산성 평가를 통해 차등분배 원칙을 도입하였다. 또한 제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던 자율처분권을 크게 확대해 국가가 제정한 목표생산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생산량의 70%는 국가가, 30%는 목표생산물 초과 분조에 처분권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 조치들이 전국 단위에서 전면 시행되었는지는 불투명하나 2013년도 자강도에서 시범적

으로 실시되다가 일부 지역으로 확대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2014년 5월 30일(5.30 조치) 북한은 노동당과 내각 명의로 전국 각 기관과 기업소에 산업 분야의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와 농업 분야의 농장 책임관리제(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골자로 한 경제개혁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시장 요소를 크게 허용하고 있어 북한 지도부의 농업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15년부터 증산을 위한 농업개혁조치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생산 체계가 기존 4~6명의 분조 단위 관리제에서 가족 단위 자율경영체로 바뀌게 된다.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작업 분조를 구성하였는데 가족 단위를 장려하면서 토지를 가족 1명당 땅 1,000평씩 지급하기도 하였다.

〈표 2〉 김정은 정권의 식량문제 주요 지침(2011.12~2015)

일시	주요 내용
2012.4.6. 김정은 담화 (4.6 담화)	- 당의 위상 강화와 유일적 영도 체계 수립 강조 -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제시
2012.6.28. 새경제관리체계 (6.8 방침)	- 협동농장의 작업분조 규모 축소, 개별화된 영농구조로 변화 - 농업생산물 배분에서 국가 대 생산자 간 7:3 비율 적용
2013.3.31. 당 중앙위 전원회의	- 경제개혁 병진노선에 입각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 결합
2014.2.7.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김정은 서한	-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기념 농촌의 사상, 기술, 문화혁명 강조 - 알곡 중심으로 농업생산구조 변화, 쌀과 옥수수 재배 면적 확대

20) 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파주: 한울엠플러스, 2016), 410~411쪽.

2014.5.30. 우리식경제관리방법 (5.30 방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농장책임관리제 제시 - 농업 분야에서 균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 추진
--------------------------------------	---

\* 출처: 노동신문 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 2기(2016~2020): 대북 제재 속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분배원칙 강조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당-국가체제가 공식화되면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대내 경제 여건은 크게 악화되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성과를 보는 듯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고, 결국 북한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 노선을 선택, ‘자력갱생’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sup>21)</sup>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줄곧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워왔으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웠다. 2016년, 2017년 신년사에서 농촌 기계화와 농기계 생산라인을 완비하라는 세부 방침이 제시되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는 농장 운영에서 농장원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정확히 집행하라는 방침을 제시한 것이 두드러진다. 북한에서 말하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 즉 ‘일한 만큼, 번 것만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식 논리에 따르면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데 평균 분배를 의미하는 공산주의 분배원칙을

21) 정원희, 「김정은 통치이념과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집 2호 (2023), 167~168쪽 참고.

실시하기 어려우며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주어 생산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농촌 지역에서 농장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를 확대 실시하며 북한 당국은 농장원의 열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권한과 분배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농촌테제 발표 55주년 계기로 제시된 농업발전 5대 요소(종자혁명, 과학농사, 새땅 찾기, 저수확지에서 증산, 당적 지도의 강화)에서 증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드러난다. 종자혁명은 농사에서 우량품종을 육종하고 새 품종에 대한 보급을 늘리며 자재와 자금을 절약하여 두벌, 세벌 농사를 하는 것이다.<sup>23)</sup> ‘과학농사’는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다수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새땅찾기’ 운동은 모든 지방의 유실된 땅들을 복구하고 빼기 논밭들을 토지 정리하여 쌀과 강냉이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것이며, 1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10만 정보의 새 땅 찾기, 유실된 농경지 원상복구, 토지정리 등을 통해 모든 지방의 빼기 논밭 정리 등을 포함한다. 저수확지(비탈밭, 모래, 자갈 등) 증산은 냉습지 개량, 흙갈이, 밭돌추기 등 토지의 비옥도를 개선하여 알곡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에서 경험주의, 주관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등 소위 ‘낡은 사업작풍’을 없애고 당의 의도대로 농업생산의 혁신을 일으킬 것을 내세우고 있다.<sup>24)</sup>

22) 김일성, 「당사업에서 주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 것이다(평양시 승호구역 리현리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1년 1월 23일)」, 『김일성저작집(제1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강서군 청산리당총회에서 한 연설, 1960년 2월 8일)」, 『김일성저작집(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3) 『노동신문』 2019년 12월 30일.

24) 김승택,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과학연구』(2020년 3월 23일).

〈표 3〉 김정은 정권의 식량문제 주요 지침(2016~2020)

일시	주요 내용
2016.5. 제7차 당대회	- 주체농법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 전개 -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현대적 개건, 협동농장의 농기계 가동률 제고, 영농공정의 기계화
2018.1.1. 신년사	-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 적극 도입 - 과학농사 및 축산물, 과일, 온실채소, 버섯 생산 증대
2019.1.1. 신년사	- 사회주의분배원칙 집행 강조 - 농장원의 개인부업 축산 장려
2020.1.1.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 농업발전 5대요소(영농과학기술, 농자재보급, 농업인프라 개발 및 보호, 증산영농, 증산경쟁) 추진 - 농업 부문 총화(식량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 출처: 노동신문 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3. 3기(2021~2024): 수령영도체계 완성과 국가 주도 식량문제 해결 강조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과 김정은은 일체화를 이루고 당의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수령영도체계로 제도화되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5개년 전략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라고 자인하였다.<sup>25)</sup> 김정은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김정은식 애민정치를 구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경제 실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 유입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상황에서 무조건 성공담으로 포장할 경우 주민들의 반감이 더 커질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

25) 『노동신문』 2021년 1월 6일.

인다.

8차 당대회에서는 의제의 범위가 농업 문제를 넘어 농촌문제로 확장되었다. 여기서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촌과 지방의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 발표되었다. 김정은의 ‘새 시대 농촌강령’은 기존 농업정책인 사회주의 농촌테제와 내용상 큰 차이는 없으나 농민들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지식형 농촌 근로자’로 육성시키겠다는데 더 큰 중점을 둔다.<sup>26)</sup> 여기엔 향후 10년간 식량자급 달성을 위해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 등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쌀과 밀 중심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며 축산물, 채소, 과일, 버섯, 콩, 감자 생산 확대 및 식품 소비 다양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기술혁명 부분에서는 농업 근로자를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들기,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 “과학농사제일주의”와 같은 구호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식량문제 해결과 함께 2~3년 내 국가의 수매계획을 점진적으로 높여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sup>27)</sup> 그러나 국가의무 수매계획을 높이는 정책은 농장원들의 분배 몫을 줄이며 그간 추진해 온 농장운영 자율성 및 농장원 생산 의욕 제고를 독려해 온 기존의 농업개혁정책과 상치되고 주민들의 식량 획득

26) 전경주, 「김정은 시대 농업정책과 식량 공급체계」 『KDB 북한개발』 제28호 (2023), 67~68쪽.

27) 2021년 양정법 개정 이후 정부가 시장의 곡물 판매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22년 가을경부터 시장의 곡물 유통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였다. 북한은 국가의 식량배급제를 축소하는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전국 286개)를 통해 기업소나 공장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인민들에게 매월 제한된 양의 식량을 시장 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임수호,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 전략보고』, No. 224 (2023), 22~26쪽).



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협동농장의 알곡 구성은 1순위가 국가 의무 수매몫이며, 2순위는 자체 조성곡이고, 3순위가 농장원 식량분배몫으로 되어 있어 1순위인 국가의무 수매몫이 높아지면 당연히 2순위와 3순위인 농장자체 조성곡과 농장원의 식량분배 몫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 유출되는 식량 규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sup>28)</sup>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3.2.26.~3.1)에서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2023년에는 알곡 생산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것을 피력하였다.

〈표 4〉 김정은 정권의 식량문제 주요 지침(2021~2024)

일시	주요 내용
2021.1.5.-12. 8차 당대회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부진 인정 - 국가의무수매계획 지정 및 달성 강조 - 국가수매량 확대를 통한 식량공급 정상화
2021.3.4.-6.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강습회	- 최우선 경제과업으로 농업생산 결정적 확대 강조 - 농업부문에서 허풍 방지 투쟁 강화
2021.12.27.-31.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 새 시대 농촌강령 발표 - 경제발전5개년 계획 수행 기반조성, 농업부문 역량 강화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 강구
2022.1.28.-30. 농업근로자동맹 제9차 대회 서한	-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투쟁, 3대혁명(사상, 문화, 기술) 강조 -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 강조
2022.9.25. 당 중앙위 제8기 10차 정치국 회의	- 당면한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 총동원 - 양곡수매와 공급사업 개선
2022.12.26.-31.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 - 농업기계화와 농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sup>28)</sup> 정은미·박희진,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3), 63쪽.

2023.2.26.-2.31. 당 중앙위 제8기 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실현 첫 해 실천 방도 토의 - 농업기계화와 농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민들의 소득 보장 대책 강구
2024.6.28.-7.1. 당 중앙위 제8기 10차 전원회의 (내각 확대회의 포함)	- 사회주의 농촌 진흥 가속화 - 물 부족 논, 가뭄, 침수 피해 극복 및 관개공사 - 12개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한 생산공정 정비 보강

\* 출처: 노동신문 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20년에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은 농업개혁조치 뒷받침을 위해 관련 법들을 대폭 수정하고 식량관리체계를 보강하였다. 이러한 법규 정비 내용은 대부분 사회주의 중앙계획의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식량 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농업법, 농장법, 양정법 개정,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단위특수화 및 본위주의 반대법, 허풍방지법 제정), 부분적으로는 농업생산 기반인 관개시설의 건설, 정비 보수에 대한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거나(관개법 제정), 신제품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농장물중자관리법 개정) 식량 작목의 방향 전환을 직접 규정(농장법 개정)하는 등 세부적인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2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국가의 농업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기존 농업성을 농업위원회로 격상하였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실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명시했다<sup>29)</sup> 이로써 ‘농업위원회 - 도농촌경리위원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 농장의 우리식 농업지도체계’가 완성되었다. 2023년에는 수매양정성이 독립된 성으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이 농업 생산성과 농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9) 『노동신문』 2022년 1월 26일.

## IV. 북한 식량정책의 효과 평가

북한 식량정책 효과 평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 안정과 체제 유지를 담보하는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식량 가용량과 획득성 분석 및 이와 연관되는 영향 요인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 1. 가용량 관점

식량 가용량은 생산량과 외부 도입(수입+지원)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투입재(비료, 농기계, 비닐 등), 경지면적, 경제성장률, 무역 실적, 보유 외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식량 생산량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생산량은 최저 439만 톤(2020년)~최고 482만 톤(2023년)으로 비교적 일정한 생산량을 보인다(<표 5>). 이는 김정은 집권전 10년간(2001~2011년) 생산량(최저 396만 톤(2001년)~453만 톤(2005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나, 집권 이후 초기 생산량이 늘었다가 중기에 떨어지고 2023년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17~2018년, 2020년 생산량 감소는 대북 제재 본격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에 더하여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에 따른 자체 봉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sup>3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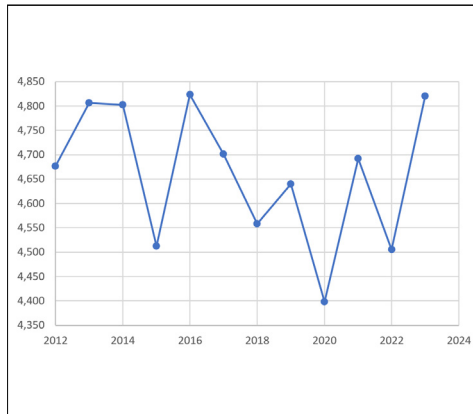
<sup>30)</sup> 2017년 1~6월간 가뭄(5만ha. 농지 피해), 2018년 7~8월간 가뭄과 홍수(농지 9,900ha 및 이재민 1만 명 이상 피해), 2020년 8월 말~9월 초간 태풍과 홍수(1만

식량 생산량 수준은 주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양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sup>31)</sup>

〈표 5〉 김정은 시기 식량 생산량

시점	식량 생산량(천톤)	증감률
2012	4,676	-
2013	4,806	2.8
2014	4,802	-0.1
2015	4,512	-6.0
2016	4,823	6.9
2017	4,701	-2.5
2018	4,558	-3.0
2019	4,640	1.8
2020	4,398	-5.2
2021	4,692	6.7
2022	4,505	-4.0
2023	4,820	6.9

〈그림 3〉 연도별 김정은 시기 식량 생산량(천톤)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 2) 영향 요인

### ① 경제(농림어업)성장률

경제성장률은 농업과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제조업, 광공

---

7천 세대 침수 및 농경지 390km<sup>2</sup> 소실) 등이 있었다. 박성열 외, 「북한의 식량 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 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91집 (2022), 75~76쪽.

<sup>31)</sup> FAO 기준 1인당 연간 소비량 175kg(일일 소비량 480g/인, 하루 1,700kcal)을 고려하면 2023년 북한 전체 주민(2,650만)이 1년간 필요한 식량 소요량은 465만 톤이다. 여기에 사료용 17만 톤, 중자용 21.3만 톤, 가공과 저장과정 손실분 100만 톤을 산정하면 연간 총 식량소요가 590만 톤 정도로서 통상 100만 톤 넘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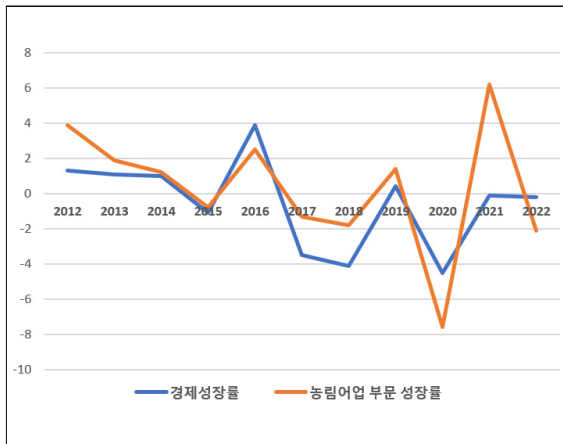
업, 농기계, 비료 등)성장 추이를 반영하고, 다음해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연관성이 있어 검토하였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대체로 저조하고, 대북 제재의 영향을 본격 받기 시작한 2017년(-3.4%), 2018년(-4.1%)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체 봉쇄 여파로 -4.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가 침체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농림어업 성장률도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식량 생산량과 연계되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시점은 식량 생산량도 대폭 줄어든 결과를 보였다.

〈표 6〉 김정은 시기

경제(농림어업) 성장률

시점	경제(농림어업) 성장률
2012	1.3(3.9)
2013	1.1(1.9)
2014	1.0(1.2)
2015	-1.1(-0.8)
2016	3.9(2.5)
2017	-3.5(-1.3)
2018	-4.1(-1.8)
2019	0.4(1.4)
2020	-4.5(-7.6)
2021	-0.1(6.2)
2022	-0.2(-2.1)
2023	3.1(1.0)

〈그림 4〉 연도별 김정은 시기 경제(농림어업) 성장률추이



\* 출처: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비교」 참고

## ② 농업 투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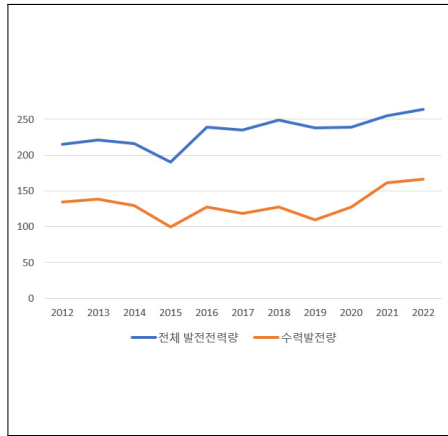
첫째, 전력은 농기계, 비닐, 비료 등 농업 투입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가동에 필수 요인으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체 발전량이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원유 부족과<sup>32)</sup> 시설 노후화로 발전소 가동이 원활하지 않음을 감안해 화력보다 수력 발전소 위주로 추가 건설하는 등 대응책을 꾸준히 세워왔기 때문이다.

〈표 7〉 김정은 시기 발전 전력량

시점	전체 발전전력량 (억 kWh)	수력발전량	
		(억 kWh)	구성비(%)
2012	215	135	62.8
2013	221	139	62.9
2014	216	130	60.2
2015	190	100	52.6
2016	239	128	53.6
2017	235	119	50.6
2018	249	128	51.4
2019	238	110	46.2
2020	239	128	53.4
2021	255	161	63.1
2022	264	166	62.9

〈그림 5〉 연도별 김정은 시기 발전 전력량 추이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둘째, 화학 비료(질소비료와 복합비료)는 자체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정은 취임 첫 해인 2012년 47만 6천 톤이었으나, 2022년 65만 9천 톤으로 대폭 증가하였다(〈표 8〉 참고). 한편, 중국에서의 화학비료 수입(단위: 달러)은 2018년(8,478만) 피크에 달했으나 2020년(549만 5,000) 급감하였고 2021년(2,424만), 2022년(542만 4,00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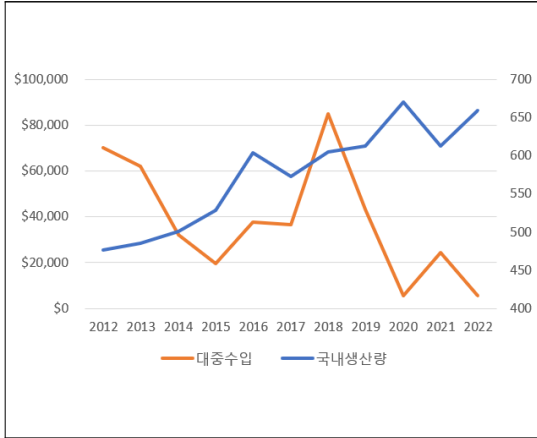
<sup>32)</sup> 통계청 북한통계 자료에 의하면 원유 수입량은 2014년 이후 388만 5,000배럴로 고정되어 있으나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

<sup>33)</sup>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표 8〉 김정은 시기  
화학비료 생산 및 수입량

연도	국내생산량(천 톤)	대중수입량(천 달러)
2012	476	70,007
2013	485	61,931
2014	501	32,182
2015	528	19,614
2016	604	37,657
2017	573	36,548
2018	605	84,780
2019	612	43,228
2020	670	5,495
2021	612	24,240
2022	659	5,424

〈그림 6〉 김정은 시기 화학비료 생산 및 수입량추이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셋째, 북한은 김정은 집권 중반 이후 농업 증산을 위해 농기계 생산과 보급에 주력해 오고 있다. 2017년 신년사에서 트랙터 등 다양한 농기계 생산라인 완비를 강조하고 기존 농기계 공장의 시설 현대화와 확장 사업을 강조했으며, 2019년 발표한 ‘농업발전 5대요소’에 농촌 기계화를 포함하였다. 2022년 황해남도 농업 국가지원 사업 일환으로 동 지역 농촌에 군수공업 부문에서 생산한 농기계 5,500대를 특별히 보급한 바 있고,<sup>34)</sup> 군수공업과 기계공업 부문에서 생산한 농기계 1만여 대를 농촌에 보급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sup>35)</sup>

34) 『노동신문』 2022년 9월 28일; 2022년 12월 13일.

35) 『노동신문』 2023년 9월 24일.

### ③ 식량 재배면적

김정은 시기 경지면적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10년 166.1만ha에 비해 2023년 188.2만ha로 22.1만ha가 늘어나 약 13% 증가했다.<sup>36)</sup> 이는 북한 당국이 알곡 생산량 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관개체계 정비와 간석지 개간 등 농업 인프라 기반 개선을 추진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농가에 허용한 텃밭(20~30평)과 기업소, 공장의 직장 단위로 부식물 공급에 주로 활용되는 부업지 및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간한 야산의 폐기밭(100~2,000평)<sup>37)</sup>은 공동생산, 분배되는 협동농장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농민들의 식량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sup>38)</sup> 소토지 경작 경험은 2011년 이전 탈북민 응답자중 경험자가 36.9%인 반면, 2012년 이후 탈북민 응답자중에서는 경험자가 44.3%로 나타나 김정은 집권 이후 소토지 경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39)</sup>

36)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ZGA53&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4&conn\\_path=MT\\_BUKHAN&path=%252Fbukhan%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ZGA53&vw_cd=MT_BUKHAN&list_id=101_001_004&conn_path=MT_BUKHAN&path=%252Fbukhan%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37) 북한 당국은 초기에는 이를 단속했지만 2002년 7.1 조치 계기로 사실상의 세금인 토지사용료 납부 조건으로 이를 눈감아주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경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적, 반(半)합법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38) FAO/WFP(2019) 조사에 따르면 북한 협동농장 가구의 90%가 텃밭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적 분배체계(PDS) 의존 가구의 약 40%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문헌팔 외, 「북한의 농업생산 개황과 최근 식량 생산 및 수급 현황」 『북방농업연구』 제42권 제1호 (2019), 68-94쪽.

39)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서울: 통일부, 2024), 118-119쪽.



### 3) 외부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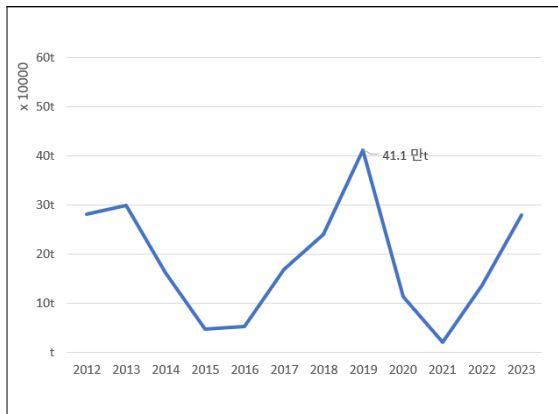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수입과 외부 지원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체 봉쇄로 규모가 급감하였다가 2022년부터 회복되는 추세이다. 첫째, 식량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국 곡물 수입은 2012년(28만여 톤), 2013년(29만 8천 톤)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부터 줄어들어 2015년(4만 7천 톤), 2016년(5만 2천 톤)을 나타냈고 2017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 41만 1천 톤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시작된 봉쇄 여파로 2021년에 2만 톤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2022년 회복세를 보여 13만 6천 톤, 2023년 약 27만 8천 톤을 수입하였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에서 2023년 3월 옥수수 2,800톤, 4월 밀가루 1,280톤, 5월 밀가루 1,300톤 등 3~5월간 5,380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유사시 중국, 러시아로부터 식량을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김정은 시기

대중국 곡물 수입

시점	곡물 수입량(톤)
2012	281,633
2013	298,257
2014	161,271
2015	47,601
2016	52,275
2017	169,031
2018	238,976
2019	411,394
2020	113,782
2021	20,713
2022	136,790
2023	278,765

〈그림 7〉 연도별 김정은 시기 대중국 곡물 수입 추이



\* 출처: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2019-2021년 통계는 한국무역협회 K-stat 참고.

\*\* 곡물: 쌀, 밀가루, 보리, 옥수수, 대두

다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식량 지원은 전체 도입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대북제재 영향으로 인도적 목적 외 식량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 이용까지 제한되고 2020년 1월 이후에는 자체 국경 봉쇄로 외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사실상 중단되었다(〈표 10〉).

〈표 10〉 대북 식량 지원(2016~2020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실적(톤)	21,738	20,527	11,787	18,559	2,590

\* 출처: WFP Country Brief 각 월호 참고

결국,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의 외부 도입은 1990년대 FAO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했던 식량 규모(1991년 155만 톤, 1994년 55만 톤, 2000년 171만 톤)에는<sup>40)</sup> 미치지 못하지만 긴급한 식량 부족분을 임시방편으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은 중, 러 등에서 조달되어 왔다. 도입 규모는 대북 제재와 국경봉쇄로 2020년 이후 급감했으나, 2022년부터 국경봉쇄가 완화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가 개선되면서 무역을 통한 식량과 영농자재 수입이 이루어지고 식량의 외부 도입 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식량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외화 보유 수준을 들 수 있다. 무역을 통한 합법적 거래 수지는 2000~2016년간 제재 이전에는 연평균 3.3억 달러 흑자가 발생했으나, 대북제재 이후 2017~2023년간 연평균 11.8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41)</sup>

40) 정광민, 『북한 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41) 임수호, 「북한의 외화 수지: 대북 제재 이후 외화수지(balance of payment) 추정 I: 합법적 거래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No. 262 (2024).

그러나 북한은 다양한 탈법적, 불법적 거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북한은 2017~2023년 기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에 봉제, 벌목, 건설 등 일반 근로자와 IT 분야 근로자를 보내 약 31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석탄 밀수출액(21.5억 달러), 중국 어선 대상 조업권 수입 및 금 밀수출, 외교관 불법 수입 등이 약 16.8억 달러, 그리고 2023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5.4억 달러)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42)</sup> 미국 백악관은 2023년 1월 2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적시했으며<sup>43)</sup> 2024년 체이널 리시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 규모가 42억 4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sup>44)</sup>

〈표 11〉 북한의 종합 외화수지

단위: 억 달러

항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합법거래 수지	-13	-16.5	-22.3	-3.5	-1.8	-7.8	-17.9	-82.5
불법거래 수지	8.6	4.7	11.0	6.5	5.2	10.1	16.7	62.9
사이버 외화벌이	0.1	1.7	0.9	1.0	1.4	5.3	3.2	13.5
해파 근로자	3.2	2.5	2.0	2.2	2.4	2.5	2.7	17.5
석탄 밀수출	2.6	-	7.0	3.7	0.7	1.9	5.5	21.5

42) 임수호,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II: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 (2017~2023)」 『INSS 전략보고』 No. 283 (2024).

43) Brian Deese, Arati Prabhakar, Cecilia Rouse and Jake Sullivan, 「The Administration's Roadmap to Mitigate Cryptocurrencies' Risks」, The White House, 2023.1.27. <<https://www.whitehouse.gov/nec/briefing-room/2023/01/27/the-administrations-roadmap-to-mitigate-cryptocurrencies-risks/>>.

44) 「2022 Biggest Year Ever For Crypto Hacking with \$3.8 Billion Stolen, Primarily from DeFi Protocols and by North Korea-linked Attackers」, Chainalysis, 2023.2.1. <<https://www.chainalysis.com/blog/2022-biggest-year-ever-for-crypto-hacking/>>.

정제유 밀수입(지출)	-	2.5	3.4	2.6	0.5	1.1	1.7	11.8
무기거래	-	-	-	-	-	-	5.4	5.4
입어료	0.6	1.0	2.5	1.1	0.1	0.3	0.5	6.1
금 밀수출	1.2	1.2	1.2	0.9	0.9	0.9	0.9	7.0
송금	0.4	0.4	0.4	0.1	0.1	0.1	0.1	1.5
외교관 불법수입	0.1	0.1	0.1	0.0	0.0	0.0	0.0	0.2
마약/위조지폐/담배	0.3	0.3	0.3	0.1	0.1	0.1	0.1	1.0
해외식당	0.1	0.1	0.1	0.1	0.1	0.1	0.1	1.0
해외건설 및 동상제작	0.0	0.0	0.0	0.0	0.0	0.0	0.0	0.0
순 외화수지	-4.4	-11.7	-11.3	3.0	3.7	2.3	-1.1	-19.7

\* 임수호,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II: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14쪽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외화 수지는 종합적으로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합법거래수지(-82.5억 달러)와 불법거래 수지(62.9억 달러)를 상계하면 -19.7억 달러의 외화 수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표 11〉).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화 수지는 감소 추세이나, 탈·불법 루트를 통해 이를 보전하고 있고 기존 북한 외화보유 연구들이 20~50억 불<sup>45)</sup> 50~106억 불+ $\alpha$ 를 제시한 점<sup>46)</sup>을 감안하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급박한 식량 위기 시 대응할 여력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45)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 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22권 1호 (2019).

46) 임수호, 「충분한 외화 버퍼설: 북한 외화수지 추정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92 (2020).

## 2. 획득성 관점

북한에서 주민들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는 배급을 포함한 공적분배체계(PDS: Public Distribution System)와 시장이다.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적분배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장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분배체계와 시장은 상호 맞물려 있어 주민들은 배급이 부족하면 시장을 이용하고, 협동농장 분배와 기업소 등 직장에서의 임금 소득, 개인 자산 보유 여부 등은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을 보기 위해 먼저 배급을 포함한 공적분배체계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시장과 식량 물가 추이 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1인당 GDP, 임금 소득 수준 등 개인 재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적분배체계(PDS)

북한은 1947년 1월 ‘식량배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1952년 3월 식량배급에 관한 규정(내각 결정 제56호)을 제정했으며, 1957년 11월 ‘식량판매를 국가의 유일 체계로 할 데 대하여’라는 내각 결정(제102호) 이후 전면적인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 왔다.<sup>47)</sup>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애국미’, 전쟁 비축미 명목을 내세워 배급량을 줄여왔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특권 계층과 평양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배급이 중단되었다.

김정은 시기 공적분배체계(PDS)는 노동당, 국가기관, 군대 등 체제 유

<sup>47)</sup> 전면 배급제는 제한된 투자 조건에서 중공업 우선의 축적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소비를 강력히 억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관세 외,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294-297쪽.

지에 필수적 기관과 근무 가족 대상 기본 배급을 실시하고 기업소, 공장 등은 책임 경영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이익을 남겨 식량을 구매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거나 현금, 현물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인구의 70% 정도로 추정한다.<sup>48)</sup> 이러한 공적분배체제는 배급과 기업소, 공장 등을 통한 공적 분배를 포괄하는 것으로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수준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 협동농장(2,513개, 610만)과 국영농장(707개, 80만)은 농민들이 자체 수확후 산출물을 일정 비율은 국가에 내고 나머지를 할당받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배받는다.

통일부가 2024년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탈북민 6,351명 심층 인터뷰)와 대한변협의 북한인권백서(2006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단위 탈북민 면접조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첫 해인 2012년 이후 배급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2.9%이며, 2016~2020년의 지표에서는 26.8%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로 접경지역 33.9%와 비접경지역 30.1%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신분 및 직업별 식량 배급 경험은 농장원의 경우 48.5%로 배급 경험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자와 특수 직종 종사자는 37.1%와 37.3%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식량 배급 경험자 중에서 주기적으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2012년 이래로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 2011~2015년에 배급을 주기적으로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45.9%인데 2016~2020년에는 59.8%로 상승하여 배급 경험이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배급을 받았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합해 보면, 김정은 정권 후반기로 오면서 전체적 배급 대상은 줄었

<sup>48)</sup> 문현팔 외, 「북한의 농업생산 개황과 최근 식량생산 및 수급현황」 『북방농업연구』 제42권 1호 (2019).

으나, 배급 대상인 권력 엘리트층에게는 과거보다 일관되게 배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급에서 소외된 평양 이외 지역과 노동자 중심 임금 소득자들의 식량 획득성이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8차 당대회(2021년 1월) 이후 식량 수매 단계부터 당국의 양곡 전매제를 시행하고 곡물의 사적 유통을 금지하며, 수매·판매 가격을 현실화한 ‘신 양곡정책’을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생산계획 수립·수매·분배의 전 과정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을 강화하고 양정 관리들의 과장, 허위 보고를 막고 양곡 빼돌리기 등 부패를 차단하며 주민들에게 싼 값에 식량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으나 곡물의 시장 유출을 차단하여 주민의 식량 획득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중적 측면이 있다.

## 2) 시장

북한에서 시장은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이 식량을 획득하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해오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공식 시장은 2022년 총 414개로 추정되며 2016년 12월 조사 결과와 대비하면 1개가 줄어들었다. 시장 변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신규 7건, 폐쇄 8건, 이전 45건, 확장 38건, 축소 18건 등이다. 2022년 말 북한 전역의 시장 매대수는 총 1,153,722개로 집계되어 2016년 조사 때 1,092,992개와 비교하면, 60,730개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수는 정체라고 할 수 있으나 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확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또한 주민들이 식량 획득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2024)에 따르면 탈북민 4,369명 설문조사 결과

<sup>49)</sup>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입쌀과 강냉이를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2011년 이전에는 시장(64.8%), 텃밭, 폐기밭(19.5%), 양정소 배급(1.8%), 소속 직장, 농장 배급(6.0%)이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시장(70.5%), 텃밭, 폐기밭(20.8%), 양정소 배급(1.2%), 소속 직장, 농장 배급(4.0%)을 보여 시장을 통한 식량 조달 비중이 커지고 있다.<sup>50)</sup>

〈표 12〉 식량 조달 방법: 입쌀과 강냉이(사례수 4,369명, 단위 %)

탈북 시기	텃밭, 폐기밭	종합시장	양정소 배급	기업소, 농장, 기관 배급	기타	무응답, 모름
2011년 이전	19.5	64.8	2.4	8.0	3.8	1.6
2012년 이후	20.8	70.5	1.2	4.0	2.6	0.9

\* 출처: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

김정은 정권의 시장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통제하되,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통제 수위를 조절한다. 북한 당국의 시장 관리 체계는 중앙당 → 상업성 → 도, 시, 군 인민위원회 및 상업관리국 → 시장관리소로 되어 있으며, 북한 전역의 시장 관리 역할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산하 시장관리소가 맡고 있다. 2020년 10월 19일에 내각의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시장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 지시문은 시장에 대한 당적 관여와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sup>51)</sup>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 이후 각 지역에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50) 대한변협의 『2020 북한인권백서』는 조사대상자 50명 중 35명(75%)이 “식량을 장마당에서 100%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의 취약계층은 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변호사협회, 『202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20), 250쪽.

51) Daily NK 2020년 11월 3일. <<https://www.dailynk.com/20201103-5/>>.



시장 시스템을 국가의 계획지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내각 산하의 국가품질감독국과 상업성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2)</sup>

식량 획득을 위한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은 법적 보장은 되어 있지 않으나, 당국이 인정하는 범위 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시장 거래는 거래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 시 제재와 처벌이 뒤따른다. 개인 간 식량 매매는 특별한 제약 없이 이루어지나, 당국 관여로 식량 공급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헌법(2019.8. 개정) 제24조는 ‘개인소유는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짐을 명시하면서도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한다’라고 하여 제한적으로 개인 재산권을 인정한다.<sup>53)</sup> 그러나 이는 텃밭이나 개인 부업 수준을 넘어선 기업 형태의 개인의 경제활동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당국이 개인의 경제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도 당국이 눈 감아 주는 선에서 자의적으로 인정될 뿐,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시장 상인들의 불안이 내재하고 관리들과의 유착이나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해 있다.

결국 김정은 시기 시장은 시장 내 관행, 인맥, 신뢰, 명성, 정, 상부상조 등 비공식 제도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sup>54)</sup> 법과 제도로 인정되지 못해 법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52) Daily NK 2021년 8월 16일;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55쪽.

53) 대한변호사협회, 『2022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22), 311~330쪽.

54) 김성배·백명숙,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통일전략』 제21권 3호 (2021).

공식, 비공식 경제활동 이원화로 부패와 탈·불법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대한변협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북한에서 물건 거래는 주로 현금으로 한다”(98.0%), “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고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도 당국이나 법을 통해 이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sup>55)</sup>

시장 곡물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의 식량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먼저, 곡물 가격 자체로서 개인 소득에 비해 급격히 가격이 올라가면 식량 획득이 어려워진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 가격 차이로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가격이 높은 지역의 식량 획득력은 떨어진다. 시장의 식량 가격은 수요-공급과 북한 전 지역 간 유통체계, 그리고 정보의 유통과 연관성이 있다. <표 12>는 김정은 시기 북한 세 개 지역(평양, 신의주, 혜산) 쌀 값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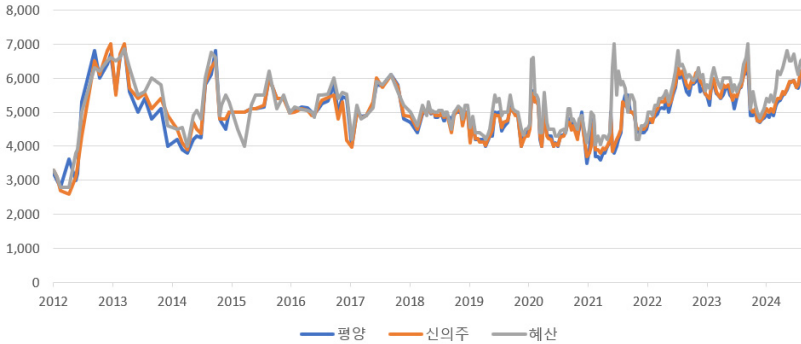
아래 <그림 8>과 <표 12>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집권 기간(2012~2024년) 쌀값은 일시적 진폭을 보일 때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간중 세 지역 쌀값 진폭이 평양(4,800원~6,800원), 신의주(4,700원~6,500원), 혜산(5,000~6,800)으로 약 2,000원 정도이나, 대체로 5,000~6,0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세 지역 쌀값이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교통 발달과 정보 유통으로 북한 전역의 쌀 수급 조절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1년 하반기부터 쌀값이 조금씩 오르는 것은 당국이 2021년부터 수매 과정에서 식량을 전매하고 시장으로의 쌀 유통을 제한하는 이유가 크다. 마지막으로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봉쇄 영향은 2017년과 2021년 이후 쌀값이 소폭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아 주민 식

55) 대한변호사협회, 『2022 북한인권백서』, 328쪽.

56) Daily NK,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B%9C%EC%9E%A5-%EB%8F%99%ED%96%A5-%EC%8C%80%EA%B0%80%EA%B2%A9/>>.

량 획득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sup>57)</sup>

〈그림 8〉 김정은 정권 기간(2012~2024.9) 세 지역 쌀값(북한 원화) 추이



### 3) 개인 재산

시장에서 식량교환 획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 개인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GDP와 시장을 통한 비공식 소득, 사적 재산(주택, 시장 매대, 소토지 등)매매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북한 주민의 1인당 GDP는 2012년(137만 1천 원), 2014년(138만 8천 원, 2016년 (146만 1천 원), 2018년(142만 8천 원), 2020년(137만 9천 원), 2022년(143만 원)으로 나타나 정체 수준이다.<sup>58)</sup> 공식적으로 제시된 북한 주민들의 개인 소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획득 차원에서 의미

<sup>57)</sup>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쌀 가격은 1993년부터 급격히 치솟아 일반 노동자들이 구매하기 어려웠고 ‘임금의 쌀 획득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정광민, 『북한 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201쪽 참고.

<sup>58)</sup>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참고.

있는 변화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시장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주민들의 주된 소득원이 직장을 통한 공식 소득보다 시장 경제활동을 통한 비공식 소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주된 소득원을 공식 소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이전 40.2%에서 2012년 이후 24.7%로 하락한 반면, 비공식 소득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2011년 이전 51.3%에서 2012년 이후 68.1%로 16.8% 증가하였다.<sup>59)</sup> 이는 직장을 통한 소득보다 시장 등 비공식 루트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아지고 음성적 재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여유자금 보유 비율에 있어 2011년 이전에는 16.8%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43.7%로 급상승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 확산에 따른 비공식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이는 가계의 식량 획득성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up>60)</sup> 가계 현금 자산중 보유 화폐 측면에서도 외화만 보유 비율이 2006~2010년(7.8%) → 2011~2015년(33.3%) → 2016~2020년(41.4%)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비공식 소득 증가와 함께 북한 원화보다 유사시 실질 구매력이 있는 외화를 선호함을 보여준다.<sup>61)</sup>

시장에서의 식량교환획득성의 원천이 되는 주민들의 사적 재산 보유와 매매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주택의 사유화 및 매매이다.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 소유로서 주민들은 이용 허가증(통칭 입사증)을 발급받는다, 그러나, 이용 허가증에 이용 기간이 적혀있지 않고 북한 주

59)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59-63쪽.

60)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단위로 나누어 조사한 가계 여유자금 보유 결과에서도 2011~2015년(39.3%), 2016~2020년(49.5%)로 나타나 가계의 여유자금 보유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61)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외화 선호 현상이 심화된 측면도 있다.

민들은 입사증을 주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있다. 주택 매매 경험은 2011년 이전 16.3%에서 2012년 37.0%로 높아졌으며, 주택가격 결정 요인은 주택 위치, 유형(아파트, 단독주택), 크기, 상태, 텃밭 크기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sup>62)</sup>

다음으로 종합시장 매대와 다양한 개인 기업이 사적 재산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합시장 매대는 국유재산이나 시장화가 고착화되면서 매대를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시장관리 당국 묵인 아래 행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전후를 비교해 시장 매대 매매 가능성에 대한 탈북민 답변을 보면 2011년 이전은 57.8%, 2012년 이후는 63.4%로 높아졌다.<sup>63)</sup>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운영하는 식당, 서비스업이 등장하였다. 소규모 국영기업(특정 기관이나 기업소 산하 기업으로 등록) 등은 등록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 시장과 당국 간 제도적 타협을 통해 운영된다. 이러한 사적 기업은 식량 획득성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소토지는 농촌 주민들이 사적으로 식량을 획득할 수 있는 경작지로 당국이 허용한 텃밭(20~30평)과 야산의 패기밭(100~2,000평)으로 구분된다. 북한이 법적으로 개인 경작을 허용하지 않으나 토지 사용료 납부 조건으로 묵인하고 있어 개인의 식량확보 수단이 된다. 소토지 생산물 처분방식을 보면 김정은 집권 전후로 구분하여 2011년 이전 탈북자는 주식으로 소비(82.2%), 시장판매(17.1%)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주식으로 소비(68.5%), 시장 판매(29.7%)로 나타나 점차 시장 판매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sup>64)</sup>

결국, 김정은 시기 식량 획득성 차원의 개인 재산은 시장을 통한 비공

62)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 137쪽.

63) 위의 책, 144쪽.

64) 위의 책, 120쪽.

식 소득과 여유 자금 및 외화 보유 비율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주택, 종합시장 매대를 매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개인 기업 등장 및 소토지를 사유재산처럼 이용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시장을 통한 식량교환 획득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미비하고 북한 당국의 확고한 시장 통제 의지를 감안할 때 언제든지 개인 재산권 행사가 불안정할 수 있고, 시장경제에서 소외되는 빈곤층 및 지역적으로 평양 이외 지역, 장애인, 노령층, 돈 없고 연줄 없는 사회적 약자층의 식량 획득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 3. 종합 평가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 기간 시행된 식량정책의 성과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분석의 틀(〈표 13〉 참고)에 대입하여 평가 요소와 영향 요인별로 O(개선), △(유지), X(악화)로 구분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식량 가용량과 획득성 관점에서 식량정책 추진 결과 나타난 사실 관계 및 상호 영향 요인들 간 맥락에 초점을 맞춘 사례지향적 연구의 결과로써 정확한 수치화는 어려우나,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본다.<sup>65)</sup>

〈표 13〉 김정은 정권 식량정책 평가

기준	평가 요소	영향 요인
식량 가용량 (FAD): 장기적 관점 일정 수준 유지	국내 생산(△)	전력 (△)
		비료 (△)
		농기계(△ → O)

<sup>65)</sup> Ragin, Charles C., *Turning the Tables: How case-oriented research challenges variable-oriented research*, pp. 27~42.

		경지면적( $\Delta \rightarrow O$ )
		경제(농림어업)성장률( $\Delta$ )
	외부 도입( $X \rightarrow \Delta$ )	무역( $\Delta \rightarrow O$ )
		외화 보유( $\Delta \rightarrow X$ )
		대북 제재( $\Delta \rightarrow O$ )
		코로나-19 봉쇄( $X \rightarrow \Delta$ )
식량 획득성 (FED): 개선 추세이나, 불안정 (당국 통제 변수)	공적분배체계( $\Delta \rightarrow X$ ) (PDS)	배급제( $\Delta$ )
		양정제도( $\Delta \rightarrow X$ )
		농장분배( $\Delta \rightarrow X$ )
		기업소, 공장( $\Delta$ )
	시장( $\Delta \rightarrow O$ )	거래의 자유( $\Delta$ )
		사적 재산권( $\Delta \rightarrow O$ )
		물가 추이( $\Delta$ )
	개인 재산( $\Delta \rightarrow O$ )	1인당 GDP( $\Delta$ )
		보유 자산( $\Delta \rightarrow O$ )
		임금( $\Delta$ )
		비공식 소득( $\Delta \rightarrow O$ )

\* 출처: 저자 작성  
 \* O: 개선,  $\Delta$ : 유지, X: 악화

먼저, 식량의 가용량은 김정은 집권 12년(2012~2023)간 연도별로 진폭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은 2020년 최저 수준인 439만 8천 톤을 기록했으나, 대체로 450만 톤(2022)~482만 톤(2016, 2023)의 수준이다. 외부 도입은 2023년 대중국 곡물 수입(27만 8천 톤)이 과거 수준에 접근하면서(2012년 28만 1천 톤) 일정한 공급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국내 생산량과 외부 도입이 동시에 감소한 경우(2015, 2020년) 식량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식량 가용량과 관련된 영향 요인들은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력은 수력 발전량 증가에 힘입어 소폭

증가되고 있고, 화학 비료는 국내 생산량이 상당폭 증가하였으며 중국에 서의 비료 수입도 202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농업 기계화와 관련하여金正은의 지시 이후(2017년 신년사) 농촌에 2022년(5,500대), 2023년(1만여 대) 잇따라 보급하였다. 식량 재배면적은 간석지 개간, 관 개체계 정비로金正은 시기에 늘어났으며, 농업을 뒷받침할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성장률과 농임어업 성장률도 2021년부터 소폭 반 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량의 외부 도입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되는 요인들도 제재와 봉쇄 완 화 등으로 침체국면을 벗어나 개선 양상을 보인다. 무역은 2021년, 2022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화는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해킹, 해외 근로자 파견, 중국어선 조업권, 무기 수출 등으로 보전하고 있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합해 비상 시 식량 수입 원천으로 사용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강화된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었 으나, 국제정세의 신냉전 분위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가 북한 입장을 지지하고 제재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전략물자, 식량 등 의 북한 유입이 용이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식량 획득성 측면에서 배급을 포함 공적배급체제(PDS)가 유지되고, 식량을 거래하는 시장의 양적 확대, 질적 성장 및 가계의 여유 자금, 비공식 자산 증가 등으로 주민의 식량교환 획득성이 높아졌다.<sup>66)</sup> 먼저 공적분배체제는 지배 엘리트층에는 배급이 실시되고 협동농장과 국영농장 농민들은 산출물을 현물로 할당받거나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 으며, 기관과 기업소는 식량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분배하거나 임금형태

<sup>66)</sup> 북한 주민 식생활 수준 조사와 관련하여 1일 3회 식사 비율이 2011년 이전은 56.3%, 2012년 이후는 89.7%에 달한다. 이는 식량난이 일정 부분 개선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 참고.



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배급 받는 대상이 감소하였고 농장 농민의 분배 몫과 기업소 임금 수령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권층이나 평양 거주민 등 기득권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 대상 공적 분배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1년부터 개편한 새로운 양정체계는 수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계 부풀리기·부패 차단을 내세워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식량의 시장 유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민의 식량 획득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전체 매매수가 증가하는 등 질적 확충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장을 통한 주민들의 식량 조달 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있어 식량 획득성 측면에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과 관련된 영향 요인들도 식량 획득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장 거래의 자유와 사적 재산권 보장 측면은 당국이 지정한 금지 품목 외 생필품은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되고, 거래 효력이 법으로 보장받지는 못하나 관행 등 비공식 제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당국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어 식량 거래량이 조절되고 제한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법제화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불안정성을 노정한다. 시장의 식량 물가는 201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평양, 신의주, 혜산의 3곳의 장기적 추이를 관찰한 결과 특정 기간 진폭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 지역의 물가 추이가 비슷하게 오르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한 전역에서 시장을 통한 식량 공급 조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인 재산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획득성 관점에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2012년 이후 사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비공식 소득(2011년 이전 51.3% → 2012년 이후 68.1%)과 가계의 여유 자금 보유 비율(2011년 이전 16.8% → 2012년 이후 43.7%)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개인 주택, 종합시장 매대, 다양한 형태의 소기업, 소토지 등 재산을 실질

적으로 사적 재산처럼 이용하고 개인의 식량획득성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의 식량 획득성은 배급과 공적분배체계 측면에서 현상 유지되거나 악화된 면이 있으나, 불가역적으로 고착된 시장과 개인 재산 이용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국의 식량 전매 정책과 시장 통제 의지를 감안할 때 주민 개인의 식량 획득성은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다 하겠다.

## V.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의 식량 문제는 만성적이다. 인민이 주인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수십 년째 인민에게 식량을 보장해주지 못해 주기적으로 식량 위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김정은 정권은 식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식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식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성과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목표는 표면적으로 주민들의 식량 보장, 즉 ‘인민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면적으로는 식량문제 해소를 통해 사회 안정과 체제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식량 보장은 공급 측면에서 국내 생산과 외부 도입 등 가용량(Availability) 확보도 중요하지만, 분배 측면에서 주민들이 식량에 접근하고 확보할 수 있는 획득성(Entitlement)도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평가와 관련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량 가용량은 매년 부족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식량 획득성이 나아짐으로써 주민 생존을 보장하고 체제 안정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다만, 식량 가용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당국의 식량 유통과 시장통제 여부에 따라 주민의 식량 획득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김정은 시대 식량정책의 초점은 분배의 개선보다 가용량의 핵심인 생산량 확대에 맞춰져 있다. 포전 담당제, 농장 책임 운영제 및 간석지 개간, 농기계 확대 보급, 국가적 동원체제 강조 등 주요 정책이 증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배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거래 자유와 사적 재산권 보장 및 핵심 지지계층 대상 배급제도 등을 건드리는 것은 자칫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잠재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정책은 분배 측면의 주민 식량 획득성 제고보다는 공급 측면의 생산량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의 시장이 권력의 통제하에 있더라도 이미 불가역적 현상으로 자리 잡아 국가권력과 시장 간 역할 및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주민의 식량 획득성이 영향을 받고, 이는 북한 체제의 향배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으로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지시로 식량 가용량 확보를 위한 증산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현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획기적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국가목표 우선 순위는 핵무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강화이다.<sup>67)</sup> 김정은이 표면적으로는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 우선 대응을

67) 2021년 8차 당대회 시 민수경제(경제발전 5개년계획)는 현상 유지 전략을 채택하면서도 군수경제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통해 비약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2023년 12월 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도 국방력 강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노동신문』 2023년 12월 27일.

내세우지만, 한정된 국가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정함에 있어 식량 문제는 군사 부문에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sup>68)</sup>

넷째, 김정은 정권 시기 분배체계 개선은 특권층 중심 배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배급 대상은 줄었으나, 배급 대상에 대한 배급 횟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권력을 떠받치는 특권층과 평양 중심 특정 지역 지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권층에 집중되고 일반주민을 차별하는 정책효과가 누적되고 장기화되면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다섯째, 이번 연구 결과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는 식량 가용성과 획득성 측면에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취약층이다. 배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을 획득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직장 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하층 노동자, 시장 활동에서 소외된 노령층, 고아, 장애인 등 돈 없고 연줄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김정은 집권 이후 식량 대응 리더십은 내부 경제 악화와 대북 제재, 코로나19 봉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식량문제 해결 의지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국가적 동원 체제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해 왔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 시대 농촌강령 등 주요 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여전히 뚜렷하지 않고 자원을 농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워 식량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sup>68)</sup> 김정은은 2023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열병식에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곯아야 했다... 보다 더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식량 생산에 충분한 자원 배분을 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노동신문』 2023년 2월 8일.

일곱째,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식량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환류(feed back) 과정을 거쳐 다시 정책 투입 요인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최고 지도자와 지배 엘리트 중심의 이해관계가 투입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북한 주민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책 결정을 위한 투입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의 개방, 개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앞으로 남한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식량문제 대응 방향에 있어 선입견을 배제하고 정확한 실상 파악을 우선하면서, 단순 식량 지원이 아닌 북한이 실제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 민간과 협조해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식량정책 시행 결과 나타난 사실관계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해 식량 가용량과 획득성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북한이 식량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사회통제와 관리능력을 전제로 식량문제가 장기적 시각에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량정책 성과로 평가되고 제시된 내용이 전적으로 정책의 효과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생존 노력과 시장화의 큰 흐름이 반영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자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이관세 외,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 이윤식, 『정책평가론(2판)』, 서울: 대영문화사, 2024.
- 정광민, 『북한 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 서울: 시대정신, 2005.
- 정은미·박희진,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23.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23.
- 통일부, 『북한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서울: 통일부, 2024.
-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2.
- Brown, L. R. and E. P. Eckholm, *By Bread Alone*, Oxford: Pergamon Press, 1975.
- Easton, David ed. *Varieties of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 Sen, Amartya.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1981.
- 김성배·백명숙,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통일전략』 제21권 3호, 2021.
- 김순양,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정책 네트워크」 『한국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04, 429~256쪽.
- 김승택, 「우리 당이 밝힌 농업발전의 5대요소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 『과학연구』, 2020.3.23.
- 김양희, 『김정일 시대 북한의 식량정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문헌팔·조수연·황흥구, 「북한의 농업생산 개황과 최근 식량생산 및 수급현황」 『북방농업연구』 제42권 1호, 2019, 68~94쪽.
- 박성열·이철·권진아·정원희,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 북한과 국제 사회의 책임」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9권 제1호, 2023, 93~137쪽.
- 박성열·한지만·정원희, 「북한의 식량 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 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91집, 2022, 49~99쪽.

- 이지선 외, 「2023년 북한 식량안보 평가와 전망: 농업 거버넌스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No. 216, 2023.
- 임수호, 「충분한 외화 버퍼설: 북한 외화수지 추정의 쟁점과 전망」 『INSS 전략보고』 No. 92,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 임수호, 「배급과 시장의 충돌: 북한 양곡유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동학」 『INSS 전략보고』, No. 224, 2023.
- 임수호, 「북한의 외화 수지: 대북 제재 이후 외화수지(balance of payment) 추정 I: 합법적 거래수지(2017-2023)」 『INSS 전략보고』 No. 262, 2024.
- 전경주, 「김정은 시대 농업정책과 식량 공급체계」, 『KDB 북한개발』 제28호, 2023, 55~89쪽.
-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 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22-1,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9.
- 정원희, 「김정은 통치이념과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집 2호, 2023, 151~199쪽.
- Ragin, Charles C., "Turning the Tables: How case-oriented research challenges variable-oriented research"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6 (1997), pp. 27-42.
- Chainalysis Team, 「2022 Biggest Year Ever for Crypto Hacking with \$3.8 Billion Stolen, Primarily from Defi Protocols and by North Korea-linked Attacker」 *Chainalysis*, 2023.2.1. <<https://www.chainalysis.com/blog/2022-biggest-year-ever-for-crypto-hacking/>>.
- Deese, Brian and Arati Prabhakar, Cecilia Rouse and Jake Sullivan, 「The Administration's Roadmap to Mitigate Cryptocurrencies' Risks」 *The White House*, 2023.1.27. <<https://www.whitehouse.gov/nec/briefing-room/2023/01/27/the-administrations-roadmap-to-mitigate-cryptocurrencies-risks/>>.
-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Repurpos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to make healthy diets more affordable*. 2022. <<https://openknowledge.fao.org/items/c0239a36-7f34-4170-87f7-2fcc179ef064>>.
- UNICEF. *Undemourished and Overlooked: A Global Nutrition Crisis in Adolescent Girls and Women, Data Tables*, March 2023. <<https://www.unicef.org/media/>>

136876/file/Full%20report%20(English).pdf>.

WFP Country Brief <<http://www1.wfp.org/countrie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

Daily NK, “북한시장동향.”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C%8B%9C%EC%9E%A5-%EB%8F%99%ED%96%A5-%EC%8C%80%EA%B0%80%EA%B2%A9/>>.

Daily NK 2020년 11월 3일.

『노동신문』 2019년 12월 30일.

『노동신문』 2021년 1월 6일.

『노동신문』 2021년 1월 9일.

『노동신문』 2022년 1월 26일.

『노동신문』 2023년 9월 24일.

『노동신문』 2022년 9월 28일.

『노동신문』 2022년 12월 13일.

『노동신문』 2023년 2월 8일.

『노동신문』 2023년 12월 27일.

김일성, 「공산주의적 시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정무원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5년 10월 22일)」, 『김일성저작집 3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대한변호사협회, 『2020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20.

대한변호사협회, 『2022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22.

통계청 북한통계포털 <<https://kosis.kr/bukhan/>>.

한국무역협회 K-stat <<https://stat.kita.net/>>.

한국은행 <<https://www.bok.or.kr/>>.



##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Kim Jong-un Regime's Food Policy : Focusing on Availability(FAD) and Entitlement(FED)

Park, Sung Yul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SU)

Jung, Won Hee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NU)

### Abstract

The Kim Jong-un regime has implemented various food policies aimed at resolving chronic food shortages. The primary goal of North Korea's food policy is to ensure minimum food supply for its citizens, thereby promoting social stability and maintaining the regime.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Kim Jong-un's food policies, specifically whether their intended goals have been achieved, by focusing on two key dimensions: Food Availability (FAD) on the supply side and Food Entitlement (FED) on the distribution side. Availability is determined by domestic production and external imports, while entitlement emphasizes the role of the state's public distribution system and market-based food acquisi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domestic production exhibits annual fluctuations, it has maintained relatively stable level over time, and external imports have shown signs of recovery,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rade with China and Russia. Entitlement, however, has slightly deteriorated due to reduced public food distribution and strengthened state control over grain distribution, though market expansion and increases in informal incomes, spare funds, and private assets have had positive effects. In summary, while food conditions under Kim Jong-un's

regime have not significantly improved, the policy goals of maintaining a consistent level of availability and improving entitlement through market mechanisms have been achieved. This suggests that, despite structural food crises, the Kim Jong-un regime has managed to maintain or improve the food situation based on its social control and administrative capabilities. As a policy implication, it is necessary to set aside preconceived notions about North Korea's food problems and prioritiz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situation. Collaborative effort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ioritize agricultural development initiatives and targeted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systematically excluded from public distribution systems and market access.

Keywords: Kim Jong Un regime, food crisis, food policy, availability, entitlement, public distribution system, market, social control

#### 박성열 (Park, Sung Yul)

---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이자 연구기획센터장으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2023), 「북한의 식량 위기론: 1990년대와 2020년대 사례 비교 분석: FAD와 FED 접근법 중심으로」(2022), 「북한도시연구의 성과와 과제-선행연구 분석 중심으로-」(2021), 「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대북제재 및 코로나 19 중심으로」(2021),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 정원희 (Jung, Won Hee)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정치와 이데올로기, 선전선동, 남북관계, 북한 식량문제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조선노동당 비밀문서를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2024), 「김정은 통치이념과 담론: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중심으로」(2023), 「북한의 체제건설과 선전선동」(2023) 「북한주민 식량권(Right to Food)에 대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책임」(2023) 등이 있다.

일반논문

##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연구\*

: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안종숙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당국이 규범적이고 공적 감정으로 제시하는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생 시기, 성분, 출신 지역이 다른 세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질적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르는 순응 행위, 충성 행위의 동기, 고난의 행군 이후 사상감정의 수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다. 동시에 공적 감정을 우선하면서 사적 감정의 미분화와 탈구라는 감정 세계의 특징을 나타내고 외부 적대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를 보이며 충성심이 체제 순응 기제로 작용하는 유사성을 보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경제적 환경과 성분 차이에 따라 감정사회화 경험에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은 당국이 주도하는 감정사회화를 겪은 결과이며 북한당국이라는 감정 권력의 통치 산물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북한당국의 감정 기획이 주민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밝힌 작업이라는 의미가 있다.

주제어: 북한, 사상감정, 감정사회화, 감정 권력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225>

\* 이 연구는 안종숙,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상감정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3) 중 일부 내용을 확장, 보완한 것입니다.

## I.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모든 사회는 그 사회구성원이 공통으로 갖는 가치관과 특정 상황에서 준수하고 준수되길 기대하는 규칙, 태도, 행동의 기준인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다.<sup>1)</sup> 사회화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sup>2)</sup> 사회 규범 범주에 속하는 감정 규범 역시 사회화과정을 거쳐 감정 규범을 내면화하고 감정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특정한 사회환경에서 감정 규범과 규율, 표현을 배우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감정의 사회화라고 할 때 북한의 경우 국가가 감정사회화의 강력한 주체로 기능한다. 이는 한 사회구성원으로 어떤 감정 규범과 관행을 습득하고 내면화할지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국가가 통제하고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에 북한당국이 깊이 관여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는 감정이 가진 사회적 속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은<sup>3)</sup>) 사회 내 구성원을 하나로 묶고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동원하는 에너지 역

1) 스캇 R. 헤리스 저, 박형신 역, 『감정사회학으로의 초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7), 36쪽.

2) 이동원·박옥희,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97~99쪽.

3) 감정이 사회과학의 탐구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후 감정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의들이 제시되었지만 합의된 정의는 없다. 본 연구 역시 감정에 대한 본질적 정의를 내리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감정이 사회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사회구성주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밝힌다.

할을 한다.<sup>4)</sup> 또한 모든 정치 사회적 행위에는 특정한 감정 양식의 공유가 전제되기 때문에 정치체제는 감정에 관심을 가진다.<sup>5)</sup> 따라서 정치권력은 감정 규범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여 개별 행위자인 구성원이 특정 감정에 순응하게 함으로 감정을 조직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인간의 감정을 활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북한당국이 정치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모범적 감정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유통하여 특정한 유형의 감정을 조직해 왔다고 보는 것이 이 연구의 관점이라 하겠다.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습득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모범적이고 규범적 감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문헌에 나오는 사상감정에 주목한다. 사상감정은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가질 때 갖게 되는 감정으로<sup>6)</sup> 북한당국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흠모감,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사상감정으로 제시한다. 또한 북한 주민은 집단생활을 시작하는 탁아소 시절부터 사상교양을 통해 사상감정에 대해 평생 주입교육을 받는다.<sup>7)</sup>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모범적이고 공적 감정으로 북한당국이 강조하는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의 양상이 어떠한지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북한당국이 주도하는 감정사회화로 인한 북한 주민의 감정 세계가 어떤

4) 랜들 콜린스 저, 진수미 역,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파주: 한울, 2009), 154쪽.

5) 김학이, 「감정사 연구의 지평-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연구』, 제28호 (2014), 234쪽.

6)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인간 감정에 관한 리론」 『철학연구』 제4호 (1996), 35~37쪽.

7) 사상감정과 사상교양과의 관계는 II장 2절 북한 문헌으로 본 감정과 사상감정 참조.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북한 주민의 개인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인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인간의 감정을 활용해 온 북한 당국의 감정통제 양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을 탐색하는 이 연구는 북한 사회의 감정 연구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북한 사회와 체제를 감정/감성으로 접근한 연구를 검토하였고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 체제의 형성, 보존과 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감정이라는 요인을 활용해 왔다고 보는 연구로 이 연구들은 감정(감성)정치나 감정(감성)통치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sup>8)</sup> 예를 들어 한모니까(2018)의 연구는 신해방지구 주민들을<sup>9)</sup> 북한 인민으로 만들어 가는

8) 한모니까,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 '신해방지구' 개성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5권 (2018), 261~298쪽; 이지순, 「김정은 시대의 감성 정치와 미디어의 문화정치학: '로동신문'의 가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59호 (2016), 195~219쪽; 김정수, 「북한의 감성 정치: <민족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반도미래연구』 제3호 (2019), 189~215쪽; 이유영·홍재범, 「1990년대 후반 북한 선군정치 담론의 예술적 형상화: 박호일의 <편지>와 <동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1집 (2020), 201~234쪽; 박계리, 「위기의 시대, 북한 문예 정책의 변화와 '웃음의 정치'·화술소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3권 3호 (2022), 47~66쪽.

9) 신해방지구에 해당하는 개성, 개풍, 장단, 판문과 황해도 웅진, 청단, 강령, 연안, 배천 등의 지역은 38도선 이남에 위치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 3년과 이승만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중 북한이 이 지역을 점령,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는 이 지역들을 신해방지구라 명명하였고 이곳 주민들도 북한에 편입되었다.

과정을 감정 정치 실례로 하여 북한이 집단적이고 공적인 차원의 감정을 구성, 이를 체제 유지와 북한식 인민 만들기 과정에 활용해 왔다고 진단한다.

두 번째는 북한 체제나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한 방편으로 감정이나 감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서<sup>10)</sup> 첫 번째 유형의 연구와 차별점은 감정이나 감성을 북한 체제 유지나 보존을 위한 통치 기제로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유형의 연구는 문학작품이나 민요, 예술영화 같은 문화예술 분야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 초기 예술영화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한 김정수(2018)의 연구는 현재 북한의 모습을 주민은 기쁨을 욕망하고 당국은 슬픔을 주조하려고 하고 예술계는 기쁨을 향한 주민의 욕망을 반영하고 수용하는 등 감정이 과잉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선행연구들은 모두 문헌이나 문화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당국의 감정 기획이나 의도와 함께 북한 사회의 감정 양상만 다룰 뿐 북한 주민의 감정 경험은 다루지 않는다. 북한당국의 감정 기획이 '무엇을 느끼고 행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라면 북한 주민의 감정 경험은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행하는지'의 문제로 두 가지 현상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 연구는 북한당국의 하향식 기획 의도를 살펴보는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북한당국의

10) 임옥규, 「선군 시대 북한 문학에 형성된 주도적 감성」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4호 (2014a), 244~266쪽;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성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 제17집 2호 (2014b), 163~199쪽; 배인교, 「선군 시대 북한의 민족적 감성: 2000년대 『조선예술』에 수록된 민요풍 노래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a), 79~126쪽; 배인교, 「북한의 천리마운동 시기 음악적 감성: 노래집 <풍어기 휘날리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5집 (2014b), 327~359쪽; 김정수, 『북한 예술영화의 '행동'과 '감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감정 기획이나 의도가 북한 주민의 삶 속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발견하는 작업으로서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감정 규범과 감정사회화

모든 사회에는 구성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지키고 또한 지키기를 기대하는 규칙, 태도, 행동 기준들이 있다. 이를 사회 규범이라고 할 때<sup>11)</sup> 사회 규범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여한다. 사회 규범의 한 범주에 속하는 감정 규범에 대하여서도<sup>12)</sup> 사회 규범 개념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한 느낀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감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그런데 사회학과 인류학 연구들은 감정 규범과 관련하여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것에 주목한다.<sup>14)</sup> 다시 말해 “어떤 감정은 말해질 수 있고 어떤 감정은 말해질 수 없으며 또한 어떤 감정들이 말해져야만 하는지”와 관

---

11) 스캇 R. 해리스, 『감정사회학으로의 초대』, 36쪽.

12) Christian von Scheve, *Emotion and Social Structure* (NY: Routledge, 2013), p. 120.

13) Kathy Chamaz, Scott. R. Harris and Lesile Irvine, *The Social Self and Everyday Life: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Symbolic Interactionism* (NJ: John Wiley&Sons, Inc. 2019), p. 127.

14) 감정과 권력과의 관계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이안 버킷(2017)의 『감정과 사회 관계』, 스캇 R. 해리스(2017)의 『감정사회학으로의 초대』, 엘리 러셀 흑실드(2009)의 『감정노동』 등이 있으며 인류학 연구는 Catherine A. Lutz와 Lila Abu-Lughod(2008)의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을 참고.



련하여 권력관계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허치슨과 블레이크는 ‘감정 권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sup>16)</sup> 이 ‘감정 권력’이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그에 따르는 감정표현 정도의 적절성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코슈트는 ‘감정 권력’이 가능한 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권력과 지위를 가진 집단은 감정 규범을 만들어 하위 구성원들에게 특정 감정에 순응하도록 가르친다면서 감정의 사회화 과정이 ‘감정 권력’에 의한 감정통제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sup>17)</sup> 이러한 감정의 사회화 과정은 공동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sup>18)</sup>

감정 규범의 생성과 유통에 관여하는 ‘감정 권력’에 의한 감정사회화는 국가 차원에서 행사될 수 있다. 특별히 개인보다는 집단,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적 평등을 우선적 가치로 하여 전 사회를 거대한 동원 체제로 동원하고 전 주민이 국가의 피고용인이 되는 근대화 과정을 밟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개인은 동질적 ‘사회주의적’ 의식을 가지도록 요구되었고 감정과 정서도 당과 국가를 향하도록 요구되었다.<sup>19)</sup>

15) Lila Abu-Lughod & Catherine A. Lutz, “Introduction: emotion, discourse,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n Catherine A. Lutz & Lila Abu-Lughod, eds.,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 14.

16) Emma Hutchison & Roland Bleiker, “Theorizing emotion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 (2014), p. 508.

17) Simmon Koschut, “Emotional (security) communiti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 norms in inter-allied conflict manage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0, no. 3 (2014), pp. 540-542.

18) 스캇 R. 해리스, 『감정사회학의 초대』, 52~55쪽; 용채용·은용수, 「국제정치학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7권 3호 (2017), 65~71쪽.

19)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186, 193쪽.

구소련 체제의 경우, 사람들을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길러낸다는 목표 아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를 갖도록 어린 시절부터 감정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교육은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무한 충성심과 복종으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었다.<sup>20)</sup> 또한 행복감, 슬픔, 신뢰, 두려움과 같은 개인적 감정은 소련 시민으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느끼도록 교육되었고 이 감정들의 표출 역시 자신이 속한 집단과 국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상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되었다.<sup>21)</sup>

중국도 마오쩌둥 시기와 문화대혁명 동안 개인의 감정이 집단의 목표에 종속된 채로 동원되고 통제되었고<sup>22)</sup> 구동독 체제 역시 사회주의 체제의 목표 실현을 위해 개인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대신 자제와 통제, 씩씩함과 순응과 같은 규범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적 감정은 극히 제한되고 억압되었고 이는 동독 주민들 안에 감정 정체로 나타났다.<sup>23)</sup>

## 2. 북한 문헌으로 본 감정과 사상감정

『조선말대사전1』에서 감정은 “객관세계의 사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심리 현상”이라고 정의한다.<sup>24)</sup> 이와 함께 감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계급적 성격”과 “사상의식”이며 이에 따라 사물

<sup>20)</sup> Herschel Alt, “Basic Principles of Child Rearing in Soviet Union: Firsthand Impressions of an American Observ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58), p. 231.

<sup>21)</sup> Rachael Styker, “Emotion Socialization and Attachment in Russian Children’s Homes” *Global Studies of Childhood*, vol. 2, no. 2 (2012), pp. 87~88.

<sup>22)</sup> Elizabeth J. Perry, “Moving the masses: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Mobilization*, vol. 7, no. 2 (2002), p. 122.

<sup>23)</sup> 한스 요하임 마즈 저, 송동준 역,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43쪽, 69~73쪽.

<sup>24)</sup>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161쪽.

현상에 대해 다른 감정을 가진다고 북한당국은 말한다. 예를 들어 혁명 투쟁 진두에 서 있는 근로 인민대중의 감정은 “수령에 대한 흠모감, 혁명하는 긍지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계급적 ‘원수’에 대한 증오심, 혁명적 동지애” 같은 “고상한 감정”이고 반동계급과 착취계급이 가지는 감정은 “재부에 대한 더러운 애착심, 인간증오, 낙망, 우울과 같은 소극적이며 저열한 감정”이라고 제시한다.<sup>25)</sup> 또한 주체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은 수령과 김정일의 “말씀”을 지켜서 일을 잘했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일을 잘하지 못해 그가 속한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수치감과 가책을 느낀다고 말한다. 반면 반동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했을 때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개인적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불만과 불쾌감을 느낀다고 주장한다.<sup>26)</sup> 감정이 계급적 성격과 사상의식에 기초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이 지향하고 지양해야 하는 감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은 감정 발생 토대에 있어 “사상의식”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사상감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밝히는데 기초하여 인간의 감정은 어디까지나 사상감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 사상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요구인 자주적 요구를 담은 사상의식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체험되는 감정이라는 것이다.……사상이 건전하고 고상하면 할수록 인간의 감정은 보다 고상하고 건전하고 풍만한 것으로 되며 사상이 불건전하면 감정은 저속하고 불건전한 것으로 된다.<sup>27)</sup>

25)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북한주체철학 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17쪽.

26)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인간 감정에 대한 리론」, 35쪽.

27) 위의 논문, 35쪽.

북한당국은 사상의식이 감정 발생과 체험의 토대라는 주장을 통해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sup>28)</sup> 따라서 인간의 자주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인 주체사상을 가질 때 발생하고 체험되는 감정이 사상감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전하고 고상한’ 사상의식인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상감정으로 위대한 수령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향한 충성심과 흠모감, 긍지, 사회주의 조국과 조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 집단과 혁명동지를 향한 사랑,<sup>29)</sup> 조국과 민족의 “원썩”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sup>30)</sup> 등을 제시한다. 또한 당에 대한 사상감정으로 수령을 향한 사상감정인 충성심과 흠모감, 긍지를 동일하게 제시한다. 앞서 주체의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형인 근로 인민대중이 가진 고상한 감정을 사상감정이라는 개념 아래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별 사상감정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대상별 사상감정 유형

대상	수령/당	사회주의조국	집단/동지	원썩
사상감정 유형	충성심, 흠모감, 자부심	조국애, 자부심	사랑	증오심과 적개심

<sup>28)</sup> 북한당국은 사상(의식)과 감정이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요구, 리해 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한편 “사상(의식)이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리론적명제의 형식으로 일반화하여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감정은 사상(의식)과는 달리 다양한 정서적체험을 통하여 반영”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인간 감정에 대한 리론」, 34~35쪽 참고.

<sup>29)</sup> 리승철, 「조선 민족 제일주의 정신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1호 (2000), 43~45쪽; 한달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사상감정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제1호 (1996), 5~8쪽; 허인숙, 「사상감정의 역할」 『철학연구』 제1호 (1998), 41~44쪽.

<sup>30)</sup> 한광철, 「원썩들을 끝없이 증오하는 것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원칙적 태도」 『철학연구』 제2호 (2003), 44~45쪽.

여기서 대상별 사상감정의 유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으로 수렴된다. 예를 들어 애국심은 수령을 향한 충성심의 발현이며<sup>31)</sup> 적대세력을 향한 분노와 증오심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sup>32)</sup> 동지애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질 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33)</sup> 애국심, 분노와 증오, 동지애 모두 수령을 향한 충성심으로 말미암고 충성심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사상감정의 중심과 궁극적 지향이 수령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의 본질이 사상개조에 있으며<sup>34)</sup> 사회주의국가 발전기반에 사상교양 사업이 선차적 과제라고 하면서<sup>35)</sup> 전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성격을 갖는 사상교양을 실행하고 있다.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 이론』에서는 사상교양이 인간개조에 있어 결정적이라면서 사상교양을 통해 인간 내면세계를 이루는 사상의식, 지식, 감정이 변화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상교양을 통해 혁명적인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소유하게 되면 “수령에 대한 흠모감, 혁명하는 긍지감,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계급적 원수에 대한 증오심, 혁명적 동지애, 집단주의적 감정 등”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31) 김정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7월 12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149~150쪽.

32) 김정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3일」 『김정일 선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56쪽, 62쪽. 본 문헌에는 수령을 대신해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33)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40쪽.

34) 장운빈, 『조선 사회과학 학술집 223 철학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143쪽.

35) 전태성,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3쪽.

고상한 감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sup>36)</sup>

또한 사상교양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안에 고상하고 숭고한 감정 정서를 잘 조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37)</sup> 북한당국이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 안에 조형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할 것은 북한당국이 사상교양을 통해 조형하고 고양하려는 감정이 앞서 언급한 사상감정이라는 개념으로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감정과 일치한다는 점이다.<sup>38)</sup> 북한당국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반복적

36) 위의 책, 76~77쪽.

37) 신영균, 「혁명적 감정 정서가 사람들의 활동에서 노는 역할」 『철학연구』 제2호 (1999), 39~42쪽.

38) 사상교양을 통해 북한 주민이 평생에 걸쳐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상)감정의 성격은 아이슨과 다이아몬드가 주장하는 ‘과잉 학습된 습관과 유사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이슨과 다이아몬드는 “감정은 그것이 자동적으로-즉 의도 없이 그리고 저항불가능하게-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깊이 각인되고 과잉 학습된 습관 혹은 상황을 단위화 하고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상)감정 역시 인지나 인식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지와 연결된 과잉 학습된 습관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감정을 “지식이나 평가적 사고의 유형으로 보는 감정의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정서 중심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감정을 사고, 판단, 믿음으로서가 아닌 비판성적 신체적 감각, 무드 또는 정서로서 개념화”한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서로 경합하기보다 두 측면 모두 감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면서 통합적 이해로 나아가 있다. 앞서 북한당국은 “감정을 사상(의식)과는 달리 다양한 정서적 체험을 통하여 반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이 말하는 사상감정은 감정의 인지주의적 관점과 정서주의적 관점 모두를 수용한, 정서적 체험을 동반하되 과잉 학습된 습관과 같은 유사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lice M. Isen and Gregory M. Diamond, “Affect and Automaticity,” in J.S. Uleman and John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New York: Guilford Press, 1989), p. 144; 용채용·은용수, 「국제정치학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54~60쪽; 은용수, 「국제관계에서의 감정(예비)이론화: 집단감정은 어떻게 유발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2호 (2018), 127~129쪽;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인간 감정에 대한 이론」, 34~35쪽 참고.

으로 시행하는 사상교양의 목표 중 하나가 사상감정에서 제시하는 감정의 조형과 고양에 있는 것이다. 사상교양을 통한 변화와 동원 대상이 사상뿐 아니라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북한 주민은 전 생애에 걸쳐 북한당국이 주입하고 조형하려는 감정들에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 Ⅲ. 연구방법

#### 1. 질적사례연구

이 연구는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은 북한이라는 특정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탐구해야 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례로 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실세계 맥락 속에서 심층 탐구하는”<sup>39)</sup> 질적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하였다.<sup>40)</sup>

질적사례연구는 표본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특정 사례를 통해 다른 사례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sup>41)</sup> 이 연구의 목적 역시 북한 주

39)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23), 285~286쪽.

40) 사례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나 양적 연구가 아닌 혼합연구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거나 양적 연구의 보조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라는 표현을 명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281~282쪽 참고.

41) R. E. Stake 저, 홍용희·노경주·심종희 공역,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2000), 25쪽.

민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감정사회화 경험을 제시하거나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연구에 참여하는 특정인들이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질적사례연구는 연구 대상인 사례에 대한 심층 이해를 위해 많은 사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 선정에 권장한다.<sup>42)</sup> 따라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을 탐색하는 이 연구는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을 직접 만날 수 없는 현실적 상황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사례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위해 첫째, 서로 다른 출생 시기, 출신 지역, 출신 성분 등 개인적 조건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북한당국의 주도하에 진행된 감정사회화 경험이 서로 다른 개인적 조건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 미작동과 시장화를 겪은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로 인한 배급제 미작동과 시장화는 북한 사회변화를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연구참여자의 감정사회화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이며 환경이라 하겠다. 셋째, 김정은 집권 시기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하려고 하였다. 이는 북한당국이 주도하는 감정사회화 경험이 김정은 시기에 지속되고 있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감정사회화 경험 양상이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의 현재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이 속해있는 커뮤니티

42)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294~295쪽, 313쪽.



니티를 통해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 1인을 소개받고 그 연구참여자를 통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다른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방식을 통해 최종 3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참여자 1(여) : 1967년 양강도 출생. 충성심 높은 애국자 집안 출신. 결혼 후 남편의 죽음으로 생계를 책임짐. 탈북할 의사가 없었으나 탈북한 딸을 찾아 나섰다가 탈북.

연구참여자 2(여) : 1984년 강원도 출생. 해외 연루자 가족<sup>43)</sup> 집안 출신. 열네 살 이후 아버지 고향으로 이전한 뒤 그곳에서 거주. 이동 중 길거리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음. 사고를 겪고 북한에서의 삶에 희망이 없어 탈북.

연구참여자 3(남) : 1991년 평양 출생. 대대로 충성심 높은 집안 출신. 집안 문제로 장래가 창창하던 인생의 행로가 바뀌어 평양에서 자영업을 함. 불법 영상물 시청이라는 불법행위 발각으로 탈북.

##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연구를 위한 자료는 일차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 분석에 도움이 되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북한이탈주민 수기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당 2~3회의 심층 면담과 2회 이상의 추가 질문 면담을 진행하였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지속적 경험이기 때문에 1회기 면담에서 감정사회화 경험에 영향을

43) 외국에 친척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줄 수 있는 출생과 성장배경, 교육환경 등 북한 생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특별히 북한당국이 북한 주민을 상대로 규범적 감정으로 제시하는 사상감정인 수령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2, 3회기 면담에서는 전사한 1, 2회기 면담 내용에서 감정사회화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여 연구자가 심화 질문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면담자료는 사례연구의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다중사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중사례분석 방법은 먼저 사례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각 사례를 비교, 사례 간 상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는 방법이다.<sup>44)</sup>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세 명의 개별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각 사례로부터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에 따른 감정사회화 경험 관련 이슈들을 간추렸다. 이후 사례별 이슈들을 바탕으로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난 양상에 따라 각각 세 가지의 하위주제를 도출, 총 여섯 개의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에 따른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상감정이라는 규범적 감정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다르게 작동한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에게 사상감정이 여전히 규범적 감정으로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심층면담은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면담 이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전화로 연구와 관련된 간략한 내용을 고지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첫 대면 면담에서 연구 목적과 인터뷰 과정, 인터뷰 녹음과 중단 결정의 자유, 익명 처리 등 연구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

<sup>44)</sup> R.E. Stake,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ew York: California Press, 2006), p. 30.

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 양상

#### 1) 충성심에 대한<sup>45)</sup> 동의와 순응의 차이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다르게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은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르는 순응 행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 1(이하 참여자 1)은 마음으로부터 충성심이 우리나라와 평생 자발적으로 무조건 충성하며 살았다.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충성심이라는 공적 담론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동의·수용하고 이에 따르는 충성 행위 역시 전면적으로 순응한 경우라 하겠다.

“충성심은 내가 나라에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도 나라에 이만큼 바쳐야 된다. 이바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는 공민

45)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 역시 아이슨과 다이아몬드가 주장하는 ‘과잉 학습된 습관과 유사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각주 38 참조). 이런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은 감정을 지식이나 평가적 사고의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충성심 역시 의식이나 인지와 분리된 감정의 영역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의식이나 인지와 연동된 감정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충성심이라는 사상감정의 수용과 결과에 따른 감정사회화 경험 양상 역시 감정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니까 당연히 나는 공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이 나라에 충성하고……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그런거지 그게 충성심이란 말이야…….” (참여자 1)

한편 연구참여자 2(이하 참여자 2)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심이 없었다. 충성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의무였고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랐다. 충성심이라는 공적 담론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동의·수용하고 충성 행위 역시 타협적으로 순응한 경우라 하겠다.

연구참여자 3(이하 참여자 3)은 자발적으로 충성심을 수용하고 수령과당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심이 높았다. 그러나 학교 졸업 후, 조직 생활 참여는 하기 싫어했다. 대신 궤기대회 같은 행사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면서 충성 행위를 관리하며 살았다. 충성심이라는 공적 담론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동의·수용했지만, 충성 행위는 타협적으로 순응하며 살았던 경우에 속한다.

“아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구나라는 느낌으로 따랐던 거 같아요.……충성심이 우러나서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참여자 2)

“…… 거기서는 수령과당을 위해서는 자기 한목숨 바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죠……내가 있던 기업소의 조직 생활이 겁나게 췌어요.……그런 걸 빠지려고 군중대회나 궤기대회에 나간거죠.……나는 충성심이 높은데 이런 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뻘한 거니까.” (참여자 3)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충성심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르는 순응 행위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1은 북한의 세대<sup>46)</sup>

구분에 있어 혁명 3세대에 속한다. 북한에서 혁명 1세대는 일제 강점기와 항일투쟁을 경험한 항일 빨치산 세대를 말하고 혁명 2세대는 6.25전쟁과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를 의미한다.<sup>47)</sup> 참여자 1이 속한 혁명 3세대는 북한 경제가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 물질적 혜택을 받고 1975년부터 시작한 11년 의무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북한 경제의 쇠퇴기를 겪은 세대를 말한다.<sup>48)</sup> 배급제 실행과 함께 조직 생활에 익숙한 조직 생활 세대이기도 하다.<sup>49)</sup>

반면 참여자 2와 3은 북한의 세대 구분에 있어 혁명 4세대에 속한다. 이 세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로 배급제 중단과 함께 시장에 의존해 생활하는 시장화 세대로<sup>50)</sup> 분류할 수 있다. 시장에 의존해 살아가는 만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생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는 세대라 하겠다.

북한에서 살 동안 충성심이 높았다고 말하며 충성심이 마음으로부터

46) 북한은 “세대를 단순히 사회적 연령 집단으로가 아니라 수령의 령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대오, 사회적 집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혁명 1, 2세대는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의 조국 땅 우에…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위훈을 세운 세대”로 혁명 3, 4세대는 “그것을 든든히 고수하고…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옹호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대”로 규정한다.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리해」 『철학연구』 제3호 (2001), 32쪽.

47) 이경식, 『새로 쓴 북한의 생각, 북한의 생활, 북한의 사람들』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22), 129쪽;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573쪽.

48) 위의 책, 129쪽; 위의 논문, 573쪽.

49) 노귀남, 「시장화 속의 북한 새 세대의 지향과 전망」, 김성경 외 지음·경남대학교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5), 121쪽.

50) 위의 논문, 121쪽.

우리나왔다고 말하는 참여자 1과 3에게서도 충성심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역시 두 사람이 살아온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경제난과 시장화를 겪었지만 참여자 1에게서는 충성심을 돈과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진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여자 1에게 충성심은 나라가 맡긴 일을 충실하게 완수하는 것으로 발현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출생해 경제난과 시장화를 겪은 참여자 3은 학창 시절부터 돈이 있어야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집안 문제로 자신이 꿈꿨던 발전이 가능하지 않게 되자 돈을 벌어 당과 수령에게 충성심을 나타내려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참여자 3에게 충성심은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환이 가능한 것이었다.

“내가 나라에다 충실한다는 게 내 일에 표현되는 거란 말입니다.……사로 청 생활할 때 돌격대 나가서도 항상 돌격대 경쟁 붙으면 1등 하고 내가 일을 너무 잘했으니까…우리는 충성심이라는 게 그 나라에 충성한 자체가 그게 충성심입니다.” (참여자 1)

“삼대 장군 연구실 꾸리는 데 뭔가 필요하다고 그 후원도 하고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성심을 발휘한다고 하죠. 다 돈이죠. 돈이 있어야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돈을 벌어서 충성심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영생탑 건립할 때 돈으로 기여해 입당도 하고 대학교도 가려 한 거였으니까요.” (참여자 3)

참여자 1과 3은 모두 북한당국이 가르치는 충성심에 대해 전면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또한 동일하게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조직 생활 세대와 시장화 세대로 나뉘는 출생 시기와 관련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충성심과 돈에 대한 이들의 다른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으로 보인다.

## 2) 충성하는 동기의 차이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다르게 나타난 두 번째 양상은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했느냐에 따라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고 동시에 이들의 출신 성분과 그로 인한 이들의 개인 경험 차이에 따라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참여자 2에게 충성심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지 않았고 충성 행위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였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지 않았어도 충성했던 이유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아두 국가를 배신했다구 그러구 걸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썩소리 못하고 그냥 잡혀가야 되니까 충성 안 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거……공포감 같은 게 많이 조성되다니까 충성 안 한다는 걸 생각도 못 했구.” (참여자 2)

반면 북한당국이 가르치고 제시하는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한 참여자1과 3에게 있어 그들을 충성하게 한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참여자 1은 나라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충성심으로 평생 나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온 충성심이 충성하는 동기였다는 것이다. 참여자 3 역시 비록 뻘한 조직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충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와서 충성했다고 말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충성은 내 마음이 진짜 우리나라서 하는 거니까.” (참여자 1)

“처벌이요?…… 처벌은 없죠. 충성심을 안 보인다고 해서,……내 마음이 우리나라니까 충성하는 거죠.” (참여자 3)

참여자 2의 충성 행위 동기와 참여자 1과 3의 충성 행위 동기의 차이를 만든 것은 이들의 출신 성분과 그로 인해 자라온 개인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참여자 2와 달리 참여자 1과 3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한 토대 좋은 집안 출신으로 평생 충성심 높은 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겼고 자라면서 나라에서 받은 혜택도 많았다. 남편이 죽은 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참여자 1은 기업소에서 열심히 일해 충성심을 인정받아 당원이 되려고 했다. 참여자 3도 돈으로 충성심을 인정받아 집안 문제로 좌절되었던 대학도 가고 입당도 하려고 했다. 이들이 충성심을 인정받아 자신들의 발전을 꿈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토대 좋은 집안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신 성분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주어지는 북한 사회 공적 체계에서 이들은 토대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다. 결국 충성심 높은 것을 자신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충성심을 인정받아 자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출신 배경은 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충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맥락이었다고 하겠다.

반면 참여자 2의 아버지는 농촌 출신으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 군대에서 장교까지 올랐다. 하지만 중국에 친척이 있는 해외 연루자 가족이라는 토대의 한계로 진급이나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참여자 2는 충성심을 공평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았다. 오히려 참여자 2가 어려서부터 기억하는 현실은 충성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처벌과 그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였다. 출신 성분의 제약으로 충성심을 발휘해 보상받을 기



대가 없는 참여자 2에게는 충성하지 않았을 때 뒤따르는 처벌과 그로 인한 공포가 충성하게 하는 조건이고 맥락이었다.

북한은 성분 정책을 통해 사람을 서열화하고 차별화하는 동시에 그 분류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달라지는 공적 체계를 통해 사회를 통제해왔다.<sup>51)</sup> 먼저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에 따라 주민을 서열화했고 등급화했다. 이 분류에 따라 분배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물질적 분배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기회에서도 이 분류에 따라 차별이 주어졌다.

충성의 보상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졌다. 정치적 발전과 사회에서 진급은 일차적으로 충성의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출신 성분과 토대와 같은 귀속적 요인을 선행적으로 고려한다. 충성을 통한 기회와 보상이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sup>52)</sup> 시장화 이후 성분과 토대가 덜 중요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신 성분과 토대라는 정치적 신분과 귀속적 지위가 정치적 발전과 사회 진급에 있어 중요하고<sup>53)</sup> 성분 정책에 의한 사회적 통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분을 통해 보상과 처벌이 주어지는 공적 체계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충성하는 사적 동기와 연계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

51) 북한은 1967년 6월부터 1970년 9월까지 주민성분구분사업을 실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 관리해왔다. 상위 계층에 속할수록 교육의 기회, 직업 배정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후 1990년도 12월에 주민재등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1991년도에 북한계층 분류기준이 갱신되어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분자 잔여세력이라는 3계층 56개 부류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330~332쪽; 김하순·최봉대, 「1980년대 북한 정치 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 세습과 성취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5권 4호(2022), 12쪽 참고.

52) 홍민, 『북한의 도덕체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28~332쪽, 378~382쪽.

53)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기획·양문수 편저,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327~331쪽.

구참여자들의 출신 성분은 이들이 충성심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충성하는 동기에 반영되었다. 성분 정책이 연구참여자의 감정 사회화 경험의 사회적 배경 및 맥락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 3) 지속되거나 변하는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다르게 나타난 세 번째 양상은 고난의 행군 이후 사상감정에 대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에서 연구참여자들 간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참여자 1은 고난의 행군으로 아들과 동생이 죽었다. 그럼에도 수령에 대한 충성심,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증오심 등 사상감정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그렇게 힘들고 며칠을 굶고 제 자식을 죽여서 언 땅에다 묻어도 나라가 이만큼 좀 다 어렵게 사는데 나도 허리띠 조여야지 혁띠 구멍 자꾸 찢이고 찢이고 혁띠 구멍 또 뚫어가지고 또 쫓쿠구 쫓쿠구(줄이고 줄이고) 살고……우리나라가 군사가 강해야 사회주의가 영원하다 그러니까나 힘들어도 힘들단 말한 거 없죠.” (참여자 1)

한편 참여자 2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겪은 굶주림 때문에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졌다. 나라에 대한 충성도 배부른 다음의 일이고 나라일보다 먼저 가족을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으로 사상감정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소학교에 들어간 참여자 3은 학창 시절 수령에게 받은 선물로 인해 충성심과 애국심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사상감정이 형성되고 고양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진짜 다음 끼가 먹을 게 없는데 금지감 같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아버지 고향으로 오는 길에 봤던 꽃제비가 혼자서 벌어서 누나 동생 맥여 살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내 동생을 고향 안 시킨다 이런……” (참여자 2)

“7살 그때부터 초등학교<sup>54)</sup> 들어가죠. 그때부터 저 콩우유라는 걸 주는데……제가 초등학교 당길 때 한 달에 며칠 유엔에서 내주는 과자를 내줬어요……수령이 능력이 되니까 유엔이 우리에게 주는 거가 되겠죠. 하여튼 어릴 적에는 뭔가 이렇게 먹을 거 주는 거 그런 데서 애국심이나 충성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참여자 3)

고난의 행군을 동일하게 겪은 참여자 2와 3에게서 사상감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성분 좋은 평양 출신이나 비평양 출신이냐에 따라 고난의 행군 경험이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소년기와 유년기를 보내 고난의 행군 세대라고 할 수 있는<sup>55)</sup> 참여자 2와 3의 고난의 행군 경험은 달랐다. 비평양 출신인 참여자 2는 아버지 고향으로 이사하는 길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고난의 행군은 참여자 2가 굶주림과 배고픔, 수많은 죽음을 길에서 목격해야 했던 사건이었다.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 보면 너무 끔찍했습니다……우리는 배고픔이랑 굶어 죽은 시체들이 드글드글하던 걸 봤던 시대다니까 어쩔 수 없는 세대적 차이……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불안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제일 큰 것 같고.” (참여자 2)

54) 북한 학제로 소학교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 3은 이를 한국식 학제인 초등학교로 표현하고 있다. 1991년에 출생한 연구참여자 3은 만 일곱 살이던 1999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소학교에 입학했다.

55)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2호 (2011), 14~15쪽.

반면 성분 좋은 평양 출신인 참여자 3에게 고난의 행군은 굶주림이나 죽음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 시기에도 가정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먹거리가 주어졌다.

“돈은 많지 않아도 고난의 행군 때도 우리 집에 쌀하고 고기는 넘쳐났거든요. … 제가 초등학교 당길 때 한 달에 며칠 유엔에서 내주는 과자를 내줬어요. 그때 그 과자가 엄청 맛있었거든요.” (참여자 3)

참여자 2와 3이 겪은 고난의 행군 경험 차이와 그로 인해 사상감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들의 출신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성분 정책의 연장이며 결과라는 점에서<sup>56)</sup> 이들의 상이한 고난의 행군 경험과 그로 인해 사상감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비평양 출신과 평양 출신이라는 성분 정책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하게 비평양 출신인 참여자 1과 2에게서 고난의 행군 이후 사상감정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나고 자란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와 함께 가정환경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생인 참여자 1은 북한의 경제가 비교적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 배급제와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혜택을 받으며 자란 세대에 속한다. 이와 함께 토대 좋은 집안 출신으로 가족 모두 충성심 높은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환경에서 살았다.

반면 1984년생인 참여자 2는 북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고 자

<sup>56)</sup> 북한 주민의 출신 지역은 계급적 토대가 반영된 것이다. 평양시를 포함하여 도 소재지 출신이거나 그곳에 살고 있으면 좋은 토대에 속한다. 농촌 지역은 가장 낮은 토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산다. 함경도, 양강도 등 산간지역이나 탄광 지역은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여겨진다. 편집부, 「현대판 주홍글씨」 『북한』 no. 479 (2011), 144쪽.

라 나라의 후견 기능이 주민의 기본적 생존마저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된 경제난과 대기근을 청소년기에 경험했다. 또한 해외 연루자 가족이 있는 가정환경으로 사회적으로 보상보다는 제약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이런 영향으로 고난의 행군 당시 참여자 1처럼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참여자 2에게서는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에 개인적 균열과 변화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들의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개인 경험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개인 경험의 차이는 출신 성분에 따른 출신 지역의 차이, 서로 다른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와 서로 다른 가정환경의 영향이 상호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난 양상

### 1) 사적 감정의 미분화와 탈구로 나타나는 감정 세계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유사하게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은 연구참여자들의 감정 세계가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공적 감정을 우선하면서 사적 감정의 미분화와 탈구라는<sup>57)</sup> 특징으로 나

<sup>57)</sup> Dislocation 원래 위치를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는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공유하는 “불완전한 시민권, 가족 별거의 고통, 모순적인 계급이동, 무소속”의 경험을 탈구 위치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사적 감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사적 감정의 탈구라고 조작 정의해서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저, 문현아 옮김,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여이연, 2009), 51쪽 참고.

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참여자 1의 오빠는 군대에서 “수령님께 바칠” 고기를 사냥하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나 오빠를 잃은 슬픔도 잠시였고 참여자 1은 나라를 위해 죽은 오빠에 대한 자부심이 오빠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말한다. 또한 집을 떠나 중국에 있는 줄 알았던 딸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안 참여자 1은 역적인 딸을 되찾아 북한당국에 신고하려고 했다. 어머니로서 갖는 개인적 감정보다 ‘나라를 배반한’ 딸에 대해 공화국 공민이 지녀야 하는 공적 감정인 충성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 공민으로 인지하고 느껴야 하는 공적 감정을 우선하면서 동생으로서,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사적 감정은 탈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오빠 툭 죽었다고 하니까 막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오빠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그게 내 그때 자부심이 생겼던 말입니다. 떳떳하더라고요, 그 슬픔보다도… 전사증 받아가지고 야 우리 집엔 전사증이랑 있다하면서 자랑하구 다녔습니다.” (참여자 1)

“…… 엄마, 내 사실은 남조선에 있어 하는데… 거기서. 야 이 개 같은 간나 나라 배반한 역적 우리 집안에 없다. 우리 집은 혁명이 집안이다라면서 개지랄 다 했던 말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역적인 우리 딸을 데리러 왔겠습니까? 전 한국에 살려고 안 왔잖습니까?” (참여자 1)

참여자 2는 학교 과제를 하지 못해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당과 수령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친구들 앞에서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은 느끼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도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갖는 고마움이나 미안함과 같은 감정은 부모를 제외하고 느끼지 않았다. 당이나 수령과 같이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 갖는 공적 감정에 비해 수평적인 인간관

계에서 경험하는 사적 감정은 미분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수치감 부끄러움? 저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가지구… 우리는 참 뭐랄까 충성심 하나 그런 죄책감 같은 그러니까… 별로 감정이 우리는 딱 그 간단명료했던 것 같아요.……감정이 뭐랄까 간단하고 몇 가지가 없었어요.” (참여자 2)

참여자 3도 집안 문제로 발전을 보장받았던 미래가 좌절되면서 감정적으로 혼란을 겪었다. 사람들과 싸우고 보안서에 들어갔을 때 당시 자신 안에 오갔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북한 사회 집단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가능한 감정만을 학습한 결과 참여자 3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적 감정이 탈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막 오고 가는 그런 감정이 막 생기거든요. …오구잡탕 감정이 오가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에 대한 원망인지 반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아직 의문이 드는 게 그때 그 감정이 국가에 대한 원한인지… 그 사회에 대한 원한인지 김부자에 대한 논란인지… 저는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3)

북한당국은 사상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향해야 하는 감정과 배제해야 하는 감정을 외부로부터 폐쇄된 환경에서 각종 감정적 서사를 동원, 북한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 사상감정은 북한 주민들이 무엇을 느끼고 행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일종의 감정 교시와 같은 것이다. 북한에서 사상감정은 어떤 것이 적절한 감정인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공적 감정이라는 점에서 규범적이다.<sup>58)</sup>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이 공적 감정을 우선하고 사적 감정에 있

<sup>58)</sup> 하홍규, 『감정, 삶, 사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감정의 세계, 정치』

어 미분화와 탈구화로 나타나는 것은 감정 교시에 의해 규제받은 감정에 대한 진술이며 그 결과라 하겠다.

## 2)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유사하게 나타난 두 번째 양상은 외부 적대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수령을 향한 충성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져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탈북 이전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지속해서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 세력을 향한 이들의 증오심과 분노 이면에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치체제나 권력 집단은 피지배 집단 내에 특정한 타자를 향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여 자신의 권력이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지배 집단을 통제하는 데 활용한다.<sup>59)</sup> 북한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도구화했던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위기 담론이 미 제국주의 세력을 향한 주관적인 두려움으로 내재화되어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1은 탈북한 딸을 찾아 북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두려움을 느꼈다. 참여자 2는 고난의 행군 시절 굶주림과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을 지켜줄 장군이 있어 안도감을 가졌다. 참여자 3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 이들이 느낀 두려움은 모두 미 제국주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미 제국주의는 언제라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상을 빼앗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33쪽.

<sup>59)</sup> 김왕배, 『감정과 사회』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9), 167~177쪽.



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존재인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적대세력으로 인해 내면화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긍지를 갖게 만들고 수령을 향한 감정적 연대로 이어졌던 것이다.

“수령님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다. 수령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다하니가 수령이 곧 조국이고 조국이 곧 수령이고……(한국행 비행기 타려고 할 때) 무섭더라고요. 여기(남조선) 미국 놈들이 외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말입니다…….” (참여자 1)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한 만행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읽고 보니까… 나라가 없으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공포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장군님이 없으면 정말 조선이 없다. 그다음에…저 큰 미국도 북한 조선에 별별 떨게 하는 거 보면 장군님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긍지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2)

“김정일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미국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김정일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덜컥 죽었다고 하니가 그때는 진짜 새까맣았죠.…그런데 그때 김정은이가 딱 등장한 거죠. 그다음부터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참여자 3)

근대적 의미의 주권국가는 안전을 감정적 원형으로 삼고 있다. 근대적 주권국가는 구성원에게 그 땅에서 구성원으로 살도록 안전을 제공하고 국가를 향한 구성원들의 신뢰와 충성심을 통해 국가에 대한 구성원의 감정적 연대가 만들어진다.<sup>60)</sup>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위기 담론은 구성원의

<sup>60)</sup> 마벨 베레진, 「안전국가: 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책 바바렛 엮음, 박형진 역, 『감정과 사회학』 (서울: 이학사), 73~74쪽.

안전을 향한 욕구로 인하여 애착감과 함께 국가를 향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구성원의 감정적 연대를 강화시킨다.<sup>61)</sup>

연구참여자 세 사람에게 수령은 인격화된 국가였다.<sup>62)</sup> 그러므로 북한 당국의 끊임없는 위기 담론으로 인한 두려움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은 충성심과 자부심이라는 공통의 감정을 중심으로 인격화된 국가인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가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체제 순응 기제로 작용한 충성심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연구참여자들 간에 유사하게 나타난 세 번째 양상은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이 동의 기제이면서 동시에 내적 통제 기제로 작동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북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체제 순응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참여자 1과 3에게 충성심은 보상을 기대하는 동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자 1의 경우 남편이 죽은 후 일하게 된 기업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충성심을 발휘해 당원이 되기 위해서였다. 참여자 3도 집안 문제로 대학도 군대도 못 가게 되었을 때 돈을 벌기로 했다. 돈으로 충성심을 인정받아 입당도 하고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각자가 살아온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충성심을 나타내는 방식은 달랐다. 그럼에도 충성심은 참여자 1에게는 노동을 통해서, 참여자 3에게는 돈을 통해서 당

61) 김종근, 「분단 적대성의 역사적 발원과 감정구조」 『통일인문학』 제75집 (2018), 18~23쪽.

62) 연구참여자 1,2,3의 공통된 진술 중 하나는 “수령은 조국이고 조국은 수령이다”라는 것이었다. 진술을 통해 그들은 수령과 조국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원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동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 직장에서 제가 일을 썩어지게 했던 말입니다. 입당하려고 입당해서 제가 여성 일꾼이 되겠다고…” (참여자 1)

“…… 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돈을 벌어서 충성심을 표현하려고 한 거죠. 영생탑 건립할 때 돈으로 기여해 입당도 하고 대학교도 가려 한 거였으니까요.” (참여자 3)

동시에 참여자 1, 2, 3에게 충성심은 이들의 행동, 말, 생각, 감정을 규제하고 규율하는 내적 통제 기제로도 작용하고 있다. 충성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 생각, 감정에 뒤따르는 처벌이라는 외적 억압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이들을 내적으로 규제하는 통제 역할을 한 것이다.

먼저 충성심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와 평생 충성하며 살았다고 하는 참여자 1에게도 처벌이라는 외적 억압은 참여자 1을 내적으로 규제하고 규율하는 통제 기제로 작용했다. 남편이 죽은 후 생계를 위해 중국 국경을 넘어 장사하고 다닌 참여자 1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해 보위부에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다니며 장사를 하면서 참여자 1은 큰돈이 되는 소, 인신매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가 장사할 때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보지 않았다. 금지된 행위에 대한 내적 두려움으로 스스로 규제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벌이라는 외적 억압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참여자 1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적 통제 기제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참여자 2는 어려서부터 충성의 이름으로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금지된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처벌과 제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참여자 2는 성년이 되어 장사할 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 장사하지 않았다. 중국 드라마는 보더라도 한국 드라마나 한국

CD는 보지 않으려고 했다.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충성 행위에 대해 마지 못해 타협적으로 순응하며 살았어도 처벌과 그로 인한 두려움으로 어느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았다. 충성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에 뒤따르는 외적 억압이 참여자 2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규율하고 규제하는 내적 통제 기제였던 것이다.

“나쁜 말 하면 잡혀간단 그런 공포감 같은 게 있어가지구…거기 초상화는 찢으면 안 된다, 낙서하면 안 된다, 불 때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유치원 가서두 그래 인민학교 가서두 그래 고등중학교 가서두…그러니까 긴장감과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충성심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성한 것은 아니라는 참여자 3에게도 처벌과 제재라는 외적 억압은 내적 통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집안 문제로 북한당국이 말한 것과 달리 불이익을 겪으면서 참여자 3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없었고 너무 뻘해서 하기 싫었던 조직 생활도 해야 했다. 군대도 갈 수 없고 대학교도 다닐 수 없게 되어 방황하던 참여자 3이 보안서에 잡혀들어갔을 때 여러 감정이 오고 갔다. 그러면서도 당시 그 잡다한 감정 중에 수령이나 당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북한에서 살 때 김부자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수령이나 당에 대해 원망이나 반감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3 역시 충성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 생각과 감정에 뒤따르는 처벌과 제재가 자신을 내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안서에 잡혔을 때 개네들 얘기하는 게 너네 집안에 문제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널 차별한 게 있냐 막 그렇게 얘길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차별한 게 없냐고 말하고 싶은 걸 겨우 참았거든요. 그걸 말하게 되면 내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저도 여기 와서 보면 내가 그때 행동했던 걸 가만 보게 되면 충성심이나 애국심에 좀 분열 같은 거…반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내 이 감정이 이 충성심이나 애국심의 이런 균열로 인한 반감이라는….” (참여자 3)

사람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감시받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규율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외재하는 규율 권력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이다.<sup>63)</sup>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심으로 전적으로 충성하며 산 참여자 1도, 타협적으로 충성하면서 순응하고 산 참여자 2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성하며 살지 않았다는 참여자 3도 처벌과 제재라는 외적 억압과 그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화함으로써 스스로 규제하고 감시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충성심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라는 이중체계는 이들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동의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처벌이라는 외적 억압으로 인해 자신들의 행동과 사고와 감정을 내적으로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충성심을 매개로 한 북한당국의 규율을 내면화하고 습관화하므로 스스로 작동한 규율체계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북한 당국에게 충성심은 보상과 처벌이라는 이중체계를 통해 이들을 통제할 기제가 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충성심은 체제에 순응하는 기제가 된 것이라 하겠다.

## V. 결론

이 연구는 북한당국이 공적이고 규범적 감정으로 제시하는 사상감정의

<sup>63)</sup>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파주: 나남), 14쪽.

수용과 결과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과 함께 북한 주민의 감정 세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 주민의 감정사회화 경험은 북한이라는 특징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탐구해야 하는 현상으로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사례로 하여 그 현상을 실세계 맥락 속에서 심층 탐구하는 질적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북한당국 주도의 감정사회화 경험이라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양상과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선정에 위해 출생 시기, 성분, 출신 지역이 다른 세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 양상에 나타난 차이점과 유사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 간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은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에 대한 동의와 그에 따르는 순응 행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조직 생활 세대와 시장화 세대로 나누어지는 이들이 태어난 출생 시기와 관련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 간 감정사회화 경험이 다르게 나타난 두 번째 양상은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했느냐에 따라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고 동시에 이들의 출신 성분과 그로 인한 이들의 개인 경험 차이에 따라 충성 행위의 동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상이하게 나타난 세 번째 양상은 고난의 행군 이후 사상감정, 구체적으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개인 경험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또한 고난의 행군에 대한 개인 경험의 차이는 출신 지역의 차이, 이들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와 서로 다른 가정환경의 영향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들 간 감정사회화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난 첫 번째 양상은 북한당국이 요구하는 공적 감정을 우선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감정 세계가 사적 감정의 미분화와 탈구라는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난 두 번째 양상은 외부 적대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수령을 향한 충성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져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끊임없는 위기 담론으로 인한 두려움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이 충성심과 자부심이라는 공통의 감정을 중심으로 수령에 대한 감정적 연대가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이 유사하게 나타난 세 번째 양상은 사상감정의 핵심 감정인 충성심이 동의 기제이면서 동시에 내적 통제 기제로 작동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북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체제 순응 기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의 경제난 이후 시장화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감정사회화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감정사회화 경험과 감정 세계가 유사한 양상과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북한당국이라는 감정 권력이 주도하는 감정사회화를 겪은 결과로 북한당국이라는 감정 권력의 통치 산물이며 동시에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북한 사회를 반영하는 개인적 진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문헌이나 문학예술 작품을 통해 북한당국의 기획 의도를 살펴보는 대신 북한당국의 감정 기획이 북한 주민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북한 주민의 경험을 통해 살펴봤다는 의의가 있다. 이로써 '무엇을 느껴야 하고 행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북한당국의 감정 기획에 대하여 북한 주민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행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북한당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간의 감정을 활용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사상감정이라는 감정 규범으로 인해 규제받고 통제받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이 어떻게 사회에 순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로써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인간의 감정을 통제해 온 북한당국의 감정통제 양상을 일부나마 포착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는 북한 문헌의 사상감정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한 연구로 북한의 감정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감정은 ‘감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정의와 관련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개념이다. 북한 연구에서도 ‘무엇을 감정으로 보고 감정연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당국이 공식 문헌에서 제시하는 사상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북한 연구에 접근한 새로운 시도이며 북한 사회의 감정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상감정의 작동 방식을 밝히거나 사상감정이 갖는 학술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알고 이를 추후 연구 작업의 과제로 남겨둔다.

■ 접수: 2024년 11월 8일 / 심사: 2024년 12월 2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김왕배, 『감정과 사회』,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9.
- 라셀 살라자르 파레나스 저,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서울: 여이연, 2009.
- 랜들 콜린스 저, 진수미 옮김,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파주: 한올, 2009.
-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파주: 나남, 2020.
-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북한주체철학 철학사전』,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7.
- 서경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2023.
- 스캇 R, 해리스 저, 박형신 역, 『감정사회학으로의 초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7.
- 이경식, 『새로 쓴 북한의 생각, 북한의 생활, 북한의 사람들』,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22.
- 이동원·박옥희, 『사회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 장운빈, 『조선 사회과학 학술집 223 철학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전태성, 『사상교양에 대한 주체적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하홍규, 『감정, 삶, 사회』,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감정의 세계, 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110~157쪽.
- 한스 요하임 마즈 저, 송동준 역, 『사이코의 섬: 감정정체·분단체제의 사회심리』, 서울: 민음사, 1994.
- Stake, R. E. 저, 홍용희·노경주·심종희 공역,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2000.
- Chamaz, Kathy., Harris, Scott R. and Irvine, Lesile. *The Social Self and Everyday Life: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Symbolic Interactionism*, NJ: John Wiley&Sons, Inc., 2019.
- Scheve, Christian von. *Emotion and Social Structure*, NY: Routledge, 2013.
- Stake, R. E.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ew York: California Press, 2006.

- 김병로,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북한연구학회 기획·양문수 편저,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4, 325~355쪽.
- 김정수, 『북한 예술영화의 ‘행동’과 ‘감정’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8.
- 김정수, 「북한의 감정 정치: <민족의 태양>을 중심으로」 『한반도미래연구』 제3호, 2019, 189~215쪽.
- 김종근, 「분단 적대성의 역사적 발원과 감정구조」 『통일인문학』 제75집, 2018, 5~32쪽.
- 김학이, 「감정사 연구의 지평-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연구』 제28호, 2014, 219~251쪽.
- 김화순·최봉대, 「1980년대 북한 정치 신분제에서 세대 간 지위 세습과 성취 기제」 『현대북한연구』 제25권 4호, 2022, 8~53쪽.
- 노귀남, 「시장화 속의 북한 새 세대의 지향과 전망」, 김성경 외 지음·경남대학교 연구소 편,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김정은 정권과 청년세대의 다중적 정체성』,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5, 115~154쪽.
- 리광선, 「세대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제3호, 2001, 32~33쪽.
- 리재순, 「주체사상이 밝힌 인간 감정에 관한 리론」 『철학연구』 제4호, 1996, 34~37쪽.
- 리승철, 「조선 민족 제일주의 정신의 본질과 특징」 『철학연구』 제1호, 2000, 43~45쪽.
- 박계리, 「위기의 시대, 북한 문예 정책의 변화와 ‘웃음의 정치’-화술소품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3권 3호, 2022, 47~66쪽.
- 배인교, 「선군 시대 북한의 민족적 감성: 2000년대 『조선예술』에 수록된 민요풍 노래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41집, 2014a, 79~126쪽.
- 배인교, 「북한의 천리마운동 시기 음악적 감성: 노래집 <풍어기 휘날리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5집, 2014b, 327~359쪽.
- 신영균, 「혁명적 감정 정서가 사람들의 활동에서 노는 역할」 『철학연구』 제2호, 1999, 39~42쪽.
- 용채용·은용수, 「국제정치학의 감정연구: 비판적 검토와 이론적 제언」 『국제정치논총』 제57권 3호, 2017, 51~86쪽.
- 은용수, 「국제관계에서의 감정(예비)이론화: 집단감정은 어떻게 유발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2호, 2018, 123~144쪽.
-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제36집 2호, 2011, 8~39쪽.
- 이유영·홍재범, 「1990년대 후반 북한 선군정치 담론의 예술적 형상화: 박호일의

- <편지>와 <동지>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81집, 2020, 201~234쪽.
- 이지순, 「김정은 시대의 감정 정치와 미디어의 문화정치학: '로동신문'의 가요 텍스트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59호, 2016, 195~219쪽.
- 임옥규, 「선군 시대 북한 문학에 형성된 주도적 감정」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제14호, 2014a, 244~266쪽.
- 임옥규, 「2000년대 북한 문학 감정과 새 세대의 감수성」 『현대북한연구』 제17집 2호, 2014b, 163~199쪽.
- 정창현,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학회 엮음,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7, 526~591쪽.
- 편집부, 「현대판 주홍글씨」 『북한』 no. 479, 2011, 143~144쪽.
- 한광철, 「원수들을 끝없이 증오하는 것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원칙적 태도」 『철학연구』 제2호, 2003, 44~45쪽.
- 한달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사상감정에 대한 주체적 이해」 『철학연구』 제1호, 1996, 5~8쪽.
- 한모니까, 「북한의 인민 만들기과 감정 정치: '신해방지구' 개성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5권, 2018, 261~298쪽.
- 허인숙, 「사상감정의 역할」 『철학연구』 제1호, 1998, 41~44쪽.
- 홍민, 『북한의 도덕체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황용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존심」 『철학연구』 제1호, 2001, 37~38쪽.
- Abu-Lughod, Lila and Lutz, Catherine A. "Introduction:emotion, discourse, and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n Catherine A. Lutz & Lila Abu-Lughod, eds.,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1-23.
- Alt, Hersche, "Basic Principles of Child Rearing in Soviet Union: Firsthand Impressions of an American Observ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58, pp. 223-240.
- Hutchison, Emma and Bleiker, Roland, "Theorizing emotion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 2014, pp. 491-514.
- Isen, Alice M. and Diamond Gregory M. "Affect and Automaticity," in J.S. Uleman and John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New York: Guilford Press, 1989,

pp. 124-152.

Koschut, Simmon, "Emotional (security) communities: the significance of emotion norms in inter-allied conflict manage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0, no. 3, 2014, pp. 533-588.

Perry, Elizabeth J., "Moving the masses: Emotion work in the Chinese revolution" *Mobilization*, vol. 7, no. 2, 2002, pp. 111-128.

Reicher, Stephen D., Spears, R and Postme, T.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6, no. 1, 1995, pp. 161-198.

Styker, Rachael, "Emotion Socialization and Attachment in Russian Children's Homes" *Global Studies of Childhood*, vol. 2, no. 2, 2012, pp. 85-96.

김정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9년 7월 12일」 『김정일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0, 145~150쪽.

김정일,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양양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86년 1월 3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1, 234~272쪽.

김정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 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한 담화 1997년 3월 23일」 『김정일 선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55~65쪽.

A Study on the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 Focusing on the Acceptance and Consequences of Ideological Emotions

Ahn, Jong-Sook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focusing on the acceptance and consequences of ideological emotions presen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s normative emotions. To this end,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ree North Korean defectors who differed in birth date, family background, and region of bir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varied, showing differences in their agreement with loyalty as a core ideological emotion, their subsequent acts of conformity, motivations for loyal actions, and acceptance of ideological emotions following the March of Hardship. At the same time, they exhibited similarities in their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including the suppression and blurring of personal emotions in favor of public emotions, emotional solidarity with the leader due to fear toward external antagonists, and loyalty as a mechanism for regime conform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participants'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differed depending o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family background in which they were born and raised. Nevertheless, the similarities in their experiences of emotional socialization can be seen as a result of undergoing emotional socialization led by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as a product of governance by the emotional power exercis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reveals how the emotional planning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operates in the lives of its citizens.

Keywords: North Korea, Ideological Emotions, Emotional Socialization, Emotional Power

**안종숙 (Ahn, Jong-Sook)**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관심은 북한 사회와 문화, 남북 간 문화와 소통이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선정 과제인 「북한이탈주민의 감정탈사회화 경험 연구」를 후속 연구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 『북한의 여성』(공저, 2024)이 있다.

일반논문

##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의 평화적 의의\*

: 1964년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이정선 (도쿄대학교)

### 국문요약

2024년은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의 추모관 건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유엔 산하 시절인 1964년에 추모관은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를 위한 유엔의 다종교적 표상으로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추모관 준공 6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 의의와 평화적 가치를 조명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연구과정에서는 미공개 유엔아카이브 및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문서, <대한뉴스>, 영국 아카이브 영상 분석에 더해 유엔아카이브와의 서면질의를 통한 자료 해제 등 史料를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문에서는 1960년대 초 유엔기념묘지로의 유엔화 과정에 이어 추모관 준공식 양상과 나라시만(Narasimhan) 유엔 사무차장의 준공식 참석 및 유엔 헌사의 의의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추모관은 다국적 유엔군의 단결이 발현된 장소로서 유엔 역사상 중요한 유엔기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3.202412.269>

\* 이 논문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2024년 6월 19일에 개최한 '2024년 6·25전쟁 학술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고의 일부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記憶の場としての國連記念公園：戦争墓地の文化遺産化」(2023)에서 추모관에 관한 연구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학술회의 토론의 장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허남성 국방대학교 명예교수님과 나중남 육군사관학교 교수님, 그리고 논문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논평을 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념묘지의 건축물 제1호였음이 확인된다. 이 기념물은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유엔의 선구안적 이상이 투영된 대상이기에, 오늘날의 제반 폭력/비평화구조에도 본 공간이 갖는 화합의 가치는 유효하다. 본고는 유엔 창설 8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평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 다문화 공생사회에 시사점을 지닌다.

주제어 : 유엔묘지(유엔기념공원),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전사자 존엄, 김중업, 전쟁기념물, 베트남 전쟁, 피란수도 부산

## I. 서론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에 이어 2024년은 22개 유엔참전국 중 14개국<sup>1)</sup>의 다국적 전사자들이 안장된 유엔기념공원(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이하 공원) 내에 공식 추모공간인 추모관(Memorial Service Hall)이 설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이하 UNCURK)이 1973년 말에 해체<sup>2)</sup>됨에 따라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묘지 관리권을 이양 받은 지 정확히 반세기를 맞이하는 의미도 지닌다. 이처럼 기념비적 해에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 내 추모관 설립 의의와 이를 둘러싼 1960년대 세계사 속 유엔과 대한민국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한국전쟁사 외 국제

---

1) 2024년 12월 현재 유엔기념공원의 14개 안장국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남아공,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알파벳순)이다.

2) UNCURK의 해체를 둘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홍석률, 『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파주: 경인문화사, 2020); 김차준, 「미중 대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3집 2호 (2021), 199~237쪽 등을 참조.



분쟁사적, 유엔 역사적으로도 시의성이 높다.

한국전쟁기인 1951년 4월 초에 준공된 유엔묘지는 약 9년에 걸쳐 유엔 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의 관리하에 운영되었다. 정전 후 1959년 11월 ‘재한 국제연합기념묘지의 설치 및 관리 유지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협정(이하 협정)’ 체결에 따라 묘지는 유엔의 산하기구인 유엔기념묘지로서 공적 위상을 획득하였으나, 국제적인 냉전 구도 속 한반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유엔 내에서 묘지의 위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학술적 연구기반은 취약했고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로서 지니는 평화적 가치와 현재적 의의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

이석조(2008) 이후 유엔기념공원에 관한 연구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한편, 선행연구<sup>3)</sup>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는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현재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된 공원의 추모관은 1960년대 초반에 어떠한 건립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유엔 산하 시절에 추모관을 둘러싼 유엔의 인식은 어떠한가? 또한 나라시만(Chakravarthi V. Narasimhan) 유엔 사무차장의 추모관 개관식(준공식) 참석과 헌사(獻辭)는 오늘날 평화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고는 준공 60주년을 기념하여 냉전기에 건립된 한국전쟁 추모공간의 현재적 함의를 최초로 조명하고자 한다.

3) 유엔기념공원과 관련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 일간의 백서』(부산: 다산, 2008);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서울: 선인, 2013);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軍史』 119호 (2021), 1~34쪽; Chungsun Lee, “Between Visible and Invisible Deaths of the Korean War: Re-envisioning Operation Glory (1954) at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7 no. 4 (June 2022), pp. 1-26;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戦争墓地の文化遺産化」(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23).

본고는 1959년 11월 협정 체결 후 유엔모지가 1960년대 초 UNCURK에 의한 ‘유엔기념묘지’로 변용해가는 가운데 추모관이 건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1964년 8월 21일 추모관 준공식 양상과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의 방한(訪韓) 및 준공식 참석 배경, 유엔 공식 헌정사(獻呈辭)의 의미를 처음으로 면밀히 짚어본다. 분석방법으로는 평화학 연구의 다학제적·융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과 관련한 유엔 문서, 미국 유엔본부 부속 유엔아카이브 기록관리부(United Nations Archives Records and Management Section, 이하 유엔아카이브)<sup>4)</sup>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대한뉴스> 및 영국 브리티쉬 파테(British Pathé) 아카이브 영상, 국내외 신문, UNCURK 기록 등 기존 학술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방면의 사료(史料) 분석을 동원하였다. 특히 최초로 공개하는 유엔의 헌정사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엔아카이브 문서 담당자에게 공식 서면질의를 실시하여 자료를 해제·확보했다.<sup>5)</sup>

이로써 본고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5개의 종교를 아우르는 다국적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공간 건립이 유엔 역사 및 한국전쟁사 계보에서 갖는 의미를 탐색한다. 그리고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건립 60주년을 맞이하여 20세기 냉전기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 건립과

4) 2019년 필자가 유엔본부 아카이브에서 사료 발굴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아카이브에는 주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유엔기념묘지와 관련하여 UNCURK가 유엔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긴 방대한 양의 서신, 케이블, 비망록(memorandum), 사진 등의 문서가 소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추모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주로 S-0690-0001-02 폴더에 계약서, 공정일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 논고도 참조.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2020), 314-315쪽.

5) United Nations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EOSG) (1946-present)의 Reference No. S-0293-0005-17 폴더는 필자가 2024년 4월 26일에 유엔아카이브에 해제를 공식 요청하여 6월 24일에 개별 메일로 파일을 전달받은 것이다.

의례가 한반도 통일·평화 분야에서 지니는 문화사회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유엔 창설 8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앞두고 추모공간에 관한 관심을 학계 저변에 확대함으로써 21세기 다문화 공생사회 속 제반 폭력과 비평화 구조에 학술적 시사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 II. 유엔기념묘지 내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관 건립 (1964년)

### 1. 1960년대 초반 유엔기념묘지 현황

19세기 영국의 사회사상가 러스킨(John Ruskin)은 근대 건축 이론을 정리한 『건축의 7등불(Seven Lamps of Architecture)』에서 참된 건축을 위한 정신을 등불에 빗대어 “희생, 진실, 힘, 아름다움, 생명, 기억, 순종”으로 간주하였다. 러스킨에 의하면 모든 건축은 인간의 신체적 편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6)</sup> 특히 종교적 건축과 기념적 건축은 타 유형의 건축에 비해 한층 정신적으로 귀중한 사물로서 우리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제공한다.<sup>7)</sup> 건축의 본질을 이루는 7가지 등불 중에서 “희생의 등불(The Lamp of Sacrifice)”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도 건물의 필요 여부를 떠나 신에 순종하는 증거로 ‘귀한 대상’을 희생으로 바치는 정신이 중요<sup>8)</sup>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6) 김광식 편저,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파주: 시간의 물레, 2013), 14쪽.

7) 위의 책, 14쪽.

8) 위의 책, 14쪽.

귀한 대상을 바치는 정신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을 애도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건축물에 구현된다.

전적지(戰迹地)나 기념관, 추모관에서 행해지는 국가 차원의 공적 의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쟁의 기억을 전승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행위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추모 매체로서 국가 혹은 공적 권위가 담보될 경우 개인이나 사회적 기억을 한층 강력히 전승하는 매개가 된다. 일찍이 전쟁의 기억 매체이자 건축물인 기념비, 추모공간 등 다양한 종류의 전쟁기념물 연구는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편 구미권에서 윈터(Jay Winter)나 샹켄(Andrew M. Shanken)과 같은 학자들이 전쟁 추모 및 기념물과 관련한 깊이 있는 담론을 축적해 온 데 비하면, 잊혀진 전쟁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전쟁의 추모공간은 다학제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자 잉글리스(Ken Inglis)가 제시하듯 다수의 전쟁 기념물이 건립 당시의 해당 사회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적 상징일 뿐이라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sup>10)</sup> 특히 분단된 한반도 정세와 국제사회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정세를 감안한다면 전쟁기념물의 함의에 관한 사유와 심도 있는 동시대적 고찰이 요구된다. 예술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는 전쟁기념물의 의미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공유되고 있으며 그간 통일과 평화 담론에서 간과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는 한국전쟁이 남긴 치외법권 지역, 바로 유엔군 묘지의 추모관에도 적용된다.

<sup>9)</sup> Jay Winter,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Andrew M. Shanken, "Research on Memorials and Monuments" *Anales del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stéticas*, 26, no. 84 (2004), pp. 163-172.

<sup>10)</sup> Ken S. Inglis, "War Memorials: Ten Questions for Historians"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ains*, no. 167 (1992), pp. 5-21.

근대적 정치문화와 개인의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현대 전사자 묘역은 군인 계급의 위계질서와 상관없이 동등한 “죽음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sup>11)</sup>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사자 추모공간의 핵심적 특징으로 등장한 죽음의 민주주의는 한국전쟁의 당곡리 유엔묘지에도 반영되었다. 유엔묘지는 1955년 유엔총회 결의문 제977(X)호 이후 유엔군 전사자 기념의 주요 장(場)으로 기능해왔다.<sup>12)</sup> 이는 1959년 협정에 따라 유엔이 유엔기념묘지의 실제 주체로서 1960년부터 1973년까지 소유권 및 관리권을 행사하게 된 데 기인한 것이었다. 협정 제2조1항에 기재된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기념묘지가 소재하는 부산시 근처 당곡리의 토지를 영원히 무상으로 기증한다”는 문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sup>13)</sup> 1951년 완공 이후 약 9년간 미군 중심인 유엔군사령부가 유엔묘지를 관리해 왔으나, 1959년 협정을 계기로 관리 주체가 당시 유엔 산하 기관이었던 UNCURK로 이관되었다.

한국전쟁기인 1950년 10월 7일 제5차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UNCURK는 해체 전까지 한국통일 민주정부 수립과 구호, 재건에 관한 책임을 담당했다. UNCURK의 활동이 온전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기는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sup>14)</sup> 적어도 1960년부터 약 14년간 실질적으로 유엔의 땅이었던 유엔기념묘지 관리 업무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정선이 주목했듯 UNCURK는 1960년대 당시 약 2,200여 명의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던 유엔기념묘지를 유엔의 땅으로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관련 기록을 방대한 양의 문서로 남겼다.<sup>15)</sup>

- 
- 11) 권현익, 「전쟁과 싸우는 전쟁의 유해」 『아시아브리프』 4권 10호 (2024), 2쪽.  
 12)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9~11쪽.  
 13) 위의 논문, 16쪽;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88頁.  
 14) UNCURK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도민, 「1964~1968년 박정희 정부의 중립국 외교와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자동상정’ 문제」 『통일과 평화』 14집 2호 (2022), 203~239쪽.

미군에서 UNCURK로 묘지의 관리권이 이양된 1960년은 유엔군 전사자 묘지가 유엔의 주요 관심무대로 부상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은 1960년 1월 22일부로 유엔기념묘지의 초대 관리처장(Custodian)에 UNCURK 사무총장인 아그하시(Mohammed Ali Aghassi)를, 그리고 UNCURK의 행정·재무 책임자 필라스키(Michel Pilarski)를 유엔기념묘지의 관리 및 유지를 책임지는 부관리처장(Assistant Custodian)으로 임명했다.<sup>16)</sup>

1959년 12월 23일자 유엔본부 내부 각서에 명시<sup>17)</sup>되어 있듯 1960년 이후 UNCURK는 유엔본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묘지 현장 운영의 제반 사항을 본부에 매주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상당 부분은 단순한 보고 이상으로 UNCURK의 상황 파악과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국내 이해관계자 및 외무부·국방부 등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조율과 합의를 거친 후 유엔본부와 의사결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근무한 UNCURK 소속의 유엔기념묘지 관리처장 및 부관리처장이 부산 묘지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Supervisor)과 묘지 관련사항을 논의하면 결과를 관리처장이 유엔본부에 보고하여 유엔 사무총장이 승인하고, UNCURK가 이를 국내 유관기관에 전하는 방식이었다. 유엔 관리시기에 본 묘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결정은 협정 조항에 근거하여 유엔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

15) UNCURK의 유엔기념묘지 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 논저는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국제평화 도시의 환상을 넘어』;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34쪽;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91~100頁 등을 참조.

16) United Nations Archives Records and Management Section (UNA), Reference No. S-0690-0005-13-00001, Date 1959-12-23 - 1965-12-11, [Correspondence-UNMCK-United Nations Custodian of Cemetary(sic)],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4 February 1960), p. 1.

17) UNA, S-0690-0005-13-00001,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23 December 1959), p. 1.

즉, 1960년대 유엔기념묘지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기틀을 다지며 유엔의 공적 권위가 담보된 유엔화 기반을 마련해갔다. 이 시기에 유엔 부속 문서의 묘지 관련 인쇄물이나 도면은 공식 유엔 엠블렘이 표현된 형태로 제작되기도 했다.<sup>18)</sup> 1960년대에 걸쳐 묘지 일대에는 UNCURK에 의한 감독과 유엔 사무총장의 승인하에 추모관과 정문, 사무실 등 주요 건물이 준공되었고, 이전의 유엔군사령부 관리시절에는 보기 어려웠던 대대적인 수입 묘목과 화훼 식수(植樹), 안장자 묘비 재정비, 유엔군 참전국 기념물 건립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정원과 같은 경관을 갖추어 나갔다.<sup>19)</sup> 대표 사례로는 1963년경부터 진행된 묘지의 경관 미화 사업과 비슷한 시기의 “영구 건축물(permanent buildings) 설립 구상”을 들 수 있다.<sup>20)</sup> 유엔 기념묘지의 영구 건축물 제1호<sup>21)</sup>로서 1964년에 완공된 추모관은 한국전쟁기 및 정전 직후의 1950년대와는 차별화되는, 본격적인 유엔 관할시대의 서막을 연 유엔화의 표상이었다.

## 2. 1963~1964년 추모관 건립 과정

1964년 1월 2일 칼리디(Ismail R. Khalidi) 유엔기념묘지 관리처장은 유엔군사령부 브로드허스트(Edwin B. Broadhurst) 참모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유엔본부로부터 본 묘지 내 “영구 건축물 설립 구상”에 대한 공

18)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94~99頁. 국내 사례로는 체신부가 1960년 11월 1일부로 발행한 “유엔 묘지 설치 기념 초일봉투”나 “UN묘지설치기념우표”가 손꼽힌다.

19) 1950년대와는 달리 묘지가 1960년대 유엔에 의한 관리에 의해 현대식 경관을 갖추게 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 안장을 희망하는 유엔군 사후 사망자와 이에 동의하는 유족들도 증가하게 되었다.

20)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100頁.

21) UNA, S-0690-0001-02-00002, 1963-12-11 - 1968-12-27, [Cemetery, The - United Nations Memorial Service Hall], “Seoul-Korea” (2 January 1964), p. 1.

식 승인을 받았다고 통보했다.<sup>22)</sup> 이 구상은 모지 개발을 위한 4종류의 복합 건축물 계획에 기인한 것으로, 추모관(Interfaith Chapel)을 비롯하여 행정사무실, 방문자 추모 전시관, 복합 빌딩 등 부속건물이 그 대상이 되었다.<sup>23)</sup> 그리고 이 4종류의 건축물 구상에서 최초로 승인된 건물이 바로 김종업 건축가가 설계한 추모관이었다. 당시 서울 종로에 소재한 김종업 건축연구소가 추모관의 건축가 겸 계약자로 낙찰된 상태였다.

김종업(1922~1988)은 1950년대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모더니즘 건축 거장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프랑스 아틀리에에서 근무한 후 한국 전통적 건축요소를 현대식으로 표현한 모더니즘 건축가였다.<sup>24)</sup> 그는 1957년 산업은행의 UNCURK 기술고문으로 위촉되었고 1962년에는 제1회 UN 국제국립공원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바 있었다.<sup>25)</sup> 김종업은 재료나 색감, 형태 등 해당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지역적 컨텍스트 개념이 구현된 건축물을 설계하였으며 국내 대표 작품으로는 유엔기념묘지 정문(1965~1966년) 및 육군박물관(1981~1983년) 등이 손꼽힌다.<sup>26)</sup>

1964년 1월 14일에 서울의 리차드스(Richards) 부관리처장이 부산 유엔기념묘지에 상주하는 빈지(Binge) 현장감독관에게 발송한 서한에는 추모관 설립 합의각서와 일반조건, 사양서가 첨부되어 있다.<sup>27)</sup> 합의각서는 발주자인 유엔본부와 계약자인 김종업건축연구소 양자 간에 체결되었으

22) *Ibid.*

23) *Ibid.*

24) 서민우, 「김종업·김수근·김종성의 뮤지엄건축 특성 비교 연구 -특히 지역적 컨텍스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1호 (2020), 3쪽.

25) 목천건축아카이브, “생산자 Creator 0008, 김종업건축연구소” (온라인), <<https://www.mokchon-kimjungsik.org/creator/13>>.

26) 서민우, 「김종업·김수근·김종성의 뮤지엄건축 특성 비교 연구」, 3쪽.

27) UNA, S-0690-0001-02-00002,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From: 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UNMCK, Seoul, To: Mr. R. W. Binge, Supervisor, UNMCK, Pusan, 14 January 1964), p. 1.



며,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묘지 예배당(CHAPEL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Pusan, Korea)”이라는 정식명칭하에 이루어졌다. 공사 장비와 공정표, 부대설비, 근로자 관리 등 제반사항은 유엔대표의 승인을 받았는데, UNCURK 소속인 유엔기념묘지 관리처장이 그 유엔대표 자격을 지녔다.<sup>28)</sup> 유엔본부는 공정별로 검사를 실시할 별도 기술자를 추천토록 하였고,<sup>29)</sup> 칼리디 관리처장은 유엔사/주한미군(UNC/USFK)의 협조를 구해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의 발란카(Frank Balanka) 엔지니어를 책임자로 위촉할 의향을 표명했다.<sup>30)</sup>

합의각서 2쪽의 3조에는 최초로 제시된 추모관 건립비용이 \$37,147.01로 기재되어 있다.<sup>31)</sup> 김종업건축연구소는 시공내역이 기재된 소요비용을 월별로 UNCURK에 청구했으며 인보이스를 검토한 부관리처장은 현장 감독관에게 간략한 회람 문서(Routing Slip)를 송부했다. 사양서에 따르면 유엔은 건축에 소요되는 기자재를 최상의 품질로 납품할 것과 기술자 역시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sup>32)</sup> 일례로 “시멘트는 국내산 삼척 또는 문경의 포틀랜드 시멘트여야<sup>33)</sup>” 하며, “바닥포장에 사용되는 부산산 천연석인 철평석(Chulpyong Suk)<sup>34)</sup>을 특정하여 명시한 사례는 유엔이 추모관 건립에서 얼마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관여했는지를 보여준다.

추모관 건립은 수차례의 시찰과 보완, 담보를 거치는 가운데 점차 완성

28) *Ibid.*,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Memorandum of Agreement)”, pp. 1-6.

29) UNA, S-0690-0001-02-00002, “Seoul-Korea” (2 January 1964), p. 1.

30) *Ibid.*, pp. 1-2.

31) UNA,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Memorandum of Agreement)”, p. 2. 최종 공사비 산정내역은 발견되지 않으나 최초 내역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32) UNA,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Specification)” (14 January 1964), pp. 1-18.

33) *Ibid.*, p. 8.

34) *Ibid.*, ‘철평석’의 영문이 한글 발음 그대로 ‘Chulpyong Suk’으로 표기되어 있다.

되어 갔다. 유엔의 작업지침이 상세하게 명시된 제반 기록은 당시 건립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도 정교한 공정을 수반했음을 나타낸다. 이를 반영 하듯 1963년 12월 24일자 문서에는 최초 준공 예정일이 1964년 2월 말일 자<sup>35)</sup>로 기재된 데 이어 합의각서에는 1964년 4월 30일로,<sup>36)</sup> 다음에는 5월 20일로,<sup>37)</sup> 나아가 6월 9일 전<sup>38)</sup>으로 기한이 시시각각 지연되었음이 드러난다. 지연 요인 중 하나는 UNCURK의 지적대로 김종업 건축가가 부산에 상주하지 않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었다.<sup>39)</sup>

1964년 5월 중순이 되자 UNCURK는 건축가 측에 각종 미비점을 지적 하며 당시 예정 준공일이었던 5월 20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sup>40)</sup> 예를 들어 주한미군 부산기지사령부 하야리아 부대 (Hialeah Compound)에서 파견된 전문 엔지니어 점검 결과 시공 불충분으로 인해 4월분 공사비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sup>41)</sup> 6월 2일 서한에서도 최종 공정단계에 접어든 추모관 지붕의 2, 4번째 “V”자형 철근 콘크리트 대들보 좌측 부분이 미흡하여 우천 시 지붕이 누수 상태 였기 때문에 UNCURK는 유사 시 공사비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경고를 첩언하기도 했다.<sup>42)</sup>

35) UNA, S-0690-0001-02-00002,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From: Donal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UNMCK, Seoul, To: Mr. R. W. Binge, Supervisor UNMCK, Pusan, 24 December 1963), p. 1.

36) UNA,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Memorandum of Agreement)”, p. 2.

37) UNA, S-0690-0001-02-00001, 1963-12-11 - 1968-12-27, [Cemetery, The - United Nations Memorial Service Hall], “Seoul - Korea” (From: Donal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To: Mr. Kim Chung Up, 14 May 1964), p. 2.

38) UNA, S-0690-0001-02-00001, “Seoul - Korea” (From: Donal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To: Mr. Kim Chung Up, 2 June 1964), p. 1.

39) UNA, “Seoul - Korea” (14 May 1964), p. 2.

40) *Ibid.*

41) *Ibid.*, pp. 1-2.

42) UNA, “Seoul - Korea” (2 June 1964), p. 1.

1964년 8월 22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당시 한국전쟁 11개 참전국 유엔군 안장자 2,266명의 종교가 표상된 유엔기념묘지의 추모관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또한 외관상 주요 특징으로 지붕의 갈색 “V”자형 대들보가 모더니즘 건축 양상을 보이는 점을 거론했다.<sup>43)</sup> 결과적으로 추모관 건물 내부는 한국전쟁 전투지원 참전국인 16개국을 형상화하고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들의 다양한 종교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sup>44)</sup> 추모관은 전체적으로 모던한 기하학적 삼각형태를 띠는데 이는 추상성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up>45)</sup> 1964년 이후 여러 차례 단장을 거듭하며 오늘날 추모관 창문 스테인드글라스에는 “평화의 사도, 승화, 전쟁의 참상,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이 추가되었다.<sup>46)</sup> 유엔 기록상 공정작업에 평화 개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처럼 세월의 경과에 따라 한국전쟁을 둘러싼 후대의 기억과 평화를 소망하는 염원이 추모공간에 덧입혀져가는 점이 확인된다.

43) *The New York Times*, August 22, 1964.

44) 문화재청, “부산에 있는 유엔의 성지, 「재한유엔(UN)기념공원」UN의 날에 맞춰 문화재로 등록” (온라인), 2007년 10월 23일,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yIgfKA2DW4NWUjzNjWwJUprVnmn5dirjzs9UKUpmWluT7a1xzpQ5TUriPyz0v33E.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248743&sectionId=b\\_sec\\_1&pageIndex=877&mn=NS\\_01\\_02&strWhere=title&strValue=&sdate=&edate](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yIgfKA2DW4NWUjzNjWwJUprVnmn5dirjzs9UKUpmWluT7a1xzpQ5TUriPyz0v33E.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248743&sectionId=b_sec_1&pageIndex=877&mn=NS_01_02&strWhere=title&strValue=&sdate=&edate)>.

45) 재한유엔기념공원, “기타 시설물 (추모관)” (온라인), (n.d), <[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20500#:~:text=%EC%83%88%EA%B2%A8%EC%A0%B8%20%EC%9E%88%EC%8A%B5%EB%8B%88%EB%8B%A4.-%EC%B6%94%EB%AA%A8%EA%B4%80,%ED%95%B4%EC%84%9C%20%EC%84%A4%EA%B3%84%ED%95%9C%20%EA%B2%83%EC%9E%85%EB%8B%88%EB%8B%A4](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20500#:~:text=%EC%83%88%EA%B2%A8%EC%A0%B8%20%EC%9E%88%EC%8A%B5%EB%8B%88%EB%8B%A4.-%EC%B6%94%EB%AA%A8%EA%B4%80,%ED%95%B4%EC%84%9C%20%EC%84%A4%EA%B3%84%ED%95%9C%20%EA%B2%83%EC%9E%85%EB%8B%88%EB%8B%A4)>. 공원 설명에 의하면 추모관 “내부에는 전투지원 참전 16개국을 뜻하는 16개의 선이 중앙정면 바닥에서부터 유엔마크를 통과하여 하늘로 승화한 의미로 천장을 가로지르는 형태”를 띤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1964년 자료상으로 16개 선은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그 후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6) 위의 홈페이지.

완공 이듬해에 제작된 유엔기념묘지 자료에 따르면 “이 會館은 墓地에 安置되고 있는 여러 宗教的 信仰을 考慮하여 韓人 建築家에 依하여 設計 建立”<sup>47)</sup>되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설명에서 읽히듯 추모관은 특정 종교를 내세우지 않고 유엔 참전국의 종교적 다원성에 입각하여 모든 의례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용도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sup>48)</sup> 건축학적으로 김중업은 본 추모관 외부로는 건축의 구조미를 강조하고 내부는 단순 명료한 공간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된다.<sup>49)</sup> 영국 브리티시 파테 영상에서도 초기 추모관 내부에는 정면 중앙에 유엔 휘장만 걸려 있어 특정 종교 대신 유엔의 위상이 강조되고 있다.<sup>50)</sup>

UNCURK와 유엔이 제반 공정을 주도면밀하게 관장한 추모관은 유엔과 김중업 건축가 간의 거듭된 수정과 협의, 절충의 공동작이었다. 추모관을 건립하는 과정은 정전 후 본 묘지를 유엔에 헌사하려는 움직임이 고조된 1955년 8월 유엔군 참전 전투국 15개국이 유엔에 공동 전달한 안건에서 이 묘지를 유엔이 관할함으로써 “유엔기념묘지로 관리하는 일은 유엔군 전사자들에 걸맞는 헌사(appropriate tribute)가 될 것”<sup>51)</sup>으로 주장

47)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Pusan: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1965), p. 6. 영한대역본 중 한글 설명이며, 원문에 충실하되 한문과 한글을 병기했다.

48) 「김중업 건축을 돌아보다 - ③ 재한유엔기념공원, 경남문화예술회관」 『건축사 뉴스』 (온라인), 2022년 4월 21일, <<https://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48>>.

49) 위의 홈페이지.

50) British Pathé, “SOUTH KOREA: MEMORIAL HALL OPENED AT PUSAN CEMETERY IN MEMORY OF FALLEN U.N. SERVICEMEN (1964)”, Archive: Reuters, <https://www.britishpathe.com/asset/206586/> (1964년 8월 23일). 58-1분 1초 해당 장면.

51)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PPLEMENTARY LIST OF ITEMS FOR THE AGENDA OF THE TEN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한 사실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유엔과 UNCURK, 김종업 간 논의와 타협이 지속된 건립 과정은 유엔 참전국 동맹과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표상하려는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64년 8월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의 헌사를 통해 유엔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 추모관은 유엔기념묘지 내 유엔의 염원이 깃든 첫 영구적 결과물이 되었다.

### III. 유엔사무차장의 준공식 방문과 추모관 건립 의의

#### 1. ‘귀한 손님’: 나라시만(Narasimhan) 유엔 사무차장의 준공식 방문

유엔아카이브에는 유엔 사무차장의 추모관 준공식 방문을 기록한 사료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 사료군은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방문 양상을 1960년대 국제정치적 맥락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유용한 보고(寶庫)로 작용한다.

당시 국내에서는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을 “귀한 손님”<sup>52)</sup>으로 칭하며 그의 내한일정과 이력을 신문 제1면에 보도하였다.<sup>53)</sup> 인도 출신의 나라시만은 1956년에 유엔직원이 된 이후 1959년 초 유엔본부로 부임하며 함마셴드(Dag Hammarskjöld) 유엔 사무총장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얼마 지

CEMETERY IN KOREA)” (A/2939), (New York: UN), 22 August 1955, p. 3;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6~7쪽.

52)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대한뉴스 제483호, “귀한손님들” (온라인), 1964년,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10048300>>.

53) 『조선일보』 1964년 8월 20일.

나지 않아 1961년 8월에 사무차장으로 승진하였다.<sup>54)</sup> 나라시만이 1964년 8월 준공식 참석 차 내한할 당시는 이 시기에 해당되었다.

국내 언론기사에는 유엔 사무차장이 “釜山近郊에 자리 잡고 있는 「유엔」軍記念墓地禮拜會館開館式에 참석하기 위해 來韓<sup>55)</sup>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보도되어 있으나, 그 배경에 관해서는 유엔문서와 병행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56)</sup> 당시 나라시만은 최초의 아시아 출신 유엔 사무총장인 미얀마의 우 탄트(U Thant)를 대신하여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극동지역을 공식 시찰<sup>57)</sup>했는데, 주목할 사항은 이 같은 유엔 시찰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면 1964년은 20개국에 가까운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이 유엔에 가입한 1960년 ‘아프리카의 해’ 이후 유엔이 제3국의 비동맹운동과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신생독립국들로 다원화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고 인근 캄보디아와 태국이 충돌하고 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변화였다.<sup>58)</sup> 유엔 차원에서는 제3국 대두와 중심세력 분산에 따라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입지를 넓히고 유엔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미 정부 입

54) 『조선일보』 1964년 8월 21일.

55) 위의 기사.

56) 『동아일보』 1964년 8월 27일자 1면(“韓·泰·印歷訪”)에는 간략히 “동남아 위기를 토의”하기 위해 극동지역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짙막하게 보도된 바 있다.

57) 나라시만의 대한민국 및 극동지역 시찰의 세부 일정 자료는 유엔아카이브의 다음 유엔 사무총장 하위 문서군(Fonds)에 소장되어 있다. 상당 수 문서에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분쟁을 둘러싸고 유엔의 역할(United Nations Cambodia-Thailand Mission)에 관한 유엔과 우 탄트 사무총장의 고민이 역력하게 드러난다. UNA, AG-005, 1935 - 1979, [Secretary-General U Thant (1961-1971)], Name of the creator: Secretary-General - U Thant.

58)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64), p. 146.

장에서도 남베트남이 무너지면 동남아시아 전체가 도미노 무너지듯 공산권 수중 하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에서 베트남 전쟁은 “또 다른 한반도 (another Korea)”로 인식되었다.<sup>59)</sup>

이러한 가운데 나라시만은 앞서 캄보디아와 태국, 인도에서 고위급 인사를 예방(禮訪)<sup>60)</sup>하여 베트남 전쟁이 해당국에 초래한 갈등과 정치적 대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후 방한하였다.<sup>61)</sup> 당시 일련의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유엔 사무차장의 방한과 추모식 개관식 참석은 유엔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극동지역 시찰의 일환으로 베트남 전쟁기 극동지역의 평화 모색 차원에서 유엔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도 맞닿았던 것이다.

1964년 8월 20일 오전 9시 50분경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은 민항공운공사(Civil Air Transport, CAT) 24기편으로 서울에 도착했다.<sup>62)</sup> 그는 공항에서 김동환 국회 외무분과위원장과 김성은 국방장관, 정일영 외무차관, 주한외교사절단, UNCURK 위원들의 영접과 육해공 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다.<sup>63)</sup> 이튿날 3시 유엔 사무차장은 부산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준공식에 참석하였다.<sup>64)</sup> 유엔본부 공보실 문서상 사전 일정에는 김성은 국방장관이 정일권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대독할 것과, 샴바르(Roger Chambard)

<sup>59)</sup> Stanley Meisler, *United Nations: The First Fifty Year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5), p. 158.

<sup>60)</sup> UNA, S-0884-0004-07-00001, 1964-07-24 - 1964-08-31, [Cambodia - Thailand - C.V. Narasimhan trip Asia and the Far East], “NOTE TO CORRESPONDENTS” (UNITED NATIONS, Note No. 2963, 6 August 1964), p. 1.

<sup>61)</sup> UNA, S-0884-0004-07-00001, “ITINERARY FOR MR. NARASIMHAN, CHEF DE CABINET:” (24 July 1964), p. 1.

<sup>62)</sup> *Ibid.*

<sup>63)</sup> 『동아일보』 1964년 8월 20일; 대한뉴스 제483호, “귀환손님들”, 3~14초 해당 장면.

<sup>64)</sup> UNA, S-0884-0004-07-00001, “MEMORIAL SERVICE HALL AT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TO BE INAUGURATED TODAY”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KOR/649, 21 August 1964), p. 1.

주한외교사절단 단장 겸 프랑스 대사, 하우스(Hamilton H. Howze) 유엔 군사령관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sup>65)</sup>과 세부 동선<sup>66)</sup>이 담겨 있다.

유엔본부 문서에 기록된 주요 참석자는 정 외무차관을 비롯하여 외무부 기획관리국 및 국제관계국장,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 주한 외교관들(영국,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교황청 대표자, UNCURK 파키스탄 대표 그리고 UNCURK의 필리핀 및 태국의 대리인<sup>67)</sup>이었다.<sup>68)</sup> 그 외에도 유엔군사령부 연락사절단(Liaison Group)과 한국유엔협회 전무이사, 추모관 건축가가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sup>69)</sup>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도 동행했다.<sup>70)</sup> 영국 브리티시 파테 영상에서는 유엔군 참전국 귀빈들과 유엔군사령관 등 관계자들이 한여름에도 제복을 차려 입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사를 경청하며 예배에 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sup>71)</sup>

그림 3-1의 추모관 개관식에서 김성은 국방장관은 정일권 국무총리의 현정사를 대독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한국 재건에 기여해 온 유엔의 대표 기구 UNCURK에 감사한다”<sup>72)</sup>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65) *Ibid.* 사료에는 “Howze” 사령관이 “Sowz”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66) *Ibid.*, p. 2.

67)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63), p. 707. 당시 UNCURK의 7개국 중 일부 국가는 대표(Representative) 외 대리인(Alternate)을 두고 있었다.

68) UNA, “MEMORIAL SERVICE HALL AT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p. 2. 다만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9) *Ibid.*

70) 『마산일보』 1964년 8월 25일.

71) British Pathé, 54-1분 18초 해당 장면.

72)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GENERAL ASSEMBLY OFFICIAL



는 공산권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에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sup>73)</sup>

〈그림 3-1〉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개관식에서 헌정사를 대독하는 김성은 국방장관



\* 출처 : UN Photo, Unique Identifier: UN7659723, “UN Memorial Ceme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Production Date: 21 August 1964).

이어서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은 추모관 개관을 정식으로 선언하는 헌사를 했다.<sup>74)</sup> 현재 유엔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헌정사(그림 3-2)는 언론을 비롯하여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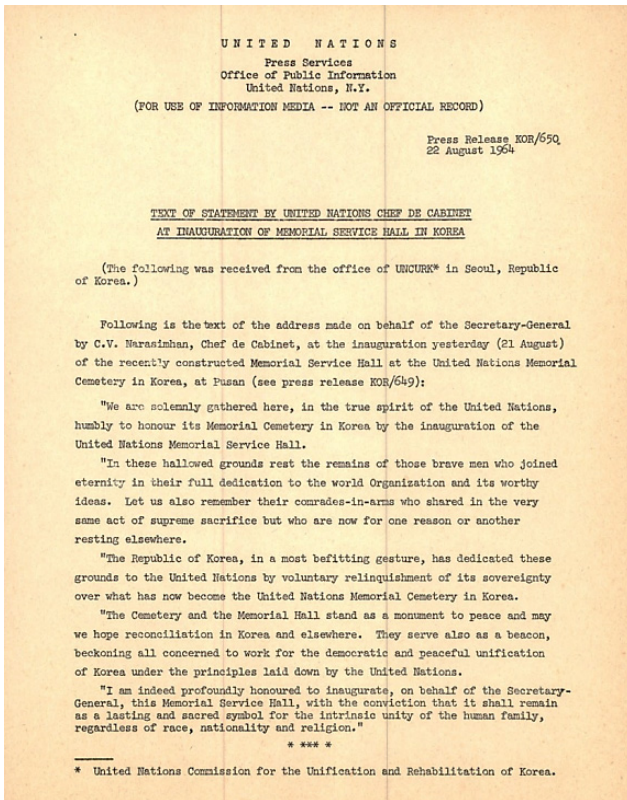
RECORDS: NINETEENTH SESSION SUPPLEMENT No. 12 (A/5812)” 1964, p. 5.

73) *Ibid.*

74) British Pathé, 48~54초 해당 장면; 대한뉴스 제483호, “귀환손님들”, 26~32초 해당 장면.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본 헌정사는 유엔 산하시절 유엔기념 묘지의 위상과 유엔의 한반도 통일, 평화의 염원이 깃든 추모관의 함의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림 3-2>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개관식의 유엔 헌정사 (1964년 8월 22일자 내부문서)



\* 출처: UNA, S-0293-0005-17, 1964-08-01 - 1964-08-31, [Speeches - inauguration of memorial service hall in Korea], "TEXT OF STATEMENT BY UNITED NATIONS CHEF DE CABINET AT INAUGURATION OF MEMORIAL SERVICE HALL IN KOREA"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KOR/650, 22 August 1964)<sup>75)</sup>

### [유엔 참모장(Chef de Cabinet)의 추모관 개관 헌정사]

우리가 이 자리에 엄숙히 모인 것은 진정한 국제연합의 창설 정신으로 대한민국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설립을 겸허하게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성한 땅에는 유엔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영혼을 바친 용사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장에서 가장 존중받아 마땅한 희생을 감수한 용사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다른 곳에 잠들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의 재한유엔기념묘지에 대한 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가장 걸맞은 방식으로 이 장소를 유엔에 바쳤습니다.

이 묘지와 추모관은 한반도와 그 외 다른 지역의 화해를 염원하는 평화의 기념물(monument to peace)로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묘지와 추모관은 유엔이 정한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들을 인도하는 등불(beacon) 역할도 합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이 추모관이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인류의 본질적인 통합을 위한 신성한 영구적 상징으로 남으리라는 확신으로 개관을 공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sup>76)</sup>

헌정사에 이어 삼바르 주한외교사절단 단장은 “자유의 이상을 수호하기 위해 세계만방에서 달려와 젊음을 그대로 바쳐버린 젊은 영현들[에]의 무덤의 대열을 앞에 두고 언제나 똑같은 감격에 사로 잡힌다”<sup>77)</sup>고 피력하였다. “自由守護神을 追仰”이라는 제목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동종합 교회는 젊음을 인류평화에 바쳐 이곳에 고히 잠든 녀들을 추앙하고 거룩한 회[희]생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작년[1963년] 12월에 착공, 이날 개관식을 보게 된 것”<sup>78)</sup>이었다.

75) 필자의 서면질의에 응하여 비공개였던 S-0293-0005-17 폴더 문서를 해제하여 디지털화한 후 송부해 준 유엔아카이브 문서 담당자들(Corinne, Alex)에게 감사로 전한다.

76) 유엔문서의 영어 원문을 필자가 문맥을 고려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77) 『동아일보』 1964년 8월 22일.

78) 위의 기사.

〈그림 3-3〉 추모관 개관식 후 상징구역으로 향하는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과 일행들



\* 출처 : UN Photo, Unique Identifier: UN7662486, "Dedication of the Memorial Service Hall a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Production Date: 21 August 1964).

다종교적 추모관 준공식에 걸맞도록 5개 종교별 대표자가 주요 인사로서 추모예배를 가장 앞줄에서 참관하였다.<sup>79)</sup> 유엔문서상의 참석자들은 ① 불교: 부산 대각사(大覺寺)의 황계원 제사장, ② 천주교: 부산지구의 루카제우스키(Leonard J. Lukaszewski) 대위, ③ 유대교: 제3군단(Third Corps)의 포톡(Simon Potok) 군목 및 중위, ④ 이슬람교: 제15 터키 국군중대(Fifteenth Turkish Armed Forces Company)의 센굴(Nazmi Sengul) 이등병, ⑤ 기독교: 부산지구 쿡(Richard G. Cook) 군목 겸 대위였다.<sup>80)</sup> 샴바르의 인사에 이어 종교별 대표자들은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sup>81)</sup> 이처럼 개관식 기념예배에서도 동서회통(東西會通)의 종교 의례를 통해 다국적 전사자들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국제 평화를 염원하는 유엔의 지향점이 엿보인다.

추모관 개관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유엔기념묘지 내 상징구역(symbolic area)으로 이동했다. 개관식 예배 후 추모관을 나서는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과 일행의 모습(그림 3-3)은 유엔의 아카이브상 주요 역사적 장면으로 손꼽힌다.<sup>82)</sup> 유엔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샴바르 단장, 하우스 유엔 군사령관, 바이칸(Muammer Baykan)<sup>83)</sup> UNCURK 튀르키예 대표, 김성은 국방장관 일행은 상징구역에서 우 탄트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합동 현화를 시행하고 1분간 묵념했다.<sup>84)</sup>

79) British Pathé, 1분 14~18초에 해당되는 장면; *The New York Times*, August 22, 1964.

80) UNA, “MEMORIAL SERVICE HALL AT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p. 1.

81) 『동아일보』 1964년 8월 22일.

82) UN Photo 온라인상에서 본 사진이 주요 장면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3) UNCURK의 바이칸 튀르키예 대표는 1960년 3월 5일에 부임했다. 外務部, 『大韓民國外交年表 附主要文獻 1948-1961』, (서울: 外務部, 1962), 724쪽.

84) British Pathé, 1분 14~18초 해당 장면.

이튿날 오전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은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당시 <대한뉴스>가 유엔 사무차장의 내한 후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한 “귀한 손님들”에서도 환담 장면이 확인된다.<sup>85)</sup> 약 30분간의 만남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유엔총회의 한국 문제 상정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엔이 韓國의 民主的 發展과 독립을 위해 힘써”준데 사의를 표명했고 유엔 사무차장은 주유엔대사와 협조하여 한국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sup>86)</sup> 환담 후 나라시만 일행은 오전 10시 50분 CAT 27기편으로 도쿄로 향했다.<sup>87)</sup>

1960년대 <대한뉴스>가 국가 이념을 국민에게 전달하며 박정희 체제의 선전<sup>88)</sup>채널로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과 추모관 개관식을 상세히 보도한 본 영상은 그만큼 박 정권이 유엔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방증이기도 하다. 한편 ‘귀한 손님’인 유엔 사무차장 방한의 주된 목적은 박 대통령과의 환담 이상으로 당시 유엔이 관리했던 묘지의 ‘평화의 기념물(monument to peace)’, 즉 추모관 건립을 기념하여 유엔의 권위를 행사하는 데 있었다.<sup>89)</sup> 설령 유엔기념묘지 추모관이 유엔 사무차장의 시찰 중 최우선 관심대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엔 입장에서 한국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관 개관식은 또 다른 위기인 베트남 전쟁 속 극동지역의 화합을 모색하고 국제 평화를 염원하는 데 시의적절한 의례이자 유효한 명분이었을 것이다.

85) 대한뉴스 제483호, “귀한손님들”, 15~25초 해당 장면.

86) 『동아일보』 1964년 8월 23일.

87) UNA, “ITINERARY FOR MR. NARASIMHAN, CHEF DE CABINET:”, p. 1.

88) 이필오, 「<대한뉴스>와 베트남전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4쪽.

89) 대한민국이 유엔묘지를 유엔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과정에 관해서는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1~18쪽 참조.

## 2. ‘귀한 대상’에게 바치는 헌사: 유엔군 전사자 추모관 건립 의의

“건축은 기념되거나 기념물적 가치를 지닐 때 진정으로 완성된다”<sup>90)</sup>고 한 러스킨의 주장을 상기할 때 1964년 8월 21일에 거행된 유엔 사무차장의 개관식 참석과 헌사, 묘지 현화에 이르는 일련의 의례를 마친 추모관은 진정한 의미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유엔 산하 시절 유엔의 공식 개관식으로 출발한 유엔기념묘지 추모관은 국제기구 유엔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낸 건축물이자 한국전쟁의 공적 기억 매체였다. 그리고 유엔 관리시기에 다른 성격의 건물이 아닌, 유엔군 전사자들의 존엄성을 기억하고 한반도와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추모관이 영구 건축물 제1호로 건립된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유엔문서에 “김중업건축연구소가 유엔을 위해 설계하고 건설하였다”<sup>91)</sup>고 명시되어 있듯 추모관은 유엔의 명분을 중시하여 건축 재료와 공정, 기간, 예산, 인력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 이듬해인 1965년에는 대문 건립 계획이 구상되는데, 여기서 추모관은 대문의 중요한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작용하게 되었다.<sup>92)</sup>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관심을 표명한 대문의 경우 유엔기념묘지의 간판 역할을 하는 만큼 추모관과 달리 유엔이 건립 과정과 디자인, 재료, 예산 등 제반 요소에 한층 강하게 개입하게 된다는 점도 괄목할 만하다.

또한 유엔이 관리한 추모관에 최상급 기자재와 전문 인력이 투입된 사실에서도 러스킨의 이론 중 희생의 등불이 확인된다. 즉, 희생의 등불은 특정 대상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고 싶은 희생적 마음이며 보다

90) 김광식,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24쪽.

91) UNA, “MEMORIAL SERVICE HALL AT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p. 2.

92)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96~97頁.

많은 사상을 포용하기 위하여, 혹은 보다 고가로 보이는, 가급적 더욱 정교한 대상을 선택하는 정신을 의미한다.<sup>93)</sup> 이를 추모관에 적용하면 그만큼 유엔은 인류의 보편적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입장에서 ‘귀한 대상’을 다종교적 신 혹은 유엔군 전사자들에게 바치는 희생의 등불, 희생의 정신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추모관은 유엔군이 참전한 문화권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5개 주요 종교를 아우르는 다국적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이었다. 앞서 언급한 현대 전사자 묘역이 군인의 평등 원칙과 “죽음의 민주주의”<sup>94)</sup>를 구현한 공간이라면, 유엔기념묘지 추모관 역시 국적이냐 종교, 안장자 계급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을 공평하게 표현한 방식은 정전 이듬해 1954년에 작성된 영현등록업무 보고서에 등장하는 유엔묘지를 지칭하는 다음 대목에서도 유사한 군사사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 ㄷ유엔묘지에는 완전한 단결(unity)이 존재하며, 죽은 자들은 완전한 만장일치(unanimity)의 살아있는 상징을 만들어낸다. 당국 군묘지에는 민족주의(nationalism)가 존재하지 않는다”<sup>95)</sup>는 문구를 추모관에 적용시키면 본 건축물은 죽음의 민주주의 및 종교적 단결이 발현된 표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유엔묘지 추모관이 유엔현장에 기반하여 최초로 창설된 유엔군 동맹의 연결고리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다양성과 공평성은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이 개관식 헌사에

93) 김광식,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17쪽.

94) 권현익, 「전쟁과 싸우는 전쟁의 유해」, 2쪽.

95)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Pacific, Office of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Military History Office (1/1959-12/31/1974), 15 January 1954, “History of [the] Korean War: Graves Registration Service (Final Draft) Jan. 1954”, NARA (AUS251\_09\_00C0270, p. 8);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71頁.



서 추모관을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인류의 본질적인 통합을 위한 신성한 영구적 상징”으로 공식 명명한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다름 아닌 유엔의 정신, 즉 헌장 제1장에 기술되어 있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 협력을 달성”<sup>96)</sup>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추모관 건립 과정에서 유엔이 유엔헌장을 직접 원용한 것은 아니었으나, 유엔기념모지 추모관에 투영된 종교적 단결과 민주주의, 인류 통합의 가치는 유엔의 이상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식은 “보다 많은 사상을 포용”하려는 정신인 러스킨의 희생적 등불과 맞닿아 있다.

추모관에 깃든 유엔군 전사자 추모를 통한 화합에의 염원은 한국전쟁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국가·민족·종교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21세기에도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냉전기에 유엔이 바라본 추모관이야말로 “한반도와 그 외 다른 지역의 화해를 영원히는 평화의 기념물”이라는 유엔 사무차장의 헌사가 이를 명징하게 증명한다. 추모관이 시각적으로 한국전쟁의 16개 전투 참전국 전사자를 형상화하면서도 건축물 그 자체의 메시지는 인류가 한반도 외 타 지역의 화합을 위해 동시에 노력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평화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60년 전에 유엔이 건립한 추모관은 오늘날 다문화 공생사회에서도 각지의 분열을 넘어 통합적 가치를 지향하는 징표 역할을 담당한다.

냉전기이자 베트남 전쟁으로 국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던 추모관 개관식에서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이 우 탄트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헌사를

<sup>96)</sup>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발효일 1991. 9. 18]다자조약, 제1059호, 1991. 9. 24].

바친 사실 자체도 한반도 및 유엔 역사에서 기념비적 의의를 지닌다. 유엔은 동서 대립이 첨예하던 시절 UNCURK 존재를 부정하며 해체를 요구한 공산권 국가의 반발과 관계없이 유엔의 예산으로 추모관 건립을 지원하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은 UNCURK 존속에 반대<sup>97)</sup>해 왔으나, 실제로 이들이 유엔군 전사자들의 추모공간인 유엔기념묘지 내 추모관 건립 자체를 부정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정 전쟁기념물에 대한 유엔의 지원은 유엔 역사와 전쟁사에서 거의 전무후무하다는 점에서도 추모관에 대한 재조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sup>98)</sup>

이상으로 살펴본 유엔기념묘지의 추모관 건립 과정과 최초 개관식은 그동안 한국전쟁사에서 간과되어 온 전쟁유적이 실제로는 어떻게 유엔 역사에 이정표를 남겼는지를 소상히 보여준다. 추모관은 대한민국 내 유엔 땅이었던 유엔기념묘지 내에서도 유엔의 핵심 이념과 평화적 가치가 응축된 추모공간이었다. 헌사 특징상 미화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귀한 손님’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이 추모관에서 바친 헌사는 한국전쟁에 동원된 ‘귀한 대상’인 유엔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추모 의례의 전형(典型)이 되었다. 이러한 의례는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고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오는 전사자들의 전우들과 묘지 내 안장자의 유족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추모관 건립 전 1951년부터 10여 년간 유엔의 날 등 추모 행사는 유엔

97) 『동아일보』 1959년 10월 4일; 김차준, 「미중 대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217~222쪽;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 100頁 참조.

98) 이는 국제정치학적 배경에서 한국전쟁과 일괄 비교는 곤란하며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엔 창설 이후 발발한 수많은 전쟁에서 유엔이 전사자 추모공간 구상에서 개관식 헌사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 관여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한 사례는 전무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묘지의 야외 상징구역과 묘역에서 주로 개최<sup>99)</sup>되었는데, 건립 이후에는 추모관이 기념예배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최근 추모관의 용도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및 한국전쟁 당시 영국군 시신수습팀 일원으로 유엔군 전사자 유해를 수습한 그룬디(James Grundy)가 시민들에게 한반도 통일과 평화 메시지를 전파하는 열린 장소로도 확장되었다. 나아가 유엔묘지는 2015년 이후 부산광역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9개 연속 유산에 포함되며 비무장지대(DMZ)와 더불어 현재적 의미에서 희망과 치유, 인류애를 전하는 한반도 통일교육 현장체험의 장<sup>100)</sup>으로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 IV. 결론

유엔기념묘지 추모관은 1960년대 본격적인 유엔 관할기구로서 UNCURK에 의한 ‘유엔의 공식묘지’ 구상으로 추진된 영구 건축물 제1호였다. 비록 추모관 건립 과정에서는 공정상 한계를 노정하며 김종업 건축가와 UNCURK 간 절충과 보완이 수반되었으나, 본 건축물은 유엔과 UNCURK가 유엔군 동맹의 기억과 평화를 후세에 전파하고자 한반도에 남긴 소산이자 유엔의 명실상부한 문화유산(heritage)이었다.

러스킨의 시각에서 해석해보면 추모관은 유엔이 16개국 유엔군 전사

99) 『조선일보』 1958년 10월 26일.

100) ‘피란수도 부산유산’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김홍수, 「통일교육 현장체험의 장(場)으로서 부산의 발전: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활동 사례」 『한국민족문화』 163호 (2017), 65~94쪽;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307~316쪽.

자들과 그들의 다종교 신에게 헌사하기 위해 많은 사상을 포용하고 최상급 재료를 엄선하여 바친 귀한 대상이었다. 이는 건축의 본질인 “희생의 등불(lamp)”이자 나라시만 유엔 사무차장이 명명한 “평화의 기념물”, 그리고 냉전기 국제사회의 어둠에서 “모든 관계자들을 인도하는 등불(beacon)”이기도 했다. 베트남전쟁 등 국제사회의 위기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던 유엔의 입장에서 당시 추모관은 한국전쟁의 참상을 회복하는 데서 나아가 인류 전체의 화합을 염원하는 투사물이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유엔기념묘지 추모관은 서론에서 잉글리시가 제시한 전쟁기념물이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견해와는 달리 유엔이 명명한 인류의 근원적 통합을 위한 장소임이 확인된다. 냉전기 유엔은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지원군이었던 한편, 제3세계 동맹의 부상과 남북 간 대치로 인해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는 복잡한 역동성을 띠었다. 또한 유엔이 추모관 건립 과정에서 유엔현장을 명문화하지는 않았더라도, 유엔현장과 상통하여 추모관이 담고 있는 인종·국적의 다원성과 동서회통의 종교관, 선구안적 민주주의 정신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다문화공생사회에도 공명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추모관은 건축물을 통해 인류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 유엔의 기념물로서 폭력과 비평화가 만연한 21세기에도 전쟁이 남긴 추모공간의 이상적인 전형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 유엔의 전 방위적 지원을 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 후 유엔에 대한 감사의 징표로 유엔묘지를 유엔에 헌정<sup>101)</sup>했으나 점차 그 사실은 잊혀져 갔다. 게다가 1964년에 추모관이 “인류의 본질적인 통합을 위한 신성한 영구적 상징으로 남으리라는 확신”을 공표했던 유엔 사무차장의 헌사가 무색하리만큼 그동안 한국전쟁이 남긴 추모공간의 평화적 의미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대한민국 내 유엔의

101)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5-11쪽.

땅'이었고 오늘날에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라는 독보적 위상을 지니는 본 공원의 평화적 가치와 추모관 건립을 통해 짚어본 UNCURK의 유엔기념묘지 운영 활동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유엔군 전사자 추모공간과 의례가 건립 60주년을 맞이한 2024년 한반도 위기 속에서 갖는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1951년 유엔묘지 설립과 2차례 관리 주체의 변천과정, 유엔군 참전국의 추모공간 건립 등은 과제로 삼아 향후 학술적 발전을 기약하고자 한다. 나아가 북한 사회에서 공산군 전사자를 바라보는 인식론 및 그들을 추모하는 시설에 관한 남북한 비교 분석이 수행된다면 한국전쟁이 남긴 지난하고도 중요한 과제, 서로 (비)대칭 관계에 있는 남북한 전사자 연구의 공진화(共進化)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창설 80주년과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논문이 그간 평화 담론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추모공간 연구에 새로운 빛을 밝히는 또 하나의 '등불(guiding light)'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2024년 11월 8일 / 심사: 2024년 12월 1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김광식 편저, 『오늘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파주: 시간의 물레, 2013.
- 민주주의사회연구소(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서울: 선인, 2013.
-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 일간의 백서』, 부산: 다산, 2008.
- 홍석률, 『1970년대 UN에서의 UNCURK 해체 문제』, 파주: 경인문화사, 2020.
-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발효일 1991. 9. 18] [다자조약, 제1059호, 1991. 9. 24].
- 外務部, 『大韓民國外交年表 附主要文獻 1948-1961』, 서울: 外務部, 1962년.
- Meisler, Stanley. *United Nations: The First Fifty Years*, New York: Atlantic Monthly Press, 1995.
-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63.
-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UN, 1964.
- Winter, Jay.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권현익, 「전쟁과 싸우는 전쟁의 유해」 『아시아브리프』 4권 10호, 2024, 1~5쪽.
- 김도민, 「1964~1968년 박정희 정부의 중립국 외교와 유엔에서 한국문제의 '자동상정' 문제」 『통일과 평화』 제14집 2호, 2022, 203~239쪽.
- 김차준, 「미중 테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3집 2호, 2021, 199~237쪽.
- 김홍수, 「통일교육 현장체험의 장(場)으로서 부산의 발견: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활동 사례」 『한국민족문화』 163호, 2017, 65~94쪽.
- 서민우, 「김중업·김수근·김종성의 뮤지엄건축 특성 비교 연구 -특히 지역적 컨텍스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71호, 2020, 3~10쪽.
-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1권 1호, 2020, 295~323쪽.
- 이정선,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軍史』 119호, 2021, 1~34쪽.

이필오, 「〈대한뉴스〉와 베트남전쟁」,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李貞善, 「記憶の場としての国連記念公園：戦争墓地の文化遺産化」,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23.

Inglis, Ken S. "War Memorials: Ten Questions for Historians" *Guerres Mondiales et Conflicts Contemporains*, no. 167 (1992), pp. 5-21.

Lee, Chungsun. "Between Visible and Invisible Deaths of the Korean War: Re-envisioning Operation Glory (1954) at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and Historiography* 7, no. 4 (June 2022), pp. 1-26 (published online ahead of print 2022).

Shanken, Andrew M. "Research on Memorials and Monuments" *Anales del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Estéticas* 26, no. 84 (2004), pp. 163-172.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U.S. Army Pacific, Office of the Deputy Chief of Staff for Operations, Military History Office (1/1959-12/31/1974), 15 January 1954, "History of [the] Korean War: Graves Registration Service (Final Draft) Jan. 1954", NARA (AUS251\_09\_00C0270, p. 8).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NINETEENTH SESSION SUPPLEMENT No. 12 (A/5812)", 1964.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AG-005, 1935 - 1979, [Secretary-General U Thant (1961-1971)], Name of the creator: Secretary-General - U Thant.

UNA, United Nations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Reference No. S-0293-0005-17, Date 1964-08-01 - 1964-08-31, [Speeches - inauguration of memorial service hall in Korea], "TEXT OF STATEMENT BY UNITED NATIONS CHEF DE CABINET AT INAUGURATION OF MEMORIAL SERVICE HALL IN KOREA"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KOR/650, 22 August 1964).

UNA, S-0690-0001-02-00001, 1963-12-11 - 1968-12-27, [Cemetery, The - United Nations Memorial Service Hall], "Seoul - Korea" (From: Donal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To: Mr. Kim Chung Up, 14 May 1964), "Seoul - Korea"

(From: Donald T. H. Richards, Assistant Custodian, To: Mr. Kim Chung Up, 2 June 1964).

UNA, S-0690-0001-02-00002, 1963-12-11 - 1968-12-27, [Cemetery, The - United Nations Memorial Service Hall],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11 December 1963);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24 December 1963); "Seoul-Korea" (2 January 1964);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Memorandum of Agreement)", "Capital Improvement Programme (Memorandum of Agreement)" (14 January 1964).

UNA, S-0690-0005-13-00001, 1959-12-23 - 1965-12-11, [Correspondence - UNMCK - United Nations Custodian of Cemetery],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23 December 1959); "UN Memorial Cemetery in Korea" (4 February 1960).

UNA, S-0884-0004-07-00001, 1964-07-24 - 1964-08-31, [Cambodia - Thailand - C.V. Narasimhan trip Asia and the Far East], "ITINERARY FOR MR. NARASIMHAN, CHEF DE CABINET:" (24 July 1964); "NOTE TO CORRESPONDENTS" (UNITED NATIONS, Note No. 2963, 6 August 1964); "MEMORIAL SERVICE HALL AT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TO BE INAUGURATED TODAY" (UNITED NATIONS, Press Release KOR/649, 21 August 1964).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UPPLEMENTARY LIST OF ITEMS FOR THE AGENDA OF THE TEN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A/2939), 22 August 1955.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Pusan: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1965.

UN Photo, Unique Identifier: UN7662486, "Dedication of the Memorial Service Hall at the UN Memorial Ceme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Production Date: 21 August 1964).

UN Photo, Unique Identifier: UN7659723, "UN Memorial Cemetery in the Republic of Korea" (Production Date: 21 August 1964).

『조선일보』, 『동아일보』, 『마산일보』, *The New York Times*.

「김중업 건축을 돌아보다 - ③ 재한유엔기념공원, 경남문화예술회관」 『건축사뉴스』,



2022년 4월 21일, <<https://www.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4>>. 목천건축아카이브, “생산자 Creator 0008, 김중업건축연구소”,

<<https://www.mokchon-kimjungsik.org/creator/13>>.

문화재청, “부산에 있는 유엔의 성지, 「재한유엔(UN)기념공원」UN의 날에 맞춰 문화재로 등록”,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yIgfKA2DW4NWU\\_jZnjWwJUpRvnmn5diRjzs9UKUpmWluT7a1xzpQ5TUriPyz0v33E.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248743&sectionId=b\\_sec\\_1&pageIndex=877&mn=NS\\_01\\_02&strWhere=title&strValue=&sdate=&edate](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jsessionid=yIgfKA2DW4NWU_jZnjWwJUpRvnmn5diRjzs9UKUpmWluT7a1xzpQ5TUriPyz0v33E.cha-was02_servlet_engine1?newsItemId=155248743&sectionId=b_sec_1&pageIndex=877&mn=NS_01_02&strWhere=title&strValue=&sdate=&edate)>.

재한유엔기념공원, “기타 시설물 (추모관)”,

<[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20500#:~:text=%EC%83%88%EA%B2%A8%EC%A0%B8%20%EC%9E%88%EC%8A%B5%EB%8B%88%EB%8B%A4,-%EC%B6%94%EB%AA%A8%EA%B4%80,%ED%95%B4%EC%84%9C%20%EC%84%A4%EA%B3%84%ED%95%9C%20%EA%B2%83%EC%9E%85%EB%8B%88%EB%8B%A4](https://www.unmck.or.kr/kor/02_unmck/?mcode=0402020500#:~:text=%EC%83%88%EA%B2%A8%EC%A0%B8%20%EC%9E%88%EC%8A%B5%EB%8B%88%EB%8B%A4,-%EC%B6%94%EB%AA%A8%EA%B4%80,%ED%95%B4%EC%84%9C%20%EC%84%A4%EA%B3%84%ED%95%9C%20%EA%B2%83%EC%9E%85%EB%8B%88%EB%8B%A4)>.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대한뉴스 제483호, “귀한손님들”,

<<https://www.ehistory.go.kr/view/movie?mediasrcgbn=KV&mediaid=%2010048300>>.

British Pathé, “SOUTH KOREA: MEMORIAL HALL OPENED AT PUSAN CEMETERY IN MEMORY OF FALLEN U.N. SERVICEMEN (1964)”, Archive: Reuters,

<<https://www.britishpathe.com/asset/206586/>>.

Implications for Peace on Memorial Space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 Memorial Service Hall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1964

Lee, Chungsun (The University of Tokyo)

Abstract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completion of the Memorial Service Hall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this paper is the first critical study to shed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UN architecture in the context of Peace Studie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reviewing documents from the United Nations Archives Records and Management Sec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as well as two documentary films from Daehan News and the British Archive. Tracing the UN process of the UNMCK in the early 1960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backdrop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Narasimhan's tribute and the UN statement, this study scrutinizes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Memorial Service Hall in 1964.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Memorial Service Hall was the first permanent building in the UNMCK, where the five major religions among the multinational UN forces were represented in unity. As a war monument to peace and projection of the United Nations' ideal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emorial space of the Korean War still stands as a valid symbol of reconciliation in today's violent/non-peace structure.

Keywords: United Nations Cemetery,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 Dignity of the fallen, Kim Chung-up, War Monument, Vietnam War, Sites of the Busan Wartime Capital

**이정선 (Lee, Chungsun)**

---

일본 도쿄대학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에서 '존엄학의 확립' Project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2021), "Between Visible and Invisible Deaths of the Korean War: Re-envisioning Operation Glory (1954) at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2022년 국제군사사학회 신진연구자상 수상)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Cultural Sustainable Tourism* (Book chapter, 2022) 등이 있다.



일반논문

## 늦봄 문익환의 통일문학과 통일운동 소고(小考)

조성면 (수원문화재단)

### 국문요약

이 글의 목표는 늦봄 문익환(1918~1994)의 통일문학과 통일운동을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그리고 전기비평(biographical criticism)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과 사회운동의 성격과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한국 재야운동을 대표하는 문익환은 목회자이자 교육자(교수)이며, 통일운동가요, 시인이었다. 그는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식민지 조국을 떠나 새롭게 조성한 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독립운동과 기독교 사상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다. 한국시문학의 대표시는인 윤동주는 동향 친구이자 동창생으로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며 그로부터 문학적 영향을 받았다.

초창기 문익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나 부친 문재린 목사의 영향으로 본인도 목회자가 되었으며, 진보적 기독교 신앙인 민중신학의 주창자이자 한신대학을 세운 김재준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아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 동창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장준하의 의문사를 계기로 사회문제와 한국현대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그는 절반가량이 시로 이뤄진 구약성경 공동번역 책임자가 되면서 구약성경의 번역을 위해 한국시를 공부하다 시인이 됐다고 술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창시절부터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문학에 대한 열망이 구약성경 번역을 계기로 전면화한 것이다.

만년에 시인이 된 그는 모두 5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첫 시집 이후부터 그의 시는 진보

문학, 민중문학, 통일문학을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분단의 아픔과 그로 인한 개인들의 수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결의를 다지는 작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독자 대중의 감성 호소하는 작품을 주로 창작하고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통일운동담론의 낭만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늦봄 문익환의 진보사상과 실천은 통일운동에서 두드러지는바, 시창작과 대사회 활동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늦봄의 통일운동은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었는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피력하는 작품 창작, 강연과 집필 같은 대중적 계몽운동, 그리고 방북과 같은 직접적인 실천이 바로 그것이다. 늦봄의 이 같은 통일운동은 서로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자 대중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주제어: 문익환, 진보, 민중신학, 통일, 방북, 감정, 통일운동담론의 낭만화

## I. 전기적 접근—늦봄 문익환을 새롭게, 다시 읽기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9년이 된다. 새 천년 들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2000. 6. 15),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남북정상회담(2007. 10. 2~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1차 남북정상회담(2018. 4. 27), 판문점에서 이어진 2차 남북정상회담(2018. 5. 20)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위한 노력이 줄기차게 이어졌으나 현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다시 기약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1989년 임수경 방북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통일운동가 임종석 전 실장마저 올 9월 19일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론’을 제시하는 등 현재 통일론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이야말로 문학 분야에서의 통일운동론과 통일문학<sup>1)</sup> 운동을 다시 돌아보고 돌아봄으로써 민

1) 이 글에서 사용하는 ‘통일문학’은 범위와 개념이 정립되거나 확정된 개념이 아

축사적 과제로서의 통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해볼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이 통일운동가였던 문익환(1918~1994)의 통일운동과 통일문학 작품들에 다시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다.

늦봄 문익환은 목회자이자 교육자(교수)이며 통일운동가였다. 동시에 그는 생전에 다섯 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자 문학인이었다. 통일운동가이자 시인이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한 이력이 될 수 없겠으나 늦봄 문익환(이하, 늦봄으로 지칭)은 작품 창작과 행동이 합일된 통일운동의 선지자였다는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알다시피 최근 들어 남북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기왕의 통일론과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통일의 노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전면적으로 무화하고 김정은 정권이 여기에 맞불을 놓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의 노력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기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체에 빠지고, 국민적 무관심이 심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남북 양 진영의 집권세력은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체제를

---

나라 앞으로 정립하고 만들어가야 할 ‘과정적 개념이자 범주’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한국문학연구에서는 통일문학보다는 통일문학사 서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거나 연구자별로 부분적인 언급과 시도는 있었으나 그 개념과 이념 그리고 범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 이 글에서는 ‘통일문학’을 분단으로 말미암은 개인사적 고난이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 민족적 입장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작품들을 통일문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통일문학과 관련하여 범주적으로 유사한 인접 용어로 분단문학과 반공문학도 있다. 그러나 분단문학은 분단 상황에서 산출된 모든 작품이 분단문학으로 수렴될 여지가 있고 또한 반공문학은 통일문학의 반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 부분은 본고의 과제의 범위를 벗어나 있어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논의에 대신한다. 아울러 지면 관계상 통일문학에 대해 언급하는 연구를 다 정리하고 제시하기 어려워 이 부분도 생략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기타 통일문학 담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김성수,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민족문학사연구』 43호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0. 8), 62~65쪽.

영속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등 두 국가론의 부상과 함께 한반도는 급격한 신 냉전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이럴 때 통일운동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늦봄이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은 시편(詩篇)들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냉정하게 객관화보고 다시 통일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되새겨보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목회자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의 기수로 고정돼 있는 통일운동가 늦봄, 통일문학가 늦봄을 함께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늦봄의 생애와 문학과 활동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작가론이면서 문학론이며 통일담론 연구라는 중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늦봄이 1980년대 재야 통일담론을 대표하는 운동가이면서 동시에 민족통일에 대한 감성과 열망을 담은 통일문학 적잖은 성과를 낸 시인이기 때문이다.

작가론이자 통일 담론 고찰이라는 이중의 목표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문학연구방법인 역사주의의 비평(historicism)과 신역사주의(new historicism) 그리고 전기비평(biographical criticism)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로부터 약간의 이론적 도움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들 방법론의 핵심은 인과율(因果律)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요컨대 어떤 문학작품이든 간에 문학 텍스트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하게 성립되고 탐구될 수 없으며, 작품과 그것이 산출된 역사적 맥락과 작품과 사회문화적 요인들, 특히 작가 정신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입장을 견지한다.<sup>2)</sup> 헤겔의 역사철학을 비롯하여 생트 뵈브(St. Beuve)와 텐느(H. Taine)에, 심미적 역사주의를 제창한 피어스(R. H. Pearce)와 모리스(W. Morris)에 영국 발(發) 문화유물론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 신

2) 전기비평의 특징과 문제점에서 대해서는 Leon Edel 저,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 1983)를 참고.



역사주의 이론가 그린블랫(S. Greenblatt) 등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가와 생애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작품창작에 끼친 영향을 중시하며, 작품을 시대의 소산으로 해석한다.<sup>3)</sup>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작품 연구가 진행되기도 전에 결론이 주어지는 공허한 인과론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학연구에서 문학텍스트를 사유의 중심에 두며, 문학을 외부와 관련 없는 심미적 자족체로 보는 신비평 같은 과거의 내재적 문학연구방법론에서는 작가와 작가의 의도를 문학작품의 원인이자 기원으로 보는 전기비평은 창작의 의도와 창작의 결과물인 작품이 항상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일종의 의도의 오류(intentional fallac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가한다.<sup>4)</sup>

늦봄은 신앙과 사회적 실천과 행동과 작품이 일치하는 드문 사례에 해당하는 작가요, 통일운동가이다. 이에 본고는 신/역사주의와 전기비평이 갖는 문제점에 유념하면서 문학인으로서의 늦봄과 통일운동가로서의 늦봄을 함께 살펴보는 한편, 늦봄의 생애와 작품 사이의 관계를 평전(評傳) 방식으로 다시 읽고자 하며, 나아가 기왕의 연구에서 보여준 오류를 바로 잡는 동시에 늦봄의 통일 시편과 통일운동론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3) 조규형, 「문학의 경계—스티븐 그린블랫」, 자일즈 건 편저, 김용권·장경렬·정정호·최영 외 옮김, 『경계선 다시 긋기』 (한신문화사 1998), 330~332쪽.

4) 전기비평에 대한 신비평의 비판적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Cleanth Brooks 外著, 이경수 外譯, 『신비평과 형식주의』 (고려원, 1991) 참고.

## II. 시대의 불꽃—문익환의 생애와 문학

시인 문익환은 연구자나 독자에게는 낯설고 생소하다. 문익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목사로, 통일운동가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수로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중<sup>5)</sup>·민주운동사에서 그가 남긴 발자취는 시대의 상징으로 삼을 만큼 크고 뚜렷하다. 그러나 그는 구약성경을 전공한 연구자요 교육자며, 다섯 권의 시집을 펴낸 문학인, 시인이다.

문익환 문학에 주목하는 몇 안 되는 연구들은 늦봄이 구약성경 전문가라는 사실에서 시인 문익환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sup>6)</sup> 그가 문학에 관심을 갖게 것은 유년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학교를 다녔던 친구 윤동주의 영향 때문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이보다 결정적 이유는 늦봄이 51세가 되던 1968년 신·구교 공동 구약 번역 책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부터라는 다음과 같은 그의 회고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나는 2년 전까지, 정확하게 1971년 봄이 되기까지 시라는 것을 써 본 일이 없었소. 아니, 시를 쓴다는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었소. 시가 거의 40%를 차지하는 구약 성서 연구에 30여 년 전념하면서도 시는 나에게 생소하기만 했소. 날이 갈수록 그 시들은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요. 나는

- 
- 5) 늦봄의 민중관은 그의 주저인 『히브리 민중사』에 잘 나타나 있다. 늦봄은 민중은 “종족, 혈족 단위를 이루는 배타적 칭호가 아니라, 당연히 자주적인 주격으로 해방되어야 할 밑바닥 계층,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약자들을 포괄하는 총칭”으로 규정하면서 일체의 억압과 착취를 일소할 해방전쟁(투쟁)의 주격 곧 주체로 본다. 문익환, 『히브리 민중사』 (재판: 정한책방, 2018), 32쪽.
- 6) 이에 관련한 연구로 공헌배, 「문익환의 예언시 연구」 『신학사상』 제193호 (2021.6); 장만식·김병선, 「문익환 시에 담긴 삶과 죽음 인식 고찰」 『문학과 종교』 제25권 4호 (2020)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시들을 문학 작품으로 다룰 자신이 점점 없어져 갔던 것이요. 그래서 나는 구약의 시들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다루고 있었소.

그러던 차이에 구약 성서 번역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나의 두 어깨에 떨어졌소. 정확하게 말해서 1968년 4월이었소. 그럭저럭 만 5년이 된 셈이죠. 문학 작품 중의 문학작품이라는 구약 성서를 어떻게 훌륭한 작품으로 옮겨 내는냐는 생각이 처음부터 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소. '특히 그 시들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한국 시단을 총동원할 심산이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되더군요. 그 후로 약 1년 반 동안 한국 시를 무던히 읽었죠.<sup>7)</sup>

실제로 늦봄은 구약 성경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 뒤늦게 그는 문학 공부를 시작했노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네 번째 시집 『두 하늘 한 하늘』(1989)을 펴내면서 「후기」에 고백한 바와 같이 구약 번역 작업을 시작할 즈음부터 한국시를 본격적으로 탐독하기 시작했고, 『현대시학』 등의 문예지를 구독하고 문학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한다.

(…) 시가 40퍼센트인 구약성서 번역책임이 제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때 처럼 동주가 옆에 없는 것이 아쉬워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시를 시답게 번역 못할 바에는 구약 번역에 손을 댈 수 없다 이거였지요. 저는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를 열심히 공부하고, 습작으로 급격거려 본 것이 그런대로 시가 된다고 해서 출판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말이 어떻게 하면 시가 되느냐는 걸 실험하다 얻은 겁니다.<sup>8)</sup>

알려진 바와 같이 늦봄은 1947년 30세 만학도로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안수를 받자마자 구미 교회와 을지 교회 전도사로

7) 문익환 전집 출간 위원회, 『문익환 전집 1』 전자책 (사계절, 1999), 121쪽.

8) 문익환, 『두 하늘 한 하늘』 (창작과비평사, 1989), 222~223쪽.

일하며 목회자로 봉직하다 1949년 구약학 연구를 위해 32세에 도미, 프린스턴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잠시 공백기를 거친 다음, 1954년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한빛교회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한신대·연세대에 출강하여 구약학을 강의했다. 이 사이 구약 성경에 관한 글과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오던 중 1968년 신·구교 공동 구약 번역 책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시' 장르에 대해 연구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온축의 과정을 거쳤다.

그가 시 창작에 나선 것은 1971년 54세 무렵으로 「53」이라는 시를 썼다. 「53」은 쉰셋이라는 자신의 나이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이것이 사실상 시인으로서 문익환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늦봄은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인 1973년 시집 『새삼스런 하루』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잘 번역하기 위해 시작했던 시작(詩作) 활동은 영혼의 동지였던 장준하(1918~1975)의 의문사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니, 그것은 바로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직접 작성하고 발표한 <3·1 민주구국선언>이다. 그는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 바로 구속되어 그의 옥중생활이 시작되고 그것이 문학작품도 성격과 방향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됐다.

그는 56세부터 생을 마감하는 77세까지 생애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다. 18년 동안 무려 6차례나 투옥됐던 것이다. 본격적인 시작(詩作)은 이 옥중생활 및 민중 민주통일운동가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시집도 대부분 이때 출판됐다. 구약성경 공동 번역위원으로 활동하며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를 제외하고, 시인 문익환의 문학 활동은 늦깎이 투사를 자치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와 겹친다. 문익환은 일제강점기와 분단 시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체화한 민족의 수난과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형상화한 대표적인 시인이라 할 수 있는바, 분단 극복과 통일 의지를 나머지 4권의 시집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처럼 그의 생애는

그 자체가 수난과 골곡이 많았던 민족사의 축도였다.

그는 1918년 6월 1일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명동소학교와 용정 해상소학교를 졸업하고, 은진중학교를 거쳐 1935년 평양 숭실학교로 전학했다. 이 시기 단짝 친구가 바로 시인 운동주였다. 고향 명동에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다가 문익환이 숭실학교로 옮겨오자 6개월 뒤 운동주도 평양 숭실학교로 편입했다. 이듬해 신사참배 거부 시위로 자퇴했으며, 스물한 살이 되던 1938년 문익환은 일본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운동주는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면서 행로가 달라졌다. 일본에서 유학중이던 문익환은 1943년 학병 징집을 거부하고 다시 간도로 돌아와 봉천 신학교로 학적을 옮긴다. 이듬해인 1944년 6월 17일 일본 유학중에 만나 교제하던 박용길과 평생 가약을 맺고 결혼하였다. 그러던 중 해방을 맞아 1946년 가족들과 함께 월남, 1947년 한신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의 가족이 월남한 이유는 아버지 문재린 목사가 이승만의 프락치 혐의를 받고 소련군에 체포되었다가 다시 소련 사병부에 미군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과 취조를 받다 무혐의로 풀려났긴 했으나 목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되자 1946년 6월 온가족이 월남한 것이다.

월남 직후 복잡한 해방정국에서 문익환의 반공기독교청년단체인 '임마누엘단'의 참여는 이 같은 가족사적 수난과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런 상황에서 1949년 늦은 나이에 돌연 미국 프린스턴신학교로 유학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에 자원하여 도쿄 유엔극동사령부에서 통역 담당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문익환이 진보진영의 운동가로 변신하게 된 것은 전태일 분신사건과 영혼의 동지이자 대학 동기이며 친구였던 장준하의 죽음 그리고 인혁당 사건과 7.4남북 공동성명 등의 아픔과 격변을 겪으면서부터이며,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사회와 역

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행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중민주주의 실현과 조국 통일 등 시대의 문제와 맞선,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가 문익환, 진보시인의 문익환이 ‘된’ 것이다. 이후 그는 불꽃처럼 뜨거운 삶을 살았고, 활동했으며, 작품을 썼다.

### Ⅲ. 세 번의 전환과 늦봄 생애사(生涯史)에 대한 재해석 — 목회자 문익환, 진보시인 문익환, 통일운동가 문익환

전환(轉換)의 사전적 의미는 방향이나 태도 또는 상태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익환의 전환은 갑작스런 단절과 비약이 아니라 이미 잠재해 있거나 예비 되어 있었던 것이 특정한 계기를 만나 전면화하거나 표출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익환의 전환은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가 남긴 기록물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바탕 위에서 전체적인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사후적으로 살펴야 그의 생애와 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접근이 가능하다.

문익환의 생애에서는 크게 세 번의 전환이 있었다. 첫 번째는 교인에서 성직자로의 전환이고, 두 번째는 시인으로의 전환이며, 세 번째는 사회운동가, 통일운동가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전환은 1938년 일본신학교로 유학을 길을 떠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인데, 이는 고향 명동촌과 가풍(家風)의 결과로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고향을 떠난 유이민, 양심적이고 민족의식 투철한 식민지 지식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당시로서는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가풍(家風)에 따라 아버지 문재린 목사의 뒤를 이어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전환은 목회자에서 시인으로 전환—정확하게 말하면 목회와 시작(詩作)의 병행—인바, 문익환 자신은 구약성경 번역 책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다 구약성경을 잘 번역하기 위해서 문학을 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기억과 현실의 불일치로, 작가의 오류다. 기실 두 번째 전환은 전환이라기보다는 잠재해있던 열망의 표출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작가가 다 그러하듯 작가가 된다는 것과 글쓰기의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제하거나 잠재울 수 없는 영혼의 질환으로 이 영혼의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글쓰기뿐이기에 작가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평생의 지기 송몽규와 운동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평양 송실학교 재학시절에 이미 직접 시 창작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명동에서 은진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목격되는 현상으로 친구 송몽규가 은진중학교 재학 시절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되었고, 운동주 역시 윤석중의 동시에 심취해 있었다. 문익환도 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으나 “재능이 못 미쳐서” 친구들을 “마냥 부러워”했다.<sup>9)</sup>

운동주·문익환과 함께 송실학교를 다녔던 동창생 이영현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송실학교 문예부장이고 운동주는 교지 편집장이었다고 한다. 운동주가 친구 문익환을 챙겨주려는 마음에 문익환에게 시를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문익환이 정성껏 작품을 써 제출했는데, 운동주가 웃으며 “야, 이게 시야?”라며 퇴짜를 놓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익환은 문학을 애호할 뿐 창작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sup>10)</sup> 그래도 문익환은 학창시절 내내 파인 김동환의 시집 『국경의 밤』

<sup>9)</sup> 김형수 지음, 『문익환 평전』 (다산책방, 2018), 126쪽.

<sup>10)</sup> 위의 책, 139쪽.

을 늘 소장하고 다녔다고 한다. 파인의 시집이 명동학교 졸업선물이었기에 애지중지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일화는 문익환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sup>11)</sup> 이밖에도 은진중학교 시절의 은사로 도쿄제국대학 출신으로 국사와 한문을 가르쳤던 은사 명희조 선생의 영향으로 문익환과 그의 친구들은 춘원 이광수의 소설 『흙』에 감동받고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형성돼 있었다.<sup>12)</sup>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구약성경 번역을 위해 시를 공부하고 내쳐 시인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학창시절부터 잠재해있던 창작에 대한 열정이 구약 성경 번역을 계기로 전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전환은 통일운동가, 사회운동가로의 변신이다. 문익환은 가평과 삶의 조건 자체가 민족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가 태어난 명동촌은 민족운동, 독립운동, 기독교신앙의 본거지였다. 문익환의 조부 문치정은 “명동의 재정을 관장하며 살림을 도맡아 했던” 명동촌의 유지이자 리더 그룹의 일원이었으며, 아버지 문재린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국민회’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독립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국민회’는 1919년 3월 13일 북간도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피신 겸 망명해온 이동휘가 가담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 단체로 활약하여 간도 교민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다.<sup>13)</sup>

문익환의 양가주망 곧 사회참여(engagement)는 기독교신앙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평양 숭실학교 재학시절인 1936년 4월 신사참배문제로 시위

11) 김형수, 「윤동주, 그 영원한 젊음 앞에 선 문익환—문익환과 윤동주의 우정」 『오 마이 뉴스』, 2018. 1. 29.

12) 『문익환 평전』, 130쪽.

13) 피재현, 「늦봄 문익환 연구: 통일담론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2), 16-17쪽.



에 가담하고 동맹퇴학을 한 것이다. 퇴학 후에는 다시 명동으로 돌아와 광명중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 1937년 광명중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일본 신학교에 입학했다. 1943년에는 학병 징집을 거부하고 만주 봉천신학교로 다시 학적을 옮겼다. 순탄치 않은 수학 기간 중에 문익환이 보여준 사회 활동은 신앙 문제와 징집 문제에 국한돼 있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회활동은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됐다.

해방 직후 월남해서는 두 번째 양가주망 즉 ‘임마누엘 선교단’에 가담하여 활동하던 1947년 한신대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유학 중 한국전쟁 기간에 도쿄 유엔사령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다 목회 활동을 했다. 1973년 6월 56세의 나이에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를 발표하며 성경 번역에 매진했고, 이때부터 ‘늦봄’이란 아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목회자이며 시인이었던 늦봄이 사회운동가, 통일운동의 기수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정확히 말해서 1974년이였다.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었던 해직 교수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교육원’을 설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중신학자들인 안병무·서남동·문동환 등과 함께 ‘갈릴리 교회’를 창립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늦봄은 진보적 기독교사상(민중신학)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활동했다. 그러다 1975년 수필집 『새 것, 아름다운 것』을 출간했고, 8월 17일 평생 지기였던 장준하의 의문사를 기점으로 문익환의 양가주망, 대사회활동은 일대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듬해인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인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아내 박용길, 동생 문동환 목사, 장남 문호근 등이 가족들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불꽃같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재야운동의 지도자로서 고난을 겪는 형극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으니 1977년 60세의 나이에 전주교도소에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육중단식>을

단행하는가 하면, 1987년 61세에 <민주주의 국민연합> 상임위원을 겸하면서 78년 12월부터 박정희 대통령 취임을 반대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태일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속해서 투옥과 석방을 오가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울러 늦봄이 이처럼 사회운동에 동화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교계의 스승이었던 장공 김재준 목사의 영향 때문이다.<sup>14)</sup> 김재준 목사(1901~1987)는 1929년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40년 한신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설립에 참여했다. 1953년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설립했다. 한빛교회 목사와 한신대 학장을 역임했고, 1969년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장공의 제자들이 바로 문익환 목사이며, 늦봄을 비롯해서 서남동·안병무 등이 민중신학자들은 장공의 진보신학을 계승한다.

늦봄의 재야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소 엇갈리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문익환 평전』을 쓴 김형수는 늦봄의 사회참여 시기를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sup>15)</sup>으로 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늦봄의 사회참여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형성과 태도를 살피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이런 점에서

14) 「큰 스승이시여: 장공 김재준 목사님 영전에」는 그의 네 번째 시집 『두 하늘 한 하늘』(1989)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늦봄이 스승 장공 김재준 목사를 추모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시 한편이 무려 13쪽에 장시(長詩)다. 참고 사례로 작품 일부를 다음 같이 인용한다. “스승이시여/ 큰 스승이시여(중략)/ 당신의 한국교육의 풍운아 ‘한신’의 정신이요 창설자이십니다/ 기독교장로회의 아버지 이십니다/ 그보다 전에 당신은 분명 예수의 제자요/ 우리의 다시 없는 스승이십니다(하략).” 짤막한 인용문에서 보듯 늦봄의 스승 장공에 대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177~189쪽에 이르는 장시로 단편서사시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다. 위의 인용 작품은 문익환, 『두 하늘 한 하늘』 (창작과비평, 1989), 172쪽, 188쪽.

15) 김형수, 『문익환 평전』, 403쪽.

보자면, 늦봄의 재야운동은 명동 및 숭실학교 시절에서 이미 형성돼 있었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 한신대 재학시절 스승 김재준 목사 영향과 지도 아래 진보적 기독교신앙관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진보적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서 3선개헌·전태일의 사망·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이어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3·1 민주구국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행동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후 늦봄은 전태일기념사업회장(1987),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1989) 상임고문에 이어 1989년 3월 25일 방북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4·2 선언>을 발표하면서 재야 통일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1994년 영면에 들 때까지 늦봄은 한국 재야운동의 상징으로,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 IV. 늦봄의 통일운동과 통일문학

늦봄은 모두 다섯 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성경 번역에 참여하며 틈틈이 문학연구와 시 공부를 하며 쓴 작품을 모은 시집이 『새삼스런 하루』(1973)다. 두 번째 시집 『꿈을 비는 마음』(1978)은 오 년의 시차를 두고 나왔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투옥됐다 22개월 만인 1977년 12월 31일 형 집행정지로 출옥하고 나서 이 기간에 쓴 작품들을 모았다. 이어 세 번째 시집 『난 뒤로 물러 설 자리가 없어요』를 1984년에, 네 번째 시집 『두 하늘 한 하늘』을 1989년에, 그리고 다섯 번째 시집 『옥중일기』를 1991년에 펴냈다.

다섯 권의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대체적인 경향은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신앙고백, 가족에 대한 사랑, 동료와 민중민주 투사들에 대한 추

모, 문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열망 특히 평화로운 통일 국가에 대한 소망과 분단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섯 권의 시집 가운데서 주목하고자 시집은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1973)와 네 번째 시집 『두 하늘 한 하늘』(1989)이다. 이 두 권의 시집에 주목하는 이유는 『새삼스런 하루』는 대개의 작가들이 그러하듯 첫 번째 작품에서 작가의 의식의 원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드너(H. Gardner)의 말대로 작가들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는바, 그는 이를 “정신의 관습(the habit of his mind)”이라 명명했다. 정신의 관습은 작가 고유의 반응양식과 사고유형을 말하는데, “언어 사용과 주제선택, 그리고 작품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념·형식·상징·연상 등”을 가리킨다.<sup>16)</sup> 첫 시집이 작가의 특징과 작가의식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네 번째 시집은 늦봄 진보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두 하늘 한 하늘』은 1989년 방북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늦봄의 통일관과 이념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의 수록된 시편들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가족·일상·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새삼스런 하루」와 「사랑의 입술」, 일상을 노래한 「단칸방 서재」와 「이른 봄의 단상」, 자연에 대한 사랑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그린 「모음 없는 신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담은 「십계명」과 「히브리서 1장 11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늦봄의 문학은 개인의 자잘한 일상에만 국한된 사소설적(私小說的) 경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핏 사회성과 통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었으니, 「구두 닦기 소년」 등이 바로 그러하다.

16) 홍문표, 『현대문학비평이론』 (창조문화사, 2003), 110쪽.

그 외 늦봄 문학에 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운동주에 대한 그리움과 그로부터 받은 영향이 엿보인다. 늦봄의 전 시편에 걸쳐 운동주를 그리워하거나 그의 시를 슬쩍 인용하는 등의 특성을 보여준다. 운동주 외 릴케와 정지용의 「유리창」을 연상케 하는 작품도 있고, 시 「밤비소리」에는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를 읽다가”라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늦봄의 문학공부는 신학자로서는 상당히 깊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평생 친구 운동주를 그리워하며 그의 「자화상」을 패러디한 작품 「추억의 커피잔」이다.

1939년 9월 어느 날이었습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 속에는  
 달이 맑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거기에는  
 스물두 살 난 운동주의 8센티나 되는 시원한 이마가  
 달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에 불려갔습시다.

1971년 9월 어느 날이었습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손이 넓은 한 사나이가  
 그의 시원한 이마가 보고 싶어  
 이조 백자처럼 희지 못해 한스러운  
 커피잔 속을  
 물끄러미 들여다 봅니다.

그 커피잔 속에는  
달도 구름도 하늘도 파아란 바람도 가을도 없었습니다.  
8센티나 되는 주름진 다른 이마가  
그저 쓸쓸하니  
추억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 「추억의 커피잔」 전문<sup>17)</sup>

첫 시집 『새삼스런 하루』는 이처럼 시인 자신의 주변과 신변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신앙 등처럼 개인사 중심의 작품이 주류를 이루면서 얼핏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피바다 크림리아 반도를  
눈물바다로 만든  
너 우리의 꾀꼬리  
나이팅게일아!  
(중략)

북으로 남으로  
끝없이 펼쳐진  
저 푸른 하늘 아래  
싸늘한 휴전선에 쏠린  
오천만의 글썽이는 눈물방울들이  
네 눈에는 정녕 보일 테지.<sup>18)</sup>  
(하략)

「나이팅게일아: 남북적십자회담에 부쳐」는 늦봄이 사회운동가, 통일

17) 문익환 전집 간행 위원회, 『문익환 전집 1』, 108쪽.

18) 위의 책, 110쪽.

운동가로 나서기 이전에 이미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감성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짧은 인용에서 알 수 있듯 통일에 대한 열망과 남북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는 크리미아 전쟁의 천사 나이팅게일에 기대어 분단의 아픔과 한국전쟁 당시에 죽어간 남북한 젊은이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늦봄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1976년 <3·1구국선언>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분단의 비극 해소와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은 재야운동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적 보편정서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사와 엄혹한 현실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 시집 『꿈을 비는 마음』부터 진보적인 사회 참여시로 발전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민중 속에서 인간 구원과 해방을 노래한 세 번째 시집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에서 늦봄의 문학은 진보적 민족문학, 민중문학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 시집에서 그의 시적 태도는 '발바닥'이라는 사적 상징과 객관적 상관물을 동원하여 보다 구체화한다.

그러나 통일운동 및 통일담론과 관련하여 볼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집은 네 번째 시집 1989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펴낸 『두 하늘 한 하늘』이다. 1989년은 늦봄의 전격적인 방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두 하늘 한 하늘』에는 늦봄의 통일에 대한 각오와 열정 그리고 그의 통일담론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구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구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구  
 거리 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열 살 스무 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하락)<sup>19)</sup>

「잡꼬대 아닌 잡꼬대」는 『두 하늘 한 하늘』에 수록된 서시(序詩)로 1989년 6월 15일 창작과비평사에서 출판됐다. 이 해 늦봄은 3월 25일 전격적으로 방북을 단행하여 김일성과 두 차례의 면담을 갖고 <조평통>과 함께 <4·2선언>을 발표했다. 4월 13일 귀국과 함께 구속 수감됐고, 『두 하늘 한 하늘』은 옥중에서 출간된 시집이다. 「잡꼬대 아닌 잡꼬대」는 방북 이전에 늦봄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방북의 각오를 피력한 작품이다. ‘잡꼬대’라는 말은 통상 잠을 자면서 하는 본인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소리 또는 이치 맞지 않는 헛소리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늦봄은 서슬파란 제5공화국 체제 아래에 자신의 통일에 대한 신념과 각오는 ‘잡꼬대’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분단 체제하에 잠들어있는 대중들을 향한 충격적 사자후(獅子吼)요, 동시에 깨어있는 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역설적·반

19) 문익환, 「잡꼬대 아닌 잡꼬대」, 『두 하늘 한 하늘』(창작과비평사, 1989), 3~4쪽.



어적 표현이며 겸사(謙辭)다. 늦봄의 시는 어려운 비유나 상징이 없이 시적 형식과 외양을 빌려 자신의 각오를 솔직하게 밝히는 출정 선언이기도 하며, 시민과 민중을 향해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분단체제 극복과 민족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중을 향해 분단체제 극복과 통일 호소하는, 나아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민족적 감수성에 자극하는 감성적 시편들은 『두 하늘 한 하늘』 전편에 걸쳐 두루 포진해 있다.

「한씨연대기」는 1972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단편소설로 1985년 극단 연우무대가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한바, 있다. 늦봄의 이 동명의 시는 한국전쟁과 민족의 비극을 다룬 연극 「한씨연대기」에 자신의 아들이자 배우인 문성근이 출연한 작품을 보고 쓴 작품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과 그로 인한 한씨 일가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통일꾼의 노래 1」·「통일꾼의 노래 2」는 통일 자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다룬 작품으로 서시 「잠꼬대 아닌 잠꼬대」와 같이 통일을 다룬 통일문학이다. 「통일꾼의 노래 1」은 “아흔 되신 아버지/ 아흔 하나가 되시는 어머니”께서 설날 아침 “예순 일곱이 되는 아들/ 예순 여섯이 되는 며느리의 세배를 받으시며” 하시는 말씀 “이젠 너희들 통일꾼이 되라”는 덕담으로 시작한다.<sup>20)</sup> 시는 통일은 정치논리가 아니라 둘로 나뉜 하나의 가족과 겨레가 다시 하나로 합치는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백두산 줄기 우렁우렁 울리는 마음으로/ 압록강 두만강 흑흑 흐느끼는 피눈물로/ 사십 년 분단 겨레 앞에 무릎 꿇고 맹세한다/ 그 소원 겨레의 소원 내 소원”<sup>21)</sup>이자 이 산하대지와 민족의 간절한 비원이기도 하다. 「통일꾼의 노래 2」는 「통일꾼의 노래」의 연작

20) 위의 책, 86쪽.

21) 위의 책, 87쪽.

으로 “1919년 3월 31일 정주읍 장터를 뒤흔들던 만세소리”가 “지금은 통일꾼의 합성”으로 계승되고 되살려내야 할 “햇살들의 노래 해방의 노래”<sup>22)</sup>라며 식민지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다시 분단체제 극복의 역사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제임을 격정적(激情的)으로 설파하고 있다. 통일을 향한 염원과 열망은 이어지는 「비무장지대」, 「나의 조국 나의 사랑」, 「두 하늘 한 하늘」의 시편들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늦봄의 통일 시편들은 대개 격정적이며, 절절한 열망으로 가득한 뜨거운 작품들이다. 제5공화국 치하의 엄혹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진정성과 뜨거운 열망이 담긴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늦봄의 용기와 담대함을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통일은 헤어진 겨레가 당연히 합쳐야 한다는 감성의 차원으로 국한되어있고, 그 뜨거운 열망이 독자들의 감수성을 일깨워줄 만큼 호소력이 크나 감정의 절제가 작품으로서의 완성도라는 차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통일을 소재로 한 늦봄의 작품들과 그의 강연 그리고 늦봄이 보여준 행동을 종합하면 그의 통일론은 상식적 판단에 기초 감성적 통일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가 1984년 8월 9일에 행한 <장준하 선생 9주기 추모강연>을 옮긴 「통일문제 인식의 현 단계」라는 글이다.

늦봄은 “민족통일”을 곧 인권문제·민주주의 구현·평화체제 구축 등과 연계된 핵심과제로 “민족사 과제의 성취”<sup>23)</sup>로 본다. 그는 분단은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비극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는 일”이었으며,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통일론도 “남과 북의 집권자들의 기득권 유지”<sup>24)</sup>에 막혀 실현과 실천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 단계에 있어 통

22) 위의 책, 91쪽.

23) 문익환, 「통일문제 인식의 현 단계」, 고은 편, 『문익환 선집-죽음을 살자』(형성사, 1986), 116쪽.

24) 위의 책, 119쪽.

일은 남북한 공히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차승인”을 선행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연방제”를 향해 나가자는 점진적 방안이다. “연방제란 일종의 지방자치제도와 같은 건데 왜 주저”<sup>25)</sup>하고 실행되지 않느냐 반문하면서 결국 그 이유는 통일 문제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화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알다시피 <연방제 통일론>은 1973년 북한에서 제시한 통일 방안이었다. 이에 남한 정부에서는 <유엔 동시 가입>과 <평화 협정 체결론>를 들고 나와 통일논의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늦봄의 통일론은 남북한 기득권 세력을 모두 비판하면서 통일문제는 정치논리와 집권세력 기득권 유지의 문제에서 벗어나 훨씬 더 커다란 역사적·민족사적 과제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시 재야 통일운동의 불씨를 되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서두에서 통일이란 당위적인 과제인바 “민족 통일의 당위성은 곧 농민해방의 당위성이요, 민족자주의 당위성이요, 민주주의의 당위성이요, 인권의 당위성”<sup>26)</sup> 곧 “모든 당위성의 총화”<sup>27)</sup>라고 단언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늦봄의 통일운동은 크게 방북과 강연 그리고 글쓰기와 시 창작 등 세 방향에서 실행되고 있다. 운동과 시 창작과 강연과 논문이 서로 보충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시를 통해서도 독자의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감상적·격정적 통일론을, 강연과 글쓰기를 통해서도 상식에 기반하여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민주화 문제가 현 단계(늦봄이 활동하던 시기) 분단 및 통일과 연동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늦봄의 통일론은 시 창작과 통일 담론으로 표출되는바, 그의

25) 위의 책, 119쪽.

26) 위의 책, 116쪽.

27) 같은 곳.

통일론은 1988년 4월 16일 연세대 토론회에서 나온 3단계 통일론으로 수렴된다. 즉 연방제와 영세 중립화를 거쳐 군사와 외교를 통합하며 최종적으로는 남북 두 차원이 아니라 도 단위로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지방자치제를 병행하는 통일론이다. 늦봄의 이러한 3단계 통일론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화국 연합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되, 그 방향은 <3원칙 3단계 통일론>을 거쳐 구현하자는 방안으로 반영된다. 김대중 정부가 주장한 <3원칙 3단계 통일론>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하에 ‘1민족·1국가·1체제·1중앙정부 체제’를 추구하되, 점진적으로 단계를 거쳐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하자는 통일방안이다.<sup>28)</sup> 첫 단계는 독립된 두 국가가 연합하되,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형태로 남과 북이 각기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 정상회의와 정부기구인 남북연합 각료회의와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되는 연방 국가의 단계로 연방정부가 외교와 국방 그리고 중요한 내정 사항에 대한 권한을 보유, 행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최종 단계는 중앙집권제 또는 세분화된 연방제의 완전통일 단계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 체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결이 다르다.

<sup>28)</sup>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 대해서는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아태평화출판사, 1995)를 참고.

## V. 결론에 대신하여—늦봄의 통일문학과 통일론의 위상

통일 관련 늦봄의 시는 대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아픔, 분단의 극복의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 장르의 특성상 늦봄의 통일문학은 정교한 정치논리나 사회과학적 사유가 아니라 낭만적 과잉이라 평가해도 좋을 만큼 때로는 감성적이고 때로는 격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일담론의 시적 낭만화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늦봄은 통일운동가라는 이름으로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만년을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이 같은 헌신은 느닷없는 돌출이 아니라 가풍, 고향 명동촌의 특정, 스승 김재준 목사의 가르침, 진보적 기독교단인 기독교장로회와 민중신학의 영향, 그리고 장준하의 의문사와 민족 현실에 대한 각성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 결과이다. 늦봄의 진보사상과 운동은 특히 통일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바, 그것은 시창작과 대사회 활동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요컨대 늦봄의 통일운동은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었는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피력하는 작품 창작, 강연과 집필 같은 대중적 계몽운동, 그리고 방북과 같은 실제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늦봄의 이 같은 통일운동은 서로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자 대중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정부나 정치학자들이 제시하는 통일론은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나 남북 양측의 기득권 세력의 견제와 통일에 따른 이해득실이 서로 달라 실제 현실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반면 늦봄의 감성적·열정적 통일론은 일종의 공감주술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울림과 진정성 그리고 대중성을 가지고 있고 대중과 독자들을

통일과 통일담론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수는 있으나 실제 현실적 통일론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낭만화한 통일론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늦봄의 통일운동과 통일문학 활동은 이념의 금제를 넘어 통일을 대중적 관심 사안으로 의제화하고 억압되어 있는 통일론과 통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끌어올리는 공감주술력과 대중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기실 분단체제 극복과 민족사적 과제 해결을 지향하는 우리 측의 통일문학은 수많은 억압과 필화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진보적 전통을 이어왔다. 주요 작품으로 남정현의 단편소설 「분지」(1968)·황석영의 「한 씨 연대기」(1972)·『사람이 살고 있었네』(1989~1991)·『오래된 정원』(1999)과 『손님』(2007)·이병주의 『지리산』(1972~1977)·윤홍길의 「장마」(1973)·홍성원의 『남과 북』(1977)·이호철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1996)·이태의 『남부군』(1988)·조정래의 『태백산맥』(1983~1989)·이순원의 「혜산가는 길」(1990)·최인훈의 『화두』(1994)·이문열의 『영웅시대』(1984)·「아우와의 만남」(1994) 등이 있다. 아울러 분단과 월북 등 가족사적 이유로 고초를 겪은 이문구·김원일·김성동 등 한국문학은 분단과 통일문제를 다룬 작품들 분명한 실체이자 분명한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주제나 소재도 다양하여 역사적 사건·개인들의 수난·빨치산·이산가족 등을 다룬 작품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잇고 있다. 분단과 통일은 그 특성상 서사성이 강해 주로 소설이나 논픽션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늦봄의 문학은 이러한 분단문학·통일문학의 흐름을 잇는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서사문학에 편중된 상황에서 시 장르를 통해서 분단 극복의 의지를 피력한 다수의 작품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치적 논설이나 이론화 경향을 보이는 통일론을 문학으로 전유한, 이른바 통일담론의 낭만화라는 독특한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늦봄의 진보사상과 운동은 특히 통일 분야에서 두드러지

는바, 그것은 시창작과 대사회 활동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요컨대 늦봄의 통일운동은 전방위적으로 실행되었는바,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의지를 피력하는 작품 창작, 강연과 집필 같은 대중적 계몽운동, 그리고 방북과 같은 실제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늦봄의 이 같은 통일운동은 서로 보완하고 상승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자 대중의 감성과 정서에 호소하는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 접수: 2024년 11월 8일 / 심사: 2024년 11월 29일 / 게재 확정: 2024년 12월 11일

## 【참고문헌】

- 고은 편, 『문익환 선집-죽음을 살자』, 형성사, 1986.
- 김용권·장경렬·정정호·최영 외 옮김, 『경계선 다시 긋기』, 한신문화사, 1998.
- 김형수 지음, 『문익환 평전』, 다산책방, 2018.
- 문익환 전집 출간 위원회, 『문익환 전집 1권~5권』, 사계절, 1999.
- 문익환, 『난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실천문학사, 1984.
- 문익환, 『두 하늘 한 하늘』, 창작과비평사, 1989.
- 문익환, 『히브리 민중사』, 재판: 정한책방, 1990.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아태평화출판사, 1995.
- 홍문표, 『현대문학비평이론』, 창조문화사, 2003.
- Brooks, Cleanth 外著, 이경수 外譯, 『신비평과 형식주의』, 고려원, 1991.
- Edel, Leon 저, 김윤식 옮김, 『작가론의 방법: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 1983.
- 공헌배, 「문익환의 예언시 연구」 『신학사상』 제193호, 2021.6.
- 김성수, 「통일문학 담론의 반성과 분단문학의 기원 재검토」 『민족문화사연구』 43호, 소명출판, 2010.8.
- 장만식·김병선, 「문익환 시에 담긴 삶과 죽음 인식 고찰」 『문학과 종교』 제25권 4호, 2020.
- 피재현, 「늦봄 문익환 연구: 통일담론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2.
- 김형수, 「운동주, 그 영원한 젊음 앞에 선 문익환—문익환과 운동주의 우정」 『오마이 뉴스』, 2018.1.29.



## Research on Late Spring(늦봄) Moon Ik Hwan's Unification Literature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Cho, Sung-Myeon (Suwon Cultural Foundation)

###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the unification literature and movement of “Late Bom (Spring)” Moon Ik-hwan (1918-1994) in the context of new historicism and biographical criticism, and to examine the nature of his literar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ir current significance.

Moon was a pastor, educator(professor), unificationist, and poet who represented the Korean Jaya(be not in a government job) dissident movement. He was born in Myeongdong Village, a newly established village in Gando, Korea, where progressive-minded people fled the colonial motherland and grew up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Christian ideas. Yoon Dong-joo, a leading poet of Korean poetry, was a friend and classmate of Yoon's, with whom he shared a long friendship and received literary influence.

Initially, Moon was a devout Christian, but under the influence of his father, the Reverend Jae-lin Moon, became a pastor himself, and was taught by Reverend Kim Jae-joon, the founder of Hanshin University and a leading proponent of Folk Theology, a progressive Christian faith. However, after the death of his college classmate and spiritual companion, Jang Jun-ha, he became deeply interested in social issues and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took the lead in the democratization and unification movements.

He became a co-translator of the Old Testament, which is half composed of poetry, and although he often says that he became a poet while studying Korean poetry for th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reality, his long-latent desire for literature, which had been latent since his school days, came to the fore through the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He became a poet in his late teens and published a total of five books of poetry. From the first collection onward, his poetry began to characterize progressive literature, folk literature, and unification literature. His poems are characterized by the pain of division, the suffering of individuals due to it, and the desire and determination for unification, and he mainly created and published works that appealed to the emotions of his readers. This can be considered a kind of romanticization of the unification movement discourse.

In the late spring, Moon's progressive ideas and practices stood out in the unification movement, leaving a distinct footprint in his poetry and public activities.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he late spring was practiced in all directions, including the creation of works that expressed the pain of division and the will for unification, public enlightenment campaigns such as lectures and books, and direct actions such as visiting North Korea. These unification movements of the late spring complemented each other and created a synergistic effect, and characterized by activities that appealed to the emotions and feelings of the general public.

The progressive ideas and movements of the late spring are especially prominent in the field of reunification, which has left a distinct footprint in poetry creation and public activities. In short, the unification movement of the late spring was practiced encompassed multiple dimensions, including

the creation of works that expressed the pain of division and the will for unification, public enlightenment campaigns such as lectures and writings, and practical actions such as visitation. These unification movements in the late spring complemented each other and created a synergistic effect, and were characterized by activities that appealed to the emotions and sentiments of the reading public.

Key-words: Moon Ik-hwan, new historicism, biographical criticism, progress, folk theology, reunification, North Korea, emotions, romanticization of unification movement discourse

**조성면 (Cho, Sung-Myeon)** \_\_\_\_\_

문학평론가이며 인하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평택대 대우교수, 인하대 강의교수, 계간 <작가들>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일하며, 경기민예총 문학위원회 위원장, 경인일보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질주하는 역사, 철도』, 『경계를 넘고 간극을 매우며: 장르문학과 문화비평』, 『장르문학 산책』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현장보고

## 2024 파리올림픽 남북스포츠 교류... 정치 과잉과 스포츠 정치화

김창금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선임기자)

### I. 남북의 복싱 '자매'는 왜 비밀을 남겼을까

2024 파리올림픽에서 남북의 선수단은 서로 냉랭했다. 공개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탁구대표팀을 응원한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일절 북쪽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북쪽 탁구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탁구협회조차 경색된 남북 관계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았다. 남쪽보다 더 신경이 예민한 북쪽 선수단의 분위기는 말할 나위도 없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의 선수나 지도자, 임원이 서로 모른 채 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말이 통하는 데다, 오랫동안 서로 알아 온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파리올림픽 여자복싱 54kg급에서 동메달을 딴 임애지는 같은 체급의 방철미와 절친이다. 둘은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처음 만났고,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파리올림픽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보통 같은 체급 선수들은 불편해서 친해지기 어렵지만, 임애지는 5살 많은 방철미를 언니라고 부른다. 올림픽 선수촌의 체력 훈련장에서 방철미가 “파이팅 하라”고 격려하면, 임애지가 “결승에서 만나요”라고 화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sup>1)</sup> 임애지가 선수촌 식당에서 북쪽 복싱 지도자들을 향해 인사하면, 그들은 ‘애지도 밥 잘 먹으라’고 말한다.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선수나 지도자들 사이의 언어 교환을 이데올로기가 막을 수는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달라진다. 방철미는 파리올림픽 여자복싱 54kg급 메달 시상대에서 옆에 있던 임애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것이 북쪽 선수단의 행동 매뉴얼일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행사에서도 모든 메달리스트가 웃는데, 방철미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방철미의 딱딱한 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상식 뒤 장소를 옮겨 열린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둘이 서로 안아줬는가?”라고 물었을 때다. 임애지가 고민하다가 “비밀이에요”라고 답했고, 순간 방철미가 빵 터지듯 웃었다. 안아줬는지, 안 안아줬는지는 사적인 영역의 일이다. 다만 ‘자매 같은’ 두 선수의 소소한 행동이 비밀이 돼야 하는 형식에 (분단의) 비극이 있다.

1) 「임애지 만나 “파이팅해라” 응원한 北복싱 영웅 방철미」 『국민일보』 (온라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385442&code=61161611&cp=nv>>.

## II. 파리올림픽 북 관련 보도는 리우대회 때보다 많다

2024 파리올림픽(7월 26일~8월 12일·한국시각)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북 관련 기사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 카인즈' 검색을 통해 분석했다. 1차 검색어로 '파리', 그 다음에 '올림픽'을 입력하면 2만 1,376개가 떴다. 여기에 '한국', '북한' 검색어를 추가하면 1,182개(파리&올림픽&한국&북한)로 압축되는데, 파리올림픽 전체 기사(2만 1,376개) 가운데 남북 관련이 5.5%라는 것을 보여준다.<sup>2)</sup>

북이 불참한 2020 도쿄올림픽 대신 2016 리우올림픽(8월 6~22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검색했다. 먼저 '리우', 다음에 '올림픽'이라는 낱말을 입력하니 총 2만 793개의 기사가 나왔다. '한국'과 '북한' 단어를 추가하면 653개(리우&올림픽&한국&북한)로 줄었는데, 전체 2만 793개의 기사 가운데 3.1%를 차지했다.

파리올림픽의 북 출전 선수단 규모와 성적(16명·은2·동4)은 리우올림픽(31명·금2·은3·동2) 때보다 두드러지지 않는다. 북 당국의 선수단 통제도 리우 대회보다 파리올림픽에서 더 심했다. 그럼에도 파리올림픽에서 북 관련 보도가 리우 때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가장 큰 원인은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돌발 변수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행사 진행자는 한국 선수단을 영어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로 불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이 말은 국내 모든 매체에서 보도됐다. 한국언론재단의 빅 카인즈 시스템으로 기사 분석을 해보

<sup>2)</sup> 검색어를 남한 대신 한국으로 쓴 이유는 한국을 남한으로 쓴 기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을 동시에 지칭할 때 가능한 중립적인 언어인 남쪽 북쪽, 남북으로 썼다.

면, 개회식, 개막식, 사과, 실수, 사고, 대통령, 호명, 황당 등 이와 관련된 단어가 많이 검색된다.

미디어 상업주의도 큰 몫을 한다. 남북 관계가 악화할수록, 문화·스포츠 등 비정치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남북 접촉은 뉴스의 초점이 된다. 극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남북 선수들이 함께 웃는다면 외신도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대에서 한국의 임중훈-신유빈 짝(동메달)이 북의 리정식-김금영 짝(은메달)과 어울려 찍은 셀카 사진이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된 이유다.

한국 근대 스포츠의 역사적 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강점기 손기정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주의를 자극했고, 이후 민중의 중요한 스포츠 기억 자원이 됐다.<sup>3)</sup> 남북의 국가 권력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 대립기에 국제무대에서 스포츠를 통한 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의 연장선에서 1950년대 말부터 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의 논의를 시작했다.<sup>4)</sup> 지바세계탁구대회 남북단일팀(1991년), 시드니올림픽 남북 공동입장(2000),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2018년) 구성 등은 이런 역사적 토양 속에서 결실을 맺은 사례다. 독자와 소통하며 담론을 만드는 미디어 또한 지속적으로 북 관련 스포츠 뉴스를 공급해왔다.

3) 김창금, 『한국 스포츠미디어 담론구조의 변화』 (글누림, 2021), 78쪽.

4) 이학래, 『한국현대체육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865쪽.



### Ⅲ. 여자복싱, 탁구가 많이 다뤄져

빅 카인즈 검색을 통해 얻은 기사의 언어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각 기사의 제목만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했다. 빅 카인즈가 제공하는 키워드 분석 용량은 최대 1만 글자여서, 파리올림픽(1,182개)과 리우올림픽(653개)의 북한 관련 기사의 제목을 다 넣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기사의 범위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 정보 서비스에 가입한 매체(104개) 가운데, 전국지 12개 사와 방송사 5개로 좁혔다. 이 과정을 통해 파리올림픽의 경우 444개, 리우올림픽은 224개로 분석 대상 기사를 줄였다.

엑셀 파일로 기사를 내려받으면, 기사의 일시, 언론사, 기자, 제목, 키워드, 특성 등으로 분류가 돼 있는 기사의 목록을 얻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기사의 제목 부분을 전부 캡처해 빅 카인즈의 형태소·개체명 분석란에 입력해 돌렸다. 1만 자밖에 처리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로, 파리올림픽 기사(444개)의 제목은 두 부분(1~277번, 278~444번)으로 나뉘고, 리우올림픽은 224개 제목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그 결과 파리올림픽 기사 제목에서는 832개, 리우올림픽 기사 제목에서는 457개의 단어가 추출됐다. 출현 빈도수 상위 90위 정도의 단어를 표로 만들었다.<sup>5)</sup>

5) 빅 카인즈의 형태소·개체명 분석란에 텍스트를 넣으면 특성추출 항목에서 단어와 빈도, 특성값, 가중치 등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적으로 빈도와 키워드만 제공하는 단순화한 형태의 분석추출 시각화 방식으로 빈도추출을 한 뒤 표를 만들었다. 또 파리올림픽 관련 기사는 양이 많아 두 부분으로 나눠 입력해 분석추출한 뒤 합쳤다.

〈표 1〉 2024 파리올림픽(7.26~8.12) 남북 스포츠 기사 제목 분석(빈도와 키워드)

173	올림픽	13	실수	9	요청	6	최초
45	메달	12	대통령	8	임애지		도마
42	탁구		진출		미소		이번
36	사과	11	세계		7	대북	메달
34	선수		결승	양궁		5	종합
	개회식		어깨	논란			셀피
33	복싱		확보	재발			하늘
31	동메달	호명	공식	기자			
	탁구	10	경기	대회	탈락		
26	2024		다이빙	장면	가능		
25	위원장		혼합	남자	중계		
23	여자	10	복식	제재	전		
	소개		태극기	위반	도전		
22	사고	9	국기	연발	응원		
20	레슬링		방철미	방지	2관왕		
	실수		시상대	문체부	국가		
16	선수단	9	폰	금	강		
	금메달		사상	중고	혁명		
	체조		여서정	사이트	사과문		
15	셀카	9	황당	일	서한		
13	은메달		차관	진출	개막		
	개막식		입장	신유빈	수상		
	선수단	면담	출전	4	폐막		

<표 2> 2016 리우올림픽(8.6-22) 남북스포츠 기사 제목 분석(빈도와 키워드)

55	올림픽	5	탁구	3	수	2	외교
32	양궁		동메달		정신		한류
27	여자		획득		국가		불
26	금메달		맞대결		자매		통역
17	선수		권총		우리		도핑
16	역도	4	몸짓		사드		경향
	대결		남자		탈락		망명
15	체조		마라톤		빈자리		정치
14	도마		대표		실패		추천
12	개인전		쌍둥이		두		대비
11	브리핑		역사	번제	기계		
9	메달		셀카	금빛	팀		
	뉴스		나이	감동	결과		
	金		조작	승리	세대		
	진출		의혹	종합	女		
7	연패	역전	사상	유연성			
	오늘	승부	2관왕	우승			
	강	속	제기	등극			
6	영웅	3	조직위	유도	부상		
	금		스포츠	성사	쌍		
	사격		성적	개막식	랭킹		
	리우포토		위원장	예선	대통령		
5	은메달		레슬링	2	축제	귀국	
	순위		특파원		폐막식	여성	
	세계		이모저모		희로애락	네티즌	

<표 1>을 보면, 파리올림픽의 경우 올림픽(173회), 메달(45회), 탁구(42회), 사과(36회), 선수(34회), 개회식(34회) 단어의 빈도수가 1~6위를 차지했다. 올림픽과 메달,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로 볼 수 있지만, 사과와 개회식이 다수 검색된 것은 파리올림픽 개회식 선수단 입장식 행사에서 한국의 국가명을 잘못 부른 데서 기인한 것이다.

실수(33회), 사고(22회)의 단어가 많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위원장(25회)이나 대통령(12회) 등의 직함도 수습에 나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목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가명 호칭 실수의 과장은 이밖에 황당, 차관, 입장, 면담, 요청, 방지, 문체부, 사과문, 서한, 연발, 대형, 당부, 유감, 역대급 등 관련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단어와 빈도수 측면에서 파리올림픽에서 발생한 개막식 진행 실수가 국내 미디어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막식 국호 문제를 제외하면, 파리올림픽 남북 관련 기사 제목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복싱(33회)과 탁구(42회)로 나타났다.

파리올림픽에서는 국내 최초의 여자복싱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임애지가 같은 체급의 북의 방철미와 함께 나란히 동메달 시상대에 선 것이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다. 복싱에서는 동메달 결정전 없이 4강전에서 진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는다.

임애지가 시상식에 앞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방철미와의 인연과 선수촌 내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비밀로 할게요, 동메달 딴 남북 임애지와 방철미가 웃었다”<sup>6)</sup> “비밀로 하겠습니다, 무표정 北 방철미 웃게 한 임애지 한마디”<sup>7)</sup> “北방철미, 시상식 내내 굳어있더니 임애지 이 말에 처음 웃었다”<sup>8)</sup> 등이 미디어의 두 사람 관련 기사 제목이다.

6) 『한겨레신문』 2024년 8월 10일.

7) 『조선일보』 2024년 8월 9일.

8) 『중앙일보』 2024년 8월 9일.

탁구가 많이 제목에 반영된 이유는 신세대 탁구스타 신유빈이 혼합복식과 단체전에서 두 개의 메달을 딴 것이 작용했지만, 남북의 오누이들이 혼합복식 시상대에서 밝은 표정으로 셀카를 찍은 것도 미디어의 관심을 끈 동력이었다. 관련 단어로 셀카(15회), 폰(9회), 셀피(5회), 스마트폰(2회), 갤럭시폰(1회), 찰카(1회), 셀피찰카(1회) 등이 제목에서 검색됐다.

“셀카로 하나 된 남북 탁구…8년 만에 같은 시상대서 웃었다”<sup>9)</sup> “탁구장에 태극기-인공기 나란히 남북 선수들, ‘스마트폰으로 셀카’<sup>10)</sup> 등의 기사 제목은 시상대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여자체조 선수 여서정(9회)과 레슬링(20회)도 많이 검색됐는데, 여서정은 여자체조 도마 결선에서 북의 안창옥과 대결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레슬링이 자주 언급된 이유는 북 선수가 올림픽 참가를 포기하면서 한국의 이한빛 선수가 대신 출전권을 땀기 때문이다.

인기가 높은 축구나 농구 등에서 남북이 올림픽 무대에 오르고, 서로 대결을 펼쳤다면 탁구나 복싱, 체조보다 훨씬 풍부한 보도가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구기 종목에는 한국의 여자핸드볼팀만이 올림픽에 나갔고, 핸드볼 단어는 한 차례 검색됐다.

<표 2>의 리우올림픽 스포츠 기사 제목들에 등장한 단어를 보면, 파리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올림픽(55회), 양궁(32회), 금메달(26회), 선수(17회) 등 중립적인 스포츠 용어가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빛어진 잘못된 한국 호칭 해프닝이 리우올림픽 대회에서는 없었다. 이런 까닭에 남북 선수들 간 교류나 종목별 대결 상황 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수준의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 종목 특성으로는, 파리올림픽에서 주목받은 탁구, 복싱과 달리 리우올림픽에서는 체조(15회), 도마

9) 『서울신문』 2024년 8월 1일.

10) 『동아일보』 2024년 7월 31일.

(14회) 등이 빈도수 상위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북의 체조 선수인 리세광의 도마 금메달 획득 뉴스는, 부상으로 대회에 불참했던 남의 체조 간판 양학선과 대비돼 많이 보도됐다. 리우올림픽에서는 파리올림픽 때와 달리 남북 선수들의 접촉이 조금 더 자유로웠는데, 남북 선수가 어우러진 것과 연결되는 셀카(4회) 단어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 IV. 정치적 국면에 따라 출렁이는 미디어 취재의 어려움

남북 스포츠 교류는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비정치적인 무대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호작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체육백서에도 남북한 체육교류는 별도의 장으로 편성돼 있다. 2016 체육백서에 따르면 남북 체육교류는 역사성, 대중성, 동질성 등의 특징을 지니며, 대중적 파급력이 큰 스포츠는 남북 양쪽에서 정치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은 체육교류를 통해, 남북이 경쟁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다. 1991년 지바탁구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한 ‘코리아 팀’이 내건 한반도기 상징은 남북이 한민족임을 느끼도록 해주듯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는 분쟁 위험을 낮추면서 양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sup>11)</sup>

미디어 역시 남북의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능하는 만큼 기자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북쪽 선수들을 취재·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1) 문체부 『2016 체육백서』의 내용(490~492쪽)을 원뜻이 왜곡되지 않게 압축했다.

하지만 남북 스포츠 교류나 미디어 보도는 정치적 국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018년에는 평창겨울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것을 비롯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북은 여자농구나 조정 등에서 한 팀을 이뤘다. 2018년 스웨덴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8강전 맞상대인 남북이 현장에서 즉석 여자단일팀을 구성했고, 단일팀이 되면서 8강전은 사라졌고, 4강에 자동진출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2024 파리올림픽의 풍경은 6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한국의 여자체조 간판선수인 여서정은 파리올림픽 도마 결선에서 먼저 연기를 펼친 북의 안창옥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알은 체를 하기 위해 일어났지만, 안창옥은 여서정을 외면했다. 여서정은 경기 뒤 인터뷰에서 “악수를 하려 일어났는데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파리올림픽에서 남쪽 체조팀을 이끈 지도자는 북 선수들의 태도가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이런 환경에서 미디어가 북 선수를 취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 선수의 말 한마디라도 듣기 위해 공동취재구역에서 대기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거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나오는 발언 말고는 다른 취재원을 찾기 어렵고, 북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까 봐 질문의 수위도 스스로 검열한다. 임애지에게 방철미를 안아줬는가 하고 물었던 기자는 교도통신 특파원인 토가시 아키히로였다.<sup>12)</sup>

파리올림픽보다 형편이 나았던 2016 리우올림픽 때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당시에 남북 선수가 어울린 셀카 사진이나 북 선수의 기자회견, 남북한 맞대결, 한국 선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북 선수 이야기 등이 주로 보도됐다.

<sup>12)</sup> 10월 서울에서 다시 만난 토가시 기자는 한국 기자들이 먼저 질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질문이 나오지 않아 물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 V. 관성화된 북 선수 취재와 스테레오타입의 강화

한국 기자들의 북 선수 취재는 관성화하고 있다. 파리올림픽 기간 남북 스포츠 관련 보도에서 부각된 여자복싱의 임애지와 방철미의 동메달 시상식은 애초부터 미디어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지시각 8월 8일 자정께 프랑스 테니스의 메카인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내 매체는 한겨레와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4개뿐이었다. 만약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애지의 “비밀” 발언과 방철미의 ‘미소’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큰 뉴스가 된 것이다.

현장의 취재 기자들 역시 본사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롤랑가로스를 찾았다. 통신사는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모두 취재에 나섰지만, 신문사 가운데 한겨레만 유일하게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대다수 국내 매체가 임애지와 방철미의 동메달 공동 수상의 뉴스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뉴스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인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23년 말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4.0%로 2015년 첫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70.4%)에 비해서는 큰 폭(6.4%포인트)으로 떨어졌다.<sup>13)</sup>

세대간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교류에 대한 MZ 세대의 입장은 분단 세대와는 다를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

13) 「“통일이 필요하다” 응답한 국민 64%…역대 최저치 기록」 『중앙일보』 (온라인), 2023년 12월 1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4686>>.



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 방증한다. 당시 남쪽 선수단이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받은 상태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라 북 선수단이 합류하기로 하자, 북 선수의 가세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남 선수가 나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결국 국제 아이스하키연맹이 단일팀에 대해 예외적으로 엔트리를 대폭 확대해주면서 탈락 선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sup>14)</sup>

스포츠 기자들이 북 선수단을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인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질문에 냉담하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북 선수단의 반응이 반복된다면 기자들의 취재 의욕은 약해질 것이다. 국제 스포츠 규범에 어긋나는 북쪽 당국의 행위는 스포츠 기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북은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홈 경기를 평양이 아닌 외국 땅에서 치르고 있다.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는 개최지로 사전 고지됐던 평양 경기를 갑자기 취소하면서 몰수패를 당하기도 했다. 국제 표준과 다른 북 스포츠가 스포츠 기자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다.

북에 대한 선입관은 기사에도 반영될 수 있다. 임애지와 방철미의 기자회견장에서 북의 코치가 한쪽에서 참관했는데, 국내 매체에서는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묘사되기도 했다.<sup>15)</sup> 하지만 과연 북의 지도자가 방철미의 발언을 감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날 회견장에는 은메달을 딴 터키 선수의 코치진도 함께 서 있었다.

14) 「文대통령 “女아이스하키 선수 입장 미치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일보』 (온라인), 2018년 1월 3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069464?sid=100>>.

15) 「회견서 北지도자 ‘매의 눈’·미소 짓던 방철미, 갑자기…」 『MBC』 (온라인), 2024년 8월 9일, <[https://imnews.imbc.com/news/2024/sports/article/6625554\\_36466.html](https://imnews.imbc.com/news/2024/sports/article/6625554_36466.html)>.

## VI. 과잉 정치에 종속된 스포츠의 한계

스포츠는 남북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남북 간 대화가 막힐수록 숨구멍을 열어줄 수단이 된다.

하지만 정치에 철저하게 종속된 스포츠는 남북 사이에서 자기 영토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스포츠의 대표조직인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자주적으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주도한 적은 없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대한체육회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해 일정한 인적 네트워크, 경험 등을 축적했지만, 남북 관계가 파탄나거나 작동불능의 시간이 길어지면 업무의 연계성을 살려 나갈 수도 없다.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 몇 차례 단일팀을 구성했고, 국제대회에서 공동입장을 했고, 한반도 깃발을 들고 아리랑 단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종목별 남북 교류전이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권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는 국가주의 스포츠 문화가 팽배한 환경에서 남북 교류는 이벤트의 성격이 강했다. 일상적이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정착되지 못했다.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남북', '스포츠', '교류'를 빅 카인즈의 뉴스 검색·분석에 입력해 검색하면, 남북 스포츠 교류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다. 경기도, 강원도 등 군사 접경지의 지자체나 인천광역시가 북과의 스포츠 교류에 적극적이었고, 개인으로는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눈에 띈다.<sup>16)</sup>

<sup>16)</sup> 2017년 10월부터 검색 기간을 정한 이유는 2018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절정에 이른 스포츠 남북 교류의 직전 3개월을 포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왕래라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정치나 군사 등 어려운 문제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라고 말했다.<sup>17)</sup>

물론 통일부 등 정부 기관이 남북 스포츠 교류의 국가 통제를 포기한 적은 없다. 지자체나 혹은 특출난 능력을 갖춘 개인이 대북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보니 지자체의 남북 스포츠 교류가 유소년 축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 대한체육회나 산하 종목 단체가 대북 스포츠 교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더욱 어렵다. 가령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상황이나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선과 악이 뒤바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같은 아이디어를, 남북 간 대치와 긴장이 고조된 2024년에 낼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은 없다. 교류 사업에는 필연적으로 비용 문제가 따르지만, 정권이 바뀌면 통일 비용은 불법 송금이나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치에 종속된 남북의 스포츠가 독자적인 교류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 VII. 2028 평양 아시아탁구대회에서는 달라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한다. 개인의 확장체인 민족도 마찬가지다. 거꾸로 자주 접촉하면 가까워지고 벽도 사라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때 걱정했던 팀 호흡

17) 「『잃어버린 10년』 남북축구 끈 지켜낸 ‘외국 사업가』 『한겨레신문』 (온라인), 2018년 3월 17일, <<https://www.hani.co.kr/arti/sports/soccer/836506.html>>.

등의 문제는 남북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먹고 자면서 사라졌다. 올림픽 경기를 마감하는 시점에는 모두가 하나가 됐고, 대회 뒤 강릉의 선수촌에서 북 선수들이 떠날 때는 남북 선수들이 눈물로 이별을 아쉬워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임애지와 방철미가 남북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둘은 파리의 롤랑가로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기 전에 대기실에서 짧게 둘만의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다. 만 30살인 방철미가 2026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면, 둘은 작별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둘의 기자회견 취재를 바탕으로, ‘정치적 대립의 그림자, 포옹은 환상에 그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민족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방침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선수들은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라는 기사 내용처럼<sup>18)</sup> 남북의 정치적 대립은 파리올림픽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스포츠 교류가 정치와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제무대에서 종목 간 남북 접촉을 한 쪽이라도 용인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한다면, ‘정치 과잉과 스포츠 정치화’의 남북 교류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북은 최근 2026년 아시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의 평양 유치를 결정했다. 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 이후 탁구 메이저 대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것은 49년 만의 일이 될 것이다.<sup>19)</sup> 국제 대회 개최의 프로토콜을 따라야 하는 북 당국은 한국을

18) 【パリ五輪】政治対立が影、抱擁は幻に 北朝鮮、韓国への言及回避, 『교도통신』(온라인), 2014년 8월 14일, <<https://www.sanin-chuo.co.jp/articles/-/628132>>.

19) 「2028아시아탁구선수권 평양서…49년만의 메이저대회 유치 배경은」 『연합뉴

포함한 전 세계 기자들의 방문 취재 기회를 막을 수 없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미디어와의 관계를 어떤 기준에서 설정할지는 2028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드러날 것이다.

방철미의 웃음을 경직된 제도와 이념을 초월하는 유머의 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

## 【참고문헌】

김창금, 『한국 스포츠미디어 담론구조의 변화』, 글누림, 2021.

이학래, 『한국현대체육사』,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문체부, 『2016 체육백서』, 2023, <www.mcst.go.kr>.

---

### 김창금 (Kim, Chang Keum)

현재 한겨레신문 스포츠팀 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1993년 입사 뒤 1999년부터 스포츠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한겨레신문 첫 보도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상을 받았고, 2020년 한국체육대학에서 체육학(스포츠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 『한국 스포츠 미디어 담론구조의 변화』는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 『통일과 평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20년 1월 7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일

###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jpus.jams.or.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민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 ;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운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15쪽.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예)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경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 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은주,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자, 면담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 『통일과 평화』 연구윤리 규약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제12조(심사서 작성)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고 모집 및 제출

1. 『통일과 평화』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21세기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성할 두 핵심 키워드인 ‘통일’과 ‘평화’를 중심으로, 그 개념, 이론과 방법론, 관련 현상 및 담론/현실 분석 등을 통해 이를 학술적으로 본격 조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지는 통일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미/일/중/러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사회 각 분야 연구와 더불어, 인간/자연/사회를 둘러싼 제반 폭력과 비평화 구조, 소수자와 인권, 환경문제와 생태, 지구화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와 갈등 등 평화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통일학/평화학의 다학제적·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용적, 정책적, 사회과학적 접근은 물론, 통일/평화의 인문적, 철학적, 종교적, 예술적, 문명론적 가치와 그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하는 논문도 환영합니다.
2. 보내실 글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글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통일과 평화』는 학술논문과 함께 서평(book review)과 현장보고(field report)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평은 위에 제시한 주제와 관련된 2권 이상의 학술서적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저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는 글이며, 현장보고는 위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기록, 조사하여 소개하는 글입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이며,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입니다.
4. 『통일과 평화』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JAMS)을 활용하여 원고 모집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투고하실 분께서는 통일평화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jpus.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메인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연구윤리서약 동의 후 필요 항목을 기입하고 원고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후 심사 역시 시스템상으로 진행되며, 투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보내신 글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고 시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어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는 첨부된 <원고제출 및 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편집위원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 (031) 5176-2332  
Fax | (031) 624-4751  
E-mail: tongil-journal@snu.ac.kr

# 통일과 평화

Vol.16, No.3  
2024

##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CONTENTS

<b>Special Articles</b>	<b>Public Opinion on South Korea's Nuclear Options and the US Extended Deterrence</b>
Jung, Sung Chul	Why Do South Koreans Want Nuclear Armament? North Korea's Threat and the ROK-US Alliance
Lee, Kyung Suk	Cost Sensitivity of Korean Public towards Nuclear Armament : Evidence from a Conjoint Experiment
Chung, Kuyoun	South Korean Public's Confidence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and Preference for Deterrenc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Hong, Ye Rim · Jo, Dong-Joon	South Koreans' Perception of the Credibility of the US Deterrence toward North Korea
<b>Articles</b>	
Park, Sung Yul · Jung, Won Hee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the Kim Jong-un Regime's Food Policy : Focusing on Availability(FAD) and Entitlement(FED)
Ahn, Jong-Sook	A Study on the Emotional Socializ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s : Focusing on the Acceptance and Consequences of Ideological Emotions
Lee, Chungsun	Implications for Peace on Memorial Space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 Memorial Service Hall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1964
Cho, Sung-Myeon	Research on Late Spring(늦봄) Moon Ik Hwan's Unification Literature and the Unification Movement
<b>Field Report</b>	
Kim, Chang Keum	North and South Korea's Sports Exchanges in 2024 Summer Olympics...Excessive Politics and Sports Politicization

